

제115차 유엔 자유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보고서

활동 시기 2014. 9. ~ 2015. 11.

보고서 발행일 2015. 11. 25.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모임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3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SOGI) 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pspdint@pspd.org)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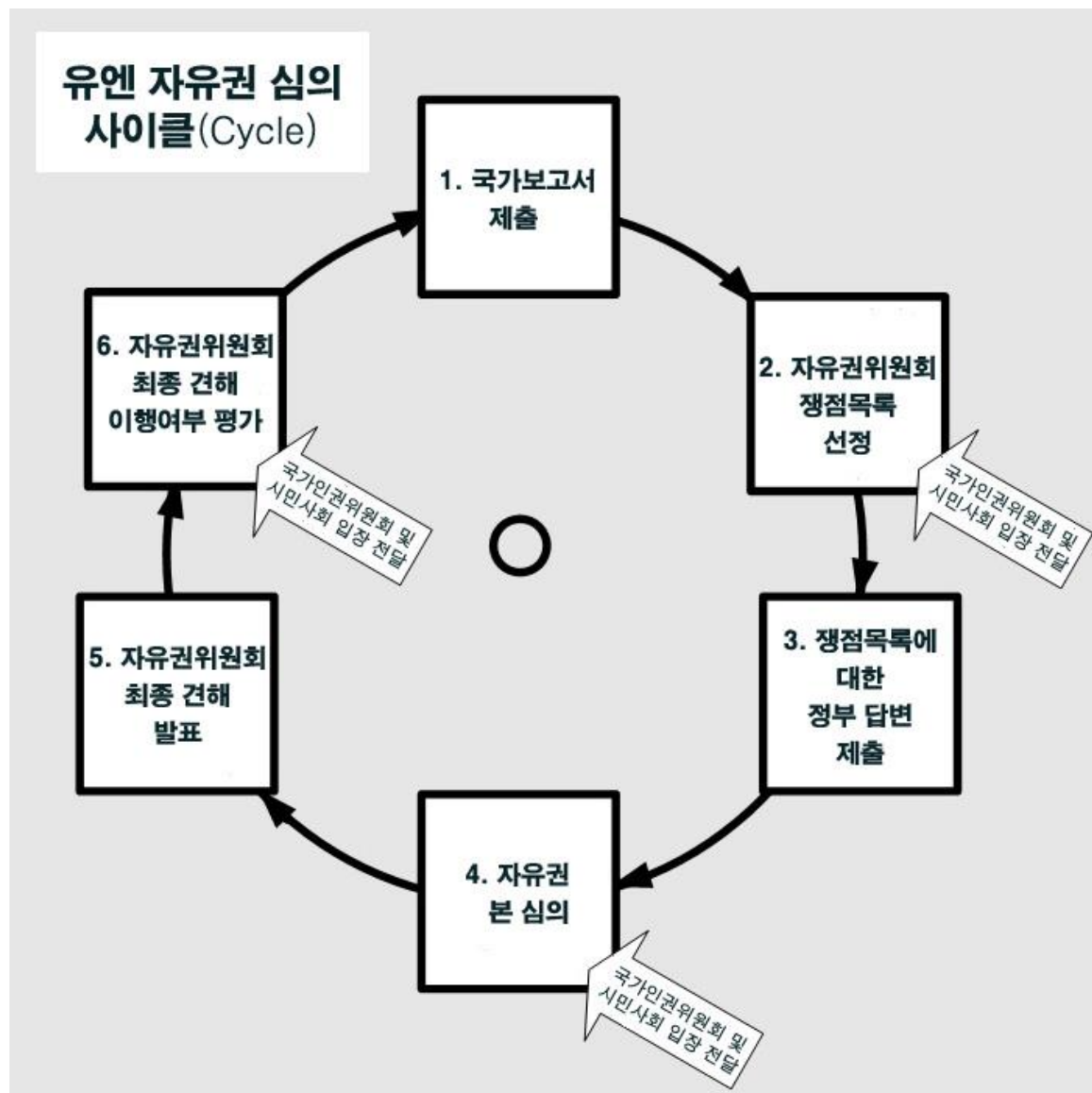
|   |     |
|---|-----|
| I.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 개요 .....  | 1   |
| II. 자유권 관련 현지 활동 .....  | 12  |
| III.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한글).....  | 15  |
| IV.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 32  |
| V. 쟁점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  | 46  |
| VI. Joint NGO Submission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for the List of Issues .....       | 114 |
| VII. 쟁점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정부 답변 .....   | 174 |
| VIII. 쟁점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정부 답변 (영문).....  | 205 |
| IX. 쟁점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NGO 답변.....  | 227 |
| X. 쟁점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NGO 답변 (영문) .....   | 293 |
| XI. 제115차 유엔 자유권 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발표문 .....  | 353 |
| XII. 제115차 유엔 자유권 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발표문 (영문)  | 358 |
| XIII. 대한민국 네번째 정기보고서에 관한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 견해 .....  | 362 |
| XIV.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 | 375 |
| XV. 언론 보도자료 및 언론 대응 .....   | 386 |

# I.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 개요

## 1. 배경

### 1) 유엔 자유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국가보고서 제출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회기 전 실무그룹 회의에서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당사국의 추가 답변서 제출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 최종견해(권고)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



출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2) 한국 자유권 심의 개괄

- 한국은 2006 년에 3 차 자유권 심의를 받았으며 이후 2010 년 11 월 2 일까지 4 차 심의를 위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받았으나 3 년이 지난 2013 월 8 월 19 일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함.
- 국가보고서가 자유권 위원회에 접수된 후 자유권 위원회는 2015 년 10 월에 열리는 제 115 차 회기 때 한국 정부에 대한 4 차 자유권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 국가보고서 제출과 심의 기간 사이에 2 년 이라는 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슈를 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는 심의에 있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쟁점목록(list of issues)를 선정함.
- NGO 들은 위원회가 쟁점목록을 선정함에 있어서 1) 지난 3 차 자유권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새롭게 제시되거나 업데이트 해야 하는 이슈들 2) 해당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자유권 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들을 중심으로 쟁점목록 선정과 관련한 NGO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 (보통 쟁점목록을 채택하기 3~4 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한국의 경우, 2014 년 12 월 말까지 NGO 보고서 제출) 쟁점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의 당시 추가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고 날카로운 쟁점 목록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쟁점목록에 대한 NGO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 심사를 위한 쟁점목록을 선정함. (본 심사가 있기 약 8 개월 전. 한국 심사의 경우 2015 년 3 월에 쟁점목록 발표)
- 제출된 쟁점 목록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추가 답변을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이와 동시에 NGO 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가 쟁점 목록에 대한 정부 답변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NGO 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을 제출할 수 있음.
- 이미 제출된 4 차 심의를 위한 정부 보고서, 추가로 제출된 쟁점 목록에 대한 정부 답변, 쟁점 목록에 대한 NGO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 등을 바탕으로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 (2015 년 10 월)

## 2. 자유권 심의 사전 준비

### 1)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3개 단체) 구성

- 2014 년 9 월 16 일: 자유권 심의 대응 NGO 사무국 구성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 2014 년 10 월 21 일, 11 월 18 일: 자유권 규약 위원회 한국 4 차 보고서 심의에 따른 NGO 워크숍을 두 차례에 나눠 개최. 자유권 각 조항에 맞춰 담당 단체들이 간략하게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로 함.

## 2) 쟁점목록에 대한 NGO 의견서 제출 (자료집 p45(한글본), p115(영문본))

- 쟁점목록에 대한 NGO 의견서는 총 83 개 단체 이름으로 2015 년 1 월 14 일 제출되었음.
- 최대한 많은 국내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 단체의 보고서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물론 공동 보고서에 모든 내용을 담기 어려우므로 공동 보고서와는 별개로 개별 이슈들을 더 자세히 다룬 개별 보고서 제출이 함께 이뤄지면 더욱 효과적임.
- 한국 자유권 심의 쟁점목록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한 NGO 들은 아래와 같음.  
(abc 순)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공익법센터 어필)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Compiled by the Kaleidoscope Human Rights Foundation with the assistance of DLA Piper International LLP (칼레이도스코프 인권재단과 DLA 파이프)

European Association of Jehovah's Christian Witnesses (여호와의 그리스도인 증인 유럽 협회)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아동체벌 근절을 위한 글로벌이니셔티브)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국제화해연대)

KTNC Watch (해외한국기업감시네트워크)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Network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TRACK)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트랙)

Truth Foundation (진실의 힘)

### 3) 쟁점목록에 대한 NGO 답변 (자료집 p228(한글본), p294(영문본))

- 자유권 위원회가 2015년 10월 심의를 앞두고 3월에 한국 정부에 대한 쟁점목록 및 추가 질의 발표.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답변서를 제출했음. (자료집 p175(한글본), p206(영문본))
- 자유권 위원들이 추가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서와 비교해볼 수 있도록 NGO 들도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음. (정부 답변서에 대한 그림자 보고서라는 뜻으로 Shadow Report 라고도 불림) 이 문서의 경우 정부 답변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필요함. 동시에 각 이슈별 위원회가 내려졌으면 하는 권고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 좋음.
- 한국 자유권 심의 Shadow Report 를 제출한 NGO 들은 아래와 같음. (abc 순)
  -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공익법센터 어필)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 European Association of Jehovah's Christian Witnesses (여호와의 그리스도인 증인 유럽 협회)
  -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국제화해연대)
  - Kaleidoscope Human Rights Foundation (칼레이도스코프 인권재단)
  - KTNC Watch (해외한국기업감시네트워크)
  - Open Net (오픈넷)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참여연대)
  -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Network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 The Birth Registration Working Group of Korea (한국 출생등록 워킹그룹)
  -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TRACK)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트랙)

### 4) 자유권 현지 대응팀 사전 모임 및 준비 자료

- 제네바 현지에 가기 전, 현지 대응팀은 세 차례 모여 현지 로비 기획 회의를 가짐. (9/11, 9/25/, 10/7). 사전 준비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함.

#### ▷ 자유권 위원 성향 분석 자료

- 자유권 위원은 총 18명으로 어떤 위원이 어느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위원들 이력서 및 저서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다른 나라 자유권 심의 때

해당 위원이 자유권 규약 중 어떤 이슈와 관련된 질문을 했었는지 살펴보면  
위원 성향을 파악할 수 있음.

- 자유권 위원들은 대부분 대학 교수, 법조인 등이기 때문에 개인 메일 주소가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로비 과정에서 위원들과의 면담 요청을 하려면 해당 개인 메일 주소를 조사해 두는 것도 필요함.

▷ **Suggested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 현지에서 위원들 면담 시 위원들에게 제출할 문서. 한국 정부 심의 시 제기해 왔으면 하는 질문들과 권고사항들을 담은 문서로 쟁점목록에 따라 작성.
- 권고사항의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자유권 위원회에서 다른 나라에 내린 권고가 있다면 그 내용이나 사용된 언어들에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됨. 이와 관련해서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 각국에 내린 권고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Universal Human Rights Index 사이트 참조. (<http://uhri.ohchr.org/en>)

▷ **유엔 쪽 관련자들과 사전 면담 약속**

- 자유권 위원 중 꼭 만나야 할 사람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내 동아시아(한국) 담당관, 제네바 소재 국제인권단체 등 현지 로비에 있어서 필요한 곳에 미리 사전 미팅 메일을 보내 약속을 정함.

**5) 사전 언론 대응**

- 10/11 [경향신문] 자유권 규약 심의에 즈음하여. 자유권 심의를 앞두고 전반적인 내용 및 기대하는 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영석 변호사 기고.
- 10/15 [오마이뉴스] 한국의 자유권 실태, 유엔에서 평가받는다. 자유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제네바에서의 시민사회 활동 예정 소개.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기고.

**3. 자유권 심사 관련 NGO 제네바 현지 활동**

**1) 개요**

▷ **일시**

- 자유권 심의 제 115 차 세션: 2015 년 10 월 19 일~2015 년 11 월 6 일
- 한국 NGO 대표단 방문: 2015 년 10 월 17 일~24 일
-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 2015 년 10 월 22 일~23 일



▷ 장소

- 제네바 Palais des Nations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제네바 현지 NGO 대표단 (가나다순)

-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류민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남, 방서은)
- 오픈넷 (김가연)
- 유엔인권정책센터 (홍승기)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병권)
- 참여연대 (박경신, 백가윤)
- 이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김태석, 장영석 변호사,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IFOR, 국제화해연대)의 이름 아래 참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프랑스 파리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이예다씨,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TRACK)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트랙)의 Ross Oke 씨도 한국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해 참가함.

2) 자유권 본심의 사전 활동

▷ 시민사회 대표단 자유권 심의 관련 일정

| 10/19(월)  | 10/20(화)                                       | 10/21(수)                                    | 10/22(목)   | 10/23(금)                         |
|---|--|---|--|----------------------------------|
| 09:00am<br>UN 패스 등록<br>10:00am<br>CCPR Center<br>(구두발언문<br>25부 전달)<br>11:00am<br>NGO Formal<br>Briefing | 09:30am<br>ISHR 면담<br>11:00am<br>ILGA 면담       |   | 09:00am<br>Yuval Shany<br>자유권 위원회<br>위원 면담                             | 10:00am~<br>한국 정부<br>자유권 심의 (II) |
| 15:00pm<br>OHCHR<br>동아시아<br>담당관 면담  | 14:00pm<br>Margot Waterval<br>자유권 위원회<br>위원 면담 | 14:00pm<br>Nigel Rodley<br>자유권 위원회<br>위원 면담 | 14:00pm<br>NGO Informal<br>Briefing<br>15:00pm~<br>한국 정부<br>자유권 심의 (I) |                                  |

▷ UN 패스 등록

- 자유권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리 인터넷으로 참가 등록을 해야 함.(보통 심의 2 주 전쯤 마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ECOSOC Consultative Status)가 있는 단체만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참가하는 단체 중 협의지위가 있는 단체 이름으로 참가단을 등록할 것.

▷ 자유권 위원과의 사전 비공식 면담

- 총 18 명의 자유권 위원 중 5 명의 위원이 한국을 담당하게 됨. 그렇지만 심의 당일까지 5 명의 한국 담당 위원은 공개되지 않음. 따라서 미리 명단을 보고 한국을 담당할 것 같은 위원들이나 (예. 예전에 한국을 담당했던 위원들) 한국에서 중요한 이슈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위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면담을 요청함.
- 몇몇 위원들은 흔쾌히 면담에 응했지만 몇몇 위원들은 NGO 와 사전 면담은 하지 않지만 자료는 꼼꼼히 보겠다, 혹은 제네바 현지에서 다시 약속을 잡도록 하자, 등과 같은 답변을 보냄.
- 만약 반드시 로비를 해야할 것 같은 위원이 메일에 답이 없거나 공식적인 면담에 부정적이라면 카페테리아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 그 자리에서 이슈를 로비할 수도 있음.
- 위원들을 만날 때는 위원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 주는 것이 중요함. 어떤 위원의 경우는 개인 어시스턴트가 있으므로 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도 유용함.

▷ NGO Formal Briefing (Oral Statement) (자료집 p354(한글본), p359(영문본))

- 사전 등록한 단체들 중 위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구두발언(Oral Statement)의 기회가 주어짐. 자유권 심의 관련 NGO 코디네이션을 맡고 있는 제네바 소재 인권단체인 CCPR Center 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심의 약 2 주 전에 마감됨. 현지에서 발언 전, CCPR Center 에 하드카피 25 부를 전달해야 함 (자유권 위원 및 통역에게 전달 예정).
- 한국 자유권 심의 관련 구두발언을 하겠다고 등록한 단체가 몇 개인지, 해당 단체가 몇 개 단체를 대표하는지, 몇 개의 이슈를 다룰 예정인지에 따라 발언 시간이 배분됨.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어느 단체가 한국 관련해서 발제할 예정인지 파악한 후 해당 이슈에 대해 입장이 같다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음.

- 83 개 NGO 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에게는 총 12 분이 배정되었으며 그 외에,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TRACK) 4 분, 국제앰네스티 4 분,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IFOR, 국제화해연대)에는 3 분이 배정됨.
- 해당 구두 발언에서는 이미 제출된 시민사회 보고서의 내용을 반복하기 보다 가장 중점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언하는 것이 좋음. 이번 제 4 차 자유권 심의에서 발언한 단체들과 관련 주제는 아래와 같음.

| 순서 | 발언자                 | NGO   | 주제  | 분 |
|----|---------------------|---|---|---|
| 1  | 백가윤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br>집회시위의 자유<br>프라이버시<br>테러방지법<br>변호인 접견권                        | 6 |
| 2  | 장영석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 구금시설 내 인권<br>북한이탈주민센터<br>군대 내 인권<br>아동, 여성, 장애인, 청소년 인권<br>성소수자 인권<br>해외 한국기업 | 6 |
| 3  | Ross Oke            |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TRACK) | 출생등록<br>입양 기록<br>미혼모에 대한 차별   | 4 |
| 4  | Matthias Braeunlich | 국제앰네스티  |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민 권리<br>양심적 병역거부<br>세월호 집회 때의 인권침해                                 | 4 |
| 5  | 이예다                 |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IFOR)                    | 양심적 병역거부  | 3 |

▷ NGO Informal Briefing

-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위원들에게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며 CCPR Center 에서 전체 코디네이팅을 맡고 있음. 모든 위원들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이슈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 담당관인 경우 참석한다고 볼 수 있음.
- 국가보고서, NGO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위원들이 먼저 질문을 던지면 이에 대해

NGO 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혹시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자유권 심의 때 제기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강조할 수 있음.

#### ▷ OHCHR 동아시아 담당관 면담

- 유엔 내에서 한국 관련 심의가 있거나 한국 인권 현황 등이 필요한 경우 1 차적인 자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동아시아 담당관에게 문의하게 됨. 관련하여 자유권 심의에 있어서도 동아시아 담당관에게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중요함.

#### ▷ 제네바 소재 단체 면담

- 자유권 대응 관련 팁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follow-up 활동 및 유엔 애드보커시 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라도 제네바 소재 NGO 들과의 면담을 잡을 필요 있음.

### 3) 자유권 본 심의 당일 활동

- 자유권 본 심의는 이틀에 나눠서 진행되었음. 첫 날 세션 때는 쟁점목록 1 번~14 번, 둘째 날 세션 때는 쟁점목록 15 번~28 번으로 나눠 진행되었음. 위원들이 돌아가며 4~5 개 정도의 질문을 하고 난 후 약 30 분 간 쉬는 시간을 갖고 (이 시간에 정부는 답변 준비) 정부가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됨.
- 첫 날 심의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둘째 날 심의 때 추가할 수 있도록 첫날 심의 이후 로비 가능. 또한 첫 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정부 답변이 부족하거나 시민사회 입장과 다를 경우, 해당 질문에 대한 시민사회 답변을 작성해 위원들이 정부 답변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전달할 것. 물론 둘째 날 심의 이후에도 질문에 대한 시민사회 답변을 준비해 제출하는 것 필요.
- 보통 한국 정부는 한국어 통역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속기를 할 수 있음. 단, 통역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한/영 통역을 듣는 것도 필요함.
- 만약 질문이 너무 많아 정부가 시간 내에 답변하지 못한다면 이후 추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보통 48 시간 내) 시민사회단체는 이 문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내 자유권 사무국을 통하거나 혹은 법무부 담당자에게 요청해 받아볼 수 있음.
- 현지에서의 심의가 끝난 이후 최종 권고가 내려지기까지는 약 2 주간의 시간이 있음. 그 사이에 이메일 등을 통해 마지막 로비 활동을 펼치는 것도 필요함.

#### 4) 언론 대응

- 제네바 현지에서 가 있는 사람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를 통해 현장 소식을 한국에 즉각적으로 알릴 수 있음.
- 자유권 심의 세션 자체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자유권 심의를 함께 모여 보는 행사를 기획해 볼 수 있음. 다만, 인터넷 상태가 좋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움.
- 생방송 중계는 CCPR Center 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후 원본 영상을 받아 국내 로비에 맞게 편집해서 활용할 수 있음.
- 자유권 심의 관련하여 한국 NGO 참가단은 자유권 심의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들을 발행함. 현지 활동 이후 보도자료의 경우, 최대한 빨리 발행해 언론들이 정부 보도자료 입장만이 아닌 시민사회 입장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 10/15 [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 10/25 [보도자료] 유엔 인권 전문가들, 악화되는 한국 인권상황에 우려 표명

#### 4. 자유권 심의 이후 NGO 활동

##### 1)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발표 관련 대응 (자료집 p363(한글본), p376(영문본))

- 자유권 심의가 끝난 지 약 2 주 후인 11 월 5 일,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 발표.
- 발표가 나자마자 자유권 대응을 함께 준비했던 단체들이 모여 권고 분석 및 번역을 시작해야 함. 권고 분석이 끝나자마자 보도자료 발행 필요. 이 역시도 최대한 빨리 발행해 언론들이 최종견해에 대한 정부 입장뿐 아니라 시민사회 입장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11/07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 2)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활용 및 이행평가

###### ▷ 우선순위 권고에 대한 follow-up

- 최종견해에는 정부가 1 년 내로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우선순위 권고들을 명시하고 있음. 제 4 차 한국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는 1) 성소수자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3)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이 우선순위 권고로 뽑힘.
- 이 권고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1 년 내로(2016 년 10 월)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정부가 follow-up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후 1 달 내로 NGO 들은 세 권고에 대한 이행평가 관련 NGO 보고서를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

#### ▷ 최종 견해의 활용

- 자유권 위원회가 내린 최종 견해와 관련 있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최종견해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음.
- 자유권 규약에서 내려진 최종 견해가 이후 2017 년 예정되어 있는 유엔 3 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역시 2017 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3 차 국가인권기본정책계획 (National Action Plan) 등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 정부의 이행 여부 감시 활동

- 2016 년 1 월 즈음 각 정부 부처에 해당 최종견해의 이행 계획을 묻는 질의서 발송 예정.
- 이후 주기적으로 정부의 최종견해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NGO 보고서 발행 가능.

#### ▷ 자유권 심의 관련 대중 홍보 사업

- 2015 년 11 월 25 일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개최
- 오마이뉴스 기획기사 게재
  - 11/12 ①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 11/19 ②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기남 변호사)
  - 11/20 ③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 11/23 ④ 갇히거나 팔리거나, 오스람과 메리를 아시나요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 11/23 ⑤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I. 자유권 관련 현지 활동

### 1. NGO 및 국가인권기구 공식 브리핑

- 자유권 위원들에게 국가인권기구와 NGO 들이 각국 이슈 중 중요한 내용을 발표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의 독립성, 여성 차별, 비자발적 입원, 군대 내 인권 문제, 교정시설 문제, 외국인 보호소 구금 등의 이슈를 다룸. 차별금지법의 경우 차별에 대한 다양한 개별 법안들이 있다고 발표함.
- Yuval Shany 위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질문함. 이에 인권위는 강제로 입원당했을 경우 인권위에 인신보호청구가 가능하며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인권위는 법을 제정할 수는 없고, 대신 위헌 심사 중인 정신보건법에 대해 위헌 입장을 현재에 제출했다고 답변함.
- 83 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통신자료제공, 반테러 관련 법, 변호인 접견권, 구금 시설 내의 인권, 여성, 장애, 성소수자, 이주민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발표함. 특히 지난 2006 년 심의 이후 한국의 자유권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함.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이외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프랑스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는 이예다씨가 양심적 병역거부, TRACK 은 출생등록, 그리고 앰네스티는 농어촌 이주노동자, 집회결사의 자유(특히 세월호) 및 병역거부자 등에 대해 발표함.
- Olivier de Frouville 위원이 낙태가 한국에서 합법인지, 그리고 Yuval Shany 위원이 합동신문센터 관련 질문을 함. 간단하게 답변한 후 추가로 자료를 전달하기로 함.

### 2. 자유권 위원 면담

#### 1) Margo Waterval 위원 면담

- NGO 들은 외국인 구금센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발언,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인신매매 이슈(필리핀 여성 사건), 이주노동자의 작업장 변경, 다문화가정에서의 외국인 보호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함.
- Waterval 위원은 남녀차별, 가정폭력, 인종기반폭력, 출입국관련 문제, 추방, 구금, 인신매매, 아동이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함. 인신매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건정보와 외국인 구금시설의 무기한 구금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을 요구함.

## 2) Nigel Rodley 위원 면담

- NGO 들은 고문 및 독방구금, 양심적 병역거부, 자유권규약 22 조 유보, 인권위 독립성,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시 성전환 수술 요구하고 입영을 위해서 성전환수술을 강제하는 현실, 변호인 접근권, 낮은 독직폭행 기소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서 탈북자 변호인 접근권이 부정되는 현실, 장기간 구금, 시설내 사생활 보호가 안되는 점 등, 군사법원,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전교조 법외노조화, 국정교과서 문제 등을 언급함.
- Rodley 위원은 고문, 양심적 병역거부자, 22 조에 대한 유보,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함.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가 2010 년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어서 한정적이라고 지적함. 당사자가 직접 자유권 위원회에 와서 의견을 주는 것이 인상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문제를 제기 안 하는 게 나올 수 있다는 조언을 해줌.

## 3) Yuval Shany 위원 면담

- NGO 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진실적시 명예훼손 적용,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시민사회 활동 처벌, 국가정책과 의견에 반하는 집단 대상으로 종북낙인, 국가보안법, 아동출생신고제,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집회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적용, 군사법원의 판사 구성 문제 등을 언급함.
- Shany 위원은 한국에서 동성커플을 인정하는지, 명예훼손이 민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질문함. 특히 대중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집회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입장인지를 다시 물어봄.

## 4) Konstantine Vardzelashvili 위원 면담

- NGO 들은 진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문제 및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 및 기지국수사에 대해 문제 제기함.
- Vardzelashvili 위원은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조건에 대한 자세한 질문과 함께 정부 비판자 처벌에 명예훼손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통신자료제공 및



기지국수사에 대한 질문을 함.

### 5) Wan Jun Seow (Sarah Cleveland 위원외 어시스턴트)

- NGO 들은 낙태와 관련해 이미 CEDAW 에서 권고를 잘 받았기 때문에 이번 자유권 규약 심의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관련 단체의 입장을 전달함.
- Seow 씨는 한국에서 낙태가 위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낙태를 해야 하는 여성들은 어떤 시설에서 낙태를 하는지, 성별/연령대별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 관련 통계가 있는지, 단순히 나이든 사람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함.

### 3. 자유권 위원들과의 비공식 브리핑

- 참석위원: Photini Pazartzis, Ivana Jelic, Yuji Iwasawa, Duncan Muhumuza Laki, Anja Seibert-Fohr, Sarah Cleveland, Nigel Rodley, Yuval Shany
- NGO 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포괄적 차별금지법(인종차별, LGBTI),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명예훼손 적용, 변호인 접견 제한 조치, 미신고 집회에 대한 탄압, 차별 사용, 아동의 출생등록(출생후 신고전 아동 보호 불가)과 미혼모 보호의 미흡,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차별 증폭,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해 비정규직 비율 증가, 통합진보당 해산, 국가보안법 7 조의 개정만이 아닌 전면 폐지의 필요성, 통합진보당 해산 후 소속 위원들의 자격박탈 문제, 통합진보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지속적 탄압, 경찰에 의한 통신장비의 일상적 감시가 영장 없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점 등을 언급했으며, 반테러법 제정은 궁극적으로 인권침해 확대할 것이므로 제정 촉구 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함.
- Seibert-Fohr: 인권 일반, 이주노조(MTU) 대법원 판결, 이주노조 합법화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질문함.
- Cleveland: 정규직, 비정규직, 여성남성 노동자 관련해서 더 높은 여성 비정규직 비율을 언급하며 어떤 이유에서 여성 비정규직이 더 많다고 보는지 질문함. 낙태에 대한 배우자 동의와 배우자 강간 처벌 관련해서 추가 질문함.
- Rodley: 집회에서 무력사용과 '과도한' 무력사용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함. 집회 관련 1-2 개의 사례를 제시하여 요점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
- Shany: 통합진보당 관련해서 질문. 새로운 강령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과거 당원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한이 있는지 질문함.

### III.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한글)

전 문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 제1부

##### 제1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2부

#####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가.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나.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다.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제4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 **제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부**

####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 **제8조**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가.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 나. 제3항 “가”호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다.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나”호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의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 (2) 군사적 성격의 의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의무
  - (3)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의무
  - (4)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의무

##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가.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나.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지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3.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증에 대하여서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나.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다.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라.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마.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바.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는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15조**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제23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중 및 혼인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제24조**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후 즉시 등록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 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 나.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 다. 일반적인 평등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 **제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제4부**

### **제28조**

1. 인권이사회(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도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명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3. 이사회위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 **제29조**

1. 이사회위원은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선거를 위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이하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동일인이 재지명받을 수 있다.

### **제30조**

1. 최초의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34조에 따라 선언된 결원의 보충선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위원의 구성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전에, 이 규약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이사회위원후보 지명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와같이 지명된 후보들을 지명국 이름의 명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1개월전에 동 명단에 규약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이사회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 이 규약당사국회합에서 실시된다. 이 회합은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 **제31조**

1. 이사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이사회 선거에 있어서는 위원의 공평한 지리적 안배와 상이한 문명형태 및 주요한 법률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 **제32조**

1. 이사회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9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9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후 즉시 제30조 제4항에 언급된 회합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2. 임기 만료시의 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전기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 **제33조**

1. 이사회 어느 한 위원이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 성격의 결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다른 위원 전원이 생각할 경우, 이사회 의장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때 동 위원의 결석을 선언한다.

2. 이사회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그 좌석의 결석을 선언한다.

### **제34조**

1. 제33조에 의해 결석이 선언되고, 교체될 결석위원의 잔여임기가 결석선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결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와같이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작성, 이를 이 규약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 제33조에 따라 선언되는 결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결석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 **제35조**

이사회 위원은 국제연합총회가 이사회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에게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는다.

### **제36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정상 이사회 효과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 **제37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최초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회의 이후에는 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이사회는 통상 국제연합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다.

### **제38조**

이사회의 각 위원은 취임에 앞서 이사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제39조**

1. 이사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개선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가. 의사정족수는 위원 12인으로 한다.
  - 나.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 **제40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 가. 관계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발효후 1년 이내
  - 나.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자체는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조 제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4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 심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의 통보는 이 규약의 당사국중 자국에 대한 이사회의 그러한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가.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든가, 현재 취하고 있든가 또는 취할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나.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관련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당사국중 일방에 의한 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다. 이사회는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그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이사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 토의를 가진다.

마. “다”호의 구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바. 이사회는 회부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나”호에 언급된 관계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 “나”호에서 언급된 관계당사국은 당해문제가 이사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아. 이사회는 “나”호에 의한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자. “마”호의 구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키고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의 보고서는 관계당사국에 통보된다.

2. 이 조의 제규정은 이 규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어떠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계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 **제42조**

1. 가.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규약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나.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모두 수락될 수 있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인권이사회위원중에서 인권이사회 위원 3분의 2의 다수결투표로 선출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은 관계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41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또한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 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동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계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서 임명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 역무를 제공한다.

6. 이사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또는 당해문제를 접수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관계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당해문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당해문제의 심의현황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나. 조정위원회가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할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다. 조정위원회가 “나”호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는 관계당사국간의 쟁점에 관계되는 모든 사실문제에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 및 구두의견의 기록을 포함한다.

라. “다”호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계당사국은 동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의 수락여부를 통고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제41조에 의한 이사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관계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모든 경비를 균등히 부담한다.

10.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의하여 관계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제43조**

이사회의 위원과 제42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 **제44조**

이 규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설립헌장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헌장 및 협약 하에서의 인권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 규약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중인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45조**

이사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한다.

### **제5부**

#### **제46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47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지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6부**

#### **제48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는 국제연합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 **제49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 **제50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 **제5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 **제52조**

제4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제48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49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5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 **제53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 등본을 송부한다.

## **IV.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200A (XXI) of 16 December 1966  
entry into force 23 March 1976,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Recognizing that these rights derive from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Recogniz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deal of free human beings enjoying civil and political freedom and freedom from fear and want can only be achieved if conditions are created whereby everyone may enjoy his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well as hi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ing the obligation of State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promote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Realizing that the individual, having duties to other individuals and to the community to which he belongs, is under a responsibility to strive for the promotion and observance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Agree upon the following articles:

### **PART I**

#### **Article 1**

1. All peoples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y virtue of that right they freely determine their political status and freely pursue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2. All peoples may, for their own ends, freely dispose of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without prejudice to any obligations arising out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based upon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and international law. In no case may a people be deprived of its own means of subsistence.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ncluding those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Non-Self-Governing and Trust Territories, shall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shall respect that righ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PART II**

#### **Article 2**

1.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respect and to ensure to all individuals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2. Where not already provided for by existing legislative or other measures,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take the necessary steps,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to adopt such laws or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give effect to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3.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 (a) To ensure that any person whose rights or freedoms as herein recognized are violated shall have an effective remedy, notwithstanding that the violation has been committed by persons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 (b) To ensure that any person claiming such a remedy shall have his right thereto determined by competent judicial,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authorities, or by any other competent authority provided for by the legal system of the State, and to develop the possibilities of judicial remedy;
- (c) To ensure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nforce such remedies when granted.

### **Article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ensure the equal right of men and women to the enjoyment of all civil and political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venant.

### **Article 4**

1. In time of public emergency which threatens the life of the nation and the existence of which is officially proclaimed,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may take measures derogating from their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venant to the extent strictly required by the exigencies of the situation,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ir othe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do not involve discrimination solely on the ground of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or social origin.

2. No derogation from articles 6, 7, 8 (paragraphs 1 and 2), 11, 15, 16 and 18 may be made under this provision.

3.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availing itself of the right of derogation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other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hrough the intermediary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provisions from which it has derogated and of the reasons by which it was actuated. A further communication shall be made, through the same intermediary, on the date on which it terminates such derogation.

### **Article 5**

1.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recognized herein or at their limitation to a greater extent than is provided for in the present Covenant.

2. There shall be no restriction upon or derogation from an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recognized or existing in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pursuant to law, conventions, regulations or custom on the pretext that the present Covenant does not recognize such rights or that it recognizes them to a lesser extent.

## **PART III**

### **Article 6**

1. Every human being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This right shall be protected by law.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life.

2. In countries which have not abolished the death penalty, sentence of death may be imposed only

for the most serious crim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in force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crime and not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and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is penalty can only be carried out pursuant to a final judgement rendered by a competent court.

3. When deprivation of life constitutes the crime of genocide, it is understood that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uthorize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to derogate in any way from any obligation assum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4. Anyone sentenced to death shall have the right to seek pardon or commutation of the sentence. Amnesty, pardon or commutation of the sentence of death may be granted in all cases.

5. Sentence of death shall not be imposed for crimes committed by persons below eighteen years of age and shall not be carried out on pregnant women.

6.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invoked to delay or to prevent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by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 **Article 7**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particular, no one shall be subjected without his free consent to medical or scientific experimentation.

#### **Article 8**

1.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slavery and the slave-trade in all their forms shall be prohibited.

2. No one shall be held in servitude.

3.

(a) No one shall be required to perfo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b) Paragraph 3 (a) shall not be held to preclude, in countries where imprisonment with hard labour may be imposed as a punishment for a crime, the performance of hard labour in pursuance of a sentence to such punishment by a competent court;

(c)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i) Any work or service, no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normally required of a person who is under detention in consequence of a lawful order of a court, or of a person during conditional release from such detention;

(ii) Any service of a military character and, in countries where conscientious objection is recognized, any national service required by law of conscientious objectors;

(iii) Any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or calamity threatening the life or well-being of the community;

(iv)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normal civil obligations.

#### **Article 9**

1. Everyone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No one shall be deprived of his liberty except on such grounds and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 as are established by law.

2. Anyone who is arrested shall be informed, at the time of arrest, of the reasons for his arrest and shall be promptly informed of any charges against him.

3. Anyone arrested or detained on a criminal charge shall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 or other officer authorized by law to exercise judicial power and shall be entitled to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or to release. It shall not be the general rule that persons awaiting trial shall be detained in custody, but release may be subject to guarantees to appear for trial, at any other stage of the judicial proceedings, and, should occasion arise, for execution of the judgement.

4. Anyone who is deprived of his liberty by arrest or detention shall be entitled to take proceedings before a court, in order that that court may decide without delay on the lawfulness of his detention and order his release if the detention is not lawful.

5. Anyone who has been the victim of unlawful arrest or detention shall have an enforceable right to compensation.

#### **Article 10**

1. All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shall be treated with humanity and with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2.

(a) Accused persons shall,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be segregated from convicted persons and shall be subject to separate treatment appropriate to their status as unconvicted persons;

(b) Accused juvenile persons shall be separated from adults and brought as speedily as possible for adjudication.

3. The penitentiary system shall comprise treatment of prisoners the essential aim of which shall be their reformation and social rehabilitation. Juvenile offenders shall be segregated from adults and be accorded treatment appropriate to their age and legal status.

#### **Article 11**

No one shall 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inability to fulfil a contractual obligation.

#### **Article 12**

1. Everyone lawfully within the territory of a State shall, within that territory, have the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and freedom to choose his residence.

2. Everyone shall be free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3. The above-mentioned right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strictions except those which are provided by law, are necessary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dre public),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other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4.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the right to enter his own country.

#### **Article 13**

An alien lawfully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be expelled therefrom only in pursuance of a decision reached in accordance with law and shall, except where compelling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otherwise require, be allowed to submit the reasons against his expulsion and to have his case reviewed by, and be represented for the purpose before, the competent authority or a person or persons especially design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 **Article 14**

1. All persons shall be equal before the courts and tribunals. In the determination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or of his rights and obligations in a suit at law, everyone shall be entitled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The press and the public may be excluded from all or part of a trial for reasons of morals,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national security in a democratic society, or when the interest of the private lives of the parties so requires, or to the extent strictly necessary in the opinion of the court in special circumstances where publicity would prejudice the interests of justice; but any judgement rendered in a criminal case or in a suit at law shall be made public except where the interest of juvenile persons otherwise requires or the proceedings concern matrimonial disputes or the guardianship of children.

2. Everyon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 shall have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3. In the determination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everyone shall be entitled to the following minimum guarantees, in full equality:

(a) To be informed promptly and in detail in a language which he understands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charge against him;

(b) To have adequate time and facilities for the preparation of his defence and to communicate with counsel of his own choosing;

(c) To be tried without undue delay;

(d) To be tried in his presence, and to defend himself in person or through legal assistance of his own choosing; to be informed, if he does not have legal assistance, of this right; and to have legal assistance assigned to him, in any case where the interests of justice so require, and without payment by him in any such case if he does not have sufficient means to pay for it;

(e) To examine, or have examined, the witnesses against him and to obtain the attendance and examination of witnesses on his behalf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witnesses against him;

(f) 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he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in court;

(g) Not to be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himself or to confess guilt.

4. In the case of juvenile persons, the procedure shall be such as will take account of their age and the desirability of promoting their rehabilitation.

5. Everyone convicted of a crime shall have the right to his conviction and sentence being reviewed by a higher tribunal according to law.

6. When a person has by a final decision been convicted of a criminal offence and when subsequently his conviction has been reversed or he has been pardoned on the ground that a new or newly discovered fact shows conclusively that there has been a miscarriage of justice, the person who has suffered punishment as a result of such conviction shall be compensated according to law, unless it is proved that the non-disclosure of the unknown fact in time is wholly or partly attributable to him.

7. No one shall be liable to be tried or punished again for an offence for which he has already been finally convicted or acquit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enal procedure of each country.

#### **Article 15**

1. No one shall be held guilty of any criminal offence on account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did not constitute a criminal offence,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a heavier penalty be imposed than the one that was applicable at the time when the criminal offence was committed. If, subsequent to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provision is made by law for the imposition of the lighter penalty, the offender shall benefit thereby.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judice the trial and punishment of any person for any act or omission which,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was criminal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the community of nations.

**Article 16**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Article 17**

1.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his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unlawful attacks on his honour and reputation.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Article 18**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have or to adopt a religion or belief of his choice, and freedom, either individually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worship, observance, practice and teaching.
2. No one shall be subject to coercion which would impair his freedom to have or to adopt a religion or belief of his choice.
3. Freedom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s may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4.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have respect for the liberty of parents and, when applicable, legal guardians to ensure the religious and moral education of their children in conformity with their own convictions.

**Article 19**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2.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his choice.
3. The exercise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carries with it spe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t may therefore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but these shall only be such as are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 (a)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s of others;
  - (b)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Article 20**

1. Any propaganda for war shall be prohibited by law.
2. Any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shall be prohibited by law.

**Article 21**

The right of peaceful assembly shall be recognized.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impo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rticle 22**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with others, including the right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2.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which ar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the imposition of lawful restrictions on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nd of the police in their exercise of this right.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uthorize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Convention of 1948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which would prejudice, or to apply the law in such a manner as to prejudice, the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at Convention.

#### **Article 23**

1.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2. The right of men and women of marriageable age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shall be recognized.
3. No marriage shall be entered into without the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4.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equality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spouse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In the case of dissolution, provision shall be made for the necessary protection of any children.

#### **Article 24**

1. Every child shall have, without any discrimination as to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or birth, the right to such measures of protection as are required by his status as a minor, on the part of his family, society and the State.
2. Every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a name.
3. Every child has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 **Article 25**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and the opportunity, without any of the distinctions mentioned in article 2 and without unreasonable restrictions:

- (a) To take part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 (b) To vote and to be elected at genuine periodic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ballot, guaranteeing the free expression of the will of the electors;
- (c) To have access, on general terms of equality,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

#### **Article 26**

All persons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 In this respect, the law shall prohibit any discrimination and guarantee to all persons equal and effectiv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 **Article 27**

In those States in which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ies exist, persons belonging to such

minorities shall not be denied the right, in community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ir group, to enjoy their own culture, to profess and practise their own religion, or to use their own language.

#### **PART IV**

##### **Article 28**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Human Rights Committee (hereafter referred to in the present Covenant as the Committee). It shall consist of eighteen members and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hereinafter provided.
2.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ationals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ho shall be persons of high moral character and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the usefulness of the participation of some persons having legal experience.
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and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 **Article 29**

1.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possessing the qualifications prescribed in article 28 and nominated for the purpose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2.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nominate not more than two persons. These persons shall be nationals of the nominating State.
3. A person shall be eligible for renomination.

##### **Article 30**

1. The initial election shall be held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2. At least four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o the Committee, other than an election to fill a vacancy decl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written invitation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o submit their nominations for membership of the Committee within three months.
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the persons thus nominated, with an indication of the States Parties which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no later than one month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4. Election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at a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convened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At that meeting, for which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nominees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 **Article 31**

1. The Committee may not include more than one national of the same State.
2. In the election of the Committee,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membership and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different forms of civilization and of the principal legal systems.

**Article 32**

1.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if renominated. However, the terms of nine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nin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meeting referred to in article 30, paragraph 4.
2. Elections at the expiry of office shall be held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articles of this part of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33**

1. If, in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other members, a member of the Committee has ceased to carry out his functions for any cause other than absence of a temporary character,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shall notif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n declare the seat of that member to be vacant.
2. In the event of the death or the resignation of a member of the Committee, the Chairman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declare the seat vacant from the date of death or the date on which the resignation takes effect.

**Article 34**

1. When a vacancy is decl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and if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 to be replaced does not expire within six months of the declaration of the vacanc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notify each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hich may within two months submit nomin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for the purpose of filling the vacancy.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the persons thus nominated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he election to fill the vacancy shall then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e present Covenant.
3. A member of the Committee elected to fill a vacancy decl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shall hold office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of the member who vacated the seat on the Committee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article.

**Article 35**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receive emoluments from United Nations resources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General Assembly may decide, having regard to the importance of the Committee's responsibilities.

**Article 36**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under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37**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convene the initial meeting of the Committee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2. After its initial meeting, the Committee shall meet at such times as shall be provided in its rules of procedure.
3.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meet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or at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 **Article 38**

Every member of the Committee shall, before taking up his duties, make a solemn declaration in open committee that he will perform his functions impartially and conscientiously.

#### **Article 39**

1.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officers for a term of two years. They may be re-elected.
2.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but these rules shall provide, inter alia, that:
  - (a) Twelve members shall constitute a quorum;
  - (b)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made by a majority vote of the members present.

#### **Article 40**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submit reports on the measures they have adopted which give effect to the rights recognized herein and on the progress made in the enjoyment of those rights:
  - (a) Within one year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for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 (b) Thereafter whenever the Committee so requests.
2. All reports shall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them to the Committee for consideration. Reports shall indicate the factors and difficulties, if any,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venant.
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ommittee, transmit to the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copies of such parts of the reports as may fall within their field of competence.
4. The Committee shall study the reports submitted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t shall transmit its reports, and such general comments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the States Parties. The Committee may also transmit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se comments along with the copies of the reports it has received from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5.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may submit to the Committee observations on any comments that may be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f this article.

#### **Article 41**

1.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at any time declare under this article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to the effect that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venant. Communications under this article may be received and considered only if submitted by a State Party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recognizing in regard to itself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No communication shall be received by the Committee if it concerns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such a declaration. Communications receiv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 (a) If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consider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it may, by written communication, br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at State Party.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communication the receiving State shall afford the State which sent the communication an explanation, or any other

statement in writing clarifying the matter which should include, to the extent possible and pertinent, reference to domestic procedures and remedies taken, pending, or available in the matter;

(b) If the matter is not adjusted to the satisfaction of both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in six months after the receipt by the receiving State of the initial communication, either State shall have the right to refer the matter to the Committee, by notice given to the Committee and to the other State;

(c) The Committee shall deal with a matter referred to it only after it has ascertained that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have been invoked and exhausted in the matter,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is shall not be the rule where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is unreasonably prolonged;

(d) The Committee shall hold closed meetings when examining communications under this article;

(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c), the Committee shall make available its good offices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a friendly solution of the matter on the basis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f) In any matter referred to it, the Committee may call upo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to supply any relevant information;

(g)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shall have the right to be represented when the matter is being considered in the Committee and to make submissions orally and/or in writing;

(h) The Committee shall,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notice under subparagraph (b), submit a report:

(i)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e) is reached, the Committee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and of the solution reached;

(ii)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e) is not reached, the Committee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the written submissions and record of the oral submissions made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be attached to the report. In every matter, the repor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2.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come into force when ten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have made declaration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uch declarations shall be deposited by the States Parties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hereof to the other States Parties. A declara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Such a withdrawal shall not prejudice the consideration of any matter which is the subject of a communication already transmitted under this article; no further communication by any State Party shall be received after the notification of withdrawal of the declaration has been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unless the State Party concerned has made a new declaration.

## **Article 42**

1.

(a) If a matter referred to th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is not resolv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he Committee may, with the prior consent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ppoint an 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The good offices of the Commission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an amicable solution of the matter on the basis of respect for the present Covenant;

(b) The Commission shall consist of five persons acceptable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I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fail to reach agreement within three months on all or part of the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concerning whom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of the Committee from among its members.

2.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They shall not be nationals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or of a State not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or of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41.
3. The Commission shall elect its own Chairman and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4. The meetings of the Commission shall normally be held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or at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However, they may be held at such other convenient places as the Commission may determine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5. The secretariat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shall also service the commissions appointed under this article.
6. The information received and collated by the Committee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Commission and the Commission may call upo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o supply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7. When the Commission has fully considered the matter, but in any event not later than twelve months after having been seized of the matter, it shall submit to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a report for communication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 (a) If the Commission is unable to complete its consideration of the matter within twelve months, it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status of its consideration of the matter;
  - (b) If an amicable solution to the matter on tie basis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is reached, the Commission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and of the solution reached;
  - (c)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b) is not reached, the Commission's report shall embody its findings on all questions of fact relevant to the issues betwee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nd its views on the possibilities of an amicable solution of the matter. This report shall also contain the written submissions and a record of the oral submissions made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 (d) If the Commission's report is submitted under subparagraph (c),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within three months of the receipt of the report, notify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whether or not they accept the contents of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8.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mmittee under article 41.
9.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share equally all the expen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estimates to be provid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10.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empowered to pay the expen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f necessary, before reimbursement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9 of this article.

#### **Article 4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of the 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s which may be appointed under article 42, shall be entitled to the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experts on 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as laid down in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4**

The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venant shall apply without prejudice to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by or under the constituent instruments and the conventions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shall not prevent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from having recourse to other procedures for settling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general or special international agreements in force between them.

**Article 45**

The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hroug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 annual report on its activities.

**PART V**

**Article 46**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interpreted as impairing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constitution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which define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in regard to the matters dealt with in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47**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interpreted as impairing the inherent right of all peoples to enjoy and utilize fully and freely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PART VI**

**Article 48**

1. The present Covenant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r member of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by any State Party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by any other State which has been invi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o become a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2. The present Covenant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this Covenant or acceded to it of the deposit of eac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49**

1. The present Covena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Covenant or acceding to it after the deposit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the present Covena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 **Article 50**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shall extend to all parts of federal States without any limitations or exceptions.

#### **Article 51**

1.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hereupon communicate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ith a request that they notify him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s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2. Amendments shall come into force when they have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3. When amendments come into force, they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them,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and any earlier amendment which they have accepted.

#### **Article 52**

1. Irrespective of the notifications made under article 48, paragraph 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of the following particulars:

- (a)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under article 48;
- (b)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under article 49 and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any amendments under article 51.

#### **Article 53**

1. The present Covenant,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Covenant to all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48.



# V. 쟁점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2015년 1월 14일 제출

## 서문

2006년 3차 국가보고서 심의 이후 한국의 자유권은 전반적으로 후퇴되었다. 2008. 5. 미국 소고기 수입반대를 이유로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던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sup>1</sup> 정부는 국가정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 참여, 노동자들의 파업을 포함한 노동권의 행사, 인터넷상의 글 게시 등에 대하여 체포<sup>2</sup>, 기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이를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 10.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sup>3</sup> 정부는 2009. 3.에 국가인권위의 조직과 예산, 인원을 21% 가량 감축시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수는 2008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최근에 북한이탈주민을 희생양으로 한 간첩조작사건도 발생하였다. 과거에는 유학생, 납북어민 등이 희생양이었으나 대규모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그 타겟이 되고 있다. 국정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트위터 글을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대선에 개입했다. 2014년 12월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판결이 내려져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더불어 구조적인 남녀차별, 비정규직 차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은 여전히 심각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발언이 심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

<sup>1</sup>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8. 5. 2.부터 2008. 8. 15.까지 106 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촛불집회 및 시위가 2,398 회 진행되었고 참가인원이 932,000 명이라고 하며(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백서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2009, 3 면) 정부(특히 경찰)가 집회나 시위의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참가자수를 축소하여 주장하는 관행에 비추어 보면 실제 참여자수는 이를 상회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sup>2</sup> 정부가 밝힌 자료(앞의 수사백서, 3 면)에 의하면 촛불집회, 시위로 인하여 체포된 후 수사절차가개시된 시민의 숫자가 1,374 명에 달한다고 한다.

<sup>3</sup>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8485.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8485.html)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군대 내에서의 인권 침해 실태도 우려스럽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년 구속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수도 500여명에 달하고 사형제도 여전히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하며, 귀 위원회가 정부에게 자유권 규약의 이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질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반적 사항 (General Comments)**

### **1. 법무부 인권국 설립**

정부는 2006년 5월 법무부 인권국을 신설하여 인권국으로 하여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비롯한 인권정책의 수립·집행, 국제인권관련 업무 주도, 인권침해사건의 자체 조사와 제도 개선, 인권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para 2).

그러나 실제 법무부 인권국에서 주요 결정을 담당하는 국장, 담당 과장들이 모두 검사들로 다양성이 부족하고 인권국에 근무하는 임기도 1년에 불과하여 인권국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본질적 한계가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법무부 인권국이 인권옹호, 추진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 담당과장 등 주요 인력을 외부 인권전문가 또는 활동가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가?
- 인권침해신고센터 설립 후 받은 인권침해 관련 자료 및 각 사건에 대한 인권국의 답변 자료를 제출하라.

###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이행**

정부는 2007년부터 5년 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하였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그 계획의 확정, 이행을 점검하고 매년 이를 일반에 공개, 배포하였다고 보고하였다(para 4, 5).

하지만 현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과정(나아가 그 이행점검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내지 의견수렴 과정이 제도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배제되어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NAP 의 수립, 확정, 이행 평가 등의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하라.

### **3. 자유권 규약 홍보**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유권 규약 및 최종견해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para 6, 7) 그러나 일반인들이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언론에 의한 홍보도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언론을 통한 자유권 규약 및 최종견해의 홍보 횟수를 제시하고 공무원 훈련 교육 과정에서 이를 홍보한 사례를 공개하라.
- 자유권 규약 및 최종견해에 관해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실제 이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 게재 이외의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 **4. 인권교육**

정부는 인권교육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보고했다(para 9). 그러나 국가 주도 인권교육의 일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교육의 결과 인권침해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없어 교육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공무원, 법집행공무원, 군대, 학교에서 진행한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커리큘럼, 강사진, 해당 교육 대상자의 평가서를 공개하라.
- 정부는 공무원, 법집행공무원, 군대, 학교 등에서 진행하는 인권교육 예산이 얼마인지 제시하고 해당 부처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하라.
- 정부는 공무원, 법집행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한 후 실제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

### **5. 테러관련 법률과 자유권 규약의 조화**

테러와의 전쟁과 한국군의 아프간 이라크 파병 이후 반테러 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축소되어오던 국정원의 역할도 다시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9.11 직후인 2001년 12월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국회가 가결한 이래, 테러방지기본법, 테러자금조달금지를위한법률(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G20정상회의경호안전을위한특별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테러방지를 빙자한 각종 통제 제도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2014년 현재 국회에는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성격상 감시와 감독이 불가능한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 실무 총괄 지휘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과도한 권한을 축소해야 할 정부가 국가정보원에게 아예 민간부분의 사이버 관련 정보들까지 종합,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가비밀지정은 최소화해야 하며 정보기관들의 활동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 Suggested Questions

-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반테러 관련 법안을 소개하고 반테러 관련 법안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들을 마련하였는지 밝혀라.
-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의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 

#### 6. 국가인권기구 업무 현황 / 독립성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현황 중 진정사건 처리현황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처리 현황을 밝히고 있다 (para. 20).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5호에 따라 접수된 진정 사건중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내용을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각하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라도 국제인권법 등의 차원에서 구제를 고려하거나 향후 인권 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다루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안들에 대하여 그 진정 내용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서 각하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권위원의 임명과 법조인 중심의 인권위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09년 인권위 조직 축소로 인권위의 독립성이 더욱 훼손되었으며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는 한국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2014년 3월에는 등급심사를 보류하면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위원의 인선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하였다.

#### **Suggested Questions**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건의 기각율과 각하율, 그리고 각각의 사유와 관련한 통계를 포함하여 2014년 현재까지의 진정사건 처리 자료 현황을 추가로 제출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직원들을 임명할 때 인권 전문성, 관련 분야 경험 등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또한 인권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위원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인선절차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
- ICC 승인소위 보류 결정에 대한 정부의 추후 조치는 무엇이며 인권위의 독립성 등과 관련한 ICC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 **7. 규약의 효력 및 재판에 원용된 사례**

정부는 헌법에 의해 비준한 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고 자유권 규약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받게 되며,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개선권고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para 22). 그러나 정부는 국제인권규약을 국내적으로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사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소극적이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조약기구, 특히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받은 권고사항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근거 법률이나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 정부는 실제 재판에서 국제인권규약이 판단의 기준으로 원용된 통계를 제시하라.

### **8. 자유권 규약 개인진정 현황 및 국내 이행 노력**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개인진정 관련 결정이 여러 차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para 26).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정이 수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았다. 그 이전의 국가보안법 관련 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14년 초 이란 출신의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과 관련한 개인진정과 관련해서 돌아가면 고문 등을

당한다는 이유로 송환하지 말라는 취지의 자유권규약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해당 진정인을 송환하지는 않았으나 그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개인진정 권고 이행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정부는 2014 년 초에 결정된 난민신청자가 강제송환 될 경우 고문을 당한다는 것이 인정된 개인진정(CCPR/C/110/D/1908/2009)에 대해서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정부의 개인진정 관련 TF 의 예산, 인력배정 현황과 TF 의 구체적인 활동 결과를 제시하라.(para 29)

## **제1조 자결권**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자결권 실현을 촉진하고 팔레스타인의 빈곤 감소 및 경제 사회발전에 위한 정부의 여러 조치를 보고하였다.(para.35)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팔레스타인의 자결권 실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팔레스타인에 가해지는 무차별한 공격과 인권침해가 중단되는 것이 팔레스타인 자결권 실현의 시작임에도 한국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23일 제21차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세션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에 기권한 바 있다. 또한 해외 인권침해국에 대한 무기수출 중단 권고의 의무가 있는 만큼 한국산 무기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에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수출 중단을 고려해야 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Suggested Questions**

-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공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제2조 차별없는 자유권 존중, 자유권 실현**

### **1. 차별금지법 제정 미 이행**

정부는 차별금지법 관련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추진 과제’(2013. 2.) 로 꼽았고 4차 보고서를 통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para. 378)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공개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진행 내용 및 구체적인 입법 과정을 제시하거나 관련 단체들과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4 차 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법 제정 추진단, 간담회,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연구 등 차별금지법제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제출하시오.
- 정부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time plan)을 제시하고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수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밝히시오.

## 2. 동성간 합의 하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정부는 군형법 92조 6<sup>4</sup>의 폐지 가능성을 재검토하라는 2012 UPR 권고<sup>5</sup>에 대해 이 조항이 추행 행위(indecent act)의 처벌을 목적으로 할 뿐, 성적지향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주장<sup>6</sup>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 조항에는 항문성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을 띠지 않고 상호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sup>7</sup> 군형법 제92조부터 제92조5에 의해 이성 간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동성간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92조의6을 통해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군대 내 이성 간의 성행위는 징계로 규율<sup>8</sup>하고 있는 반면, 동성간 성행위는 징역형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

<sup>4</sup> 현행 군형법 제 92 조의 6 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 육군전시법상 ‘소도미(sodomy)’ 처벌조항을 계수한 것으로서, 1962 년 군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군형법 제 92 조에 규정하여 왔다. 2013 년 3 월 이전에는 제 92 조의 5 에서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sup>5</sup> 124. 34. Review the possibility of repealing laws that criminalize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within the military (United States of America);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HRC/22/10)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2/AHRC2210\\_English.pdf](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2/AHRC2210_English.pdf))

<sup>6</sup> 22. Recommendation 34. Article 92(5)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has the purpose of maintaining discipline within the military by punishing specific acts of indecent conduct; it is not a regulation for the punishment of sexual orientation itself.- Views on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voluntary commitments and replies presented by the State under review (A/HRC/22/10/Add.1)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2/A.HRC.22.10.Add.1\\_en.pdf](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2/A.HRC.22.10.Add.1_en.pdf))

<sup>7</sup> 2004. 1. 1.부터 2007. 12. 31.까지 군형법상 추행죄(현행 「군형법」 제 92 조의 5, 구 「군형법」 제 92 조)가 적용된 사건은 모두 176 건이다. 이 중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 행위는 4 건(3 건 선고유예, 1 건 기소유예), 나머지 172 건은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군형법상 추행죄가 적용된 사례이다.(이경환,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하여」, 『공익과 인권』제 5 권 제 1 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8. 2.)

<sup>8</sup> 軍, 해외 파병부대 性문란 사고 '쉬쉬', 한국일보 2010. 10. 03 (<http://www.hankookilbo.com/v/0df540a9293a433d8e78587ae7f7cab8>)

것은 제92조의6이 이성 간 성행위와 동성 간 성행위를 다르게 대우하는 차별적 조치로서 사실상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조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규범력을 지닌 규정으로 존재해 왔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법적 근거가 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군대 내 성소수자에 대하여 성적접촉 유무와 관계없이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동성애적 성적지향은 범죄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편견을 조장할 여지가 크다.

### Suggested Questions

- 군대 내 이성 간의 성행위는 징계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동성 간 성행위는 징역형으로 규율하고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
- 군형법 제 92 조부터 제 92 조 5 에 의해 강제력이 동원된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92 조의 6 을 통해 합의된 성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

### 3. 가족구성권의 차별

2014년 한 남성 동성애자 커플은 행정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현행 민법상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으며 수리할 수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sup>9</sup> 관련 법규에서 모든 비혼자를 동일하게 대우한다고 해도,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동성커플에 대한 차등대우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이는 자유권규약 상 차별금지위반이다. 또한 비결혼 동성 커플을 비결혼 이성커플(사실혼)에 비해 차등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한국에는 동성결합 혹은 동성결혼(same-sex union or same-sex marriage)에 대한 국가적 승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4.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평등권의 보장

정부는 4차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보장관련 위헌결정 사례를 보고하였다.(para. 51 a)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는 2007년에 폐지되었고 정부는 현재 고용허가제를 실시 중이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sup>9</sup> South Korea's LGBT Community Is Fighting for Equal Rights  
<http://time.com/6575/south-koreas-lgbt-community-is-fighting-for-equal-rights/>



사업장변경 횟수를 3회(3년 내에, 2년 추가된 경우에는 그 동안 2회)로 제한하고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등 외국인근로자는 한국 국적의 근로자에 비하여 명시적으로 차별 받고 있다.

또한 정부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언급하고 있는데(para. 51 b)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 상황을 고려한 일응의 기준일 뿐, 그에 따르더라도 투표의 가치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인구 편차(예를 들어 위 결정에서는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을 4:1까지 허용)는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결정을 들어서 바로 선거권의 평등이 보장되는 것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사업장변경 제한 등을 포함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차별하는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지 밝혀라.
- 정부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선출과정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가능한 최소화되도록 어떠한 내용의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라.
- 정부는 좀 더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답변하고, 연구내용이 있다면 이를 위원회에 답변하라.

#### **5. 학생 자유권 실현의 차별**

현행 법률체계에서 학교 내 학생들의 시민·정치적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학칙이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의해 한국 초·중·고교 학생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자의적으로 침해되고 있다.<sup>10</sup> 이를 위해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인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2010), 광주(2010), 서울(2011), 전북(2013)에서 제정되었다. 정부는 2012년 1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제기, 같은 해 1월 30일 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중단 명령 등을 신청한 바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학생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학칙들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

<sup>10</sup> 구체적으로 체벌, 강제이발을 포함한 두발·복장단속, 종교사학에서의 종교예배와 종교수업 강요, 정규 교육과정 외 수업 강요, 무작위 소지품 검사, 학생 표현의 자유 탄압, 학내집회 해산과 주최자에 대한 징계, 학생자치활동 탄압, 학교운영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 대한 보복성 징계 등이 있다.

## 제3조 남녀동등 권리 보장

### 1. 여성의 고위직 참여 확대

정부는 2010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 선거 시 지역구 여성의원 할당 의무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para. 56).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법과 제도의 개선에 따라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여성 당선자 비율이 여전히 15%에 못 미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선출된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없다<sup>11</sup>.

정부는 '양성평등채용 목표제'의 일환으로 여성관리자의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여성 관리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para. 57). 그러나 2013년까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5급 이상 여성관리직 공무원의 비율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sup>12</sup>.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의 여성 지원자 채용 비율은 2011년 기준 44.04%이나<sup>13</sup>, 2014년 6월 기준 조사된 여성임직원 현황을 보면, 전국의 30개 공기업 중 여성 임원을 보유한 곳은 두 곳에 불과하였고, 부장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1%를 넘는 곳도 두 곳에 불과해서<sup>14</sup> 여성 관리자의 수만 단순증가했고 공기업에 입사하고 난 후에 여성과 남성의 관리직으로의 승진 기회는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여성의 고위직 참여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정책 이외에 정부가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시하라.
- 여성의 관리직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제시하라.

### 2. 양성평등의식 확산

정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기관을 통해 양성평등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성차별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paras. 62-64).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양성평등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강사의 질 담보를 위한 정책을

---

<sup>11</sup>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sup>12</sup> 안전행정부(2013), 「2013 년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sup>13</sup> 박찬준(2011), 공기업·준정부기관 여성인력 채용과 운영현황,

한국조세연구원/여성정책연구원(2013),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p.44

<sup>14</sup> CEO 스코어(2014), 「공기업 30 곳(시장형/준시장형) 남녀 임직원 직급별 현황」

제시하고 해당 커리큘럼을 공개하라.

- 여성가족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라.

### 3. 성인지정책 추진

현재 성인지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와 다른 부처들(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이 상반되는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어 성인지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다른 부처들 간의 협력적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 지방의회가 성인지 예·결산서 심의 주체가 되었고, 지역여성의 참여도 확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지방의회가 성인지 관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액수가 크지 않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성인지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의 협력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 관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액수가 작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정부는 성인지 정책의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할 방안을 제시하라.

### 4.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추진

정부가 주장하는 단기간 정규직 모델(유연근무제)(para. 67)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지만 성별분업을 더욱 강화하고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으로 출산과 양육을 들고 있으나 (para. 67) 실제로 경력단절의 원인은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점과 직장내 성차별적인 문화 및 육아를 여성의 전담으로 보는 문화가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 남성중심적인 기업문화, 육아가 여성의 전담이라는 인식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단기간 정규직 모델(유연근무제)이 성별분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라.
- 정부는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정부는 국내의 장시간 노동 문화, 남성중심적인 기업문화, 육아가 여성의

전담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5.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정부는 성폭력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법률 제정 및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paras. 70-7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가중되면서 오히려 수사/재판기관에서 적극적 처벌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역고소, 역처벌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성폭력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전담재판부가 있으나 (para. 70) 그 보직이 2년 이내로 되어있어 성폭력 관련 전문성이 축적될 수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를 전후하여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무고죄 기소 통계의 변화가 있는지, 성별분리하여 답변하라.
- 정부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무고죄 기소 중 검찰의 인지에 의한 경우의 비율을 제시하고 다른 범죄와 관련한 무고죄 기소 중 검찰의 인지에 의한 경우의 비율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친고죄 폐지 이후 위 비율의 증감이 있었는지 답변하라.
- 정부는 성폭력전담 경찰, 검사, 재판부의 현황과 이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제시하라.

## 6.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노력

정부는 가정폭력/성폭력 대응을 위해 일련의 보호체계를 갖추고 피해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 (para. 75) 2010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및 2013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피해여성 중 62.7%가 외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0.2%만이 정부가 언급한 보호체계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이 여성가족부 일반회계가 아닌 여성발전기금과 범죄피해자지원기금 사업비로 수행되고 있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편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여성의 개인정보가 16개 정부부처가

공동 활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집적되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sup>15</sup> 업무 외에 개인정보를 열람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훈계나 주의에 그치고 있어 사후조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을 여성가족부의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하고 확대할 방안을 제시하라.
- 정부는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해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모두 지원할 방안을 제시하라.
- 정부는 가정폭력/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방안을 제시하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한 공무원들에 대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라.

### **7. 가정폭력 범죄 처벌 관련**

정부는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상담조건 기소유예 처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으나(para. 85-87)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의 내용을 공개하라.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중도 탈락한 경우 이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라.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재범률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라.

### **8. 배우자 강간**

정부는 배우자 강간에 대해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para. 92).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판례(para. 93)에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 ‘흉기 사용’ 등의 전제조건이 있다.

---

<sup>15</sup> 실제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누출이 심각하다고 드러났으며, 개발원에서 발견한 개인정보 불법접근 및 열람 의심사례는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10,566 건이었다.

2010년 여성가족부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갖거나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최근 1년간 성 학대 발생률은 10.4%로 높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4%의 여성이 최근 1년 이내에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2010년 이후 배우자 강간 행위로 처벌된 사례를 제시하라.

### **9. 성희롱 관련**

정부는 법률로 성희롱 관련 사항,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규정을 두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희롱 전담창구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paras. 94-96) 구체적인 활동 내용, 횟수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성희롱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사업장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각종 점검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나(para. 102)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교육의무대상기관의 교육방법, 내용, 횟수 등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라.
- 정부는 '성희롱 전담창구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하라.
- 정부는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

### **10. 스토킹 범죄**

정부는 스토킹과 관련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였으나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 괴롭힘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스토킹 처벌관련 발의안들 역시 형사 처벌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경범죄 처벌법에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규정이 도입된 2013년부터 4월부터 현재까지 경범죄로 처벌된 스토킹 범죄 건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라.

### **11. 여성의 노동권**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남녀 임금 격차 통계를 조사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의 1위(2012년 기준 37.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45%인것에 비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66%로 성별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여성이 훨씬 높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정규직 대비 39%로 심각한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의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sup>16</sup> 이로 인해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본인 돈으로 치료받아야 하며 부당해고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다.

### Suggested Questions

- 성별분업과 남녀임금격차,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무권리 상태에 있는 가사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제6조 생명권, 사형제도

### 1. 사형제에 대한 입장

정부는 사회현실, 국민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 폐지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para. 108). 정부는 2009년, 유럽 인도조약과 추가의정서, 유럽 형사사법공조협약<sup>17</sup> 등에 가입을 요청하면서 가입 시 사형의 비적용(non-application)을 선언하겠다고 유럽평의회에 약속한 바 있으며<sup>18</sup>, 이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에서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을 협약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2010년, 법무부장관은 사형집행시설의 추가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것이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19</sup> 현재까지도 정부는 사형제의

---

<sup>16</sup> 근로기준법 제 11 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sup>17</sup>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은 2011년 12월 29일 국내에 발효되었다.

<sup>18</sup> 정부 “사형 집행 않겠다” 유럽평의회에 약속, <한겨레> 2009. 9. 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4399.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4399.html),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374472.html](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374472.html)

<sup>19</sup> 이귀남 법무 “보호감호제 재도입”, <한겨레> 2010. 3. 1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0465.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0465.html),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410589.html](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410589.html)

실질적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사형 집행 대기 기간과 죄명을 포함한 사형확정자의 통계, 하급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상소 중인 재판 관련 통계를 제시하라.
- 정부는 1992 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사형대상 범죄 축소 관련 권고를 이행한 실적을 제출하라.
- 정부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 시 유럽평의회에 약속한 대로 사형집행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

## 제7조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

### 1. 수용자의 계구 사용과 징벌제도 개선

정부는 4차보고서에서 사슬을 폐지하고 현대적 보호장비를 추가했다고 밝혔다(para. 121), 그러나 보호장비는 여전히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형 집행 과정에서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해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등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지만 (para. 121) 징벌 중 88%는 가장 가혹한 징벌인 금치 위주로 집행되고 있다. 그리고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에 포함된 외부 위원도 교도소 소장이 임명 혹은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징벌결정 절차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과 보호장비 사용기간을 포함한 보호장비 사용 통계를 제시하라. 또한 징벌 통계, 특히 징벌 사유와 징벌의 종류, 징벌 기간을 포함한 통계를 제시하라.
- 정부는 금치 위주의 징벌 관행을 탈피하고 △실외운동 정지 △집필 제한 △서신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 수용자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처우를 징벌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징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가?
- 정부는 운동과 집필을 포함하여,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교도관의 의무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형 집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교도관의 지시불이행을 징벌사유로 규정하여 자의적인 징벌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 214 조 제 17 호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가?



- 정부는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중 퇴직 교도관의 비율, 징벌위원회의 징벌 기각률, 징벌 1 건당 징벌위원회의 평균 논의 시간 등 징벌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라. 또한 징벌대상자가 기피신청권 및 출석진술권을 행사한 건수 등 징벌부과 절차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제시하라.

## 2. 구금시설 내에서의 권리 구제절차

### 구금시설 내 청원제도의 실효성 결여

정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청원 제기 건수가 증가하는 등 청원제도가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para. 126) 실제 2013년까지의 청원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청원제기 건수에 비한 인용율은 평균 0.1% 안팎으로 그 실효성이 없다. 또한 정당한 청원임에도 청원이 집단으로 제출된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처우가 아닌 경우, 허위의 사실,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는 사유 등과 관련해 사전에 청원을 차단하고 있어 현실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2014 년 현재까지 제기된 구금시설 내 청원제도 통계와 청원 대비 인용되는 청원의 비율을 밝혀라.

### 교정시설 내 청원제도 운영 현황

정부는 청원제기 건수가 증가되었다고 밝혔으나 (para. 126) 청원 내용 중 실제 처우에 반영되거나 인용된 비율이 0.1% 안팎이며 청원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용자 스스로가 청원을 포기하는 취하율도 50%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청원 통계, 특히 인용률과 기각률, 취하율을 포함한 통계를 제시하라.

## 3.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 노력

정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전면개정과 그 모범사례를 포상하고 있다는 점,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교육과정과 '인권상담 전화'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들어 수사과정에서 비인도적 처우를 방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para 133). 그러나 현 제도 하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비인도적 처우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인권침해를 자행한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 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기소율이 낮고, 수사과정에서 비인도적 처우를 예방하는 효과도 미미하다.

### Suggested Questions

-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면개정 이전과 이후 고소·고발사건 수와 인권침해를 이유로 접수된 사건 중 기소 비율은 얼마인가.
- 수사과정에서의 비인도적 처우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 4. 학교 내 체벌과 비교육적 징벌

경기(2010), 광주(2010), 서울(2011), 전북(2013) 네 지역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반해 2011년 3월 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훈육의 방법을 정하게 해 학교에 따라 체벌을 용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시행령 31조 8항에서는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한 체벌만 금지하고 오리걸음이나 팔굽혀 펴기 등 기합성 체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학생의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고문 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학교 교사들 역시 학생 체벌을 여전히 교육적 관행으로 간주하고 있어 학교 내 체벌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한국 정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비인도적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5. 성전환자 성별정정시 강제수술요건

2006년 만들어진 대법원 “성전환자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은 성전환자들이 성별정정을 신청할 시 참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지침이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 있는 법률이 아님에도 법원에서 사실상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 이 예규는, 성별변경 신청서 제출시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의 성전환증 진단서, 생식능력이 없을 것, 성전환수술을 마쳤을 것, 미성년자 자녀가 없을 것, 결혼하지 않은 상태일 것,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의 동의서가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수술요건은 많은 성전환자에게 신분증상의 성별변경을 위해 원치 않는 외과적 수술을 강요하고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성전환자가 법적인 성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불임 또는 성전환수술 없이 성전환자가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 정부가 법적인 성별정정을 허가할 때 어떠한 사유로 허가하는지 그 통계를 제시하고 실제 성별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을 제시하라.

## 6. MTF에게 고환적출 등 신체훼손 강요하는 병역판정

현재 한국에서는 MTF(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사람)들의 병역과 관련되어 마련된 제도가 전혀 없으며 병무청의 신체검사 기준에는 신체 침해적 내용 없이 성주체성장장애의 경/중/고도의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sup>20</sup> 그러나 성주체성장장애의 경/중/고도의 기준도 모호하며 군의관의 개인적 판단에 맡기고 있기도 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신과진단서만으로 충분한데도 병역면탈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고환적출 등 비가역적인 수술을 제안/요구하고 있다. 많은 MTF트랜스젠더들이 성주체성장장애로 병역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압력에 의해 원하지 않는 시기에 고환적출 또는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된다.

### Suggested Questions

- 병무청의 현재 트랜스젠더의 병역면제 경/중/고도의 기준 과 비가역적 수술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개인의 신체 변형을 침해하지 않는 병역 등급 기준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제8조 강제노동 금지

### 1. 강제노동 금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매해 아동, 교사, 공무원 및 사기업 직원들을 동원하여 수작업으로 목화를 심고 수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이에 연루되어 있다.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는 2012년도 및 2013년도 국정감사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 펄프 생산을 위해 현지 공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한국 기업인 대우 인터네셔널 또한 현지 법인을 통해 강제노동을 통해 수확한 목화를

---

<sup>20</sup> 병무청의 성주체성장장애 5급 판정 기준

-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장애·성주체성장장애·성적 선호장애 등)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7 급)

나. 경도(진단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장애가 적은 경우)(3 급)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4 급)

라. 고도(1년 이상의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 행동이 있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급)

처리하는 공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sup>21</sup>

또한 한국 정부는 뉴질랜드 해역에서 일어난 한국국적의 어선에서 일어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sup>22</sup>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증거부족으로 사건을 기각하였으며, 정부 각 부처의 합동조사 후에도 외국인 선원을 모집하는 경위 및 현장에서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원 폭행에 가담한 한국인 선원들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위조에 가담한 한국 회사 직원들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기소되었으나, 사문서 위조에 대한 집행유예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버렸다.<sup>23</sup>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 등 자유권 규약에 위배되는 행위에 연루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정부는 공기업이 강제노동에 연루된 것이 확인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가?

## 2.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

<sup>21</sup> 2011. 10. 아동권리위원회의 의견은 아동강제노동에 국한되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제노동사용은 아동뿐 아니라 성인 또한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3. 고문방지위원회는 성인 및 아동의 강제노동 사용을 우즈베크 정부에 대한 주요한 고려대상(principle subjects of concern) 중 하나로 주목하였으며(CAT/C/UZB/CO/4, para. 22), 2013. 우즈베크정부의 2 차 UPR 때에 한국 정부를 포함한 많은 정부들이 성인 및 아동의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지적하였다(A/HRC/24/7). 이러한 국제적인 비판에 대응하여, 2013. 수확기 이후로 우즈베크 정부는 이전과 같은 대규모의 아동 동원은 중지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16, 17 세의 아동들이 산발적으로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으며, 동원되는 아동 수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성인강제노동이 강화되었으며, 교사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아동들의 교육권이 현저히 침해를 당하고 있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4, available at: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26849.pdf> [accessed 16 November 2014]).

<sup>22</sup> 뉴질랜드 정부조사단이 유독 사조오양을 비롯한 한국 선박에서만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2012 년 2 월에 발표하였고,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2012 년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까지 언급되었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물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국제 NGO 와 국제 인권기구들까지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sup>23</sup> 최초 사건을 담당했던 부산지검에서는 이 사건을 2012. 12. 불기소처리하였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고, 이에 2014. 1.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에서 기소가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때, 재기소된 것 또한 결국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에 등급이 낮춰질 수 있다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궁책으로 이루어진 기소였음을 알 수 있다.

2012년에 개정되어 2013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형법에는 인신매매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그 정의는 유엔 팔레르모 협정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sup>24</sup> 인신매매범죄 검거율은 매우 미약하여, 2012년에 부녀매매죄로 기소된 사건은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으며,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예술흥행(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강요죄 등의 죄(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포함)로 입건, 처리된 사건은 총 9건에 불과하다.

정부는 예술흥행(E-6) 비자에 대한 발급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8년도부터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para 142). 하지만 실제로 유흥시설업으로 파견되고 있는 대다수의 필리핀 연예인의 수는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아무리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파견 현장에서 공연자가 아닌 유흥접객원으로 이주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에 관련 공연 업소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이행 결과라 볼 수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비자 발급을 위한 형식적인 심사 강화가 아닌, 관련 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가?
- 인신매매법을 확실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발생율, 검거율, 신고율, 기소율, 선고율 및 선고형량을 제시하라. 또한 수사 중 피해자가 보호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수사기간 중 피해자의 체류자격 현황, 주거 현황, 출국비율, 인지부터 검사의 처분 및 법원의 판결까지의 기간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출하라.

## 제9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

### 1. 불구속 수사, 재판 원칙

정부는 보고서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하였다고 하였으며, 정부보고서에 의하면 검찰 구속인원점유율, 경찰구속률

---

<sup>24</sup> 개정 형법에서는 기존 부녀매매죄에서 ‘부녀’만을 범죄의 객체로 삼았던 것을 ‘사람’으로 확대했고, ‘추업 사용’ 목적에서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 목적과 ‘노동력착취, 성적착취, 장기적출’ 목적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처벌규정은 삭제되었다.

등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para. 147)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정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검찰 구속인원점유율’이 구체적으로 무슨 통계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하라
- 정부는 경찰 구속률 중 ‘총검거인원’이 무슨 의미인지 답변하라.
- 정부는 법원이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설명하였는데(para. 148), 위 규정의 개정 이후로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감소하였는지 여부를 통계자료에 기하여 답변하라.

## 2.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제도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집중단속 과정에서 사전 고지나 공장주나 가옥주, 상점주의 허락 없이 건물에 침입하여 미등록체류자를 체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체포 과정에서 미등록체류 외국인인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강제퇴거 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보호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였다고 설명(para. 154)하고 있으나, 사법부가 구금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해 정기적인 심사를 해야 하고 구금 기간의 상한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sup>25</sup>

또한 장기간 보호된 보호대상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의 사유나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장기구금’이라는 점을 이유로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전무하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등록체류자 단속 과정에서는 어떠한 인권보호 매뉴얼이나 지침을 사용하고 있으며, 법집행 공무원들에게 어떤 내용의 인권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답변하라.
- 정부는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보호’가 자의적 구금이 되지 않도록, 구금의 개시, 구금의 계속, 구금의 상한에 대하여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라.
- 정부는 보호외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과 인용 사례들의 정보, 어떠한

---

<sup>25</sup> 난민신청자의 경우 3년 9개월 구금된 사례도 있다.

기준에 기하여 기각 혹은 인용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보호기간 연장 시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라.

### 3. 변호인 참여권 보장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제243조의2 신설)으로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고 주장하나(para. 157),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만 ① 신문 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며(제243조의2 제3항), ③ 피의자가 스스로 개별 질문에 대하여 조언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2014.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변호권 행사와 관련하여 묵비권 행사를 ‘강요’하고 허위진술을 증용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인들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였다.<sup>26</sup> 2014년 12월 경찰청은 피의자의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2006년 10월 국가정보원 내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에게 묵비권 행사를 조언한 변호인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다. 2014년 10월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신문시 변호인 참여건수만을 밝혔는바(para. 157),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전체 조사건수 중 몇 건의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있었는지, 그 결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건수가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답변하라.
-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권이 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

### 4. 긴급체포 제도 개선

정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para. 160)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긴급체포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

<sup>26</sup>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3164.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3164.html)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제도 개선 이후에, 매년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건수와 체포를 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라.
- 정부는 위와 같이 체포를 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건수 중 집회, 시위 참여로 인한 체포자들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라.
- 위와 같이 법을 개정한 이후에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의 구금 시간이 평균 몇 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하라.
- 정부는 집회, 시위 참가에 대하여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방법이 인권옹호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법집행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답변하라.

### 5.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확대, 체포 구속 적부심, 보석

정부는 필요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를 도입하였음을 주장하나(para. 161), 위 제도가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부는 기소 전에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경우에 석방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장하고(para. 165), 매해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건수 및 처리 결과(석방건수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para. 164) 보증금 납입조건 이외에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들의 석방기회를 보장한다고 주장하나(para. 166), 그러한 조치들의 실효성을 나타낼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필요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도입 이후 영장실질심사의 인용율과 기각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라.
- 정부는 또한 보증금 납입 조건 외에 서약서 제출 등을 가능하게 한 제도의 도입 결과 보증금 납입 조건 외로 보석허가된 건수가 전체 보석허가 건수 중의 몇 % 정도에 해당하는지 답변하라.

### 6. 인신 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권리

정부는 보고서에서 인신보호법 제정에 따라, 2010. 말 기준 198건의 인신보호청구사건이 접수되어 26건이 인용되었다는 점을 밝혔는데(paras. 167-169), 전체 피수용자들이 몇 명이며 그들에게 위 제도가 잘 홍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피보호자들이 사법적으로 구제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외조항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결하기도 하였다.<sup>27</sup>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피수용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그 홍보를 위하여 의료시설, 복지시설, 수용시설, 보호시설 등에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여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지 설명하라.
- 정부는 위 법에 따라 2010 년 이후 매년 몇 건의 구제청구가 접수되어, 인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라.
- 출입국관리법 상의 외국인 보호시설을 인신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밝히고 향후 인신보호사건으로 포함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라.

### **7. 형사보상 제도 등**

정부는 헌법재판소2008헌마514 결정에 기하여 형사보상 결정에 대하여 다룰 수 있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나(para. 171, 현행 형사보상법 제20조), 위 결정이 이후의 인권 개선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매년 몇 건의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즉시항고비율,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 인용비율은 어떠한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라.

### **8. 영창제도**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군대 내 구타, 사망사고가 발생<sup>28</sup>하는 등 군대 내의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군인사법상 징계의 사유가 군인사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것 등으로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징계로는 영장 없이도 최대 15일까지 구금이 가능한 영창제도가 있어 자의적 구금의 우려가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sup>27</sup> 2012 헌마 686.

<sup>28</sup> [http://www.nytimes.com/2014/08/07/world/asia/outrage-builds-in-south-korea-over-military-abuse.html?\\_r=0](http://www.nytimes.com/2014/08/07/world/asia/outrage-builds-in-south-korea-over-military-abuse.html?_r=0)

- 정부는 군대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법률 및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따라 어떠한 이행(예를 들어 인권교육 및 가해자의 처벌 자료 등)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라.
- 위의 법률과 정책의 이행 전후의 군대 내 사망사고 및 구타 사례의 변동상황을 통계자료를 통해 답변하라.
- 군대 내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

### 9. 북한이탈주민센터에서 자의적 구금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와 정착지원이라는 목적으로 국가정보원 내에 조직된 북한이탈주민센터(변경 전 합동심문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최초로 수용되는 시설이다. 그러나 수용되는 사람들의 신원도 공개되지 않고 수용자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한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센터 내에서 간첩혐의에 대한 수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지거나, 가혹행위, 협박과 함께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특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최대 6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내 독방에 감금된 사례도 보고되었다.

#### Suggested Questions

- 북한이탈주민센터 내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본권 (거주이전의 자유, 변호인 접견권 등)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제10조 인신구속자에 대한 처우

###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정부는 보고서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였음을 주장한다(para. 175). 그러나 정부가 성소수자들에 대한 별도 처우 현황과 교정시설별 인원 등 기본적인 정보도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음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sup>29</sup> 특히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경우 신분증 상의 성별을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어 독거수용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운동, 목욕 등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 생활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sup>29</sup> 2013 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

정부는 보고서에서 “서신내용의 검열 원칙을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나(para. 175), 각종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위 법 제43조 제4항 각호<sup>30</sup>) 교도관의 판단에 따라 검열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법률상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수용자들에 대하여 서신검열을 하는 등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또한 정부는 ‘수용관리 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1027호)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제979호) 중 국가보안법 위반 수용자 등 이른바 ‘공안사범’에 대한 규정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성소수자 수용자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어떠한 법률과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법률과 정책의 실제 이행이 차별사례의 감소로 나타났는지 각 정보를 제공하라.
- 정부는 성소수자 수용자의 수용 통계, 독거수용 여부(특히 수용자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여부 포함), 운동, 목욕 등의 개별 진행 허용여부 등 성소수자의 보호를 위한 개별적인 처우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라.
- 정부는 서신검열 통계, 특히 내용 검열 건수 및 발신 또는 수신 금지 건수를 포함한 통계를 제시하라.
- 정부는 서신검열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떠한 법률과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하라.

## 2. 수용생활 환경 개선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나(para. 17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접견금지 요건이 추상적이어서<sup>31</sup> 교정시설이

<sup>30</sup>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sup>31</sup> 제 41 조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자의적으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접견권 보장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특히 접견거부, 접견중지 건수 및 그 사유를 포함한 통계를 제시하라.
- 정부는 자의적인 접견 불허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

### **3. 수용자 의료처우의 개선**

정부는 연 1회 건강검진과 원격진료시스템, 의료전문교도소 등을 통해 의료처우를 개선하고 있다고 하나(para. 180~18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외부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제37조, 제38조) 내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는 사실상 자비부담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히 가난한 수용자가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경우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13년 7월까지 10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자 227명 중 37.4%에 해당하는 85명의 수용자들이 치료 등을 위하여 형(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sup>32</sup>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의료처우와 관련하여, 외부의료시설 진료 불허 건수, 외부의료시설 진료시 수용자 자비 및 국비 부담액을 포함한 통계를 제시하라.
- 정부는 교정시설내 사망자 중 형(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의 사망원인, 사망일시, 형(구속)집행정지 신청일시, 형(구속)집행정지 허가여부를 포함한 통계를 제시하라.

### **4. 외국인 보호시설에서의 외국인 보호**

외국인 보호시설의 경우, 교정시설보다 오히려 시설이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며, 2007. 2. 17.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한 사건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sup>33</sup>

정부는 보고서에서 전문 의료 팀이 보호시설에 상주하고 있다고 하나(para. 189) 실제로는

<sup>32</sup>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

<sup>33</sup> [http://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89938.html](http://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89938.html)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1명만이 보호소에 배치되어 있고,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외진을 가려 해도 원칙적으로 보호외국인이 외진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외진을 보호소의 의사로부터 허가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고 정신과 등의 문제는 진료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외국인보호소에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비상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법집행 공무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대비훈련을 시키고 있는가.
- 정부는 외국인보호소 수용자들에 대한 진료 등을 위하여 피수용자 1 인당 연간 얼마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어느 정도까지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 타임 바운드된 계획을 밝혀라.

#### **5. 경찰 유치인의 관리 개선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처우)**

정부는 「유치장설계표준규칙」을 전면개정하여 유치장을 피구금자의 편의 및 안전성에 입각하여 설계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para. 195), 위 규칙은 유치장의 신축·개축 또는 시설 개선시에 사용할 설계 표준을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위 규정으로 기존 유치장을 이에 따라 개선해야 할 의무가 각 경찰서에 부과된 것은 아니다.

현재 경찰서 유치장의 유치실에 설치된 화장실은 대부분 1미터 정도 높이의 미닫이 문만 있는 개방형<sup>34</sup>이어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으며, 화장실을 포함한 유치실을 CCTV가 감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모든 유치장의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개선할 타임 바운드된 계획을 제시하라.
- 정부는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의 시설 개선 사항이 기존의 유치장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타임 바운드된 계획을 제시하라.
- 정부는 자살 등의 우려를 따지지 않고 모든 유치인을 감시하고 있는 CCTV 설치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하고, 유치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

---

<sup>34</sup>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결과(접수번호 1797898, 2012. 8. 24.자)에 의하면, 경찰서 유치장의 화장실이 밀폐형으로 바뀐 경찰서는 전국적으로 6 개에 불과하였다.

## 6. 과밀수용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 1인당 적정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무부 예규인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정기준이 있을 뿐이다. 그 기준<sup>35</sup> 역시, 다른 법률이 정하는 1인 기준 면적,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시설의 기준<sup>36</sup>, 경찰서 유치장의 기준<sup>37</sup>, 주택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sup>38</sup> 등에 비하여 수용자 1인당 면적이 너무 좁으며, 그나마도 위 수용정원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수용정원 대비 수용률이 111%이고, 개별 교정시설에 따라서는 161.5%(부산구치소)에 달하기도 한다.<sup>39</sup>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연도별로 수용자 1인당 수용거실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답변하라.
-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개선할 타임 바운드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
- 정부는 교도관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거실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수용거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답변하라.
- 정부는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적정 면적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라.

## 7. 미성년 피고인 및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개선

### 구금된 소년에 대한 열악한 처우

정부는 보고서에서 보호소년 등을 상대로 개방처우(open treatment)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고 주장하나(para. 202). 2007년 이후 '시설 내 처우'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 기준으로 새로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중에 개방처우를 경험한 보호소년은 32.67%에 불과하고 소년원에 수용된 인원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인원까지 더하면

<sup>35</sup>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당 1명 △장애인 혼거실 3.3㎡당 1명(신축예정시설의 경우 4.3㎡당 1명) △외국인 수형자, 여자수용자 및 직업훈련 수형자 혼거실 3.3㎡당 1명, △병수용동 혼거실 4.3㎡당 1명

<sup>36</sup> 1인당 3.3㎡ 이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sup>37</sup> 5인실은 1인당 3.6㎡(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 10조 제 2항)

<sup>38</sup> 1인가구 14㎡, 6인가구 1인당 9.2㎡(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490호)

<sup>39</sup>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0.4.21, 27쪽

개방처우 비율은 4.16%로 훨씬 더 낮아진다.<sup>40</sup>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보호소년 개방처우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개방처우 운영기준을 밝혀라.
- 소년원 내 인권보호의무 준수를 위한 공개된 지침, 외부 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라.

#### **소년사범의 수 및 재범률 증가**

정부는 재범방지 네트워크를 구축,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운영, 미성년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성과 가점제, 생활성적 상·별점 체크리스트제 도입(paras. 201, 203) 등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들고 있다. 실제로 소년사범의 수는 2007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고, 2012년 기준 소년범죄의 40%가 재범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2012년 기준)<sup>41</sup>, 소년의 재범률은 10.7%로 성인의 2배 이상이다.<sup>42</sup>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재범방지 네트워크 등 위 제도들의 실효성을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소년사범의 수 및 재범률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계획을 제시하라.

#### **소년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구금**

소년법 제46조에 의하면 제1심에서 소년원 송치결정이 내려지면 동 제1심 결정에 대해 항고하여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곧바로 소년원에 수용된다. 그리고 이후 항고로 해당 제1심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수용된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위와 같이 소년원 송치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여도 구금처분이 집행되며, 이후 제 1 심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수용된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하여 타임 바운드된 개선안을 제시하라.

#### **‘소년사법운용에 관한 유엔최저기준’ 적용여부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문제**

한편 일반논평 21의 제13항(General Comment 21, para13)에 따라 당사국은 베이징

---

<sup>40</sup> 법무부 소년보호통계 ‘신수용인원’과 제 4 차 국가보고서 ‘개방처우 대상 인원’을 비교한 것

<sup>41</sup> 2008 년 26.2%에서 2012 년 41.3%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검찰청, 범죄분석통계)

<sup>42</sup> 노철래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제출 자료, 2014. (14. 11. 6.자 시티뉴스, “보호관찰 소년범, 10 명 중 1 명꼴로 재범”)

규칙으로 알려진 ‘소년사법운용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가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고서에서 ‘소년사법운용에 관한 유엔최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소년사법운용에 관한 유엔최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답변하라.

### **8.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出廷)비용 징수**

법무부는 2010년 2월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교도소·구치소 수용자가 민사·행정·가사소송으로 법원에 출정할 때 교정시설 측이 해당 수용자에게 호송차량의 연료비와 도로통행료를 미리 징수하도록 하고,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면 일단 수용자를 출정시키되 나중에 수용자의 영치금에서 상계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는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특히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교도소가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를 해당 법원에서 먼 다른 구금시설로 이송하여 더 많은 출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출정비용 징수 통계, 특히 영치금과 상계된 징수액, 영치금 부족으로 인한 미납액, 출정신청 후 수용자가 법원 출석을 포기한 건수를 포함한 통계를 제시하라.
- 수용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건수 및 소송 제기 시기와 이송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제시하라.

## **제12조 거주·이전의 자유**

### **1. 영주자격**

정부는 2007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F-5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취업에 제한이 없다고 하였다(para 211). 그러나 영주자격은 형식적으로 체류할 권리만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회보장 혜택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서 영주권자들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영주자격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에도 영주



외국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반면 영주자격 취득 대상도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고 있다.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출생한 이주아동 역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출생했다 하더라도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적법 아래에서 국적을 취득할 수도 없다. 그 결과 건강권, 교육권, 발달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어떠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가?
-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출생한 이주 아동과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주자격 취득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 제13조 외국인 추방

### 1. 외국인 강제퇴거

정부보고서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 상 사유에 한정하고 영주권자에 대한 강제퇴거는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였다 한다. (para.217) 그러나 강제퇴거 대상자 선정은 출입국관리소장의 지나친 재량에 맡겨져 있다. 예를 들면,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자로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자'로 모호하게 규정하여 어떤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특수한 문제로 인해 미등록체류를 하게 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더라도 아무런 공사의익 형량없이 오로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만을 근거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있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아울러, 절차상 강제퇴거명령서(deportation order)는 교부가 아닌 제시만 이뤄지고 있고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의신청기간은 7일이며 짧은 편이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강제퇴거명령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무엇이고 그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
- 정부는 강제퇴거명령 대상자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 2. 난민제도

정부는 2008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사안을 보완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제안한 난민 인정 절차와 처우에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고한다. (paras.220~221) 이후 정부는 2013. 난민법을 도입하여 난민인정절차 및 인정난민의 처우를 규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률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생계비는 당국의 재량에 운용되고 있어 비계획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취업허가도 기본적으로 재량사항이다. 아울러 난민신청절차에서 난민신청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sup>43</sup>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난민인정율을 제고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적극적인 난민보호조치에 대해 설명하라.
- 정부는 난민인정심사 절차의 신속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를 설명하라.
- 정부는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체류허가자의 생계 보장을 위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를 설명하라.

## 제14조 공정한 재판

### 1. 재정신청 대상 범주의 전면 확대

정부는 재정신청 대상 범위를 모든 범주로 확대했다고 보고했다.(para. 228~231)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고소사건에 대하여 모든 범주에 대해 재정신청을 확대 허용되었지만, 고발사건에 대하여는 여전히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범한 일부 범죄, 즉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등으로만 제한하였다.<sup>44</sup>

---

<sup>43</sup> 예를 들면, 난민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신청자를 구금하거나, 난민심사 면담 중 녹음 및 녹화를 하지 않거나 자료열람복사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다든지의 관련정부부서의 행정상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sup>44</sup>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범한 범죄 중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고발사건의 경우, 예를 들면, 공무원의 공금횡령사건, 배임사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등에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재정신청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또한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의 경우 무죄를 주장하며 애초에 불기소 처분을 하였던 검사측(defense)이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는 2007년 개정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건을 담당할 제3의 변호사를 임명했던 것으로부터 후퇴된 입법이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고발사건에 대해서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제한한 이유를 밝히고 재정신청제도의 범위를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 및 정책 시행에 대한 계획을 밝혀라.

## 2.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교통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접견교통권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 시행령 58조에 따르면 접견 시간이 1회 30분에 불과하며 매월 4회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할 수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변호사와 수형자와의 접견권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히고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을 밝혀라.

## 3.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2012. 탈북 화교 출신 공무원에 대하여, 간첩 혐의 등으로 형사사건이 제기되었고 여동생의 진술이 이 사건의 주된 증거가 되었다. 그러나 여동생은 당시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sup>45</sup>의 감금된 상태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강요에 의해 “오빠가 간첩이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1심은 2013. 국정원 직원들이 여동생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항소심 법원은 2014. 위 여동생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간첩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결과 등의 자료가 위조되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2014.에도 ‘북한군 보위사령부에서 직접 파견된 간첩’이라는 피고인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

<sup>45</sup> 탈북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게 되면 우선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혐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위 시설에서 최장 6개월간 구금될 수 있음에도 ‘피보호자’에게 변호인 접견권, 가족들과의 전화 통화나 서신왕래 등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된 피고인의 진술서, 반성문 등이 '진술거부권 고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이 두 사건은 국정원이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여 무고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간첩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변호인들이 '여동생에 대하여 국정원이 회유, 폭행, 감금을 하였다'는 기자회견을 하자, 국정원 직원이라는 3인이 2013. 위 변호사 3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패소<sup>46</sup>하였다. 2014.에는 위와 같은 간첩단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를 상대로 검찰이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기도 하였다<sup>47</sup>. 이는 변호인의 변호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보장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라.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하라.
- 정부는 간첩조작 사건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징계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증거조작으로 인한 간첩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를 밝혀라

## 제15조 형벌불소급 원칙

보호감호제도(preventive detention)는 2005년 폐지되었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는 보호감호 수감자들이 처한 구금 상태가 일반 교도소 수감자의 상태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보호감호제도 폐지 당시 사회보호법(Social Protection Act) 부칙 제2조에 의거 보호감호 폐지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거나 당시 보호감호 집행 중인 수감자에 대해서는 그 폐지 적용의 예외를 둔 바 있다. 실제로 이에 따른 수감자는 총 677명에 이르며, 현재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는 134명이다. 2020년까지 102명에 대한 보호감호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 (2013년 법무부 자료)

### Suggested Questions

<sup>46</sup>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1/27/0702000000AKR20141127114600004.HTML>

<sup>47</sup>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052153055&code=9403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052153055&code=940301)

- 정부는 보호감호 수감자의 즉각적인 가출소 또는 석방을 허용할 계획에 대해 설명하라.
- 보호감호제도 폐지 이후 실질적으로 개선 구금 상황을 밝히고 향후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제17조 주거·사생활·통신의 자유

### 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및 위반자 현황

정부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통신사실을 확인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였다.(para. 242~243) 또한 2009년에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한 통지조항이 신설되었다.(para. 244)

그러나 정부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의 확인을 광범위하게 허가하고 있어 그 오남용이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수사기관이 미리 요청하면, 특별한 요건 심사 없이 대상자의 휴대전화나 인터넷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sup>48</sup> 또 최근 한국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집회 장소 주변의 무선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히는 모든 휴대전화 내역을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sup>49</sup> 이에 대해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제공해야 하고, 이중 '실시간위치정보' 제공의 요청은 이 요건 외에 보충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감청의 경우, 국가정보원은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십 여년 간 실시해 왔다는 사실이 2009년 처음 알려졌다. 한편 이메일, 메신저 등 통신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통신내용에 대해서는 통신회사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sup>48</sup> 2011년 경찰은 고공농성 중인 한 여성노동자를 지지하기 위한 전국 희망버스 행진을 기획한 활동가들을 추적하기 위해 그들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의 위치를 몇달 간 실시간으로 추적하였다. 2013년에는 파업 중이었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은 이 노동자들과 그들의 초등학생 자녀가 포함된 그 가족들 명의로 발급된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하여 몇달 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였다. 이 두 개 사건은 모두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사 중이다.

<sup>49</sup> 2012년 야당의 행사에 취재차 참석한 기자에 대하여 기지국 수사가 발생하자,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사 중이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때의 요건을 강화할 계획을 설명하라.
-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체계(effective and independent oversight regimes)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라.
- 정부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 통신관련 법률, 정책, 관행이 국제인권법상 기준과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이와 부합하는 기준을 입법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을 제출하라.

### 2.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정보 보호 미흡

정부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존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규정을 들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정보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para. 247). 그러나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접수된 피의사실공표죄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30건, 2009년에는 74건, 2010년에는 56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약식, 정식을 합해 기소가 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 Suggested Questions

- 피의자 정보 누설로 피의사실공표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소, 고발이 제기된 경우 기소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 3.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증인 정보 보호 미흡

정부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을 제정하여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신고자 및 증인의 인적사항을 생략하도록 규정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공무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들어 정보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paras. 250-251).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는 등 정보 유출로 인하여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발생한 보복범죄 건수는 총 614건으로, 그 발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피해자,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 피해자, 증인에 대한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어서 2 차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추정

정부는 2005년 개인의 위치정보의 누설, 약용, 오용을 방지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para. 252)

그러나, 정부가 개인의 GPS 위치 정보를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2012년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긴급구조 목적으로 소방방재청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이용자의 GPS 위치 정보를 경찰관서도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개인의 위치 정보가 제공된 사례가 40%정도 증가된 것으로 2014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또 정부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2012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제조된 단말기에 GPS와 와이파이를 원격으로 강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했음이 밝혀졌다.<sup>50</sup>

#### Suggested Questions

- GPS 와 와이파이라 같은 위치정보를 수사기관이 오남용하지 않도록 국회의 감독이나 법원의 허가 등의 엄격한 절차를 보완할 관련법률의 개정 계획을 설명하라.

#### 5.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구제 강화

정부는 2008년 개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 아래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출했고 (para. 254) 2012년 동 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와 예산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심의·의결 기능만 존재하고 조사권도 결여되어 있어 독립적 개인정보 보호기구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sup>51</sup>

아울러 정부는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개인식별 번호로 공공 아이핀(I-PIN)을 전면 보급하였고 피해구제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para. 255) 그러나 출생당시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을 통해 그 유출이 심각하여 사생활권을 심각하게

<sup>50</sup> See the article of Kyeonghyang Newspaper, available at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6&artid=201411181131001&pt=nv>

<sup>51</sup>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commendation on 2012~2016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January 2012

위협해 왔다. 최근 정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반대로 이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이 2014년을 기준으로 1,000개가 넘어서고 있어 사생활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기 어렵다.<sup>52</sup> 또한 이동통신사와 신용정보업체로부터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 업체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였다.<sup>53</sup>

#### Suggested Questions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계획을 밝혀라.
-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에 대한 법, 정책 및 관행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하라
- 온라인 실명확인이나 본인확인이라는 국가정책을 이유로 특정 기업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재고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하라.

#### 6.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정부는 NEIS 운영과 관련하여 사생활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관련법령의 정비를 통해 지도, 감독 및 벌칙을 강화하였다고 설명했다. (para. 258~259)

최근 NEIS를 통해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추정되는 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정보를 성명불상자가 수 차례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sup>54</sup> 2013년 한 국회의원은 교육부로부터 NEIS가 모의 해킹·인프라 보안수준·개인정보 영향 평가 등 4개 분야 61개

---

<sup>52</sup>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하는 시설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국가에 제출토록 한 시행령의 경우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과 신변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 (strengthening data protection in this regard (hungary))을 권고한 제 2 차 UPR 권고 내용에도 위배된다. See more at: A/HRC/WG.6/14/L.8

<sup>53</sup> 2014년 1억 4백만 건의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본인확인기관인 KCB의 직원이었으며,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이자 본인확인기관인 KT에서는 2014년에만 98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런 문제점을 들어 “본인확인기관 활용 문제에 대해 ...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sup>54</sup> 2013년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부인과 자녀에 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경찰, 국민건강보험, NEIS 등 여러 전자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열람하고 언론사에 유출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행위들은 2014년 11월 법원에 의해 일부 불법으로 확인되었다.



항목에 취약하다는 보고서를 공개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접속기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다.<sup>55</sup>

#### **Suggested Questions**

- 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사례가 발생한 후에 정부가 취한 조치를 밝히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수립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 **7. 가입자 정보 제공**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법원의 심사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사업자들이 보유한 성명,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가입자 정보를 정보·수사기관에게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는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이용자를 사찰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sup>56</sup>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Suggested Questions**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이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요건을 강화하는 계획이 있는지 밝히고 그 구체적 내용을 밝히라.

### **8. 통신자료 보관 (data retention)**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따라, 모든 가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유선전화 사업자는 6개월, 이동통신 사업자는 12개월, 인터넷 사업자는 3개월 동안 각각 보관해야 한다. 위와 같은 보관 제도는 기본권에 대해 광범위하고 특별히 심각한 침해를 수반(it entails a wide-ranging and particularly serious interference with the fundamental rights to respect for private life an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한다는 우려가 있으며,<sup>57</sup> 유럽사법재판소는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up>55</sup>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

<sup>56</sup> 2013년 9,574,659 건의 가입자 인적 사항이 제공되었다는 것은 매일 전국에서 26,232 명의 정보가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50,219,669 명의 인구를 보유한 한국에서 전체 19%의 국민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철도 파업 당시에는 경찰이 체포대상 노동자의 통화상대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3~400 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이동통신사로부터 법원의 허가없이 제공받은 후 그들에게 연락하여 관계를 캐묻기도 했다.

<sup>57</sup> <http://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4-04/cp140054en.pdf>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모든 통신 가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는 제도에 대하여 재고할 계획은 있는지 밝히고, 있다면 그 구체적 계획을 설명하라.

## 9. 통신비밀의 외국인 차별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감청을 시행할 때 정부는 관련사안이 내국인과 연관이 있을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관련사안이 외국 기관·단체 및 외국인과 연관이 있을 경우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감청에 있어서도 내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대등하게 처우할 계획이 있는지 밝히고 있다면 구체적 계획을 밝히라.

## 10. 감청준비 의무화

정부는 2007년부터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수사기관을 위한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회의원 일부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17대 및 18대 국회에서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19대 국회의 2014년에는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대해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기업들에게 자기 통신망을 '감청 준비' 상태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실태가 "씩씩이 감시 조치를 촉진하는 환경을 낳기 때문에" 특히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sup>58</sup>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기업들에게 자기 통신망을 '감청 준비' 상태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밝히고, 있다면 그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라.

## 11.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규범은 정보·수사기관에게 많은 예외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

<sup>58</sup> See more at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4875&LangID=E#sthash.gMnz6InZ.dpuf>

제공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sup>59</sup>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주차, 주차, 공원 관리라는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경찰은 사실상 실시간으로 CCTV를 관제하거나 제공받는 것으로 드러났다.<sup>60</sup> 경찰은 이와 같은 CCTV자료를 집회시위 감시에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고,<sup>61</sup>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국민의 차량 번호판에 대한 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는 등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sup>62</sup>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정보·수사기관이 CCTV 영상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법원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법, 정책 및 관행을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밝히고, 있다면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라.

## 12. 학생의 사생활과 통신 자유 침해

학교 안에서 성적 공개나 휴대전화 통신 제한 등 학생 사생활의 침해가 심각하다. 학생의 성적을 동의없이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성적이 공개된 적이 있다는 사례가 많다.<sup>63</sup> 그리고 수업시간을 제외한 쉬는시간 및 기타 자유시간 또는 특정 공간에서의 사용만을 제한하는 등과 같은 합리적 수준의 제약을 초과하는 무분별한 학교의 휴대폰 사용 정책이 학생들의 사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심지어 2014년에는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에 접근을 통제하여 학생의 위치 확인, 사용 가능한 기능 통제, 데이터 열람까지 가능한 '아이스마트키퍼'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도 하는 등 인권감수성없는 사례도 발생했다.

---

<sup>59</sup> 2013년 철도파업 당시 파업 노동자를 추적하기 위하여 경찰은 공공기관들로부터 당사자와 그 가족의 건강보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제공받았으며,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당사자가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사 중이다.

<sup>60</sup>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629545.html](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629545.html)

<sup>61</sup>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발생한 시민들과 유가족의 집회시위에서 경찰이나 청와대가 CCTV를 본래 목적외로 회전하며 감시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당사자들이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지만 경찰과 청와대는 해당 영상이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sup>62</sup>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661547.html](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661547.html)

<sup>63</sup>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에 따르면, 시험성적이 공개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29.1%에 이르렀다. 2014년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도 지난 1년간 성적(점수/등수) 공개나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주는 일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이 40.6%에 이르렀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성적 공개나 휴대전화에 대한 과도한 통제 등 학생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침해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밝히라.
-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원격 통제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은 사적 정보 유출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데, 정부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교육 현장에서 도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밝히라.

### 13. 에이즈 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정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에이즈관리지침 등에서 에이즈 및 HIV 감염인의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실명사용을 제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감염자 또는 감염인의 실명정보가 노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익명검진 규정을 신설하여 잠재된 감염인의 검진을 유도하고 개인정보 누출을 최소화하였다는 정부보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익명검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익명검진을 받았더라도 HIV 양성확진이 되면 실명보고 되고 있다. 익명검사를 받은 경우 HIV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진료비지원과 연계시켜 실명신고를 유도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고지없이 시행하는 HIV 검사 및 수검자 동의 없는 HIV 검사(HIV 강제검사)가 확대되고 있다. 강제검사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고 질병정보를 노출하게 되며 의료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외국인, 재소자, 군인(한국은 징병제이다)을 대상으로 HIV 강제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에게 검사에 대한 설명과 동의없이 HIV 검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HIV 감염인에 대한 실명보고 및 실명관리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밝히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하라.
- 정부는 외국인, 군인,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검진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밝히라.
- 정부는 병원에서 수술 전이나 질병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 시 HIV 검사를 하게 될 경우 사전설명과 수검자 동의를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라.

## 제18조 종교의 자유

### 1. 종교 등의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북한과의 대치상황 등을 이유로 들어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지속적 연구를 하고 있으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복무 허용을 유보했으며, 향후에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성립될 경우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para.265~271)

하지만 정부는 2008년 이후로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점 해소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없으며, 여론조사 역시 2011년 11월 병무청이 한 차례 실시하는 것에 그쳤다. 2014년 11월 현재 국회에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 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sup>64</sup>

2014년 12월 9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병무청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입영 등에 응하지 않는 이들의 신상정보를 웹상에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본 법률 공포 6개월 이후부터 병역거부자들은 현재 부과되는 징역형 이외에도 인터넷 상에 모든 신상이 공개되게 된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대체복무제도 도입 시 병력자원 유지가 어려워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라.
- 정부는 현재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진행한 연구 및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라.
- 정부는 병역법 개정에 따른 병역기피자 신상공개의 대상, 공개 범위, 목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 **2. 종립학교에서의 종교 자유 침해**

종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들에서 학생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종교 예배나 종교 행사, 종교 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학생의 학교를 배정해주는 시스템인데 종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종교 행사나 수업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교육부는 종립학교에서도 학생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이 종교수업을 원치 않을 경우 대체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안이나 학교의 공식 행사에서 종교의례가 이루어지고, 학생이 종교수업이 아닌

---

<sup>64</sup>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2013년 7월 18일 발의

대체과목을 원하는지 적극적 조사를 하지 않기에 학생의 종교와 충돌하는 학교법인의 종교가 학생에게 강요되고 있다.<sup>65</sup> 교육부와 교육청이 종립학교에서의 종교 자유 침해 예방에 소극적이다 보니, 종교 자유를 요구하는 학생은 불이익을 당하고 대다수 학생들은 종교 강요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전체 학교에서 종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립학교에서 종교수업에 대한 대체과목이 개설된 통계를 제공하라.
- 정부는 최근 종립학교 내의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를 파악한 실적이 있는지 밝히고, 있다면 확인된 문제에 대해 조치한 내용을 밝히라.
- 정부는 종립학교가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 무엇이고 종교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한 방안이 무엇인지 밝히라.

##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

### 1. 인터넷 본인확인제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및 인터넷 게임 이용자 본인확인제 등 인터넷에서 다양한 신원확인제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부 기관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서 인터넷에서 실명 및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여 인터넷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보장하고 있지 않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기준을 밝히고 인터넷 익명 표현의 자유를

---

<sup>65</sup> 대표적인 예로 2010년 경기도 백영고에서는 일주일에 한 차례씩 학생들을 교회로 등교시켜 사실상의 예배를 보게 하는 등 강제성 종교 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2937.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2937.html)) 또한 2012년 서울 명지고에 재학중이던 홍서정 학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예배를 강요받았고, 매일 아침 기도 강요, 매주 월요일 1교시 예배, 주 1회 종교수업, 부흥회 참석 등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하며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교육청에서는 소극적으로만 대응하다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특별장학을 실시해 대체과목을 신설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대체과목을 신설하면서도 학생들을 위협해 대체과목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홍서정 학생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결국 홍서정 학생은 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자퇴를 하기에 이르렀다.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 2.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결정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para. 292)로도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형사소추가 계속되고 있다<sup>66</sup>. 특히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 중이던 고등학생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경찰, 검찰, 대통령은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형사적으로 대응해 왔다<sup>67</sup>.

### Suggested Questions

-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형사소추 된 사건 수를 시기 별로 밝혀라. 또 그 형사소추들에 대한 유죄 여부를 밝혀라. 세월호와 관련해서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형사소추를 당한 사안들의 범죄 사실은 무엇인가?

## 3. 인터넷 행정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과 인터넷 부문에서 내용심의를 담당해온 행정기관<sup>68</sup>으로서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사실상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할 우려가 있다.

---

66 2011년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의 대기 유입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한국 정부는 "한국 영토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 유입 불가"를 공식화하였고, 경찰은 관련된 논란을 다룬 외국 방송 내용을 소개한 인터넷 게시자 1명을 입건하였다. 서울 근교에서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실제로 발견된 후 해당 게시자가 형사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관련 인터넷 토론이 위축되었다. 2011년 7월에는 서울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자 경찰이 여당 소속 전 서울시장을 비판한 게시자들을 수사하겠다고 밝혀 관련 토론 또한 위축되었다.

67 경찰은 참사 직후인 4월 23일 '세월호 괴담' 엄정 대처 방침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악성 유언비어 87건을 적발하는 한편 1,038명의 사이버 경찰을 동원하여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선정한 악성 유언비어 중 상당수가 해경과 현장책임자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해경이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잠수부들의 수색을 막았거나 산소 주입이 거짓이라는 주장은 후에 사실로 드러났다. 또, 7월에 세월호 실질 선주 유병언씨가 갑작스레 사망한 채 발견되자, 경찰은 사망 원인에 대한 경찰의 공식 발표와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허위사실로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68 정부는 UPR 2차 심사에서 이 기관이 민간기구라고 보고하였으나 한국 법원들은 이 기관이 행정기관이라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이 기관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 2MB18nomA(<http://twitter.com/2MB18Noma>)에 대한 국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정부를 비판하는 표현물을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결정을 다수 내렸으며, 이 기관이 결정한 내용에 대한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이행률은 99%에 달한다.

### Suggested Questions

- 국가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UPR 2 차 심사에서 권고한 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현재와 같은 인터넷 행정심의를 중단하고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구에게 그 기능을 이양할 계획이 있는가?

### 4. 학교 안 표현의 자유 탄압

한국 교육에서 학생은 학교의 일방적 지시와 통제,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학교의 규칙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되어야 마땅하지만, 여러 연구 조사에서 학생들이 학칙의 제·개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013년 말, 전국 여러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한국사회의 인권현실, 노동자 탄압, 강제 보충수업 현실 등에 대한 의견을 적은 벽보를 학내에 게시하였는데 모든 학교가 일제히 벽보를 철거했다. 몇몇 학교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학생을 조사하거나 학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Suggested Questions

- 학생이 벽보 게시나 서명운동, SNS 게시물 작성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징계나 불이익의 대상이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 정부는 학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과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 있는가?

### 5.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정부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para286). 그러나 2008년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sup>69</sup> 이 중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은 각각 전체 사건 중 2008년은 76%, 2009년 77%, 2010년 73%, 2011년 93%, 2012년 79.4%, 2013년 9월 79.7%에 이른다.<sup>70</sup> 전체 국가보안법 사건 중에서 7조의 남용은 광범위하며 자의적이다. 7조 사건의 대부분은 사이버 공간에서 친북적인 내용을 게재하거나 퍼나른 행위가 문제된 경우였다. 북한사이트의 글을 리트윗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7조

<sup>69</sup> 국가보안법으로 2008년 46명, 2009년 57명, 2010년 97명, 2011년 90명, 2012년 112명, 2013년 9월까지 79명이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다.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 [2014년 국정감사 자료] 중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에서 제출한 자료

<sup>70</sup>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 [2014년 국정감사 자료] 중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에서 제출한 자료



위반으로 기소된 박정근 씨의 사례<sup>71</sup>는 국가보안법 7조 남용의 폐해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가보안법 7조를 근거로 정부는 사이버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주장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의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사이버 상에서 일상적인 사찰을 진행하면서 '업무협조요청'이라는 형식으로 정보작성자,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강제집행 이전에 대부분의 표현물들이 경찰의 요청에 의해 자체 삭제되고 있다. 2009~2014.8까지 경찰이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권고 삭제를 요청한 것이 20만 건에 이른다.<sup>72</sup> 또한 경찰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시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심의를 요청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결정을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되는 데 이렇게 형사고발된 건수는 2007년부터 2014년 8월까지 865건에 이른다.<sup>73</sup>

### Suggested Questions

- 정부 보고서 중 '국가보안법 사건 처리 현황'의 출처는 어디인가?
-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입건되는 숫자가 2008년 이후에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6.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한국 정부는 직무상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공무원에 대해 투표권 이외의 모든 정치표현의 자유를 법과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2008년 한미FTA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

<sup>71</sup> 2012년 1월, 박정근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 계정 우리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리트윗한 행위로 인해 구속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박정근 씨는 북한 정권을 조롱, 풍자하기 위한 장난으로 북한 계정을 리트윗한 것이었는데 검찰은 박씨에게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 위반으로 기소했다. 박정근 씨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014년 8월 28일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sup>72</sup> 새정치연합 박춘식 국회의원 [2014년 국정감사 자료]중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

<sup>73</sup> 새정치연합 박춘식 국회의원 [2014년 국정감사 자료]중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

광우병 소고기 파동 당시 광범위하게 진행된 시국선언에 공무원노조가 동참하고, 2010년과 2011년 일부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진보정당에 월 1만원씩 소액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하여 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위 사안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제353차 이사회는 “공무원노동조합은 폭넓은 경제적·사회적 정책 문제들에 대해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공무원의 표현에 자유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2008년 5월 29일, 헌법재판소도 ‘공무원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sup>74</sup>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에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자유권 규약상 보장된 공무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한국정부는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법·규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할 의사가 있는가?
- 한국 정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개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제20조 전쟁, 폭력 등 선전, 선동 금지**

### **1.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정부가 나서서 북한을 비방, 증상하거나 한 일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북한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을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살포하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일부 단체들이 북한과 접경 지역에서 북한정부를 비난하는 전단지들을 풍선에 실어서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있다. 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군의 보복사격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 생존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Suggested Questions**

---

<sup>74</sup> 2008. 5. 29. 2006 헌마 1096.

-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북한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하였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라.<sup>75</sup>
- 일부 단체들이 북한 정부를 비방하는 전단을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살포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2. 외국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과 증오 선동

인터넷이나 공공기관에서 정치인, 종교지도자 등에 의해 이주민,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혐오발언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학생인권조례나 서울시민인권헌장 관련 공청회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더욱 드러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여전히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교과서가 비도덕적인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교과서의 동성애 차별 금지 내용 삭제' 운동을 벌여온 단체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사람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외국인과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연도별 발생 건수와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가?
- 정부는 혐오 발언, 증오 선동 등을 규제하는 캠페인이나 법적 장치 마련 등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제21조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 1.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시법

정부는 합법 집회와 불법 집회를 기계적으로 나누어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para298).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집시법은 평화로운 집회를 '적법한' 집회로 축소시키면서 집회가 실제로 평화로운지 여부를 떠나 하나라도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금지하거나 집회자체를 해산시켜 버리고 처벌한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집회가 불법집회로 규정되고 처벌을 받는 데에는 '사전신고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집시법은 집회주최자에게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한 후 신고된 내용을 경찰이 판단해서 금지·보완 통고를 한다.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로 교통질서,

<sup>75</sup> "K-9 자주포로 대북전단 쏜다", 심진섭 건국대 심리학과 교수 인터뷰, 자유아시아방송 2013. 10. 21.

공공안녕질서, 일정한 장소에서 옥외집회 금지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경찰은 금지통고되거나 신고의 범위를 이탈했거나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해산하고 처벌해 신고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집회주최자와 참여자를 체포하고 벌금<sup>76</sup>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손해배상청구까지 취하고 있다.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2008년 촛불집회와 2010년 희망버스에서 집시법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증가하지만 한편으로는 집시법에 대한 무죄율도 높아지고 있다<sup>77</sup>. 집회시위에 대한 무리한 기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으며 과도하게 공권력이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Suggested Questions

- 경찰과 검찰은 미신고집회 위반을 이유로 입건, 기소, 처벌된 통계를 각각 제공하라.

## 2. 집시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집시법은 야간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 야간시위금지에 대해 자정 12시 이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자정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여, 12시 이후 시위 자체가 금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중단되었던 2008년 촛불 재판이 6년만에 시작되었다. 촛불 재판은 약식기소 250건, 정식기소 56건 등 총 306건이며 피고인 수로만 945명에 이른다<sup>78</sup>. 이들은 1심 재판에서 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 Suggested Questions

- 경찰과 검찰은 야간시위를 이유로 입건, 기소, 처벌된 통계를 각 제공하라.
- 집시법 10 조로 기소된 많은 사람들이 12 시 이전부터 집회시위를 시작해 12 시 이후에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12 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하는 이유와

---

<sup>76</sup>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현황에서 집시법 1 심 위반사건 중 벌금형 통계는 다음과 같다. 2006 년 111 명, 2007 년 180 명, 2008 년 339 명, 2009 년 168 명, 2010 년 263 명, 2011 년 190 명, 2012 년 267 명, 2013 년 130 명, 2014 년 1~10 월 218 명 [출처: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 2014 년 국정감사 자료]

<sup>77</sup>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현황에서 집시법 1 심 위반사건 중 벌금형 통계는 다음과 같다. 2006 년 5 명, 2007 년 7 명, 2008 년 15 명, 2009 년 20 명, 2010 년 37 명, 2011 년 17 명, 2012 년 8 명, 2013 년 5 명, 2014 년 1~10 월 13 명 [출처: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 2014 년 국정감사 자료]

<sup>78</sup>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집계한 촛불변론 통계

12 시 이후의 야간시위가 특별히 위험한 이유를 밝히라.

### 3.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2008년부터 검찰과 경찰은 집회참여자들에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다. 많은 집회 참여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사진 촬영 등으로 추후 소환되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고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경찰과 검찰은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입건하고 기소하고 처벌한 통계를 각 제공하라.

### 4.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 주요 사례들

- **촛불집회 강제진압:** 정부보고서는 촛불시위가 당초 평화로운 집회에서 점차 조직화구체화되어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para301) 그러나 평화롭게 시작한 촛불집회 시위는 경찰이 오히려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약하였다. 국책연구소인 형사정책연구소는 과도한 차벽설치가 시위의 폭력성을 증가시켰다고 분석할만큼 경찰은 차벽, 물포, 소화기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해산과 검거위주의 대응으로 집회의 자유를 억압했다. 검찰은 평화적인 촛불집회시위에 대해서도 현행법 상 야간집회시위와 도로점유가 불법인 점을 이용해 참여자들을 기소해왔으며, 관련재판은 2014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피고소고발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정부보고서(para30)의 언급처럼,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은 시민들이 알아볼수 있도록 신분증을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 **용산세입자시위무력진압:** 2009년 서울시 용산구에서 도시개발을 위해 진행된 강제퇴거에 반대하는 세입자들의 시위에 대해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진압하여 5명의 세입자와 경찰 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다. 철거세입자 30여명의 농성을 집압하기 위해 경찰은 1,600여명이 투입되었고 경찰특공대 99명, 물포 차량 4대가 동원되었다.

정부보고서는 도로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하여 신속히 저지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para304) 그러나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했던 정황은 물포를

쓰거나 용역들이 접근하고 있을 때였고 그외 대부분의 시간은 소강상태였다<sup>79</sup>. 최초 화염병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경찰은 사전에 인화물질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화학소방차, 에어매트리스도 준비하지 않았고 성급한 집압에만 몰두해 화재진압에 실패했으며 건물에서 추락한 사람의 경우 땅바닥으로 추락해 부상을 당했다. 정부고서는 안전한 진압을 위해 소방차, 살수사, 응급차를 동원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para305) 사실과 다르다.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시위 강제 진압:** 2009년 4월 쌍용자동차가 2,646명 인력감축 방안을 발표하자,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고, 회사는 직장을 폐쇄했다.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77일간 지속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공장 점거파업에 경찰과 사측은 공장으로 들어가는 음식, 물, 가스, 전기를 차단했으며, 의사와 간호사들의 진입을 불허했다. 사측의 용역경비원 300여명은 헬멧과 쇠파이프와 분발소화기, 방패, 그물망 등으로 전원 무장하고, 회사 측 직원 3000여명 등과 함께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쇠파이프로 조합원을 구타하고 분말소화기를 살포하거나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회사 측 직원과 용역경비원의 시위자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 방조했다.

- **대한문 앞 집회시위 방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는 2012년 대한문 앞에서 노숙투쟁(sit-in)을 진행하던 중 서울 중구청은 노숙투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남대문경찰서는 화단의 보호와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화단 앞에서의 집회신고를 반려하고 집회를 불허하였다. 이에 대해 2012년 7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옥외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남대문경찰서장에게 관련 집회를 허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여 남대문경찰서의 집회의 불허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대문경찰서는 대한문 앞에서 개최하는 집회를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신고된 집회장소 내에 폴리스라인을 과도하게 설치하거나 이에 항의하는 민변 변호사들을 연행하였다. 그리고 다섯 명의 민변변호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다.

- **한진중공업 노조원을 지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시위 강제 진압:** 2011년 1월 6일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김진숙 민주노총 노조원은 홀로 공장 내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전국에서 4만 여명의 시민들이 5차례에 나누어 1박 2일로 김진숙을 지지방문하는 시위를 하였는데, 경찰은 이동제한, 차벽설치, 물대포 살포,

---

<sup>79</sup> 경찰 정보보고서

근접거리에서 최루액 발사 등을 통해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방해함으로써 크레인 접근을 막았다. 또한 경찰은 공격적이고 무리한 해산 절차를 감행하여 다수의 참가자들이 부상당하고 체포되었다. 수사기관은 위 시위에 참여한 500여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사법 처리를 하였고, 시위 진압 장구 파손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세월호에 대한 시위 강제 진압:**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출발하여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탑승자 중 295명이 사망하였고, 9명이 실종하였다. 시민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 침몰에 대한 원인규명과 정부의 안전대책을 촉구하며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발생한 시위에 대해 경찰은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청와대 주변에 대한 집회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고 청와대 인근 광화문 주변 집회는 금지통고가 급격히 증가했다.<sup>80</sup>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2008 년 촛불집회시위 참가를 이유로 입건하고, 기소하고, 처벌된 사람들의 통계를 밝히라. 또한 정부는 2008 년 촛불집회시위 참가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와 결과를 제공하라.
-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제철거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개발 사업이나 도시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고지와 임시 이주 시설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는데, 이 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을 밝혀라.
- 경찰이 회사 측의 직원과 용역경비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에 대한 폭력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이유를 제공하라. 이런 집회방해행위와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한 사실에 대해서 공개하라.
- 정부는 한진중공업 노조원을 지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시위와 관련되어, 입건, 기소, 처벌된 통계를 각 제시하라. 정부는 위와 같은 시위 참가자들을 가로막고 폭행한 한진 중공업 용역경비원들을 입건, 기소, 처벌 한 통계를 각 제시하라.

#### 5. 집회관리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와 같은 제도적 수단 외에도 경찰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제하고 있다.

---

<sup>80</sup> 5월 18일 청와대만민공동회를 주최하기 위해 10곳에 대해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은 모두 금지통고했고, 6.10 항쟁 청와대만민공동회를 주최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 61곳의 집회에 집회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모두 금지통고했다.

- 집회 시위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차벽
- 집회시위 참여와 이동을 차단/제한하는 통행제한
- 집회.시위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카메라와 캠코더 촬영
- 경찰의 이름표 등 식별표시 미착용
- 무기와 유사한 경찰 장비를 사용한 시위의 강제해산

#### **Suggested Questions**

- 평화로운 집회에 차벽을 설치하는 경우 무엇을 근거로 위험성을 판단했는지 근거를 제공하고, 집회장소에서 차벽을 설치했던 통계를 제공하라.
- 통행제한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경직법을 개정해 집회를 경찰이 사전에 전면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을 제공하라.
- 경찰력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모든 혐의를 독립적인 기구가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프랭크 라 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밝혀라.
- 경찰장비 사용 요건과 방식에 대한 법이나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라. 또한 규정을 위반한 장비사용 시 엄격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공하라.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국제앰네스티 촛불보고서 등에서 모두 신분확인이 가능한 표식을 경찰에게 부착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정부는 실제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밝혀라.

#### **6.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처벌하고 평화적 결사를 방해하는 학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집회.시위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청은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행사한 학생들을 방해하고 징계한 학교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학생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학교가 징계·처벌 혹은 탄압을 가한 것과 관련한 통계를 제시하라.

#### **7. 성소수자에 대한 집회의 권리 침해**

2014년 6월 서울에서 진행된 퀴어퍼레이드가 반동성애 단체들의 방해로 4시간 가까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대문경찰서는 집회와 행진이 신고되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고 쿼어퍼레이드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반동성애 단체를 제지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성소수자 차별적 조치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권리를 위축 시키는 사회 환경과 차별적 인식에 기반한 혐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제22조 결사의 자유**

### **1. 노사관계 제도의 개선**

정부 보고서는 자유권 규약 제22조를 유보하고 있으며 (para. 306)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하고 복수노조 설립을 통해 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여 노조간 건전한 경쟁관계를 조성하여 조합원 중심의 노조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para. 308) 하지만 공무원, 교사의 결사의 자유는 점진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복수노조설립을 통해 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 해태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등 정부보고와 달리 결사의 자유 조항을 비준하지 않음으로 인한 권리 제한은 심각한 상태이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유엔 자유권 규약 제 22 조 결사의 자유 유보선언을 철회할 계획이 있는가?

### **2.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정부 보고서는 공무원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해당 법률 정비, 단체교섭 체결 시 공무원 노동관계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신청 절차 마련(para. 311), 관련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대화와 타협(para. 312)이 있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공무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para. 314)

하지만 정부보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8월 해고자가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제출된 서류심사는 무시한 채 노정교섭으로 약속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약속을 파기하였고, 2009년부터 4회에 걸쳐 설립신고를 반려하였다. 서류심사에 근거한 설립신고증 교부는 행정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실사를 통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 중 6급 업무총괄자의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설립을 반려하고 있다. 이에 국제노동기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관련하여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 제한 없는 단결권 보장 할것을 권고하였고<sup>81</sup>, 2013년 8월에는 긴급개입 (ILO TUR 1-145/1-145-3) 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법외 노조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2007년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었다고 주장한다 (para.312). 그러나 2008 대정부 교섭은 2009년 10월 13일 정부가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한 채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 민주공무원노조, 구 법원노조 가 통합된 이후에도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문제 삼아 2014년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조건, 보수 등은 대부분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당연히 적용을 받는 것임에도 단체교섭의 범위에서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있다. 매년 해당부처인 구 안전행정부 (현 인사혁신처) 는 불법관행해소 지침 공문을 통해 관련 자치단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체결한 교섭에 대하여도 징계를 동반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친 사용자 성향의 노조를 설립시켜 창구단일화를 악용하여 노.노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창구단일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해태의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태업을 포함한 일체의 집단행동을 금지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ILO 에서 제시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 국내법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
-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보수 등 대부분의 교섭사항이 현행 국내법에는 비교섭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바 단체교섭권의 범위를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 단체교섭권의 온전한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단체행동권이 현행법에는 태업을 포함한 일체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집단행동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

### 3. 교원의 노동권 보장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의 “ 단 결 권 과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호하고 단체행동권만 일부 제한하고 있다(para.316)”고 보고 하였는데, 정부는 2013년 10월 24일 9명의 해직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60,000명의 교사들이 가입된 전교조의 노동조합 등록을 취소하였다. 정부가 전교조의

<sup>81</sup> ILO Governing body CFA Report No. 304, 306, 307, 309, 311, 327, 331, 335, 340, 346, 353, 363, 371

노동조합 등록을 취소하면서 내세운 근거는「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 2조인 현직 교원들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때문인데 이 법률조항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수차례 개정 권고<sup>82</sup>를 받은 조항이고,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60,000명의 교사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다.

한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법적으로 완전히 박탈되어 있다. 하지만, 대학교 교사들은 정당 활동 및 그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전교조의 설립 취소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 조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개정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시하라
- 유치원, 초중고등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대학 교사의 수준으로 보장하는 관련법 개정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시오.

## 4.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법무부는 2013.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사를 청구하였고, 2014. 12. 19. 헌법재판소가 위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 되었다<sup>83</sup>.

그런데 위 인용결정이 국제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 위원회의 정당해산 지침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당해산은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이후 위 정당의 소속당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 되어 다수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제23조 가정의 보호

### 1. 보육사업지원 확대

정부는 2013년부터 아이사랑 카드(바우처)<sup>84</sup>를 통한 0~5세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

<sup>82</sup> 2014년 3월 27일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정부의 전교조 노조 설립 취소에 대하여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며, 소수의(a handful of) 해직자가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제 노동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전교조의 노조 등록 취소를 지체없이 철회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sup>83</sup> [http://www.huffingtonpost.kr/2014/12/19/story\\_n\\_6351738.html](http://www.huffingtonpost.kr/2014/12/19/story_n_6351738.html)

<sup>84</sup> 아이사랑카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및 양육비를 이용권(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직접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50% 이상의 재정책임을 떠넘겼고, 이후 국비 비율이 15% 인상되고 나서 무상보육 중단을 막았다. 그러나 2015년 보육예산에는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액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교육재정은 축소하여 시도교육청도 예산편성을 거부했다. 사설어린이집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무상보육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육의 질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para. 318), 2013년 말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시설수 기준 5.3%, 아동수 기준 10.3%에 불과하며 2015년 예산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개수를 전년대비 동결하고 예산을 줄여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2015년 3 ~ 5세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5년 1조 2,000억원 이상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실상 부담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무상보육 중단사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라.
- 보육 바우처 부정사용을 이유로 어린이집을 제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 두 28032) 이후 무상보육 지원을 이유로 한 사설 어린이집 관리감독이 법적으로 어려워진바, 사설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감독계획을 제시하라.
- 사설어린이집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2010년말보다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데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답변하라.

## 2.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

결혼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본인의 이혼서류를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혼인관계에 있는 상태로 살아야 하고 재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일부 국가의 경우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등의 서류가 있어야 현지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한데, 이 경우 현재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서류를 받는 방법이 유일하다. 또한 위임을 하여도 한국국적이 없으면 한국인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이혼 후 본국으로 돌아간 결혼이주민들이 자신의 혼인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이러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라.

### 3. 성전환자 성별정정 미성년자녀 없음 및 혼인 중이 아닐 것 요건

2006년 대법원 성전환자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에는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미성년 자녀를 가진 성전환자는 신분증상 성별과 다른 외관 때문에 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자녀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은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혼인 중이 아닐 것을 요구하여 혼인 중의 성전환자가 성별정정을 희망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혼을 강요하고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대한 조건으로 미성년자녀 없음 및/혹은 혼인 중이 아닐 것으로 하는 요건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

## 제24조 아동의 보호

### 1. 아동의 면접교섭권 인정

정부는 「민법」의 개정을 언급하며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권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였다고 밝혔다 (para. 336).

그러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고, 이혼을 한 후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 출국을 하여도 일정기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의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 부모가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명시된 협의서 또는 판결문 기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를 발급 받는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의 면접교섭권이 보장되기 어렵다.

#### Suggested Questions

- 아동의 외국인 부모가 아동과 함께 한국에 체류하지 않고 입국을 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라.

### 2. 아동성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무거운 처벌 규정 등 범죄율 하락을 위한 노력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paras. 342-346). 그러나 여전히 강간범죄 피해자 중에 20세 이하의 피해자는 36.3%로 가장 높고(2013년 기준)<sup>85</sup> 그 비율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15세 이하

<sup>85</sup> 경찰청, 2013년 주요 지표범죄 분석

아동의 피해율은 2008년 14.4%에서 2012년 14.3%로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sup>86</sup>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의 비율은 여전히 높고 2013년에는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sup>87</sup> 또한 법 집행기관에 의한 2차 피해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처벌강화 위주의 정부의 조치가 아동 성범죄 피해율에 미친 효과성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시하라.
-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율, 기소율, 유죄선고율, 집행유예율, 법정형과 선고형의 차이 등 구체적인 정보와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
- 아동전담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전담경찰, 전담검사 및 전담판사의 인원, 요건, 근속년수, 순환보직 등 아동성폭력사건을 다루는 법집행관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규정(제7조 제2항,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para 343).

그러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선고형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아동 성매수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66%로 매우 높고,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도 3년 미만의 선고형이 66.3%로 나타나<sup>88</sup>, 법집행 과정에서 아동 성매수범죄가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sup>89</sup>. 특히 인터넷/모바일을 중심으로 아동 성매매가 확대·증가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비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한 청소년들을 피해청소년과 범죄청소년으로 분류하고, 범죄청소년에 대하여 처벌적 조치인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다<sup>90</sup>.

---

<sup>86</sup>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p.144~145

<sup>87</sup> 김진태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제출 자료, 2013. (13. 10. 18.자 연합뉴스, “올해 아동대상 성폭력법 집행유예 비율 더 올라갔다”)

<sup>88</sup>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 2007~2012 -, 2013

<sup>89</sup> 아동 성매수범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거나, 아동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다며 억울해 하는 등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sup>90</su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36 조부터 제 40 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를 당한 아동을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때 피해아동·청소년은 법이 정한 보호를 받는 반면(제 36 조, 제 37 조), 대상아동·청소년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자발적으로

### Suggested Questions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매수된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상황, 성매수된 아동에 대한 법집행관의 관점, 수사 및 재판 관행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라.
- 아동 성매수범에 대한 발생율, 검거율, 신고율, 기소율, 선고율 및 선고형량 자료를 제시하라.
- 아동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일반논평 17의 제3항(General Comment 17, para3)에 따라, 성매수된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제시하라.

### 3.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

교육부가 실시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가운데 1.4%인 6만2천여 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12년 말 이후 학교폭력 전수조사 강화와 가해학생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2013년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가 전국 교사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담실/상담사 배치를 제외하곤 대다수 정부정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는 70.4%, CCTV 확대 설치는 62.2%, 1회성 인성교육은 95.4%의 교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교지킴이(보안관) 설치의 경우, 자질 검증이 되지 않은 전직 군인이나 경찰에게 주로 맡기다 보니 학생 상담과 보호보다는 학생을 통제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고, 학교지킴이가 학생을 성희롱하거나 폭행하는 사건도 여러 발생하기도 했다.<sup>91</sup> 반면 피해학생을 위한 치유와 복귀를 위한 예산은 거의 책정되지 않고 있고, 상담사나 사회복지사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량 해고되기도 했다.<sup>92</sup>

---

성을 매매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결과 보호를 위한 지원은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제 38 조, 제 39 조, 제 40 조).

<sup>91</sup> “‘지킴이’가 ‘야수’ 돌변 아이들은 홀로 떨어졌다” <동아일보 2012-07-31>, “천안서 배움터지킴이가 학생 폭행 논란” <민중의 소리, 2012-04-16>, “‘준비 안된 학교보안관’ 시행 열흘도 안돼 서울 초교서 성추행” <뉴시스 2011-03-11>

<sup>92</sup> “학교폭력 없앤다더니...전문상담사 1000명 해고” <뉴시스, 2013-02-20>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벌 기록을 기재하게 되면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다수 학생간 폭력이 장애학생, 빈곤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차별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데도 정부 대책에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한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학교 교사나 관리자에 의한 체벌이나 언어폭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 **Suggested Questions**

- 상담 인력과 사회복지사 충원을 위하여 어떠한 예산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학교지킴이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인력의 자질을 개선하고, 지킴이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라.

#### **4. 아동의 등록과 성명**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의 출생 등록은 한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국국적 아동은 출생신고를 위한 접수와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나 출생이 등록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공식적 자료가 없으며, 난민 자녀, 무국적, 중국의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벌금부담, 한국 체류 미등록 자국민의 수를 줄이려는 대사관의 등록 거부 등을 이유로 자국 대사관에조차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어디에도 등록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으며, 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국적과 상관 없이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모두 출생과 동시에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을 제시하라.
- 정부는 현재 출생등록이 되지 못한 아동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밝혀라.

#### **5. 아동의 국적**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거나, 부모 모두 알 수 없거나 모두 무국적인 경우에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 외에는 아동에게 한국국적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며, 아버지가 구청에 인지신고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출생등록과



한국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아동이 수년간 국적 및 체류자격 없이 의료보험조차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무국적 아동의 수와 발생 사유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시하라.

## **제25조 선거권, 피선거권**

### **1. 공직선거법 개정**

#### **선거권 연령 조정**

정부는 4차 보고서에서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para. 366), 그러나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국회는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선거 연령 제한에 따라 공직선거법 60조 2항은 19세 미만인 자의 선거운동조차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SNS를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했던 16세 청소년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현재 19 세로 되어있는 선거권 연령을 18 세로 낮출 입법발의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 **선거기간 중 표현의 자유**

2012년 선거법 개정 이후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일부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는 제한적이다. 대표적으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활발해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또한 비판과 비방의 모호한 기준으로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가로막는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상의 인터넷실명제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는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가 선거 시기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인터넷실명제를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sup>93</sup>한 취지에 비춰볼 때 선거법상의 인터넷실명제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Suggested Questions**

- 한국 정부는 선거 기간 동안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 93 조 1 항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

### **2.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정부는 4차 보고서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para. 369, 370)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은 재외국민이 선거를 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경우 '여권원본'을 제시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유(공직선거법 제18조)보다 여권법상의 발급 거부, 제한 사유(여권법 제12조 제1항)가 더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서, 정부가 여권발급을 거절함으로써, 해당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선거권은 국적을 가진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여권이 아닌 다른 서류로 국적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재외국민 중 선거권이 있는 성인이 국가별로 몇 명인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를 통하여 선거인으로 등록된 재외국민은 국가별로 몇 명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
- 정부는 여권의 소지여부와 무관하게 국적을 입증한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

### **3. 수형자의 선거권**

헌법재판소는 2014. 수형자에게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4. 1. 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을 한 바 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수형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 **4.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

<sup>93</sup> 2012. 8. 23 헌법재판소 결정

2012.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과 국방부는 대통령 선거 및 기타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작성, 유포하는 방법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하였다.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트위터의 글 숫자는 2013. 11. 까지 확인된 것만 121만개<sup>94</sup>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개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후 증거인멸에 관여한 일부 경찰만이 기소가 되었다. 또한 국정원장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졌으나, 대선개입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판결이 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국정원 및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및 그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자 처벌의 내역을 밝혀라.
- 정부는 국정원 및 국가기관의 선거 및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라.

## 제26조 법앞의 평등

### 1.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hate crime)

#### 성매매 트랜스젠더 대상 혐오 범죄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정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성전환자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의 기준이 균일하지 않아 고용현장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존재한다. 성매매가 불법인 한국에서 MTF들은 성판매를 하고 있다. 2014년에는 불법인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성전환자들이 피해를 입고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전환자를 흥기로 22차례나 찢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고,<sup>95</sup> 2012년에는 집단 폭행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sup>96</sup>이 발생했다.

#### 성소수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

2011년 서울 종로구 남성 동성애자 bar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세 명의 남자가 남성 동성애자 커플에게 ‘게이새끼들’이라며 욕을하며, 일방적으로 집단 폭행을 가한 사건이

<sup>94</sup> <http://newstapa.org/2323>

<sup>95</sup> 성매매한 트랜스젠더 잔혹 살해 20대 남성 구속 (2014년 7월)

[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5564381](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5564381)

<sup>96</sup> 성매매 트랜스젠더 집단 폭행과 갈취(2012년 4월 서울 한남동)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301038131&code=9402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301038131&code=940202)

발생<sup>97</sup>했다.

2013년 9월에는 한국사회 최초로 김승환-김조광수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공개 결혼식이 열렸다. 자신을 교회 장로라고 소개한 50대 남성은 결혼식 진행 도중 무대에 난입해 오물을 뿌렸다.<sup>98</sup> 이 남성에 이어 또 다른 남성은 '동성 결혼 박살내자'라고 쓴 피켓을 들고 김조광수씨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 Suggested Questions

- 정부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심리, 물리적 폭력을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혐오 범죄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가?
- 정부는 혐오 범죄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권보호 캠페인, 형사법적 조치, 수사기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교육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sup>97</sup> 호모포비아... “이런 게이xx들” 묻지마 폭행

<http://stoo.asiae.co.kr/news/stview.htm?idxn=2011110807314993157&sc1=life&sc2=news&sc3=hot&sk=>

<sup>98</sup> 김조광수 결혼식에 오물투척 소동.. "동성애는 최악이다"

<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SCD=EA11&newsid=01387446602937824&DCD=A10302>

# VI. Joint NGO Submission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for the List of Issues

Submitted on 14 January 2015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Network

## PREFACE

The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Network composed of 42 human rights organiz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ubmits its report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in advance of the preparation of the list of issues for the review of the 4<sup>th</sup>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its 113<sup>th</sup> session from 16<sup>th</sup> March to 2<sup>nd</sup> April 2015.

As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its 4<sup>th</sup> periodic report in August 2013, the South Korean Human Rights Network has been formed and prepared its parallel report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report. In this report, we, the South Korean Human Rights Network, would like to propose and enumerate below particularly noteworthy points of inquiry to be put forth to the Korean government. We present first our assessment of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South Korea, indicate the problems of the State report, and finally suggest the list of issues and questions.

We expect that our organization will be providing additional information in advance of the 115<sup>th</sup> session in October 2015 when the Committee will review of the 4<sup>th</sup>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 Introduction

Since the review of the 3<sup>rd</sup>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06,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retrogressed by and large. Since the massive candlelight vigils held in May 2008 protesting against U.S. beef imports<sup>99</sup>,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stricting criticism towards the Government by carrying out coercive measures such as arrest<sup>100</sup>, prosecution, and filing suits for compensation for damage against those who participate in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protesting against government policies or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practice their labor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strike, and upload posts online criticizing the Government. Furthermore, aft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decided in October 2008 that the police violated the human rights of candlelight vigil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suppressing the assemblies<sup>101</sup>, the Government reduced the organization, budget, and personnel of the NHRCK by

---

<sup>99</sup> According to the statistics provided by the Government, candlelight vigils and demonstrations took place 2,398 times across the nation from 2 May 2008 to 15 August 2008, with 932,000 participants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2009, 'Anti-U.S. Beef Imports Illegal and Violent Protest Cases', *Investigative White Paper*, pp.3).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especially the police, usually reduces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order to diminish the significance of demonstrations and protests, the actual number of participants could exceed the provided number.

<sup>100</sup> According to data provided by the Government (Page 3 of the white paper mentioned above), the number of citizens arrested and investigated for participating in candlelight vigils and protests amount to 1,374.

<sup>101</sup>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8485.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8485.html)

about 21% in March 2009, greatly damaging its independence.

Meanwhile, the number of prosecutions for viola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has been on the rise since 2008. In particular, a fabricated spy case in 2013 occurred in which a North Korean defector was made into a scapegoat. While students studying abroad or fishermen abducted to North were usually targets of spy accusations in the past, now North Korean defectors are being targeted with the massive inflow of North Korean defectors into the Sout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systematically manipulated public opinion by tweeting and writing comments online and intervened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rdered 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which raised concerns for serious infringements on the freedom of thought,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In additi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on-regular workers, and migrant workers persists along with hate speech against sexual minorities. Nevertheless, legislation prohibiting discrimination has not yet been enacted.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military is also alarming, but no effort has been put in to resolving this issue. The annual number of conscientious objectors being arrested amounts to 500 and capital punishment has not been officially abolish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aware of the fact that now is an extremely important time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We sincerely ask the Committee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question the Korean Government if it is putting forth earnest efforts into realizing the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General Comments**

### **1. Establishment of the Human Rights Bureau in the Ministry of Justice**

The Government reports that the Human Rights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in May 2006, is responsible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national human rights policies including the National Action Plan (NAP)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carrying out self-investigation and system reform with regard to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para. 2).

However, there exist fundamental limits in ensuring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work continuity of the Human Rights Bureau required for achieving its goals, since the director and the managers of who are in charge of important issues are all prosecutors with only a one-year term.

#### **Suggested Questions**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hire human rights experts or activists from the outside as main personnel of the Human Rights Bureau so that it can effectively carry out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motion?
- Please provide data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written answers of the Human Rights Bureau to each case they received after establishing the Human Rights Infringement Report Center.

### **2.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five-year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2007. The Government reports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Council confirmed and monitored the implementation of the NAP and also disclosed and distributed the results to the public every year (para. 4, 5).

However, the participation and opinion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been institutionally or procedurally ex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confirming the NAP and also in the process of monitoring its implementation.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esent measures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the NHRCK and civil society in establishing and confirming the NAP and monitoring its implementation.

### **3. Promotion of the Covenant**

The Government insists that it is actively promoting the Covenant and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para. 6, 7).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find related information on the websites of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re is little effectiveness in promoting the information via media.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the number of times the Covenant and concluding observations were promoted via media and also information on the cases in which the promotions were made in the training process of public officials.
- Please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on the contents posted on government websites regarding the Covenant and concluding observations. Also, what activities have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promote these contents?

### **4. Human Rights Education**

The Government reports that it has been putting efforts into expanding human rights education (para. 9). Despite the quantitative growth in human rights educ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e budget allocated to human rights education is insufficient.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as there are no data indicating decreased human rights violations as a result of the education.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curriculum, instructors, and evaluation of recipients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vided to public officials, law enforcement officials, military, and school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budget for human rights education provided to public officials, law enforcement officials, military, and schools, and indicate how much the budget accounts for with regard to the bureau’s total budget.
- Please provide data that shows the number of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have decreased after conducting human rights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law enforcement officials, etc.

### **5. Compliance of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with the Covenant**

After the initiation of the war against terrorism and the dispatch of Korean armed forces to Afghanistan and Iraq, attempts to introduce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have continued.

Accordingly, the rol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which was being largely reduced, is being reinforced and expanded, thus raising concer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Since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mendment of the United Defense Act in December 2001 right after the 9/11 attacks, there have been continuous attempts to strengthen various regulation systems including the Basic Act on Prevention of Terrorism,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ct (Act on Prohibition against the Financing of Terrorism), Special Act on G20 Safety and Security, amendment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amendment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on grounds of counter-terrorism. As of 2014, legislative bills for the National Anti-Cyberterrorism Act and the Basic Law on National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Damage Preservation have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is inappropriate to have the NIS in charge of cyber security, as any monitoring on the institution's activities is not allowed. The Government is trying to give the NIS authority to collect and analyze private cyber information, when it should be preventing the NIS's abuse of authority and reducing its already excessive authority. The designation of national secrets should be minimized and the activities of intelligence agencies should be strictly and democratically regulated by law.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roposed laws on anti-terrorism and also specify what kind of measures has been provided to minimize human rights violation in those laws.
- What measures have been prepared to democratically regulate the activities of intelligence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6. Activities and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With regard to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Government provides information on the NHRCK's handling of petition cases from 2001 to 2010 (para. 20). Among the petition receiv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Section 1, Clause 5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NHRCK is rejecting cases that are either in the process of other remedy procedures or have been closed, without reviewing the contents at all.

Rejecting cases without reviewing the contents of petition is problematic, since some cases might have to be dealt with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r human rights policy in the future, even if other remedy procedures are in progress or have already been concluded.

Moreover, the NHRCK has been criticized by civil society for appointing human rights commissioners that lack expertise and are mostly legal experts. The independence of the NHRCK was damaged further with the reduction in personnel of the NHRCK in 2009. Consequently, the NHRCK has not able to function properly with regard to critical human rights violations.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ICC) continuously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independence of the NHRCK and in March 2014, it withheld the status of the NHRCK and recommended to establish the NHRCK's independence and create an appointment procedure for its commissioners.

#### **Suggested Questions**

-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hould additionally provide current data



on the handling of petition cases as of 2014, including the percentage of dismissed petitions and statistics regarding the grounds for dismissal.

- What are the criteria for appointing commissioners and employees of the NHRCK and evaluating their expertise in human rights and related experience?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amend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regarding personnel appointment to appoint personnel with expertise in human rights?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regarding the ICC's withholding of the NHRCK's status and what are the specific plans for implementing the ICC's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the NHRCK?

## **7. Effects of the Covenant and its Invocation in Trials**

According to the state report, ratified treaties have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legislations that conflict with the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will be placed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s examination for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The state report also mention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n fact made decisions that are in compli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para. 22). However, the Government is passive in taking legal action in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CCPR (for exampl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in Korea. Furthermore, it is extremely rare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 courts to refer to the CCPR as a standard for ruling.

### **Suggested Questions**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establish laws or policies that guarante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received from treaty bodies, namely the Human Rights Committee?
- Please provide statistics on cases in which the CCPR has been invoked in trials as a standard for ruling.

## **8. Individual Communications and Efforts for Implementation of the 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Although the Human Rights Committee has made decisions on individual communications many times, they have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para. 26). Despite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many decisions made on individual communications regarding conscientious objection, none of them have been implemented and the same is true for the previous decisions regard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In early 2014, the Committee made a decision on the case of an Iranian refugee applicant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repatriate the applicant since the applicant would be tortured once repatriated. Consequently, the Government did not repatriate the petitioner, but it has not granted him status to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 **Suggested Questions**

- What kind of efforts has the Government put into implementing the Committee recommendations for individual communications regard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 What kind of follow-up measures have been taken regarding the individual communication (CCPR/C/110/D/1908/2009), which was confirmed in early 2014 and acknowledged that the refugee applicant would be tortured when repatriated?

- Please provide in detail information on the budget of the Task Force on individual communications, personnel assignment, and activity results.

## Article 1

The Government reports that it has taken various measures to support the realization of the State of Palestin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o alleviate poverty and promot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ara. 35). However, such humanitarian assistance cannot be seen as directly related to realiza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lthough there should be emphasis on stopping the indiscriminate attacks on the State of Palestine and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e Korean Government abstained from adopting a resolution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s 21<sup>st</sup> special session in 23 July 2014 that would allow the UN to investigate the attacks on the Gaza Strip by Israel.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obligated to investigate if weapons made in Korea have been used in such attacks and, if any, consider discontinuing the export of such weapons.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on any effort made in order to prevent indiscriminate attack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Palestine.

## Article 2

### 1. Failure to Legislate the Anti-Discrimination Act

The UN has urged the Government to adopt expeditiously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that clearly spells out all the grounds for discrimination, including sexual orientation.<sup>102</sup> Accordingly,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13 cited the “[prospective] legislation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as a national agenda”, and the Government has proposed several measures in the state report (para. 378). However, to this date, the Government has never made efforts to legislate the Anti-Discrimination Act or held meetings with organizations to which the grounds for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concern. In addition, a report conducted f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sup>103</sup> demonstrates the people’s responses toward the need to legislate the Anti-Discrimination Act: “Very necessary” (31.9%) and “Generally necessary” (27.9%). In addition, according to Key Results of the South Korean LGBTI Community Social Needs Assessment Survey, 53.2% of LGBTI people consider the legislation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as the most important policy issue.<sup>104</sup>

<sup>102</sup> The CESCR in 2009 (E/C. 12/KOR/CO/3, para. 9), CEDAW (CEDAW/C/KOR/CO/7, para. 15) and CRC in 2011 (CRC/C/KOR/CO/3-4, para. 29), and UPR in 2012 (para. 223, 24, 33).

<sup>103</sup> Korea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 *A Report on a Survey on Religion and the Anti-Discrimination Act*, June 24, 2013, p.6. [http://www.kirf.or.kr/\\_ups/bb\\_47\\_4879\\_2013-07-01-%C1%BE%B1%B3%C0%C7\\_%C0%DA%C0%AF%BF%CD\\_%C1%A4%B1%B3%BA%D0%B8%AE\\_%BD%C3%B9%CE%C0%C7%BD%C4\\_%C1%B6%BB%E7\\_%B0%E1%B0%FA%BA%B8%B0%ED%BC%AD.pdf](http://www.kirf.or.kr/_ups/bb_47_4879_2013-07-01-%C1%BE%B1%B3%C0%C7_%C0%DA%C0%AF%BF%CD_%C1%A4%B1%B3%BA%D0%B8%AE_%BD%C3%B9%CE%C0%C7%BD%C4_%C1%B6%BB%E7_%B0%E1%B0%FA%BA%B8%B0%ED%BC%AD.pdf) (in Korean)

<sup>104</sup>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Key Results of the South Korean LGBTI Community Social Needs Assessment Survey*, June 14, 2014, p. 32. <http://chingusai.net/files/research2014/%EC%A3%BC%EC%9A%94%EA%B2%B0%EA%B3%BC%EB%B3%B4%EA%B3%A0%EC%84%9C%20%EC%98%81%EB%AC%B8%ED%8C%90.pdf>.

## Suggested Questions

- What steps has the Government taken to address discrimination against LGBT people? Has the Government enacted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to prevent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What is the time frame for enacting this legislation?
- Has the Government undertaken research on the prevalence and impa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LGBT people?
- Since the reporting of Fourth cycle report, in terms of research, raising awareness, an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especially LGBT NGOs, has the Government consulted with LGBT civil society to address the needs of LGBT people with regard to legal protections from discrimination and violence?
- Does the Government have a concrete time frame for legislating the Anti-Discrimination Act?

## 2. Article 92-5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Criminalizing Consensual Same-Sex Acts

In the 2012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the Government was urged to reconsider abolishing [the former] Article 92-5 of the Military Criminal Act.<sup>105</sup> Nevertheless, it claims that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of maintaining discipline within the military by punishing specific acts of indecent conduct; it is not a regulation for the punishment of sexual orientation itself.”<sup>106</sup> However, the provision can even punish same-sex acts that do not result from coercion, assault, threats, or even mutual consent.<sup>107</sup> In other words, even though sexual violence not only between members of opposite sexes, but also between members of the same sex can be punished based on from Article 92 to Article 92-5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92-5 has been established separately and expressly to punish consensual same-sex acts. Moreover, while sexual acts between members of opposite sexes in the military are regulated with disciplinary measures,<sup>108</sup> same-sex acts are regulated with imprisonment. This shows that Article 92-5 is a discriminatory measure providing disparate treatment to sexual acts between members of opposite sexes and between members of the same sex; thus, the Article criminalizes homosexuality in fact.

---

<sup>105</sup> 124. 34. Review the possibility of repealing laws that criminalize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within the military (United States of America):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HRC/22/10).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2/AHRC2210\\_English.pdf](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2/AHRC2210_English.pdf).

<sup>106</sup> 22. Recommendation 34. Article 92(5)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has the purpose of maintaining discipline within the military by punishing specific acts of indecent conduct; it is not a regulation for the punishment of sexual orientation itself.

- Views on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voluntary commitments and replies presented by the State under review (A/HRC/22/10/Add. 1).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2/A.HRC.22.10.Add.1\\_en.pdf](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2/A.HRC.22.10.Add.1_en.pdf).

<sup>107</sup> From January 1, 2004 to December 31, 2007, the crime of “indecent conduct” according to the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92(5) of the current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92 of the previous Military Criminal Act) was applied to a total of 176 incidents. Out of these, four cases involved consensual same-sex acts (suspension of sentence for three cases; suspension of prosecution for one case) and the remaining 172 cases constituted indecent assault or indecent sexual acts by force but the crime of indecent conduct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was applied to them because of agreement with the victims. Yi Gyeong-hwan, “On the Punishment of Same-sex Acts in the Military,” *Gongik-gwa Ingwon*, vol. 5, no. 1, Center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February 2008 (in Korean).

<sup>108</sup> “The military hushes sexual mischief in units abroad,” *Hankook Ilbo*, October 3, 2010.

<http://www.hankookilbo.com/v/0df540a9293a433d8e78587ae7f7cab8> (in Korean).

Even though the number of cases where members of same sex are punished due to their consensual sexual acts is small, the crime of “indecent conduct”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has existed as a regulation with practical regulatory power and can be evaluated as having served as a legal ground for discrimination against gender/sexual minorities. Consequently, the discriminatory atmosphere against sexual minorities in the military, which violates basic human rights, has been created for gender/sexual minorities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sexual contact in the military. Therefore, the likelihood of violating the human rights of gender/sexual minorities in the military has increased. In addition, it is likely to spread in society the prejudice that homosexual orientation must be treated like crime.

### **Suggested Questions**

- What steps is the Government taking to abolish the discriminatory aspects of Article 92-5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 **3. Discrimination in the Right to Form Families**

In 2014, a gay male couple’s marriage registration was deni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because the current Civil Act does not allow same-sex marriage.<sup>109</sup> Article 2(2)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pousal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does not cover unmarried couples or relationships outside heterosexual marriage. Police officers refuse to implement the law when the violence involves same sex couples, indicating lack of training and awareness about the widespread oc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lso, many social security laws and policies lik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and Public Housing Act do not cover same-sex relationships.

### **Suggested Questions**

- What is the Government’s plan to recognize same-sex union or same-sex marriage?

### **4. Guarantee of Right to Equality by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4th State report, the Government lists cas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lared unconstitutional in relation to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equality (para. 51 a). The foreign industrial trainee system abolished in 2007 was replaced by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Section 4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ny foreign worker’s transfer of business or workplace shall not exceed three times (twice if the permit is renewed by an additional two years, within the three year period). Migrant workers are not allowed to freely transfer their business or workplace, which amounts to apparent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nationality.

In addition, the report mentions the case that was declared unconstitutional with respect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ara. 51 b). However, the decision is nothing more than a temporary standard because it cannot guarantee the equal value of a vote from each constituent. The decision allows population disparities among constituencies of 4:1. Therefore, the Government cannot assert that it has guaranteed equally the right to vote.

---

<sup>109</sup> “South Korea’s LGBT Community Is Fighting for Equal Rights,” *Time*, February 11, 2014. <http://time.com/6575/south-koreas-lgbt-community-is-fighting-for-equal-rights>.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explain the measures taken to abolish regulations that cause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including restriction of workplace transfer.
- Please provide any amendments on the relevant laws to reduce population disparities among constituencies to the minimum during the general election and local elections.
- Please provide any information on studies conducted, if any, in an effort to more equally guarantee the right to vote.

### **5. Discrimination in Realizing Students'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Korea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ave been arbitrarily violated by school policies or teachers' guidance, since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students within schools are not clearly defined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sup>110</sup> In order to change this,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needs to be revised, but the Government has not taken any action.

Meanwhile, the Ordinance of Student Rights, a local government act, has been enacted by four Education Offices across the nation; Gyeonggi (2010), Gwangju (2010) Seoul (2011), and Jeonbuk (2013). The Government initiated litigation for confirmation of nullity of the Ordinance of Student Rights on 26 January 2012. On 30 January of the same year, the Government issued an order to stop amending school policies in according to the Ordinance.

### **Suggested Questions**

- Including the amendment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hat kind of measures does the Government plan to take regarding school regulations that violate students' civil and political rights?

### **6.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The Government states that it enacted and is implementing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RPD), in order to realize the equality and full participation in socie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a. 38). However,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Committee), during its consideration of the state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concerned about the lack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law and that the majority of complaints demanding for remedies had not been resolved. The CRPD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allocate adequat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designated discrimination correction body under the ARPD. Furthermore, it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lower the requirement for the order for correction by the Minister of Justice" (Article 43 of the ARPD).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specific measures taken to increase the

---

<sup>110</sup> More specifically, such violations of students' rights include corporal punishment, restrictions on hair and clothes, coercing religious worship or religious class in religious private schools, coercing classes outside of regular curriculum, random inspection of belongings, suppressing students' freedom of expression, dispersing assemblies or rallies within school and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organizers, suppressing independent student activities, and retaliatory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tudents that have raised issues regarding school management.

effectiveness of the ARPDA.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measures taken to ensure equal and effective protection by law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all forms of discrimination.

## Article 3

### 1. Enhancement of Women's Representation in High-Level Positions

The Government reports that it established a gender quota system for legislatresses in local constituencies during local elections with the amendment of the Public Official Act in 2010 (para. 56). As a result, the number of legislatresses in local councils has increased in the 2000s. However, the percentage of elected women in the wide area council is still under 15% and there have been no female elected heads in the wide area councils.<sup>111</sup>

As a part of the Gender-Equal Recruitment Target System for government officials, the Government explained that the five-year plan to increase the number of women at the managerial level resulted in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female managers (para. 57). Unfortunately, according to the statistics up to 2013, among positions grade 5 and higher, the percentage of women does not exceed 10%.<sup>112</sup> The percentage of women hired at public enterprises and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s is 44.04%, bu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n high-level female officers (June 2014), only 2 out of 30 public enterprises hired female executives and 2 public enterprises have more than 1% of females in high-level positions. This shows that only the number of female workers has increased and it is still very difficult for female workers to be promoted to higher positions.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esent actual ways to guarantee female participation in higher-level positions in addition to setting number goals.
- Please present measures to ensure the promotion opportunities for women in administrative positions.

### 2. Enhancement of Gender Equality Awareness

The Government claims that it has implemented gender equality awareness training programs through the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KIGEPE), developed the programs by life cycle stages, and promoted the improvement of gender discrimination by the use of mass media (paras 62-64).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policies that ensure the quality of the trained instructors who determine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standards, and also on all curriculum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KIGEPE, which is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3. Gender-Sensitive Policy

While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gender-sensitive policies, some government bodies such as

---

<sup>111</sup>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lection Statistics System (<http://info.nec.go.kr/>)

<sup>112</sup>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Statistics of Public Officers in 2013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ave different opinions from tha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operative mechanisms for government bodies.

Also, local councils recently became the main agent of reviewing gender-sensitive budgets and accounts 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women has been expanded. However,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full financial independence and remain highly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the budget for implementing gender-sensitive policies is not sufficient at the local level.

#### **Suggested Questions**

- What measures have been taken to establish cooperative mechanisms for different government branches to fully implement gender-sensitive policies?
- What policies exist to increase the budget for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gender-sensitive policie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plans to institutionalize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establishing gender-sensitive policies.

#### **4. Pursuit of Comprehensive Plans for Female Workforce Development**

The short-term regular worker model (flexible work program) suggested by the Government may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workforce (para. 67), but it will also reinforce gender division of labor and cannot provide high quality jobs for women. Also, the Government argues that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are the primary reasons for women's career interruption (para. 67), but in reality, the causes are high rates of irregular female workers and gender discriminative office cul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ale-dominant office culture, long working hours, and the perception that child rearing is a woman's responsibility.

#### **Suggested Questions**

- Research whether a short-term regular worker model (flexible work program) is reinforcing gender division of labor and provide results.
- What kinds of measures are being taken to expand high quality jobs for women?
- What kinds of policies exist to change the male-dominant office culture, long working hours, and the gender biased perception on women's roles?

#### **5. Punishment of Sexual Crimes**

With regard to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heavier punishment by amending and enacting relevant laws such as the "Special Act for Punishment of Sexual Crime of Violence" (paras. 70-71). However, as the punishment of criminals of sexual violence has intensified, law enforcement officers tend to avoid active indictment. Also, cases of counteraccusation against victims for defamation and false accusation are increasing. Meanwhile, a full bench in charge of sexual crimes has been appointed (para. 70), but the term of judges is less than 2 years, which is not enough to develop expertise on cases related to sexual violence.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gender separated statistics on the indictment cases on charges of calumny against the victim, before and after the repeal of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 Please provide the statistics on the number and reasons of indictment on charges of

calumny against the victim that were recognized by the prosecutor in both sexual violence and other cases. Also,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whether there was any change in the statistics after the repeal of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police, prosecutors, and judge panel appointed exclusively for sexual violence and measures take to improve their expertise.

## **6. Efforts to Protect Female Victims of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The Government reports that a series of protection systems against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is available for the female victims (para. 75). However, according to research on the situation of domestic violence conducted in 2010 and research on the situation of sexual violence conducted in 2013, 62.7%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did not seek external help and only 0.2% of them sought help from the protection mechanisms mentioned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there is a lot of concern about the instability and unsustainability of the current prevention/support system for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because the relapse prevention programs for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are supported by working expenses from individual funds, such as the Women's Development Fund and Informant Protection, and not from the general accoun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reover, the Government has selectively supported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victims by examining their asset information through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The personal information of women victims is accumulated in the System and is jointly utilized by 16 governmental departments, thus there are risk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sup>113</sup> Furthermore, the disciplinary actions take against public officials involved in non-work related access of personal information are insufficient as they have been limited to minor disciplinary warnings.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describe plans to draw up a general accounting budget for the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system and support of victims.
- Please present plans to support all female victims of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without examining their asset information.
- Please present plans to provide a separate support system considering the distinct nature of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 Please present data on the disciplinary measures (punishments etc.) of public officials involved in non-work related access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 **7.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The Government mentions tha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etc. of Domestic Violence Crimes is in effect and “counseling for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is being implemented (paras. 85-87). However, “counseling for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suspends the prosecution of the perpetrator of domestic violence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

<sup>113</sup> The 2013 parliamentary inspection revealed that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of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managed by the Korea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Service (HWIS), was severe. A total of 10,566 suspected cases of illegal access or reference of personal information was found by the HWIS from 2011 to August 2013.



perpetrator undergoes counseling. There have been concerns that this has nullifi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etc. of Domestic Violence Crimes.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disclose information on the guidelines regarding counseling for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 Please explain what follow-up measures exist when domestic violence offenders are unable to complete counseling for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 Please provide statistics on the repeat offense rate of domestic violence offenders who underwent counseling for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 **8. Marital Rape**

The Government says marital rape is punishable under the Criminal Act (para. 92), but the judicial precedent provide by the Government (para. 93) mentions preconditions such as “virtual failure of marriage”, “use of a deadly weapon”, etc.

Research conducted on national domestic violence in 2010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vealed that the percentage of the occurrence of sexual abuse, such as sex without spousal consent and undesired sexual activity, was as high as 10.4% in the past year. With regard to female victims of the domestic violence, 70.4% of women had been abused sexually in the past year.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esent cases of marital rape that was punished since 2010.

#### **9. Sexual Harassment**

The Government provides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and prohibition related policies and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for public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specialized channel to deal with sexual harassment (paras. 94-96). However, the Government does not specify details on the activities regarding the specialized channel. Also, the Government stated that it plans to carry out various inspections in order to prevent re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s where sexual harassment cases have been reported,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its guidance and supervision, but no specific plans have been provided.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statistic on the contents, methods, frequency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conducted at institutions required to carry out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 Please present the manual on the “management of the specialized channel for sexual harassment”.
- Please provide specific plans to reinforce inspections on workplaces where sexual harassment cases are reported.

#### **10. Stalking Crimes**

With regard to stalking, the Government mentioned that provisions on “continuous harassment” are included in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However, according to the Act, continuous harassment can only be punished with a fine less than KRW 100,000 (approximately 100 USD) or

temporary confinement. The draft bills related to punishing stalking crimes that are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also make exceptions on criminal punishment.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statistics related to stalking crimes since April 2013, when the provision on punishment of continuous harassment was added to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 **11. Labor Rights of Women**

The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in South Korea wa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from 2000 to 2012. In 2012, the wage gap was 37.4%. Also, while 45% of male workers are irregular workers, 66% of female workers are irregular workers. Also, the average wage of female irregular workers is 39% less than that of male regular workers.

Moreover, domestic workers are not recognized as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s a result, they are not protected even when in cases of industrial accidents and cannot file complaints for unfair layoffs or delay in payment of wages.

### **Suggested Questions**

- What are the policies and solutions for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wage gaps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and irregularization of female workers?
- What plans exist to protect domestic workers who are currently left rightless?

## **Article 6**

### **1. Death Penalty**

The Government claims that it will carefully decide on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aking into account the realities of society and public opinion (para. 108). With the request to join the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Additional Protocols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sup>114</sup>, the Government promised the Council of Europe that it will announce the non-application of death penalty with its accession to the conventions and protocols.<sup>115</sup> The promise to not execute criminals extradited from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was a precondition for joining the conventions.

However, in 2010, the Minister of Justice ordered the review of additional installments of execution facilities and stated that this order was indeed issued to carry out the death penalty<sup>116</sup>. The Government has yet to show concrete efforts for the *de facto* abolishment of the death penalty.

---

<sup>114</sup> The European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came into effect in Korea on 29 December 2011.

<sup>115</sup> S. Korean government pledges “non-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to European Council, <The Hankyoreh> 2009. 9. 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4399.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4399.html),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374472.html](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374472.html)

<sup>116</sup> “Justice Ministry to pursue protective custody system and execution in S. Korea”, <The Hankyoreh> 2010. 3. 1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0465.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0465.html),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410589.html](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410589.html)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statistics on the number of people sentenced to death including the waiting period before the execution and the name of their offense, and also the statistics on the appellate trials ongoing after receiving the death penalty in the court of lower instance.
- Please provide records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made in 1992 to reduce the range of crimes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 Please describe specific plans to officially announce the suspension of the death penalty, as promised to the Council of Europe at the time of joining the European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 **Article 7**

### **1. Improvement in the Use of Restraining Devices and Disciplinary Punishment against Prisoners**

The Government reports that it had ceased the use of chains and introduced modern protective devices. (para. 121) However, restraining devices are still used in ways which violate the human rights of prisoners. When more than two restraining devices are used in the sentence execution process, the length of use of restraining devices exceeds one day overly and unnecessarily violates the rights of detainees. The Government also mentioned that there was a variety of punishments. (para. 121) However, solitary confinement, which is one of the harshest punishments, accounts for 88% of punishments. Furthermore, the outside members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committee that is responsible for determining punishments are appointed by heads of prisons, so the procedures of determining punishment are not independent and objective.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statistics regarding the use of restraining devices including cases where more than two devices are used at the same time and the average length of use. Also, provide statistics on punishment, especially the reasons for punishment, types of punishment, and length of punishment.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improve the punishment system which focuses on solitary confinement, and exclude punishments that limit the basic rights of detainees such as suspension of outside exercise, restrictions on postal correspondence, restrictions on writing and restrictions on consultation with counsel?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revise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to oblige prison guards to allow the temporary removal of restraining devices or to relax their use for activities such as exercise, writing, bathing, eating, easing nature and medical treatment? Also,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amend enforcement regulation article 214 (17)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that allows disciplinary actions for non-compli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prison guard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objectivity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committee including the percentage of retired prison guards among outside members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committee, proportion of dismissed punishment, discussion time for each case, etc. Also, please provide statistics that verify the fairness of the punishment decision process including cases that the subject of disciplinary punishment has exercised the rights to appeal and present an opinion.

## **2. Procedures for Remedy of Rights Violations at Detention Facilities**

### **a. Lack of Effectiveness of Petition system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e Government reports that the number of petitions increased after amending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nd that this indicates an improvement in the petition system (para. 126). In fact, the number of petitions has been decreasing and the average percentage of accepted petitions is around 0.1% as of 2013. Even when the contents of the petition are reasonable, correctional facilities deny petitions on grounds that the petition is a group petition, concerns the treatment of other people, includes false information, and is without actual gains from remedi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xpect effective remedies.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statistics on the petitions submitt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as of 2014, including on the proportion of accepted petitions.

### **b. Status of Petition System Operation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e Government announces that the number of petitions in correctional facilities had increased (para. 126), but the average percentage of accepted petitions is around 0.1% and withdrawals of petitions before the end of the procedure is abnormally high at over 50%.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esent the results of the procedures including percentages of accepted, dismissed, and withdrawn petitions.

## **3. Efforts to Prohibit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Government reports that it is preventing inhumane treatment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by wholly amending the Rules of Investigation 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granting awards for good practices, implementing human rights education, and introducing a “human rights hotline”(paras. 133). However, under the current system, when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investigative agency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s investigate the case. Therefore, prosecution rates are low and the effects on prevention of inhumane treatment are insignificant.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the number of suits filed and prosecution rates for cases rela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before and after the amendment of the Rules of Investigation 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set up a system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for cases of inhumane treatment?

## **4. Inappropriate Punishment in Schools**

Gyeonggi (2010), Gwangju (2010), Seoul (2011) and Jeonbuk (2011)<sup>117</sup> forbade punishment against students by enacting rules governing students' human rights. However, in March 2011, the Ministry of Education revis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o allow principals to enact and revise school regulations, which leaves the method of instruction at the principals' discretion. This leaves open the possibility for corporal punishment. Especially, Article 31

---

<sup>117</sup> Gyeonggi, Gwangju, Seoul and Jeonbuk are the name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sup>118</sup> only bans punishment using tools and does not prohibit disciplinary punishment such as running, squat walking, and push-ups; the rules allow torture-like punishment. Also, teachers still consider these punishments as acceptable educational practices, thus corporal punishment continues to be carried out in schools.

### Suggested Questions

- What measures have been taken for the prevention of inhumane corporal punishment against students?

## 5. Requirement for Forced Surgeries for Transsexuals' Legal Sex Reassignment

Drawn up in 2006, the Supreme Court's Guidelines on the Clerical Processing of Cases of Transsexuals' Application for Legal Sex Reassignment are created for reference when transsexuals apply for legal sex reassignment. Even though the Guidelines do not constitute a law, they carry *de facto* regulatory power to lower courts. Under the Guidelines, applicants for legal sex reassignment are required to submit written diagnoses of transsexualism from two or more psychiatrists, absence of reproductive ability, completion of sex reassignment surgeries, absence of underage children,

---

<sup>118</sup> Article 31 (Discipline of Students)

(1) The head of a school may punish student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en he/she deems it necessary for education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8 (1) of th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712, Mar. 18, 2011>

1. Services in the school;
2. Social services;
3. Completion of special education;
4. Suspension from attendance within 30 days per year, one time within 10 days.
5. Expulsion from school.

(2) When disciplining a studen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head of a school shall punish the student in an educational manner so that the student's personality may be respected, and shall give him/her an opportunity to repent by applying the discipline type by stages depending upon the seriousness of the reason.

(3) When disciplining a studen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head of a school shall consult with the student's guardian concerning the guidance for the student.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712, Mar. 18, 2011>

(4) The Superintendent of an Office of Education shall prepare and operate educational methods necessary to educate students subject to discipline of special education and suspension from attendance under paragraph (1) 3 and 4, and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securing teachers, facilities and equipmen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712, Mar. 18, 2011>

(5) An expulsion from school under paragraph (1) 5 shall be taken against students other than those in the course of compulsory education, wh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712, Mar. 18, 2011>

1. A person who is deemed not to repent of his/her act because of his/her bad demeanor;
2. A person who is frequently absent from school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3. Persons who violate school regulations.

(6) The head of a school may have a student do home study for a specified period before taking an expulsion from school.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712, Mar. 18, 2011>

(7) If the head of a school expels a student, he/she shall consult with the student and his/her guardian about a course of his/her life, and shall make efforts to introduce other schools or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in cooperation with the communit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712, Mar. 18, 2011>

(8) Where the head of a school provides guidance referred to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8 (1) of the Act, it shall be conducted by methods such as discipline and admonition which do not inflict physical pain on a student's body using punishing tools and body parts, pursuant to school regulation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712, Mar. 18, 2011>

state of being unmarried, and written consent from parents (regardless of applicants' ages). The issue is that the surgery requirement forces unwanted surgical operations on many transsexuals just for legal sex reassignment on personal identification documents.

### **Suggested Questions**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establish legal procedures that do not require sterilization operations or irreversible medical interventions when transsexuals apply for legal sex reassignment?

### **6. Determination of Potential Conscripts' Military Fitness Grades That Forces Body Mutilation Including Orchiectomy on Male-to-Female Transgender People**

The physical examination standards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classify gender identity disorder (GID; gender dysphoria) into three categories; light/medium/severe depending on severity of psychological disorder without additionally considering bodily modification. However, determining the standards of light/medium/severe GID depends on military physicians' arbitrary judgment, not thorough clinical evaluation. Although a written psychiatric diagnosis alone is sufficient, some physicians demand irreversible surgeries, including orchiectomy (testicle removal), to prevent possible attempt to evade mandatory military service. Many MTF transgender people have been forced to have orchiectomies or gender reassignment surgeries by the Government for exemption for military service regardless of their own choices.

### **Suggested Questions**

- What are the MMA's current standards for military service exemption based on light/medium/severe GID and reasons for demanding irreversible surgeries for such exemption? What efforts is the MMA making to establish standards for determining potential conscripts' military fitness grades that do not violate individual bodily integrity?

## **Article 8**

### **1. Prohibition of Forced Labor**

Every year,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forcibly mobilizes children, teachers, public servants, and private sector employees for the manual planting and harvesting of cotton.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are complicit in the forced labor in the cotton sector of Uzbekistan. The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 (KOMSCO), a state-owned enterprise, continues to operate factories to produce cotton pulp even after the forced labor issue was officially raised during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in 2012 and 2013. Daewoo International, a Korea-based multinational corporation, also continues to operate factories through its local subsidiaries to process cotton harvested by forced labor.<sup>119</sup>

---

<sup>119</sup> Though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f the Rights of the Child from October 2011 only addressed forced child labor issues, the use of forced labor by the Uzbek government is not limited to children, but also includes adults. In 2013, the Committee Against the Torture declared the use of forced labor of adults and children by the Uzbek government as one of their primary subjects of concern (CAT/C/UZB/CO/4, para. 22). Many stat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raised the issue of forced labor of adults and children during the Uzbek government's second Universal Periodic Review (A/HRC/24/7).

Following international condemnation, the Uzbek government seemed to have ceased the previous practice of mass mobilizing children in 2013, but it is still reported that children of age 16 and 17 are forcibly and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failed to redress the human trafficking and forced labor of foreign crews in Korean-flagged fishing vessels that occurred in New Zealand waters. Despite international condemnation,<sup>120</sup>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dismissed the case citing lack of evidence, and no improvement was made for the recruitment procedure and treatment of foreign fishing crews even after a joint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by Korean government departments. Korean fishing crews involved in assault against foreign fishing crews and staffs of the Korean fishing company who forged employment contracts and wage payment confirmation documents were indicted for uttering and counterfeiting private documents, but merely received a suspended sentence for forgery of private documents.<sup>121</sup>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after Korean companies were found to have been complicit in forced labor or human trafficking, in violation of the ICCPR.
- Does the Government plan to take measures against public corporations that continue to operate even after they have been found to be complicit in forced labor?

## **2. Efforts for the Prevention of Human Trafficking**

Though the amended Criminal Code lists human trafficking as a crime, it still does not comply with the trafficking definitions in the UN Palermo Protocol.<sup>122</sup> The arrest rates for human trafficking is very low and there were no indictments for the crime of “selling a woman” in 2012. From 2008 to June 2013, only nine bookings and indictments were made on charges of “coercing prostitution (including sex-trafficking)” of foreign women with E-6 (Culture and Entertainment) visas.

The Government claims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making a steady effort to strengthen the review of E-6 visa issuance (para. 142) and the number of foreign entertainers who entered Korea with an entertainment and artistic activity visa has been decreasing since 2008. However, the number of the entertainers from the Philippines being sent to entertainment bar businesses has been increasing. Even with a stringent visa screening process, since the fundamental problem is the employment of migrant women as persons of entertainment rather than performers, the

---

sporadically mobilized. Furthermore, the forced labor of adults has been intensified due to lack of labor from the decreased number of children mobilized; the right to education of children has been significantly violated as teachers are forcibly mobilized for labor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4, available at: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26849.pdf> [accessed 16 November 2014]).

<sup>120</sup> The Ministerial Report from the New Zealand government in February 2012 stated that it was mostly Korean-flagged fishing vessels that had problems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s; the 2012 US TIP report also addressed the poor working conditions of Indonesian fishing crews. These issues were covered by the media from all around the world including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New Zealand and it has become an issue amo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NGOs as well.

<sup>121</sup> Originally, the Busan Prosecutors’ Office dropped the case in December 2012. It was only after an appeal was made by civil society that the case was reopened for investigation and indictments were made by the Seoul Western Prosecutors’ Office in January 2014. However, considering that no actual punishments were carried out, the indictments were only a way to avoid being downgraded in the US TIP report.

<sup>122</sup> The amended Criminal Code has broadened the target of offense from “women” to “person”; the purpose of offense was changed from “use of prostitution” to “sexual assault, adultery, marriage, profit” and “labor and sexual exploitation, organ harvesting”. The provision on punishing sex trafficking in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was repealed accordingly.

Government failed to carry out a more stringent supervision and monitoring of entertainment bar business.

### **Suggested Questions**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conduct a more stringent supervision of related entertainment bar businesses besides a formal intensification of the review of visas?
- With regard to human trafficking,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rates of incidence, arrest, report, conviction, sentencing, and length of sentence. Also, provide statistics regarding the sojourn status of victims, residence of victims, expenses for departure, and the length of time period from acknowledgement to the prosecutor's or court's decision,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 **Article 9**

### **1. Principles of Non-Restraint Investigation and Trials**

The Government states that it has amended legislation so that suspects of crimes are investigated on the principle of non-restraint. According to the state report, the occupancy rate of the people restrained by the prosecution and the rate of police restraint seem to be decreasing (para. 147). However,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Government as there are no concrete explanations.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explain the meaning of the "occupancy rate of the people restrained by the prosecution".
- Please clarify the meaning of the "total number of people arrested" with regard to the rate of police restraint.
- The Government provided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at allow bringing suspects to prison, detention centers, or police detention centers when necessary (para. 148). Please comment based on statistical data whether suspects' human rights have been violated less frequently after the enactment of the legislation mentioned above.

### **2. Protection System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Government's intensive control on unregistered migrants often involves breaking into buildings without notification in advance or the consent of the owners of the factory, house, or business. Such excessive crack-downs sometimes lead to injury or even death of unregistered foreigners. Regarding the concerns abou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subject to compulsory eviction, the Government argues that it has amended the law so that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Justice has to be given every 3 months when the protection period is longer than 3 months (para. 154). Despite the fact that the judiciary should conduct periodic evaluations on the necessity and legality of confinement and that a maximum detention period should exist, there are no such regulations under the current law.<sup>123</sup>

In addition, even when people who have been under protection for a long time file an objection, there is no regulation defining the grounds or criteria for objection and everything is left at the

---

<sup>123</sup> There was a case in which a refugee applicant was confined for 3 years and 9 months.



discret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So far, there has been no case in which an objection was accepted on the grounds of “long-term confinement”.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explain what kind of human rights protection manuals or guidelines are used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in crack-downs against unregistered migrants. Also,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contents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the Government is offering to law enforcement officials.
- Please present directions for future improvement so that the “protection” of unregistered migrants does not become arbitrary detention, such as application of the criteria provided by the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on the start, continuation, and maximum period of detention.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dismissal of objections filed by foreigners under protection, including details of the cases, and the specific criteria for dismissal or approval. Please also provide the criteria for extending the protection period.

### **3. Guarantee of Lawyers’ Right to Participate**

The Government argues that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243 (2) newly established) guarantees the rights of crime suspects to receive assistance from counsel (para. 157). However, in principle, lawyers that participate in interrogations can make a statement only after the interrogation. The suspects can 1) raise objections in the process of interrogation, 2) make a statement of opinions with “approval” from the prosecutor or the judicial police (Article 243, Section 2, Clause 3) only regarding unfair interrogation methods, and they 3) cannot decide on their own whether or not they will receive advice on individual questions.

In 2014,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requested the Korean Bar Association to take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lawyers that suggested to suspects to exercise the right to remain silent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rguing that the lawyers “forced” the suspects to remain silent.<sup>124</sup> In December 2014, the National Police Agency released an official statement that it cannot accept the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ensure the criminal defendant’s right to counsel.

In October 2006, a lawyer that advised a defendant, who was being investigated in the Joint Interrogation Cente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o remain silent was forced outside by an NIS employee. In October 2014, the Supreme Court ruled such actions of the NIS as unconstitutional.

### **Suggested Questions**

- The Government has only released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lawyers were present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para. 157). Please provide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lawyers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out of the total number of investigated cases after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Also, please indicate how much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have been reduced.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amend the law to fully guarantee lawyers’ right to participate and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

<sup>124</sup>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3164.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3164.html)

#### **4. Improvement of the Emergency Arrest System**

The Government claims that it has improved the Emergency Arrest System so that prosecutors or judicial police have to request an arrest warrant “without delay” within 48 hours of time of the arrest when they are to detain a suspect arrested without a warrant (para. 160). However, the excessive reliance on and abuse of the Emergency Arrest System continues even after the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the ratio of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an arrest warrant is requested after the arrest to the cases in which suspects are released after being arrested without requests for an arrest warrant, after the above changes in the system.
- Among the cases in which suspects are released after being arrested without requests for an arrest warrant, what is the percentage of suspects arrested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ctivities, such as participating in assemblies or rallie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results of the revised legislation and the change in the average hours of detention (from the time of arrest to the time of request for arrest warrant), before and after the above amendment.
- With regard to the concern that arresting protestors and releasing them without requesting an arrest warrant might have a chilling effect on human rights protection activities, please comment on this concern and provide data on human rights education provided to law enforcement officers.

#### **5. Expansion of Suspect Interrogation System Prior To Confinement, Review on Legality of Arrest and Confinement, Bail**

Although the Government argues that it has introduced the suspect interrogation system prior to necessary confinement (para. 161), it has not provided any information on the effectiveness of such system. In addition, the Government insists that there are cases in which suspects are released before indictment if they request a review of the legality of confinement (para. 165). The Government also presents data on the annual number of requests for review of the legality of confinement and their results (number of releases, etc) (para. 164), and argues that it guarantees the opportunities for release for those with no economic ability by allowing them to submit a written oath or agreement for deposit payment, in addition to deposit payment conditions (para. 166). The Government should additionally provide data that show the effectiveness of such measures.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esent data on changes in the rates of approval and rejection of warrant validity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system prior to necessary confinement.
- As a result of introducing the system that allows the submission of written oaths in addition to deposit payment conditions, how many bails of such method other than “deposit payment conditions” have been allowed each year? What was the percentage with regard to the total number of bails?

#### **6. Right to Seek Court’s Decision on Confinement**

According to the State report, 198 claims for *habeas corpus* were filed as of late 2010 after the revision of the Habeas Corpus Act, and 26 of them were approved (paras. 167-169).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if *habeas corpus* has actually improved human rights, as no data have been

provided on the total number of inmates and whether the system has been publicized to them.

Meanwhile, the protected persons' opportunity to receive judicial relief is limited, since procedures for relief in accordance with the Habeas Corpus Act are not applied to the foreigner "protection" facilities operated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cently ruled that such exception is constitutional.<sup>125</sup>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explain how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relief procedure to inmates in accordance with the Habeas Corpus Act and indicate what kind of legal obligations or guidelines have been provided to medical facilities, welfare facilities, asylums, and protection facilities with regard to promotion.
- Please present data with regard to how many relief requests have been filed and approved each year since 1010 in accordance with the Habeas Corpus Act.
- Please explain why the Government excluded foreigner protection facilities operated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from the application of the Habeas Corpus Act and indicate if it is considering including foreigner protection facilities in the boundaries of *habeas corpus* in the future.

### **7.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Etc**

In its report, the Government states that criminal compensation decisions can be contend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8Heonma514 (para. 171, Article 20 of the current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Impaired Reput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firm how much the decision has actually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esent data showing the number of criminal compensation decisions made annually and the percentage of instant appeals against decision along with the percentage of approved of appeals.

### **8. Military Prison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many concerns regard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military and incidents of brutal beating and death in the military continue to occur<sup>126</sup>. Moreover,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under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is too abstract, such as violations of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or order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actions that demean soldier's dignity, and violation or negligence of official duties. Moreover, the military prison system as a disciplinary measure raised concerns on arbitrary confinement. The military prison system is used as a disciplinary measure that can detain a soldier up to 15 days without a warrant.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concrete data on the kind of legislations and policies provided to prevent

---

<sup>125</sup> 2012Heonma686.

<sup>126</sup> [http://www.nytimes.com/2014/08/07/world/asia/outrage-builds-in-south-korea-over-military-abuse.html?\\_r=0](http://www.nytimes.com/2014/08/07/world/asia/outrage-builds-in-south-korea-over-military-abuse.html?_r=0)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military and how they have been implemented (for instance, human rights education and data on the punishment of perpetrators, etc).

- Please provide statistics on the changes in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military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legislations and policies.
-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plans to improve thorough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f perpetrators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military, such as the introduction of independent external monitoring systems.

### **9. Arbitrary Confinement in the North Korean Defectors Center**

The North Korean Defectors Center (previously the Joint Interrogation Center), creat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o protect North Korean defectors and support their settl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very first facility North Korean defectors are admitted to upon their arrival. However, the fundamental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not guaranteed in the Center, since the identities of the detainees are not disclosed and they are shut off from all outside contact. Recently, it was revealed in court that investigations on the suspicion of espionage have either been conducted without counsel or the suspects were forced to make confessions through cruel treatment and threats. North Korean defectors can be confined up to 6 month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there was a reported case in which a North Korean defector was put in solitary confinement for 6 months.

#### **Suggested Questions**

- How are the fundamental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freedom of movement, right to counsel, etc) admitted in the North Korean Defectors Center being guaranteed? What kind of relief measures are provided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en their fundamental rights are violated?

### **10. Strengthening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during Admission to and Discharge from Psychiatric Institutions.**

Article 24 of the Mental Health Act (MHA) allows hospitalization of a "mentally ill person" based on the consent of two persons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person concerned and if a neuropsychiatrist decides it is necessary. This means there exists a legal provision that allows deprivation of libe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concerned. Currently, the rate of voluntary admission is only 21.4%, while that of involuntary admission by family members or others reaches 78.6%. Regarding this matter,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Committee) was concerned that the existing legal provision in the MHA, as well as the Government's draft amendment, allows deprivation of liberty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repeal all related provisions in the MHA and ensure that all mental health services are provided based on the free and informed consent of the person concerned.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an explanation on the specific measures to ensure voluntary admission and discharge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y based on their free and informed consent.
- Please provide a response as to whether the Government is willing to repeal Article 24 of the Mental Health Act.

## Article 10

### 1. Enactment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The Government claims in its report that it has included sexual orientation as grounds for non-discrimination in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para. 175). However, it was revealed during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that the Government had not produced or managed even basic information on correctional facility personnel and the current conditions on the treatment of sexual minorities.<sup>127</sup> Transgender inmates have been detained based on the gender listed on their identification cards. While they have been allowed solitary confinement, all other activities such as exercise, shower, etc. have to be carried out together with other inmates, inevitably causing them much pain.

Though the Government has written in its report that they have abolished the principle of censoring inmate correspondence, they maintain various rules on exceptions (Article 43 Paragraph 4 of the above -mentioned law<sup>128</sup>) which allows censorship based on the discretion of the prison officers. Furthermore, although political opinion is established as one of the grounds for non-discrimination, inmates who have violated the National Security Act have been subject to discrimination, which includes the censorship of their correspondence. Also, the Government has not publicized information on the regulations on the detainment of National Security Act and public security offenders in the 'Guidelines on detainment management' (Ministry of Justice Regulation No.1027) and 'Guidelines on detainment classification, transfer, and documentation' (Ministry of Justice Regulation No.979).

### Suggested Questions

- What laws and policies exist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in detention, and how has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m?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s and policies, and whether they have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cases of discrimination.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individual treatment for the protection of sexual minority inmates, such as statistics on detainment of sexual minorities, including whether they have been detained in solitary confinement (and whether such solitary confinement had been requested by the inmate) and whether they have been allowed to take part in exercise, bath, etc. in private.
- Please provide statistics on the censorship of correspondence, especially on the number of cases of censorship and prohibition of dispatch and reception of correspondence.
- Please explain what laws and policies exist to prevent the censorship of correspondence and how they have been implemented.

---

<sup>127</sup>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o parliamentarian Seo, Giho (Justice Party) during the 2013 parliamentary inspection

<sup>128</sup> 1. Where the other party of correspondence cannot be confirmed;  
2. Where a ruling for censorship of correspondenc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or other Acts exists;  
3. Where reasonable grounds exist to suspect that correspondence includes the contents falling under paragraph (1) 2 or 3, or the contents which conflict with criminal law;  
4. Where correspondence is between prisoner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 **2. Improvement in Living Conditions of Detention Facilities**

Although the Government claims to be guaranteeing inmates the right to visitation and communication in various ways (para.178), because the requirements in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prohibiting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world are abstract<sup>129</sup>, correctional facilities can arbitrarily disallow interviews.

### **Suggested Questions**

- Provide information on the guarantee of inmates' rights to visitation and communication, particularly statistics on the number and grounds of rejection and cessation of interviews.
- Please describe concrete plans to reform the relevant regulations to prevent arbitrary prohibition of interviews.

## **3. Improvement of Medical Treatment for Inmates**

The Government writes in its report that it has improved medical treatment for inmates by providing physical examination, remote diagnosis system, and specialized medical prison (paras. 180-182). However,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only allows prisoners to receive external medical treatment when granted permission from a warden (Article 37 and 38) and in practice, medical treatment within the facility is the default treatment method and external treatment is allowed only when inmates bear the treatment fees. This particularly affects impoverished prisoners as they are not able to get specialized treatment for serious diseases.

From 2004 to July 2013, 85 out of the 227 inmates (37.4%) who di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were found to have died because their applicati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detention) for treatment purposes had been denied or because the evaluation process took too long.<sup>130</sup>

### **Suggested Questions**

- With regard to medical treatment, please provide statistical information on the denial of external medical treatment and the proportion of medical treatment expenses borne by the individual and the Government.
- With regard to deaths in correctional facilities, please provide statistics on deceased inmates who had applied for suspension of execution (detention) including the cause of death, time of death, application date for suspension of execution (detention), and whether the suspension of execution (detention) had been granted or denied.

## **4. Protection of Foreigners at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The treatment of detainees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is worse compared to that of correctional facilities. The fire at the Yeosu Immigrant Detention Center on 17 February 2007 that resulted in 10 deaths and 17 injuries<sup>131</sup> is an example of such poor conditions of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The Government claims that professional medical staffs reside within the facilities (para.189), but in

---

<sup>129</sup> Article 41 ① Prisoners may meet with persons outside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any ground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exists.

<sup>130</sup> Information submitted to parliamentarian Seo, Young-gyo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during the 2013 parliamentary inspection

<sup>131</sup> [http://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89938.html](http://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89938.html)

reality there is only one general practitioner assigned to each facility. Moreover, even if detainees seek external medical treatment, the detainees have to bear the entire expense of treatment and the visits have to first be approved by the residing general practitioner, and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detainees to receive psychological treatment.

#### **Suggested Questions**

- What kind of facilities has the Government established at the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in preparation of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fire?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manuals for such emergency situations and explain what kind of training is given to the law enforcement officials at the facilitie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a concrete and time-bound plan on how much of the national budget will be used for the medical treatment of detained immigrants per year, specifically on what kind of medical services are currently being provided, and the extent to which improvements will be made in future.

#### **5. Improvement of Treatment of Detainees at Police Detention Facilities**

Although the Government claims in its report that it has implemented a complete revision of the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Detention Facilities (para.195), the above regulation merely provides design standards for police detention facilities to be built or improved and does not require existing facilities to be improved accordingly.

Currently, the restrooms installed in police station jails are typically open-type<sup>132</sup> with a sliding door that is only about one meter high/ Therefore, they do not provide adequate protection of privacy and the jails, including the restrooms are monitored by CCTVs.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a time-bound plan on improving the current open-type restrooms in police station jails to closed-type.
- Please provide a time-bound plan to make the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Detention Facilities applicable to existing police station jails.
- Please explain if the CCTV monitoring of all detainees has a legal basis, besides the risk of suicide, and please also provide a concrete plan on protecting the privacy of detainees.

#### **6. Overcrowded Detention Centers**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is a serious issue.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does not regulate the cell space allowed per inmate. The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the 'Guidelines on detainment classification, transfer, and documentation',<sup>133</sup> which sets a standard on the maximum capacity of correctional facilities, but makes the available space for each inmate too small compared to the standards set for handicapped

---

<sup>132</sup>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Application No. 1797898, 2012. 8. 24.), only six restrooms were changed to closed-type in police detention facilities.

<sup>133</sup> one person per one single cell Δone person per 2.58 m<sup>2</sup> of an associated cell; one person per 3.3 m<sup>2</sup> of an associated cell with disabilities (one person per 4.3 m<sup>2</sup> in case of new facilities); one person per 3.3 m<sup>2</sup> of an associated cell with foreign detainees, female detainees, or job-training detainees; one person per 4.3 m<sup>2</sup> of an associated cell in the patient accommodation facilities.

facilities<sup>134</sup>, police station jails,<sup>135</sup> and residential facilities<sup>136</sup>. Furthermore, the above standard is not well enforced and, as of 2010, the ratio of maximum capacity of inmates to the actual number of inmates at correctional facilities was 111%; at some individual facilities, namely the Busan Detention Center, the ratio reaches 161.5%.<sup>137</sup>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explain how the size of the space occupied by each inmate has changed annually.
- Please describe a concrete, time-bound plan to improve the problem of overcrowding in detention centers.
- Please explain whether there are cells that are available, but not being used due to shortage of prison officers, etc.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a concrete plan to include provision on the space allowed per inmate in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 **7. Improved Treatment of Minor Defendants and Protected Juveniles**

### **a. Poor Treatment for Detained Juveniles**

The Government states that it has greatly increased open treatment for protected juveniles. (para 202.) However, institutional treatment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2007. In 2010, only 32.67% of protected juveniles who were newly detained in youth detention centers received open treatment. The percentage decreases to 4.16% when including juveniles in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Board.<sup>138</sup>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protected juvenile selection criteria for open treatment and on the open treatment operation standard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institutional strategies to prevent poor treatment in youth detention centers, including guideline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monitoring by external organizations.

### **b. Increase of Juvenile Offenders and Second Offense Rate**

The Government claims to be making efforts to prevent second offenses by operating juvenile misconduct prevention centers, introducing merit points based on educational performance, and a checklist system for reward and punishment based on behavior (paras. 201-203). However, in reality the number of juvenile offenders has been increasing since 2007. In 2012, more than 40% of juvenile delinquency were committed by second offenders,<sup>139</sup> and the second offense rate is more than

---

<sup>134</sup> More than 3.3 m<sup>2</sup> per one person (Attached Table No. 5,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p>135</sup> 3.6 m<sup>2</sup> per one person in the cell for five detainees (the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Detention Facilities Article 10 (2))

<sup>136</sup> 14 m<sup>2</sup> per one-person household, 9.2 m<sup>2</sup> per one person in six-person household

<sup>137</sup>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Disposal Request for Audit Result, 2010. 4. 21., p.27

<sup>138</sup> Comparison between the “number of new detainees” from juvenile protection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umber of open treatment subjects” from the 4th state report

<sup>139</sup> The number has increased from 26.2% in 2008 to 41.3% in 2010. (Public Prosecutors' Office, Analysis of crime statistics)



twice as high compared to the adult second offense rate of 10.7%.<sup>140</sup>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comment on the base of specific data the effectiveness of the above strategies such as the network to prevent the second offense of juvenile delinquents. Also,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specific plans to decrease the number of juvenile offenders, second offense rate, and on budget plans.

### **c. Unjustifiable Detention of Juveniles**

According to the Juvenile Act, juveniles are detained in youth detention centers right after a decision to send the juveniles to the center has been made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ven if an appeal is made. Also, juveniles cannot receive any compensation for time detained even after the decision of the first trial has been repealed.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a time-bound plan to revise the law that detains juveniles in youth detention centers, even when they appeal the decision, and do not provide adequate compensation for the time detained when the decision of the first trial has been repealed.

### **d. Lack of Indic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

According to General Comment 21 para.13, The States parties should indicate in the state report whether they are applying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 However, the Government did not indicate in its report whether the Rules are being applied.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explain in detail whether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is being applied.

### **8. Collection of Expenses for Civil Trials and Court Appearance of Inmates**

In February 2010, the Ministry of Justice enacted the "Guideline on collection of expenses of civil trials and court appearance of inmates" requiring correctional facilities to collect convoy fuel costs and highway toll fees in advance from inmates at prisons and detention centers who need to appear in court for civil, administrative, or family litigations, and in case the inmates are unable to pay the expenses, the inmates will first be allowed to appear in court, but the expenses will be deducted from the inmate's money kept in custody.

However, this is a policy that undermines the inmates' right of access to courts, especially since it has the effect of making inmates hesitant to file a civil suit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regarding violations of their human rights or unfair treatment by the correctional facility. Furthermore, there are even cases in which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ntentionally move inmates, who have filed lawsuits, to another correctional facility far away from the court in order to make them bear higher expenses to appear in court.

---

<sup>140</sup> Information submitted by 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ized by parliamentarian Chul-Rae Noh(14.11.6 Citynews, “one out of ten committing second offense among juvenile offenders under probation”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statistics on the collection of court appearance expenses, particularly on the amount collected from inmates' money kept in custody, the outstanding amount due to shortage in the money kept in custody, the number of times inmates have given up their court appearance after their initial request to appear.
- Please provide statistics on the cases in which the inmates who have filed lawsuits were transferred to another correctional facility, including when the lawsuit was filed and transfer carried out.

### **9. Protection of Patients in Mental Health Institutions**

A mental health sanatorium is an accommodation facility for persons with chronic mental illness (Article 10 of the Mental Health Act). Nationwide, there are 59 such facilities accommodating 11,072 persons with an average period of hospitalization of 3,693 days (over 10 years) (2012 Report of the 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 Furthermore,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y within psychiatric hospitals, such as solitary confinement, constant beating, constraint without principles, excessive medication, etc, are commonplace and happening repeatedly. The Government is officially recognizing degrading treatment by requiring hospitals to establish and follow internal guidelines on constraint, yet even such guidelines are being ignored.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grasp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as adequate investigations are not taking place.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detailed statistics on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psychiatric hospitals and mental health sanatoriums (solitary confinement, constant beating, constraint without principles, excessive medication, etc.).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measures to prevent and remedy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persons in mental health sanatoriums.

## **Article 12**

### **1. Permanent Residency**

The Government claims that the amendment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made in 2007 eliminates any employment restrictions for foreigners with an F-5 (Permanent Resident) visa. In reality, the F-5 Visa merely grants the right to stay and not social security benefits. Social security related legislation does not have separate provisions that apply to permanent residents and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s regarding permanent residents in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lso, the Child Welfare Law, Welfare of the Aged Act, and Basic Old-Age Pension Act makes no mention of foreigners with permanent residency.

In addition, the prospective recipients of permanent residency are narrowly defined. Foreign workers with E-9 Visa cannot obtain permanent residency and the migrant children born to parents who are unregistered migrant workers are not allowed to acquire permanent residency. Even when children are born in Korea, they cannot acquire citizenship as the Korean Nationality Act adopts the principle of *jus sanguinis*. As a result, they are not fully guaranteed their rights to health, education, and development.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measures taken to guarantee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foreigners with permanent residency.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broaden the prospective recipients of permanent residency, by including foreign workers holding E-9 Visas as well as the migrant children born to unregistered migrant workers?

### **2. Mobility Rights of Vulnerable Users of Transportation**

Persons with disabilities do not have adequate access to the process of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public transport policies. There have been efforts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the subway, buses, and other related facilities through the Mobility Improvement for the Transportation Disadvantaged Act (MITDA) and the Act on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the Disabled, Senior Citizens, and Pregnant Women (APC). However, some subway stations still do not have elevators and rather have lifts that frequently lead to safety accidents. The provision rate of low-floor buses is currently 16.4% (as of 2013), much lower than the Government's goal of 33.5% in 2012. As for wheelchair accessible call taxis, a special transportation method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the provision rate remains at 60% of the legal requirement. In addition, there are no inter-city buses that are low floor or equipped with a lift, meaning the mobility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wheelchairs are not being ensured.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specific measures to ensure the mobility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have mobility limitations. Please include information on relevant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measures, and especially on how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have mobility limitations are included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ublic transport policies. Please also explain how such public transport policies are connected to policies regarding special transportation.

## **Article 13**

### **1. Deportation of Foreigners**

The Government claims that the grounds for deportation of foreigners are limited to those set forth i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requirements for deportation of foreigners with the permanent residency has become more stringent. (para 217). However, the selection of deportees is excessively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head of Immigration Offices. For example,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mbiguously defines deportees as "those who may harm public interest," without specifying detailed definitions of such actions. Moreover, in cases where unregistered foreigners who have resided in Korea due to extraordinary circumstances apply for refugee status, they have been given deportation orders based solely on their violation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ithout any fair assessment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 thus violating the non-refoulement principle under international law.

Also, deportees do not receive a physical copy of the deportation order, but are only shown the deportation order written in English; they often have trouble understanding the order. As a result,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deportees have not been able to appeal within the given time period. The time for filing a notice of appeal is relatively short, amounting to 7 days.

### **Suggested Questions**

- What measures have the Government taken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while executing deportation orders? Please provide concrete evidence of its effectivenes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criteria for the examina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appeals of deportees.

## **2. Refugee System**

The Government reports that it revise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 2008, remedying the issues pointed out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achieving improvements in the treatment and recognition procedures of refugees as suggest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ara. 220-221). The Government enacted the Refugee Act in 2013, regulating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s and the treatment of recognized refugees.

Despite such regulations, there have been no real improvements in the refugee recognition rate. Also, the living expense provided to refugee applicants is provided in an unplanned manner as it is managed at the discretion of the authorities, and the budget is insufficient. Work permits are also granted at the discretion of the authorities. Moreover, measure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refugee applicants are not guaranteed in the refugee application process.

### **Suggested Questions**

- What measures have been taken to improve the Government's refugee recognition rate?
- What measures have been taken to enhance the speed and efficiency of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what measures have been taken to guarantee the livelihood of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nd refugee applicants.

## **Article 14**

### **1. Full Expansion of Scope of Crimes applicable to Petition for Adjudication**

The Government reports that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crimes applicable to petition for adjudication to include all crimes (paras. 228~231). Even though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vised in 2007 made all crimes applicable to submission of complaints, it still limits the scope of cases subject to prosecution to crimes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on duty such as abuse of official authority, illegal arrest/detention, violence/cruel treatment, and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s.<sup>141</sup>

Furthermore,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allows the prosecution (defense) to be in charge of cases where they had initially argued for the suspect's innocence and non-prosecution, which works against the guarantee of fair trials. Such revision is retrogressive because the previous ver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d allowed for the designation of a third attorney to handle cases described above.

---

<sup>141</sup> When a civil servant is accused of committing a crime with no direct victim, such as misappropriation of public funds, malpractice, or vio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 or she is not able to apply for adjudication once the prosecution orders non-prosecution.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explain why the scope of crimes applicable to prosecution is limited, and present plans to revise legislations and to implement policies that will expand the scope of crimes applicable to prosecutions.

### **2. Inmates' Right to Obtain and Communicate with Counsel**

Inmates' right to obtain and communicate with counsel is restricted by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ccording to Article 5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law, the time allowed to meet with counsel is limited to only 30 minutes per session and four sessions per month. In addition, inmates are only allowed to meet with counsel in a location without a glass wall when there is no risk of harming order or safety.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explain the measures being taken in order to ensure inmates' right to obtain and communicate with counsel and the criteria used to determine the risk of order or safety.

### **3. Fabricated Spy Case Involving a Seoul Public Official**

In 2012, a criminal case was raised against a public official, an overseas Chinese from North Korea who had defected to South Korea. The testimony of the public official's sister was the linchpin evidence of this case. However, the sister was being detained at the Central Joint Interrogation Center (current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 Center)<sup>142</sup> when she was coerced by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members to testify "my brother is a spy". The first trial in 2013 determined that the NIS members had not notified the sister of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the appellate trial in 2014 decided that the accused public official was innocent because the court recognized that the sister's testimony was false. In particular, it was also revealed in the trial process that the information on the defendant the prosecution had received from the NIS and submitted to the court, such as the entry and departure records, was fabricated.

There was another criminal case in 2014 where an individual was accused of being a "spy sent directly from the North Korean military headquarters". The defendant was found innocent on grounds that the defendant's statement and letter of apology were drawn up without going through a lawful procedure such as the "notification of the right to remain silent". In these two cases, the NIS tried to frame two innocent North Korean defectors for espionage using fabricated evidence.

On the other hand, when the three defense attorneys of the "Seoul Public Official Spy Case" held a press conference to state that the NIS "conciliated, assaulted, and confined the defendant's sister," three NIS employees filed a civil suit for damages in 2013 against the attorneys for libel. The judge ruled against the NIS in 2014.<sup>143</sup> More recently in 2014, the prosecution asked the Korean Bar Association to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attorneys that defended the spy case.<sup>144</sup> Such

---

<sup>142</sup> Under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North Korean defectors must go through an investigation process first, regarding "suspicion of espionage" at the Central Joint Interrogation Center operated by the NIS, upon their request for protection to the Korean Government. Although the "protected persons" can be detained up to 6 months at the Center, their right to counsel is not guaranteed nor can they communicate with their family via phone or letters.

<sup>143</sup>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1/27/0702000000AKR20141127114600004.HTML>

<sup>144</sup>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052153055&code=9403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052153055&code=940301)

actions are direct attacks on attorneys' activities and may damage people's right to counsel.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explain what measures are being provided by the Government to guarantee the right to remain silence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conducted by the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 Center on North Korean defectors.
- Please explain what measures are being taken by the Government to guarantee the right to counsel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conducted by the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 Center on North Korean defectors.
- Please provide the details of criminal charges and disciplinary actions taken against the persons responsible for the fabrication of the spy cases.
- Please explain what measures are being considered in order to prevent cases on viola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involving false espionage accusations based on fabricated evidence.

## **Article 15**

The preventive detention system was abolished in 2005. Research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2003 revealed that the conditions of detainees under preventive detention were no different from those of inmates in regular prisons. However, under Article 2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Social Protection Act, the abolition did not apply to prisoners who had already received final rulings before the abolition of the preventive detention or were under protective custody at the time. The number of such inmates amounts to 677 and 134 of them are currently under protective custody. By 2020, 102 additional prisoners are to be taken into protective custody. (Ministry of Justice, 2013)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plans to allow the immediate parole or release of prisoners under preventive detention.
- Please indicate specific and concrete improvements that have been made to the detention conditions and provide plans for further improvements.

## **Article 16**

### **1.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Government is running an adult guardianship system that designates a guardian for persons deemed persistently incapable of managing tasks due to psychological restrictions caused by disease, disability, or old age, and allows substituted decision-making by the guardian on matters of property and personal status (acts such as hospitalization and leaving, admission to facilities and discharge).

The Family Court, through a claim by the person concerned, spouse, relative near in kinship, minor guardian, supervisor of minor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 supervisor of limited guardianship, special guardian, supervisor of special guardianship, prosecutor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may decide the ward's scope of legal activity and that the guardian will substitute decision-making.

Limited guardianship, which allows substituted decision-making on a limited scope, and special guardianship, which allows substituted decision-making on specified acts, are also, in principle,

restricting the legal capacity on the basis of disability.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what measures are in place to ensure equal legal capacity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plan regarding the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move from substituted decision-making to supported decision-making, which respects the person's autonomy, will and preferences.

## **Article 17**

### **1. Amendment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Situation of Violators**

In order to protect privacy, the Government amended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in 2005 so that court approvals must be attained prior to reviewing communications (para. 242~243). In 2009, a notification provision was newly established regarding the seizure, search, and inspection of telecommunication data that has been transmitted or received (para. 244).

However, the Government is broadly allowing the review of communication “when necessary for investigation”; there is serious abuse of the system.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real-time” provision of location data of mobile phones or internet devices of targeted persons upon an investigative agency’s request in advance, without even proper review.<sup>145</sup> In addition, the police has recently started conducting the so-called “base station” investigation, in order to figure out the identity of participants in assemblies. This involves the provision of a base station’s call history of every mobile phone within range of assemblies.<sup>146</sup>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commended in 2014 that information regarding communication can only be provided limitedly “when there is circumstantial evidence the suspect has committed a crime and when the data is known to be related to the corresponding case” and that the request for “real-time location data” should be limited to cases with supplementary conditions in addition to the those mentioned above. In the case of wiretapping, it was first revealed in 2009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had been wiretapping the all internet connections in real-time for over a decade using Deep Packet Inspection (DPI). Meanwhile, the seizure, search, and investigation of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have been broadly carried out with regard to the communication data from e-mails, messengers, etc. kept by the companies.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esent plans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for providing information regarding communication history and location information to intelligence or investigation agencies.

---

<sup>145</sup> In 2011, in order to trace the activists that planned the nationwide Hope Bus March to support a female worker staging a high-altitude sit-in demonstration, the police traced the location of the activists’ and their families’ mobiles phones in real time for months. In 2013, in order to arrest the leaders of Korail union on strike, the police traced the locations of the mobiles phones and internet IDs under the workers’ names and their family members’ names including their elementary school student children in real time for months. These two cases have been fil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the help of human rights groups and are currently being reviewed.

<sup>146</sup> In 2012, when base station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n a journalist who was covering the opposition party’s event, the journalist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with the help of human rights groups and the case is currently being reviewed.

- Please indicate plans to provide effective and independent oversight regimes in order to prevent the NIS from abusing its monitoring authority.
- With regard to securing the right to privacy in today's digital environment involving smart-phones and Wi-Fi,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a plan to evaluate the compliance of domestic communication laws, policies, and custom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o legislate laws in compliance with such standards.

## **2. Insufficient Protection of Suspect's Information during Investigations**

The Government insists that information of suspects is being protected during investigation processes, since the Criminal Act criminalizes acts such as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s, libel, obstruction of work, and divulging secrets, and provides the "Rules for Official Report of Investigation to Protect Human Rights" (paras. 247-248). However, according to the government audit report the Ministry of Justice submitted to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no indictments were made for prosecution cases 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s; the number of cases was 30 in 2008, 74 in 2009, and 56 in 2010.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the percentage of indictments in which acts of leaking suspects' information has led to complaints or prosecutions involving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s, libel, obstruction of work, and divulging secrets.

## **3. Insufficient Protection of Information of Victims Witnesses in Investigations**

The Government argues that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is being realized as it has enacted the Act on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Information, Etc. which stipulates that the personal data of victims, those who report crimes, and witnesses are omitted when there exists potential danger of retaliatory crimes. The Government also claims tha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also prohibit public officials from disclosing or leaking personal information or photos of the victims (para. 250-251).

Despite such efforts, the number of retaliatory crimes occurred between 2008 and August 2012 caused by the leakage of information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mounts to 614 in total and is on the rise.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explain additional plans to improve the situation regarding retaliatory crimes against victims and witnesses.
- Please indicate measures being taken to prevent revictimization caused by the leakage of the information of victims and witnesses.

## **4.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In 2005,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to prevent leakage, abuse, and misuse of location data of individuals and to protect their privacy (para. 252).

However, there are concerns that the Government may abuse or misuse individuals' GPS location



data.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Act amended in 2012, the police can receive the GPS location data of users that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has been receiving for the purpose of emergency rescue, without any approval from the court. It was revealed in the 2014 parliamentary inspection that the cases in which location data of individuals were provided increased by 40%. It has also been revealed that the Government and smart-phone manufacturers had begun installing GPS/Wi-Fi remote activation functions into devices manufactured in Korea since October 2012.<sup>147</sup>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esent plans to amend and supplement relevant laws with stricter procedures, such as supervision by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approval from the court, to ensure that investigative agencies do not abuse or misuse location data including that from GPS and Wi-Fi.

### **5.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Enhancement of Remedies**

In 2008, the Government submitted and implemente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o safely manage personal information (para. 254). Though the Act was enacted in 2012,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gave a recommendation stating that the personnel appointment and budge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were not conducted independently and that the PIPC's role is insufficient as an independ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stitution, having been only granted with review and deliberation functions, but not the power to investigate.<sup>148</sup>

In addition, the Government argues that it has fully provided the public I-PIN as a personal identity verification number, the use of which could replace the us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n internet, and enhanced remedies to enhanc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and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para. 255).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given to every Korean citizen upon birth has been widely leaked through the internet, threatening privacy rights. Recently, the Government has prohibited the us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nline and offline without legal grounds. Nevertheless, it is hard to say the us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has been prohibited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since there are over 1,000 legislations as of 2014 that allow the us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sup>149</sup>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designated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nd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as personal identity verification institution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massive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has continuously occurred in those companies.<sup>150</sup>

---

<sup>147</sup> See the article of Kyeonghyang Newspaper, available at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6&artid=201411181131001&pt=nv>

<sup>148</sup>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commendation on 2012~2016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January 2012.

<sup>149</sup> In particular, the enforcement ordinance that stipulates that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should provide thei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o the government upon their entrance to protection facilities is very problematic in that it can lead to the leakage of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and threaten their safety. This is also does not comply with the second UPR recommendations, which recommended the Korean Government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strengthening data protection in this regard (Hungary)). See more at: A/HRC/WG.6/14/L.8

<sup>150</sup> In 2014, the source of the massive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which over the personal information of 14 million people from 3 credit card companies were leaked, was an employee of KCB, a personal identity verification institution. Similarly, over 9.8 million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was leaked in 2014 from KT, the nation's biggest telecommunication company and a personal identity verification institution. On these issues,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esent plans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NHRCK with regard to the independence of the PIPC.
- Please explain the possibility and Government's willingness to limit the law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us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nly to exceptional cases.
- Please indicate if the Government has plans to reconsider its policy that grants privileges of collect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for commercial use to specific companies for online name or personal identity verification.

### **6.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 and Invasion of Privacy**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 the Government explains that it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in order to eliminate concerns of invasion of privacy and that it has strengthened the monitoring, supervision, and penalties by modifying relevant laws (para. 258~259).

It has recently been revealed by the NEIS that on numerous occasions, unidentified persons had accessed the information of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who was presumed to be an illegitimate child of the previous Public Prosecutor General, at his school.<sup>151</sup> In 2003,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isclosed a repor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revealed that the NEIS was found to be vulnerable in 61 items of 4 fields in a mock evaluation that evaluated areas of hacking, infra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also recommended the NEIS to improve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personal information access records.<sup>152</sup>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explain what measures had been taken when the leakage of a student's personal information occurred and how the Government plans to prevent recurrences in the future.

### **7. Provision of Users' Information**

The Government allows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the user information including names, ID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addresses to intelligence or investigation agencies without any restrictions such as court review. This has been criticized as such information is being misused in monitoring internet users that criticize the Government.<sup>153</sup> In 2014, the National Human Rights

---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has concluded that "a serious reevaluation needs to be carried out regarding the issue of utilizing personal identity verification institution."

<sup>151</sup> In 2013, high-ranking officials, including from the Blue House, accessed information on the mistress of Chae Dong-wook, the previous Prosecutor General, and on her child in numerous online government databases including the database of local government, police, National Health Service, and the NEIS, and leaked the acquired information to the media. Such action was found partially illegal by the court in November, 2014.

<sup>152</sup>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

<sup>153</sup> The fact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9,574,659 users was provided in 2013 means that information of 26,232 people were provided to intelligence or investigation agencies every day across the nation. It also indicates that the information of 19% of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is being provided, the country's total population being 50,219,669. During the railroad workers' strike in 2013, the police acquired personal data of 3~400 people from telecommunication companies without the court's approval for no other reason than the fact that they were on the calling list of the workers that were targeted for arrest. The police contacted them and questioned them for their relationship with the workers.

Commission of Korea (NHRCK) recommended that the conditions for requesting users' information should be limited to "when there is circumstantial evidence the suspect has committed a crime and when it is related to the corresponding case."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explain whether the Government is willing to strengthen requirements in which intelligence or investigation agencies can acquire users' information, such as requiring approval of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NHRCK's recommendation. If so, please present a detailed plan to do so.

#### **8. Retention of Communication Data**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ordinance, not a legislation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viders of telephone service, telecommunication service, and internet service should retain every user's communication data for 6 months, 12 months, and 3 months, respectively. There have been concerns that such data retention system entails a wide-ranging and particularly serious interference with the fundamental rights to respect for private life an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sup>154</sup> and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has decided to abolish the system.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explain if the Government is willing to reconsider the current system that requires the retention of communication data of every user for specific period of time. If so, please present a detailed plan to do so.

#### **9.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in Communications Secrets**

While the Government requires approvals of the Chief Judge of a High Court before wiretapping in matter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associated with Korean nationals, wiretapping in matters associated with foreign institutions, organizations, or foreigners is only possible with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and the information on such cases has not been disclosed.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explain if the Government is willing and planning to apply the same measures to its nationals and foreigners with regard to wiretapping in matter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If so, please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 **10. Compulsory Wiretapping Preparation**

Since 2007,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pass the amendment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hat would require telecommunication business operators to be equipped with wiretapping facilities for the use of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ies. Though it was not enacted in the 17<sup>th</sup> and 18<sup>th</sup> National Assembly with opposition from some parliamentarians and civil society, a bill with the same contents was proposed to the 19<sup>th</sup> National Assembly in 2014. With regard to this,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as expressed concerns that the system that requires telecommunication companies to make their communications networks "wiretap-ready" is particularly alarming since "it creates an environment that facilitates sweeping

---

<sup>154</sup> <http://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4-04/cp140054en.pdf>

surveillance measures”.<sup>155</sup>

### **Suggested Questions**

- Explain if the Government is willing to withdraw its plan to introduce a system that requires telecommunication companies to make their communication network ‘wiretap-ready’. If so, please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 **11.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Investigation Agency**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ovide many exceptions for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ies. In particular, the personal information retained by public institutions is provided to investigation agencies without a warrant (Act, Article 18, section 2, clause 7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sup>156</sup>.

Moreover,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police have practically been monitoring or provided with the CCTV images in real-time from the CCTV Integrated Control Center, which was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 for crime prevention, parking, and park management.<sup>157</sup> The police have caused controversy for using such CCTV data in monitoring demonstrations and protests.<sup>158</sup> The controversy of human rights violation has been continuing with the long-term retention of the citizens’ license plate information without legal grounds.<sup>159</sup>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explain if the Government has plans on improving the related laws, policies, and practices to require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ies to go through legal procedures such as court approval upon receiving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CCTV data. If so, please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 **12. Infringement of Students’ Freedom of Privacy and Communication**

Students’ privacy is seriously being infringed upon at schools by measures such as revealing grades or limiting the use of mobile phones. There have been numerous cases in which students’ grades had been reveal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students or legitimate grounds.<sup>160</sup> In addition, the

---

<sup>155</sup>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4875&LangID=E#sthash.gMnz6InZ.dpuf>

<sup>156</sup> During the railroad workers’ strike in 2013, the police were provided with the workers’ and their families’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and etc. from public institutions. With the help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e people concerned filed a constitutional appeal on this case, which is now under review.

<sup>157</sup>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629545.html](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629545.html)

<sup>158</sup> In the demonstrations and protests held by the citizens and the bereaved families after the 2014 Sewol ferry tragedy, the police and the Blue House were seen controlling CCTVs in the periphery areas to monitor the participants. The people concerned applied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with the help of human rights groups, but the police and the Blue House answered that the corresponding clips have been deleted and do not exist anymore.

<sup>159</sup>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661547.html](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661547.html)

<sup>160</sup> According to the <Study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Korean Children and Juvenile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2013, 29.1% of the students have had experiences in which their exam results were revealed. In the 2014 National Student Human Rights Survey conducted by Human Rights Friendly School+Neomeo Movement Headquarters and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40.6% of the

limitation of the use of mobile phones even during break or in specific areas outside the classroom gravely infringes students' privacy rights. Moreover, the test operation of the 'iSmartKeeper' program, which enables teachers to control students' mobile phones and check their location information, control usable functions, and browse data, was executed by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Gangwondo Office of Education in 2014.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governmental measures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students' freedom of privacy and communication, including revealing grades and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use of mobile phones.
- The operation of a program that enables teachers to remotely control students' mobile phones is an excessive restriction of freedom of communication as well as an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governmental measures to prevent the introduction of such programs in the education field.

### **13.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

In processing information on people living with HIV/AIDS (PLWHA) in accordance with Prevention of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ct and the HIV/AIDS Management Guidelines, the Government places no restrictions on the use of the people's real names. Consequently, there occasionally are cases where information on the real names of PLWHA is leaked. The Government's claim that regulations on anonymous medical examinations have been newly established to encourage medical examinations on potential PLWHA and to minimize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s groundless. The truth is that anonymous medical examinations have not become prevalent and that even when medical examinations are anonymous, if and when a person is diagnosed to be HIV-positive, his or her real name would be reported to a local community health center. There are regulations stating that, in the case of anonymous tests, information on PLWHA must be managed anonymously. However, the Government induce PLWHA to report their real names by reimbursing medical examination fees.

Moreover, the number of HIV tests conducted without notification and testees' consent (forced HIV tests) is increasing. This increasing number of unjustifiable tests has raised concerns about possible human rights violation and also disclosed private medical information. Therefore, it creates serious medical ethics problems. HIV tests are forcibly conducted on foreigners, prisoners, and soldiers (military service is mandatory in South Korea). Also, some medical examiners often conduct HIV tests without prior explanations or consent of their patients who come to medical institution for medical needs, not for the HIV tests.

#### **Suggested Questions**

- Does the Government have a plan to abolish the real-name reporting and management of PLWHA? Please provide a specific and detailed plan.
- Please concretely elucidate the reality of forced HIV tests conducted on foreigners, soldiers, and prisoners. Also, please explain the Government's effort to abolish such forced tests.
- Please explain the Government's effort to make prior explanations and testees' consent

---

students answered that they had experienced insults regarding their grades or disclosure of their grades (marks/ranks) over the past year.

mandatory when people are subjected to HIV tests during hospital tests conducted before operations or aimed at discovering the causes of diseases.

## **Article 18**

### **1.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for Religious Reasons, etc**

In response to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Human Rights Committee to acknowledge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the Government states there ar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due to the confrontational situation with North Korea and despite its continuous research, has deferred implement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as a national consensus has not been established. The Government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consider implement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the future if a national consensus is established through a public opinion poll (paras. 265-271).

However, since 2008, the Government has not conducted any research on introduc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and only one public opinion poll was conducted by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n November 2011. As of November 2014, a revised bill for the Military Service Act regard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has been proposed at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re has been no specific discussion in progress yet.<sup>161</sup>

On 9 December 2014, revised bills regarding the Military Service Act were partially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amendments allow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ose who have objected to physical examination, military duty, etc. to be made public on the internet. Six months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amendments, in addition to prison sentences imposed by current law, the personal information of military service objectors will be disclosed on the internet.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any new research results that can support the claim that a security vacuum will be created as a result of the difficulty in maintaining military manpower if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s introduced.
- Please explain in detail any research and activities carried out on improving the public awareness of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 With regard to the amendments to the Military Service Act, please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subjects for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degree of disclosure, purpose, etc.

### **2. Violation of religious freedom in religiously affiliated schools**

Schools established by religious corporations are not guaranteeing the religious freedom of their students and forcing religious services, religious events, and religious education upon students. In the current system,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assigning students to schools, thus students attending religiously affiliated schools are forced to attend religious events and take religious classes regardless of their religion.

---

<sup>161</sup>Legislative bill partially revising the Military Service Law (proposed by parliamentarian Jin, Hae-Chul). Proposed on 18 July 2013.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stated that religiously affiliated schools should not force students to attend religious events and should offer an alternative subject if students do not wish to take religious classes. However, the religion of the school is being forced upon students as religious ceremonies take place as part of the schools' formal education program and formal events. No surveys on what alternative subjects students wish to study in place of religious class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sup>162</sup> Sinc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Education Offices have shown a passive attitude towards preventing violations of religious freedom, students who demand religious freedom experience disadvantages and most students accept the forcing of religion as normal.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proportion of religiously affiliated schools to total schools and also statistics on religiously affiliated schools that have offered alternative subjects in place of religious classes.
- Please provide any statistics or information on violations of religious freedom in religiously affiliated schools, and please explain if there have been any measures taken regarding the violations.
- Please indicate measures that have been taken to prevent religiously affiliated schools from forcing religion on their students and from giving disadvantages to students who demand religious freedom.

## **Article 19**

### **1. Identity Verification on the Internet**

The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e online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unconstitutional in August 2012. Nevertheless, various identity verification systems still exist online such as the online real-name policy during election periods and the online game user identity verification policy. Furthermore, the Korean Government is not guaranteeing the right to anonymous expression on the internet by designating identity verification institutions to verify real name and identity online.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the Government's criteria for designating identity verification institutions and measures for ensuring the right to anonymous expression online.

### **2.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Even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in December 2010 (para. 292), criminal charges against the spreading of false

---

<sup>162</sup>In 2010, Baekyoung High School in Gyeonggi-do made students go to church once a week, rather than directly to school, practically forcing religious classes and service on students.

Also,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2937.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2937.html)) in 2012, a student named Hong Seo-Jung who was attending Seoul Myung Ji High School was forced to participate in religious service starting from freshman orientation and submitted a civil appeal to the Education Office, testifying about being forced to participate in morning prayers, attend Monday religious service in the first class of the day, attend religious class once a week, and participate in religious revival service. The Education Office passively dealt with the appeal and only took measures to provide an alternative subject when the case was reported in the media. However, while the school established an alternative subject, it threatened its students to not take the alternative class and publicly criticized Hong Seo-Jung for damaging the school's reputation. Ultimately, Hong Seo-Jung was not able to endure the pressure and dropped out of school.

information online still persist.<sup>163</sup> In particular, after the Sewol ferry tragedy took place on 16 April 16 2014, in which 304 people lost their lives including high school students on their school trip, the police, prosecution, and the President have been responding to the internet posts that criticize the Government with criminal charges, insisting that they are all groundless allegations.<sup>164</sup>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cases per time period that were charged for spreading false information online and whether there were convictions. What were the criminal facts of the cases that were charged for spreading false information online regarding the Sewol ferry tragedy?

### 3. Administrative Deliberation of Internet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is an administrative organ in charge of deliberating the contents of broadcasts and the internet.<sup>165</sup> There are concerns that it may function as a *de facto* post-censorship body that deletes information critical of the Government.

### Suggested Questions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stop the current administrative deliberation of internet conduct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Special Rapporteur, and the 2<sup>nd</sup> UPR, and transfer its functions to an independent organ free of political, commercial, and other unlawful influences?

### 4. Oppre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chools

In the Republic of Korea, students are treated as beings that are supposed to follow school directions,

---

<sup>163</sup> When a controversy arose regarding the influx of radioactive substances into the atmosphere after the Japanese nuclear accident in March 2011, the Korean Government publicized that “radioactive substances cannot flow into the Korean territory, because of the westerlies”. The police charged a person who introduced the contents of a foreign broadcast on the internet that dealt with the concerned controversy. The person was not prosecuted after radioactive substances including cesium were actually discovered in the suburbs of Seoul, but the internet discussions regarding the issue withered. There was another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when heavy rain hit Seoul causing huge damages in July 2011. The police announced that they will investigate those who criticized the former Mayor of Seoul online, who belonged to the ruling party, and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issue were largely withered afterwards.

<sup>164</sup> On April 23, right after the tragedy, the police promptly announced their policy on strict handling of “Sewol ferry rumors” and prosecuted 87 cases of vicious rumors. The police also declared that they will mobilize 1,038 cyber police officers to launch a massive crackdown on the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However, a considerable number of the vicious rumors selected by the police about criticizing the coast guard and the commander-in-chief onsite, along with the arguments that the coast guard was not enthusiastic in rescuing victims, prevented divers from searching, and that the Government did not inject oxygen into the ferry, were found to be true. In addition, when Yoo Byung-eun, the owner of Sewol ferry, was suddenly found dead in July, the police proclaimed that they will strictly deal with posts online that contradict the official statement of the police.

<sup>165</sup> In the 2<sup>nd</sup> UPR, the government reported that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s (KCSC) is a private organization. However, Korean courts have numerous times ruled that it is an administrative body. The KCSC blocked the twitter account 2MB18nomA (<http://twitter.com/2MB18Noma>)’s internet access in Korea citing that the account name resembles an insult against the president and took measures to delete or block the access of posts that criticize the Government numerous times. The rate of domestic telecommunication companies implementing contents decided by the KCSC amounts to 99%.



control, and orders. Although school regulations should be enacted by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students, many studies show that students are not able to voice their opinions in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amendment of school regulations. At the end of 2013, posters with students' opinions on the realities of human rights, labor repression, and the compulsory supplementary classes in the Korean society were posted on school notice boards across the nation by numerou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owever, all posters were removed and several schools even reported it to the police to investigate the students or held school disciplinary meetings.

### **Suggested Questions**

- What measures have been taken to prevent students from being punished or disadvantaged for expressing their opinions by putting up posters, posting on SNS, or conducting signature campaigns?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modify the laws and administrative measures so that students' opinions can b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enacting or revising school regulations as per recommendations?

### **5. National Security Act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Government states in its report that it is strictly apply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para. 286). However, the number of people charged for viola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simply for expressing their opinions has rapidly increased since 2008.<sup>166</sup> Among the total number of charges for violations of the said Act, violation of Article 7 amounted to 76% in 2008, 77% in 2009, 73% in 2010, 93% in 2011, 79.4% in 2012, and 79.7% in 2013.<sup>167</sup> Among the total National Security Act cases, the application of Article 7 is especially broad and arbitrary. The majority of the cases charged for the violation of Article 7 have involved uploading or forwarding pro-North contents on the internet. A prime example of the arbitrary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infring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case of Park Jeong-Geun, who was arrested and charged for re-tweeting posts of a North Korean twitter account.<sup>168</sup>

The Government also restricts information and arguments distributed in cyberspace based on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Regarding "information with contents that accompany activities prohibited by the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77 Section 7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stipulates that the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should have the provider of the information and the website manager delete the information. Non-compliance with this provision may result in up to 2 years in prison or up to 10 million KRW in fines (approximately USD 10,000). The police conduct everyday

---

<sup>166</sup> 46 people were charged with violations of National Security Act in 2008, 57 in 2009, 97 in 2010, 90 in 2011, 112 in 2012, and 79 as of September 2013. From the [2014 parliamentary inspection data] by Seo Giho of the Justice Party,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Public Security Affairs Division of the Prosecution Bureau at the Ministry of Justice.

<sup>167</sup> From the [2014 parliamentary inspection data] by Seo Giho of the Justice Party,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Public Security Affairs Division of the Prosecution Bureau at the Ministry of Justice.

<sup>168</sup> In January 2012, Park Jeong-Geun was arrested by the police for re-tweeting the posts of a North Korean account <Uriminzokkiri>. Park became the first man in the world to be arrested for re-tweeting posts. Park re-tweeted the posts of the North Korean account to satirize and ridicule the North Korean regime, but the prosecution arrested him for violating Section 1 and 5 of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Park was found guilty in the first trial, but later found innocent in the second trial. On August 28, 2014, his innocence was finalized as the appeal was dismissed.

inspection in cyberspace and ask posters of information or website managers to delete certain information by “requesting cooperation”. Most of online expressions are being voluntarily deleted upon request from the police and before compulsory execution through the KCC. From 2009 to August 2014,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police advised to delete certain information via phone, fax, e-mail, or mail amounts to 200,000.<sup>169</sup> Furthermore, the police request the KCC to delete information when people do not comply with police requests. Consequently, the KCC requests for deliberation to the Korean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After the deliberation, the KCSC notifies the website operator of the decision on deletion. Non-compliance of this decision leads to criminal charges, and the number of such criminal charges amounted to 865 from 2007 to August 2014.<sup>170</sup>

### **Suggested Questions**

- What is the source of the “Results of Case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Act* “ in the state report?
- Please explain why the number of people charged for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has rapidly increased after 2008?

### **6. Public Official’s Freedom of Expression**

The Government is entirely restricting public official’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except for the right to vote, on grounds of political neutrality required to be maintained in their duties. In 2008,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GEU) joined in the extensive and nation-wid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 when the anti-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eef import wave was sweeping the nation during the Korea-US FTA discussions. In 2010 and 2011, some members of the union supported a progressive political party with a small sum of money (KRW 10,000 per month: approximately USD 10). As a result, the public officials were charged and received disciplinary action for violating their duty to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Regarding the issue above, the 353rd board of directo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 should be given opportunities to publicly express their opinions regarding a wide range of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and issue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lso expressed deep concerns regarding the restriction of public officials’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On 29 May 2008,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lso stated that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when one does not use his or her position as a public official”.<sup>171</sup>

Moreover, the Government added a provision to Article 27 of the Public Officials Service Regulations that prohibits criticizing government policies that are “not related to their official duties”, which excessively restricts the rights of public officials guaranteed under the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sup>169</sup> From the [2014 Parliamentary Inspection Data] by Park Chun-Shik of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the data submit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sup>170</sup> From the [2014 Parliamentary Inspection Data] by Park Chun-Shik of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the data submit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sup>171</sup> 2008. 5. 29. 2006Heonma1096.

### **Suggested Questions**

- Is the Government willing to amend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restrict public official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revise the Public Officials Service Regulations?

## **Article 20**

### **1. Hate Speech and Incitement to Hate against Minority Groups Including Foreigners and Gender/Sexual Minorities**

Hate speech is prolifer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Consequently, even public figures, including politicians and religious leaders, express their views of hostility against gender/sexual minorities and migrants on the internet and in the public sphere.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legislating or attempting to legislate the Anti-Discrimination Act, Seoul Student Rights Ordinance, and Charter of Human Rights for Seoul Citizens, hate against social minorities has become even more noticeable;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has yet to be enacted. Under this situation, the President appointed the Minister of Education, one of the joint representatives of an organization that has carried on the movement to delete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homosexuality from textbooks on the grounds that "textbooks promote immoral homosexuality" and, as a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 figure who has opposed the legislation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 **Suggested Questions**

- Is the Government aware of the number of cases and degree of damage per year incurred by hate speech against minority groups, including foreigners and gender/sexual minorities?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regulate hate speech and incitement to hate, such as conducting awareness-raising campaigns on LGBT and establishing legal measures?

## **Article 21**

### **1.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s a System of Permission**

The Government is categorizing assemblies into legal and illegal assemblies without proper consideration and taking firm measures against the latter (para. 298). These measures show that the Government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to ensure the right of peaceful assembly. The curr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limits peaceful assemblies that are "legal" and allows the restriction, dispersal, and punishment of assemblies if there are any violations of the law,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assembly is being held in a peaceful manner.

The classification of peaceful assemblies as illegal and according punishment is mainly due to the "system of notification in advanc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requires the organizer of an assembly to file a report to authorities in advance and the police to review the report and issue a ban or supplementation notice. The police have cited reasons such as maintenance of traffic order,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nd security, restrictions on outdoor assemblies in certain locations, etc. to ban assemblies.

Although this is claimed by the Government to be a "system of notification", in reality it is a "system of permission" as assemblies are dispersed and punished if they were banned in advance, breached

the bounds of the reported objectives, or were not reported in advance. Also, the prosecution and police have been arresting and fining the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assemblies<sup>172</sup>, in addition to filing claim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There was an increase in indictment by the prosecution for violations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during the 2008 candlelight vigils and 2010 Hope Bus campaigns, but the acquittal rates<sup>173</sup> for violations of the Act has been increasing as well. The excessive indictment against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has a chilling effect on the exercise of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shows that there is an abuse of governmental authority.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statistics of the police and Prosecutors' Office on bookings, indictments, and punishments for unreported assemblies.

### **2.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bans all night tim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On 27 March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rticle 10 of the Act, which bans night time assemblies before midnight, as unconstitutional.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added that banning assemblies after midnight should be up to the National Assembly, thus leaving open a possibility that assemblies after midnight may be banned. Aft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dlelight vigils began to take place after they had stopped in 2008. There were 250 summary indictments, 52 formal indictments, and 945 defendants<sup>174</sup> in trials related to the candlelight vigils. These individuals were issued fines ranging from KRW 500,000 to KRW 2,500,000 (approximately USD 500-2500).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statistics of the police and Prosecutors' Office on bookings, indictments, and punishments for night tim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 Many of those who were charged with and found guilty of violations of Article 10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ad participated in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at began before midnight and were arrested after midnight. Provide information on the grounds for banning protests after midnight and explain why nighttime protests are considered particularly dangerous.

### **3. The Application of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to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Since 2008, the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have been imposing punishments on assembly participants through the application of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under the Criminal Act. Many assembly participants are being arrested *in flagrante delicto* or subject to illegal photographing by the police, later summoned to be charged with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and fined between KRW 1,000,000 and KRW 5,000,000 (approximately USD 1000-5000).

### **Suggested Questions**

---

<sup>172</sup> Statistics for fines given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for violations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e as follows. 2006: 111, 2007: 180, 2008: 339, 2009: 168, 2010: 263, 2011:190, 2012: 267, 2013: 130, Jan-Oct 2014: 218. [Source: Parliamentarian Seo, Giho, Justice Party, 2014 parliamentary inspection data]

<sup>173</sup> Statistics for acquittals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for violations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e as follows. 2006: 5, 2007: 7, 2008: 15, 2009: 20, 2010: 37, 2011: 17, 2012: 8, 2013: 5, Jan-Oct 2014: 13 [Source: Parliamentarian Seo, Giho, Justice Party, 2014 parliamentary inspection data]

<sup>174</sup> Statistics on candlelight vigils from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Please provide statistics of the police and Prosecutors' Office on bookings, indictments, and punishments for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in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 **4. Main Examples of Violations of the Right of Assembly**

**1) Suppression of candlelight vigils:** The Government stated in its report that peaceful assemblies have been gradually turning into illegal and violent assemblies that even cause damage to police buses (para. 301). However, the police have been restricting the right to assembly by using excessive force, despite the peaceful nature of the candlelight vigils. As can be seen by the statement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at the excessive use of bus blockades increases the violence of assemblies, the police are arbitrarily using bus blockades, water cannons, and fire extinguishers and focusing on methods such as dispersal and arrests in dealing with assemblies. The Prosecutors' Office has been indicting participants of peaceful candlelight vigils using the fact that current laws prohibit night time assemblies and road occupation; related trials are ongoing as of 2014. As mentioned in the state report, when filing charges against the police, it is difficult to file charges against a particular individual (para. 30) so it is necessary for police officers who manage assemblies to wear nametags. However, the police have not agreed to this practice.

**2) Yongsan tenant protest:** In 2009, tenants gathered in an assembly to protest the development-based evictions in Yongsan district were subject to excessive use of force by the police, which left five tenants and one police officer killed and over 20 individuals injured. Over 1,600 police officers, 99 SWAT team members, 4 water cannons were mobilized to suppress 30 protesting tenants.

The Government states in its report that it was necessary to put an end to the protests immediately, since protestors were throwing Molotov cocktails and posing threats to public safety (para. 304). However, protestors only used Molotov cocktails when water cannons were being used or private security guards were approaching and the protest was in a lull for most of the time. The SWAT team had already arrived before the Molotov cocktails were first used. Also, although the police knew of the presence of flammable materials, they focused on suppressing the protest rather than preparing chemical fire engines and air mattresses. Consequently, people who fell from the building were injured. The Government mentions that it mobilized fire engines, sprinkler trucks, and ambulances for the safe handling of the protest, but this information is not consistent with the truth.

**3) Protests against Ssangyong Motors mass layoffs:** In April 2009, after Ssangyong Motors announced its plans to lay off 2,646 employees, the workers began a general strike and the company shut down its main factory. During the Ssangyong Motors labor union's sit-in strike at the company's factory, which took place for 77 days from 22 May to 6 August 2009, the police and company cut off the supply of food, water, gas, and electricity to the factory and did not allow doctors and nurses to enter the premises. Over 300 private security guards hired by the company were armed with helmets, steel pipes, fire extinguishers, shields, nets, etc. and together with more than 3,000 company employees, assaulted union members with steel pipes and used fire extinguishers while attempting to enter the factory. However, the police abetted the use of violence by company employees and private security guards against the protesters.

**4) Interruption of protests in front of Daehanmun:** In 2012, when laid-off Ssangyong Motors workers were engaging in a sit-in protest in front of Daehanmun (Gate), the Jung-gu (District) Office installed a flower garden in front of Daehanmun to disrupt the sit-in. Also, the Namdaemun Police Station rejected reports for assemblies and banned all assemblies in front of the flower garden, citing

reasons such as preservation of the flower garden and maintenance of public order. In response, lawyers of MINBYUN-Lawyer for a Democratic Society (MINBYUN) filed a suit for the cancellation of the ban notice on outdoor assembly in July 2012 and the court ordered the Namdaemun Police Station to approve the assemblies. Furthermore, they submitted an application for emergency remedy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NHRCK gave a recommendation stating that the Namdaemun Police Station was violating the right to assembly by disallowing assemblies. Despite these actions, the Namdaemun Police Station continues to intentionally disrupt assemblies in front of Daehanmun. The police excessively set up police lines at the assembly area and MINBYUN lawyers who made complaints against it were taken to the police station. There is an ongoing criminal suit filed by the police against 5 MINBYUN lawyers.

**5) Citizen protests to support Hanjin Heavy Industries labor union members:** On 6 January 2011, Jin-sook Kim, a member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began an aerial protest on top of a factory crane against Hanjin's mass layoffs. Over 40,000 citizens from all over the country showed support by visiting Kim over the course of five times for one night each, but the police restricted movement and used bus blockades, water cannons, and tear gas against the Hope Bus participants taking part in a peaceful march to keep them from approaching the crane. In addition, due to the overaggressive dispersal procedures carried out by the police, many participants were injured and arrested. Investigative agencies took judicial action against more than 500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protests for violations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d also filed a civil suit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to police equipment (riot gear).

**6) Sewol ferry disaster assemblies:** On 16 April 2014, the Sewol ferry sank on its way from Incheon to Jeju and 295 passengers were killed and 9 went missing. Citizens and families of the victims engaged in protests to demand an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the sinking and an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safety measures. However, the police took firm action against the nationwide protests. Assemblies near the Blue House, the presidential residence, were completely banned and the number of ban notices for assemblies in the Gwanghwamun area, which is near the Blue House, drastically increased.<sup>175</sup>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statistics on bookings, indictments, and punishments of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2008 candlelight vigils. Also,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civil suits filed against participants of the 2008 candlelight vigils and their results.
-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commended that 'forced eviction be used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that no project of development or urban renewal be carried out without prior notification and access to temporary housing for those affected so as to avoid recourse to violence, such as that seen in the Yongsan incident'.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recommendation.
- Please comment on why the police did not restrain company employees and private security guards from committing acts of violence against the Ssanyong Motors protestors, even when they knew of such actions.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punishments carried

---

<sup>175</sup> Assembly notifications were submitted for 10 locations to hold the 18 May Blue House General People's Assembly, but the police issued ban notices for all locations. Assembly notifications were submitted for 61 locations near the Blue House to hold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Blue House General People's Assembly, but ban notices were also issued for these locations.

out with regard to these illegal acts including disruption of assemblies and violence.

- Please provide statistics on bookings, indictments, and punishments of those who participated in protests to support Hanjin Heavy Industries labor union members. Also, please provide statistics on bookings, indictments, and punishments of private security guards who committed acts of violence against protestors.

## **5. Crowd Management**

In addi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d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the police are suppressing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using the following methods.

- 1) Use of bus blockades to isolate and block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 2) Restricting the participation and movement of protestors
- 3) Gathering evidence by photographing and filming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o punish participants
- 4) Not wearing nametags
- 5) Use of weapon-like equipment in dispersing assemblies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grounds for setting up bus blockades at peaceful assemblies and provide statistics on the use of bus blockades.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implement measures to prevent the police from blocking assemblies in advance, including by amending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used as the grounds for restricting movement?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given by Frank La Rue, the former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an independent body can investigate all cases of excessive use of police force.
- Please explain what laws and regulations exist concerning the grounds and methods for using police equipment. Also,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punishments and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of violations of equipment use regulations.
-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have all recommended the use of nametags by the police.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measures taken to ensure that police officers wear nametags at assemblies.

## **6. Schools Punishing Students for Participating in Assemblies and Disruption of Peaceful Associ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does not specify the right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Office of Education has not ordered corrective measures to schools that have interfered with and taken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tudents who have exercised their right to assembly and association.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statistics on disciplinary action, punishment, or suppression against students who have taken collective action.

## **7. Violations of Gender/Sexual Minorities' Right to Assembly**

In June 2014, an annual LGBT pride parade held in Seoul was severely interrupted for some four hours by homophobic organizations. Although the host of the parade had reported the festival and the parade in advance, the Seodaemun Police Station neither guaranteed the participants' rights nor made efforts to restrain the homophobic organizations that threatened and inflicted violence on participants.

### **Suggested Questions**

- Does the Government monitor discriminatory practic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gainst gender/sexual minorities in the public?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prevent social environments that might infringe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assembly and might tolerate acts of hate based on discriminatory perceptions?

## **Article 22**

### **1. Improvement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The state report mentions that the Government maintains its reservation on Article 22 of the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para. 306). The Government stated that it hopes to create sound competi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encourage member-oriented labor union activities by requiring representative unions to represent in a fair manner and through the multiple union system, which guarantees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of unions (para. 309). However, the freedom of associ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is being gradually restricted. Contrary to the state report which argues that the multiple union system is used guarantee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of unions, the system is used as grounds for applying neglect of collective bargaining, thus there are many restrictions on rights that are due to the reservation on Article 22 of the CCPR.

### **Suggested Questions**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withdraw its reservation on Article 22 of the CCPR?

### **2. Guaranteeing the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The Government claims it has modified relevant laws to protect the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provided measures for mediation or arbitration through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for collective bargaining (para. 312), engaged in dialogue and reached an agreement with relevant public official labor unions (para. 312), and mentions that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Unions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citing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ara. 314)

Contrary to the state report, in August 2013,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id not review the application for union establishment on grounds that there were union members who were dismissed workers, and broke the promise first made in labor-government negotiations to approv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GEU). The Government has rejected the application four times since 2009. Although the issuance of registration application certificate is an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Government has conducted inspection of the KGEU



and rejected its establishment, citing reasons that there are members who are dismissed workers or grade 6 supervisors. In response,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made recommendations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KGEU to guarantee without restrictions the right to organize of grade 5 public officials and below.<sup>176</sup> In August 2013, the ILO carried out an urgent intervention (ILO TUR 1-145/1-145-3), but the KGEU remains without legal status to this day.

Moreover, the Government claims that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have been well executed in 2007 (para.312). However, in the 2008 government negotiations, the Government only delivered its own demands on 13 Oct 2009 and even after the merger of the former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former Korean Democratic Government Employees' Union, and former Korean Court Workers Union, the Government made an issue of the former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s legal status; the negotiations have not taken place as of 2014. In addition, although the working conditions, wage, etc. of public officials are either included in most laws and ordinances or reflected in the budget, the Government is excluding matters stipulated by laws, ordinances, or the budget from the bounds of collective bargaining. Each year,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former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orders corrective measures including disciplinary action by sending guidelines on the elimination of illegal practices, even for labor-management agreements made voluntarily by relevant local governments. Some local governments allow the establishment of employer-friendly labor unions and abuse the use of single bargaining channels to create conflict among laborers. They also apply neglect of collective bargaining, citing that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was not used, and ban collective action including slowdow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dify relevant legislation.

### **Suggested Questions**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ame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Unions and related laws in compliance with the protection of the basic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proposed by the ILO and with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 The working conditions, wage, etc. are mostly designated as non-negotiable items by law.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ame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Unions and expand the bounds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amend relevant laws to consistently guarantee rights to collective action, since current laws ban collective action including slowdowns?

### **3. Guaranteeing the Labor Rights of Teachers**

According to the state report, the teachers' "right to organize, and rights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signing a collective agreement are protected, but their right to collective action is partly restricted" (para.316). However, on 24 Oct 2013, the Government revoked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which has more than 60,000 members, on grounds that they accepted nine dismissed teachers as members. The Government referred to Article 2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s' Unions, which stipulates that only current teachers are permitted to join labor unions, as the grounds of revocation. However, the ILO has made recommendations to amend this provision<sup>177</sup>, and the restri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of 60,000

---

<sup>176</sup> ILO Governing body CFA Report No. 304, 306, 307, 309, 311, 327, 331, 335, 340, 346, 353, 363, 371

<sup>177</sup> On 27 March 2014, 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firmly criticized the Korean Government's revocation of the KTU's legal status and stated that revoking the status of the KTU on grounds

teachers cannot be justified by the presence of nine dismissed teachers.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eachers have been deprived of their right to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by law. However, university level instructors are able to exercise their rights to participate in political party activities and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 **Suggested Questions**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implement the ILO recommendations to amend Article 2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s' Unions, which was used as the grounds for revoking the legal status of the KTU?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plans to amend laws to ensure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eachers to the same degree as university level instructors.

#### **4.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Dissolve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The Ministry of Justice filed a petition for the dissolution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3. On 19 December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ed the dissolution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sup>178</sup>.

#### **Suggested Questions**

- The above decision does not comply with the Venice Commission's Guidelines on Prohibition an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Analogous Measures, and is a serious violation of the freedom of thought, association, and expression. There are concerns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s as the members of the above party are undergoing investigations for viola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Please comment on this decision.

## **Article 23**

### **1. Requirement of Absence of Underage Children and/or State of Being Unmarried as a Condition for the Legal Sex Reassignment of Transsexuals**

Since 2006, the Supreme Court's Guidelines on the Clerical Processing of Cases of Transsexuals' Application for Legal Sex Reassignment has required the absence of underage children as a condition for legal sex reassignment. Consequently, transsexuals with underage children have had difficulty in actively exercising their parental rights and protecting their children due to appearances that differ from the sexes on their personal identification documents. In addition, these guidelines demand the state of being unmarried as a condition for legal sex reassignment; thus, such requirement forces divorce on married applicants for legal sex reassignment.

#### **Suggested Questions**

- Has the Government made plans to abolish the requirement demanding the absence of underage children and/or the state of being unmarried as a condition for transsexuals legal sex reassignment?

---

that a handful of dismissed workers joined the union i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recommended the Korean Government to withdraw the revocation without delay.

<sup>178</sup> [http://www.huffingtonpost.kr/2014/12/19/story\\_n\\_6351738.html](http://www.huffingtonpost.kr/2014/12/19/story_n_6351738.html)

## Article 24

### 1. Recognizing the Visitation Rights of the Child

The Government claims that visitation rights have newly become a children's right, mentioning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para. 336).

However, in cases where a child's parents are divorced and one of the parents is a foreigner who becomes an irregular migrant because the period of sojourn has expired, the parent is prohibited from reentering the country for a certain period after departure. Therefore, in this case, the visitation rights of the child cannot be fully guaranteed. Also, the procedure is difficult for a parent who is a foreigner to access divorce documents that specify details on the exercise of visitation rights, thus limiting both the visitation rights of children and parents.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describe measures in which children's visitation rights can be guaranteed in cases where the child's migrant parents cannot stay in Korea with them or reenter the country,

### 2. Protection from Child Sexual Abuse

The Government states in its report that it has implemented measures to lower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such as imposing heavier statutory punishments for child sexual abuse, and that it is providing victim support and protection (paras. 342-346). However, rape victims under the age of 20 accounted for 36.3% of total rape victims in 2013, which was the highest among all age groups<sup>179</sup>. This ratio has been continuously growing since 2008 and the ratio of victims under the age 15 was 14.4% in 2008 and 14.3% in 2012<sup>180</sup>, which shows there was almost no decrease. The ratio of child and juvenile sex offenders put on probation to those imprisoned remains to be high and the ratio even increased in 2013<sup>181</sup>. Also, revictimization by law enforcement agencies continues to occur.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esent analysis reports on how the Government's policy focusing on imposing heavier punishments has affected the number of child sexual abuse victims.
- Please present specific data on the enforcement of the newly amended law, such as crime report rate, prosecution rate, conviction rate, probation rate, and the difference between statutory punishment and declaratory punishment etc.
- Please indicate plans to ensure the qualifications of law enforcement agents dealing with child sexual abuse cases. Please also provide specific plans to educate Prosecutors for Child (PFC) and investigators, including number of PFCs, specialized investigators and judges, requirements, length of service, and circulation, etc.

The Government states that it has newly established provisions to punish acts of solicitation of prostitu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articles 7 (2) and 10 (2)) (para343).

However,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2007 to 2012, 66% of criminals who committed child

---

<sup>179</sup> The National Police Agency, 2013 Analysis of Major Index Crimes, 2013

<sup>180</sup>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Crime Phenomenon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2013. 144~145

<sup>181</sup> Data from the Supreme Court of Korea for parliamentarian Jin-Tae Kim, 2013. (Yonhap News Agency, "Probation ratio of child sex offenders has increased this year" , 18.10.2013.)

prostitution were put on probation. Among those who were sentenced to prison, 66.3% were sentenced to less than 3 years<sup>182</sup>. This shows that law enforcement is not taking the crime of child prostitution seriously<sup>183</sup>. Furthermore, even though child prostitu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mobile technology is growing fast, the Government has no plans to address this issue. Als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classifies children who were engaged in child prostitution as either a “victimized child” or “targeted child”, which leads to imposing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on the so-called “targeted child”<sup>184</sup>.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law enforcement’s viewpoint and investigation or trial practices regarding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which criminalizes children who were engaged in child prostitution.
- Please provide statistics on the rates of occurrence, arrest, crime report, prosecution, conviction, and on the declaratory punishment of clients of child prostitution.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government welfare plans and economical and social measures to provide a social safety net for children engaged in prostitution, in accordance with CCPR General Comment No. 17: Article 24 (Rights of the Child) para 3, which states that every possible measure should be taken to prevent children from being exploited by means of prostitution.

### **3. Protection of Children from Violence in School**

According to the “2014 Analysis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First Survey on the Situation of Violence in School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1.4% of all students (approximately 62,000 students) have experienced violence in school. Since the end of 2012,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comprehensive measures focusing mainly on strengthening the total inspection of violence in school and as well strengthening punishment of student perpetrators. However, there is concern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se measures.

In April 2013, a survey of 1,007 teachers was conducted by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KTU) and the Campaign Headquarters for Human Rights Friendly + Across School Environments. The majority of the opinions said except for establishing counseling offices and appointing counselors, the most of the Government’s measures are ineffective. As for other ineffective measures, 70.4% of the teachers answered “leaving punishment records on student records”, 62.2% answered “increasing surveillance cameras”, and 95.4% answered “conducting one-time human rights education”. With regard to the placement of “school keepers” (sheriff), former soldiers and policemen whose qualifications have not been verified are assigned to the positions, so they usually engage in controlling students rather than counseling and protection. There have been

---

<sup>182</sup>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alysis of the Occurrence and Trends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the Youth: From 2007 to 2012, 2013

<sup>183</sup> Clients of child prostitution often claim that the sexual intercourse was done under the child’s free will, or that the child offered prostitution in the first place.

<sup>184</sup>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36 to Article 40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classifies sexually abused children as either a “victimized child” or “targeted child”. A “victimized Child Victims” receive protection by the law (Article 36 and 37), while a “targeted child” cannot receive any protection since the law recognizes that the child voluntarily violate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nd became a prostitute.(Article 38, 39, and 40)

several instances where school keepers sexually harassed or assaulted students.<sup>185</sup> On the other hand, the budget for the treatment and return of student victims has not been established and many counselors and social workers have been fired due to the lack of budget.<sup>186</sup>

Leaving records on punishment for school violence on student records causes disadvantages in entering upper level schools and finding employment. Even though most of the violence between students happens in relation to discrimination against students with disabilities, students in poverty, and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do not include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Also, corporal punishment and verbal violence by teachers and school managers still exist.

#### **Suggested Questions**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increase the budget for recruiting counselors and social workers in schools?
- What measures have been taken to improve the qualifications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including school keepers,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to ensure the safety of students from school keepers?

#### **4. Right to Birth Registration and to a Name**

According to the current legislation, birth registration of children is made possible only when the child has Korean citizenship. For children with foreign citizenship, birth registration applications may be submitted, but only a certificate proving that the application was submitted is issued and the birth is not registered. There are no official data on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who were born and raised in Korea. Also, there are children whose births cannot be registered even at their own country's embassy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being children of refugees, being without citizenship, fines due to China's one-child policy, being refused of registration due to the embassies' attempts to reduce the number of its own unregistered nationals who are staying in Korea, etc., and it is difficult to obtain related statistics or information on these children.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plans to permit all children who are born in Korea, regardless of their citizenship, to be registered at their birth.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measures taken to produce data on children whose births have not been unregistered.

#### **5. Citizenship of Children**

For children who were born in Korea, they acquire Korean citizenship if either parent is Korean, none of the parents' nationality is known, or if both parents are stateless. In other cases, children are not given Korean citizenship.

On the other hand, children who are born to a Korean father and a foreign mother who are in *de facto* marriage cannot acquire Korean citizenship at birth, but they can acquire Korean citizenship when the father has acknowledged his child and then registered the child's birth at the Immigration Office. However, many people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in this process. As a result, there are

---

<sup>185</sup> "Keeper turns into a 'beast', children shudder alone" <Dong A Daily 2012-07-31>, "Controversy of school keeper assaulting student" <Vox Populi, 2012-04-16>, "'Unprepared School Sheriff' sexually assaults within ten days since its placement at an elementary school in Seoul" <Newsis 2011-03-11>

<sup>186</sup> "Instead of ending violence in schools, 1,000 expert counselors laid off" <Newsis 2013-02-20>

instances where children live for years without citizenship or legal residency and are unable to benefit from medical insurance.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number and cause of children without citizenship.

## **Article 25**

### **1. Amendment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a. Adjustment of the Voting Age**

The Government stated in its 4<sup>th</sup> report that it lowered the voting age to 19 (para. 366), bu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recommended in 2013 that the voting age should be lowered to 18.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amending the law insisting that the ability to make political judgment of juveniles under the age of 19 is inadequate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vote. Moreover, Article 60, Section 2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ohibits people under the age of 19 from conducting election campaigns. Accordingly, a 16-year-old who expressed support for a certain candidate on SNS in 2011 was issued a warning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Suggested Questions**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propose a legislation that will lower the voting age from the current 19 to 18?

#### **b. Freedom of Expression during Election Period**

Even though freedom of expression online was partially improved after the electoral reform in 2012, freedom of expression during the election period is still very limited. For example, Article 93, Section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omprehensively limits expression of political opinions on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from 180 days before the election to the day of the election, which restrict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The offense of defamation of a candidate and the online real-name policy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at obstruct voters' freedom of speech with the vague standards for critique and slander are also problematic. Though the National Assembly judges that online real-name policy is implemented only during the election period and necessary for a fair election, give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unanimou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n the real-name policy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sup>187</sup> it is appropriate to abolish the real-name policy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Suggested Questions**

- Does the Korean Government have plans to abolish Article 93, Section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guarantee the freedom of expression during election periods?

### **2. Granting Voting Rights to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The Government states in its 4<sup>th</sup> report tha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s been amended to grant voting rights to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para. 369, 370).**

---

<sup>187</sup>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2. 8. 23

However, Article 218-5 (2)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when any person who intends to fil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he or she should present an “original copy of passport”. Furthermore, the grounds for rejection and limitation of passport issuance (Article 12, Section 1 of the Passport Act) under the Passport Act is more widely defined than the grounds for the limitation of voting rights (Article 18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allows the Government to limit the voting rights of overseas voters by rejecting the issuance of their passports. Since the right to vote is a fundamental right of any adult who has citizenship, anyone should be able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if they can prove their citizenship with documents other than a passport.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statistics for each country to show how many adults among persons living abroad have the right to vote and how many of them have been registered as voters through the application process for registration of overseas voters.
-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ame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guarantee the voting rights of Korean nationals living abroad who proved their citizenship regardless of the possession of a passport?

### **3. Voting Rights of Convicted Persons**

In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limits the voting rights of convicted persons is not in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2014. 1. 28. 2012Heonma409`510, 2013Heonma167).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concrete measures to guarantee the voting rights of convicted persons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4. State Institutions’ Intervention in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ried to manipulate public opinion by systematically uploading and distributing comments and tweets online about the election and other political issues. The number of tweets confirmed to be uploaded by NIS agents amounted to 1.21 million as of November 2013.<sup>188</sup> In spite of that, NIS agents that actively interven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have not been charged and only some police officers that participated in the destruction of evidence were charged. Even though the director of the NIS was indicted, he was found innocent regarding the interventio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appellate trial is underway.

### **Suggested Questions**

- Please provide in detail information on the punishment of the people involved in the state institution’s interventio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destruction of evidence.
- What plans does the Government have to prevent the state institution’s intervention in elections and politics?

---

<sup>188</sup> <http://newstapa.org/2323>

## Article 26

### 1. Hate Crime against Gender/Sexual Minorities

#### a. Hate Crime against Transgender People Engaged in Prostitution

Transgender people are disadvantaged in employment because they are easily exposed to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laws for legal sex reassignment have yet to be legislated, and only the Guidelines on the Clerical Processing of Cases of Transsexuals' Application for Legal Sex Reassignment, whose standards are inconsistent, are implemented. Under this situation, even though prostitution is illegal in the Republic of Korea, many transgender people, especially MTF transgender people, earn their living through prostitution. Because prostitution is illegal, transgender people who earn their livelihood through prostitution are hesitant to report to the police even when they suffer from legal injuries or damages. There have been several incidents abusing this vulnerability: a transgender person was stabbed no fewer than 22 times and murdered in 2014;<sup>189</sup> and another transgender person was robbed of money and valuables after a mob attack in 2012.<sup>190</sup>

#### b. Physical Violence against Gender/Sexual Minorities

In 2011, in an area in the Jongno district of Seoul where many bars for gay men are located, a gay male couple was subjected to a mob attack by three men yelling insults such as "Faggot bastards."<sup>191</sup>

In September 2013, for the first time in the Republic of Korea, an open wedding ceremony for the gay male couple Kim Seung-hwan and Kim Jho Gwang-soo was held. During the ceremony, a man in his 50s identifying himself as a church member stormed on the stage and hurled feces. Subsequently another man with a sign stating "Let's smash gay marriage" attacked Kim Jho as well.

### Suggested Questions

- What measures have been taken to protect LGBT people from violence?
- Does the Government recognize violence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s hate crimes and conduct research on hate crimes? How many cases of hate crimes against LGBT people have been officially punished by the Government over the past five years?
- What specific measures do the Government implement to train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judges to respond cases of homophobic and transphobic hate crimes properly?

---

<sup>189</sup> "Man in 20s confined for cruel murder of transgender prostitute," *JoongAng Ilbo*, August 18 2014. [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5564381](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5564381) (in Korean).

<sup>190</sup> "'Bet you can't report me', teen caught after robbing money from touting transgender prostitute," *Kyunghyang Shinmun*, April 30, 20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301038131&code=9402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301038131&code=940202) (in Korean).

<sup>191</sup> "Homophobia... 'You gay bastards', anonymous assault," *Sports Today*, November 8, 2011. <http://stoo.asiae.co.kr/news/stview.htm?idxno=2011110807314993157&sc1=life&sc2=news&sc3=hot&sk> (in Korean).



## VII. 쟁점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정부 답변

### 규약 이행에 관한 헌법적 및 법적 체계 (제2조)

1. 동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기 위해, 동 조항을 계속 유보할 필요가 있을지를 재검토하는데 있어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채택한 (개인진정에 대한) 견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도적 및 입법적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와 당사국과 관련 해 위원회에서 채택한 모든 견해를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1-1. (유보철회) 정부는 최초국가보고서 제276항, 4차 국가보고서 제311항-314항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급 이상 공무원에게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 하위 직급 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용자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들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입장으로서는, 현재 동 조약의 유보를 철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2. (개인진정견해의 이행) 제4차 국가보고서 제29항에 언급된 바대로, 한국 정부는 개인진정결정을 이행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양한 의견수렴 또한 거쳤으나, 개인진정결정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개인진정결정의 내용이 관련 법 개정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물품반환, 기록말소, 사면 등 다양하므로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내용의 결정 이행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한편 모든 개인진정 결정은 영문으로 번역하여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의 결정을 받은 이란인에 대해서는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파리원칙(유엔총회 결의 48/134)을 준수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을 선발 및 임명하는데 있어 명확,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입법의 부재를 다루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2-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9. 및 2015. 1.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 위원에 대한 심사기준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하는 한편, 인권위원회 임명에

관여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인권위원 선출·지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권고하면서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 규칙(2014. 12. 22. 제정)에 따라 위원 중 공석이 발생되기 3개월 전, 공석을 알리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임명권 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5. 7. 현재 인권위가 권고한 법안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3.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 또는 관할권 내에 등록된 모든 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동 규약에 따른 인권기준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활동을 규율하는 입법적 체계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면화생산과 관련한 한국조폐공사(KOMSCO)와 대우인터내셔널의 활동 및 인도 Jagatsinghpur에서의 제철소 프로젝트와 관련한 POSCO의 활동과 관련하여 가능한 기업의 책임성을 다루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일반적으로 한국에 등록된 모든 기업은 국내외 기업 활동 중의 인권침해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해외 한국기업 또는 그 소속 한국 직원이 외국에서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 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기업도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다. 현재 인권기준 존중을 위한 별도의 법률 체계를 도입할 계획은 없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중재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인권·노동·환경보호 등에 관한 책임 준수에 관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포스코의 인도제철소 투자사업은 본격적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며, 한국 정부가 포스코에 지원한 것은 없으나 유엔특별절차나 우리 시민사회의 우려를 포스코에 전달하여 인권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의하였다. 한국조폐공사는 2010년 우즈베키스탄에 대우인터내셔널과 합작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펄프를 생산하고 있는데, 아동강제노동 이슈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조폐공사는 2012년 12월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아동강제노동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2014년 우즈베키스탄에서 ILO협약 이행 책임을 가진 상공회의 소와 노동인권에 관해 협의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세계은행과 공조를 추진 중이다. 한편 ILO는 2013년, 2014년 우즈베키스탄의 면화수확 시 아동노동에 대한 대대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일부 청소년의 노동이 발견되었으나 조직적 아동강제노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차별금지, 양성평등, 민족, 인종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하는 혐오에 관한 옹호의 금지 그리고 소수자 인권(제2,3,20,26 및 27조)**

4. 사적 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의 차별을 다루는 직·간접 차별 및 복합 차별을 금지하고 출신국, 성적지향 그리고 성 정체성을 포함하여 종합적 차별 사유를 열거한 그리고 효과적인 행정적 및 사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4차 국가보고서 제377항, 제378항에 기재된 내용 이후 2013년 5월 발표된 새정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되었으며,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차별금지 사유 및 영역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 이다.

5. 인종적인 동기의 폭력이 범죄화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특히 외국인을 목표로 한 인종차별과 증오표현, 특히 대중매체 및 인터넷 상의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정의 개념이 지니는 한계성, 가령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게만 동 개념이 적용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점, 한국태생이 아닌 두 명의 이주노동자를 다문화가정의 정의에서 배제하는 점 등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 주십시오.

5-1. (인종적 동기의 폭력 범죄화 등) 인종적 동기로 인한 폭행, 상해 등 물리적 폭력은 범죄행위로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되, 폭력의 동기는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을 목표로 한 차별, 표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으나, 인종차별을 범죄의 별도 구성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없다. 인터넷 상 인종차별적 외국인혐오 발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권리침해 신고가 있을 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게시물을 심의하여 삭제 등 시정요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방송에서의 인종차별과 증오표현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심의 제재하고 있고,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사유, 위반법규, 제재결과를 방송으로 시청자에게 고지한다.

국회에는 인종적 동기로 인한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인종적 동기의 표현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나 이러한 행위를 형법적으로 규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5-2.(다문화가정 개념) 2000년대 초반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최초의 정책대상은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이민자와 한 국국민으로 구성된 가족이었으나 2011년부터는 인지·귀화자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2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을 외국인가족 및 유학 생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6. 미혼모 및 미혼모의 자녀, 탈북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애자등 성 소수자(LGBTI) HIV/AIDS 감염자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낙인에 맞서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시오. 병영 내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간 성적행위를 비범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국이 이성간 및 동성간 강간행위(준 강간행위)와 강간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우(취급)을 일치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시해주시시오.**

6-1.(차별방지 및 사회적 낙인 예방조치) 미혼모 가족 지원을 위해 전국 58개소의 미혼모자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주거지원 및 출산 등 의료지원, 자녀 양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해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HIV감염인 관련 2013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감염인 차별구제를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 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미디어를 통한 홍보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6-2.(병영내 동성간 성적행위 비범죄화 조치) 병영내 동성간 성행위는 집단 생활을 하는 병영의 특성과 균율을 유지하기 위해 금지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률인 「군형법」 제92조의6조를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6-3.(강간 및 강제추행 형량) 2012년 12월 「형법」을 개정하여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제297조의2조로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였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죄는 이성간 또는 동성간의 강간행위를 달리 취급한 것이 아니라 유사강간죄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태양을 규정한 것을 반영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2년으로 규정한 것일 뿐 법정형의 상한은 30년으로 동일하며 실제 양형은 구체적 범죄행위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강간이나 유사강간 피해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형사 절차 상 보호조치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조치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7. 다음의 경우: (a) 결혼생활 및 사회 내에서 여성,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b)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자치 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구, 특히 의사결정 직위를 포함한 정치적 및 공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관련 통계를 포함 바람); (c) 근로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7-1.(결혼이민자) 정부는 전국 217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 정착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업교육훈련, 콜센터를 통한 갈등해결상담 및 이주여성보호시설과 연계한 긴급 지원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인권과 폭력대응 교육을 확대하고,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 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한국인과 혼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구성원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경우 등에는 국내에 계속 체류를 허용한다.

7-2.(여성대표성증진) 여성판사는 2000년 6.8%에서 2013년 27.4%로, 여성 검사는 동 기간 1.8%에서 25.4%로 증가하였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은 4차 보고서 제56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정부는 '제3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계획 (2012~2016)'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12년 말 9.9%이며 2016년까지 15.1%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장, 국 장, 부단체장에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임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표> 여성 지방정치(단체장, 의회의원) 참여 비율 (단위 : 명, %)

| 구분            | 선거명       |      | 계     | 성별          |           |
|---------------|-----------|------|-------|-------------|-----------|
|               |           |      |       | 남           | 여(%)      |
| 제4대<br>(2006) | 합계(구성비율)  |      | 3,867 | 3,338       | 529(13.0) |
|               | 시·도지사선거   |      | 16    | 16          | -         |
|               | 자치구·사군의 장 |      | 230   | 227         | 3(1.0)    |
|               | 시·도의원     | 지역구  | 655   | 623         | 32(4.0)   |
|               |           | 비례대표 | 78    | 21          | 57(73.0)  |
|               | 사군·구의원    | 지역구  | 2,513 | 2,403       | 110(4.0)  |
| 비례대표          |           | 375  | 48    | 327(87.0)   |           |
| 제5대<br>(2010) | 합계(구성비율)  |      | 3,893 | 3,148(80.0) | 745(20.0) |
|               | 시·도지사선거   |      | 16    | 16          | -         |
|               | 자치구·사군의 장 |      | 228   | 222         | 6(2.6)    |
|               | 시·도의원     | 지역구  | 680   | 625         | 55(8.0)   |
|               |           | 비례대표 | 81    | 23          | 58(71.0)  |
|               | 사군·구의원    | 지역구  | 2,512 | 2,238       | 274(9.2)  |
| 비례대표          |           | 376  | 24    | 352(93.0)   |           |
| 제6대<br>(2014) | 합계(구성비율)  |      | 3,930 | 3,076       | 854(21.7) |
|               | 시·도지사선거   |      | 17    | 17          | -         |
|               | 자치구·사군의 장 |      | 226   | 217         | 9(4.0)    |
|               | 시·도의원     | 지역구  | 705   | 647         | 58(8.2)   |
|               |           | 비례대표 | 84    | 29          | 55(65.5)  |
|               | 사군·구의원    | 지역구  | 2,519 | 2,150       | 369(14.6) |
|               |           | 비례대표 | 379   | 16          | 363(95.8) |

<표>지방자치단체 관리직 여성 공무원 증가 추이

| 연도    | 전체     | 여성    | 비율  |
|-------|--------|-------|-----|
| 2007년 | 18,959 | 1,349 | 7.1 |
| 2008년 | 19,076 | 1,457 | 7.6 |
| 2009년 | 19,579 | 1,595 | 8.1 |

|       |        |       |      |
|-------|--------|-------|------|
| 2010년 | 20,078 | 1,730 | 8.6  |
| 2011년 | 20,390 | 1,869 | 9.2  |
| 2012년 | 20,934 | 2,064 | 9.9  |
| 2013년 | 21,512 | 2,296 | 10.7 |
| 2014년 | 21,805 | 2,527 | 11.6 |

\* 고위공무원, 일반직(일반임기제 포함)1~5급, 일반임기제 6급, 연구·지도관, 별정직 1급상당~5급상당, 전문경력관 가군, 전담직위 5급이상

7-3.(남녀임금격차) 2014년 15세 이상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0%이지 만 출산·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여성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경력단절을 겪어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임금성 별격차는 39.6%에서 36.6%로 약간 감소하였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일가정 양립정책을 강화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육시설설치 지원,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사업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 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 위반 사업장은 임금차별시 2천만원 이하, 임금 외 금품 차별 시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제2,7 및 24조)

8. 배우자간 강간의 범죄로서의 성격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제시해 주십시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사적인 가족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이 러한 사건의 신고를 독려하고 이들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 기소 및 제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해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아동 대상 성범죄와 교내폭력 및 왕따 문제 등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구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8-1.(배우자간 강간) 2012년 12월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었으며, 법원 또한 2009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던 판례에서 나아가 2013년 5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2도14788판결).

8-2.(가정폭력·성폭력 대응) 정부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사적 가족문제로 보고 있지 않으며 중대한 사회적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2013년 새정부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근절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매년 이행을 점검한다. 2012년 12월에는 성범죄의 친고죄 관련 규정을 폐지하였고,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신고접수 시 경찰의 현장출동을 의무화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가정폭력에 관해 인식개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적극적인 형사 처분 및 교화처분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관련 지침에 따라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등 가해자 처벌강화,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확대를 시행하고, 다문화 가정폭력피해자와 구성원 등에 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였다. 성폭력범죄 구형·항소기준을 상향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제도 도입, 성범죄전담 검사 및 수사관 대상 전문교육실시 등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 중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사를 배치하고, 진술조력인 양성, 의료·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하였고, 가정 폭력피해자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해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폭력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방송사와 연계하여 기획보도를 추진하고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8-3.(아동대상폭력 해결) 정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우편으로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한다. 성범죄자는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운영·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2014년 9월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중상해·상습범·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였으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동행출동,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이후 사법절차 등에서 보조인,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에는 아동학대 인식전환 교육을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아동학대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개발, 교육하였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초·중·고 교직원 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학교규칙 제·개정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성폭력 또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증대하거나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2014년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게 그 지원이 확대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 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아동학대피해자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자 중에서 국선변호사 예정자 중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5명이 선정되어 활동 중이다. 이들은 학대피해아동에 관한 전문적 교육을 받는다.

(학교폭력)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차(2010~2014)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던 2011년에는 학생의 자살로 인해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학교 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로 인식하도록 철저히 대응 하고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 정 부에서 학교폭력예방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며 3차 학교폭력예방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추진 중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공감·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형 교육 및 학생들이 직접 토론, 변호, 판결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법의식을 체득하게 하는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 보급,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고 교내 CCTV 및 학생보호인력을 확충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검찰에서도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안교육, 보호관찰소·법사랑위원 선도 등 다양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 처리 시 검사의 결정 전에 교사의견을 청취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처분을 한다.

## **대 테러 조치(제7,9,10 및 14조)**

9. 당사국이 대테러 법률, 특히 동 규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여 “테러 행위”를 규정하고, 통신의 도청, 수색, 구금과 추방을 규율 하며, 테러행위나 관련 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법적 보호 및 효과적인 인

**구제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주시시오.**

9-1. 현재 대테러관련 법률에 관해서는 제4차 국가보고서 제16항 내지 제19항 에서 기재된 것 외에 제정된 법률이나 관련 규정은 없다. 한국은 현재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 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테러 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2012년~2016년 제19대 국회에는 테러방지에 관한 기본적 성격의 법률안 3 건, 사이버테러방지에 관한 법률안 2건이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모든 법안은 테러의 정의를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제협약 및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하고, 대테러활동에서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였다.

## **생명권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제2,6,7,9 및 10조)**

**10. 청년 및 여성층에서 특히 높은 자살률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및 그 조치의 영향을 보고해 주십시오. 법률상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주시시오.**

10-1.(자살방지대책) 2004년부터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청소년·직장인·노인대상 자살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13년부터는 자살 고위험 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사회기반 노인자살 예방사업' 및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을 시행 중이다. 또한 2013년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부터는 자살원인을 규명하여 예방정책수립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 하고 있다.

10-2. (사형제폐지)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법은 사형을 최고형으로 하여 형벌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법률상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개별범죄의 형과 벌 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집행할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는 국민여론과 법 감정, 사회 현실,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제19대 국회에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2015년 7 월 6일자로 발의되었다.

**11. 다음 사안: (a) 고문이 형법 상 별개의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

부; (b) 고문 및 학대혐의가 효과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조사되는지 여부; (c) 어떠한 형법 조항에 근거해 고문 및 학대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자가 기소되었고 어떠한 종류의 제재가 부과되었는지에 관해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제4차 국가보고서 (CCPR/C/KOR/4)의 121항에서 명시된 “현대적 보호장비”, 징계로서의 독 방구금조치, 그리고 “보호장비”(가령, 수갑 및 안면보호구)의 사용이 응보 적인 목적에서가 아닌 보호적인 목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보호장비를 사용하기 이전에 사용 가능한 대안에 관해 보고해 주십시오.

11-1.(형법상 고문죄 규정) 고문을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고문의 유형은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 제125조(폭행·가혹행위) 등 「형법」 및 특별형사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CAT/C/32/Add.1. paras. 105-110 참조).

11-2.(고문 및 학대에 대한 독립적 조사) 고문 및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에서 조사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절차와 권한에 따라 권고를 내린다. 검찰의 경우 검찰 전담 검사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사안에 따라서는 특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한다. 고문을 당한 개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 등도 가능하다. 경찰청도 경찰관 대상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해당경찰관 소속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사를 하도록 한다.

11-3.(고문행위 기소 형법 조항 및 처벌) 경찰은 2012년~2015. 7. 독직폭행혐의로 2012년 1건, 2013년 1건, 2014년 1건에 대해 해임 2건, 견책 1건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형법」 제124조 및 제125조에 따라 2011년 이후 기소된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5. |
|-------------|------|------|------|------|----------|
| 기소(불구속 구공판) | 2건   | 1건   | 1건   | 1건   | 1건       |

11-4. (보호장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내지 제99조는 보호장비의 사용이 가능한 상황, 보호장비의 종류와 사용요건, 보호 장비의 남용금지에 관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9조 제2 항은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을 위한 절차로는 사용 전에 수용자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우선 수용자 상담을 통해 자발적인 심적 안정을 유도하고 필요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보호장비 사용 시에는 반드시 의무관이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로서의 독방구금조치로는 금지 처분이 있는데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이 사전, 또 집행 중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집필, 서신수수, 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 심리사회적인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중 정신병원(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입원된 사람의 수를 감소시키고, 이러한 시설에 수용된 자들을 독방감금조치, 신체적 폭력, (신체)속박 그리고 과도한 약물치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12-1.(정신병원) 정부는 정신보건 관련 종전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중심의 정책을 조기발견·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법률안을 2014년 1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법에는 비자발적 입원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현재 입원 후 6개월마다 시행하는 계속 입원여부에 대한 심사를 최초 입원 후 3개월, 6개월 되는 때에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퇴원 심사 주기 단축을 통해 비자발적 입원자 수가 감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입소자의 독방 감금조치, 신체적 폭력 및 속박에서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정신보건법」에 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 강요 금지, 폭행 또는 가혹행위 금지, 종사자 등에 의한 자의적 격리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국가보고서 제167항, 제168항에 기재된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보호청구는 2013년 12월 말 현재 총 119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94건이 인용되었다. 정부는 인신보호관이 수용시설의 위법수용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위법수용을 발견한 경우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도록 하는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2014년 4월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논의 중에 있다.

12-2.(장애여성강제불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적 불임이나 낙태가 전혀 허용되고 있지 않다. 과거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시 유전적 신체·정신적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로 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으로 1999년 폐지되었다.

**13. 군대 내 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와 같은 혐의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며 피해자는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제시해주시시오.**

13-1. 국방부는 군대 내 폭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현재 「군형법」 상 영내폭행죄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인권상담 관제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 군인권모니터단, 국방헬프콜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대 내 폭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군법무관 및 군인권교관을 통해 군대 내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인권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군대 내 인권의식 향상과 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2.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피해내용에 있어 지휘관이 폭행행위를 목인 또는 방조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등 국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의 형태로서 보상을 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가 직접 피해자를 위한 특별 보상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13-3. 한편 국회는 2014년 10월 31일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성범죄의 빈발 원인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와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7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이 특위는 군 사법체계 개선, 군 복무 부적격자 심사 및 부적응자 관리 체계 개선, 군 성폭력 대책 및 군 의료체계 개선,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장병 교육체계 개선, 군 음부즈만제도 도입 등 5개 분과별 소위 활동을 기초로 23개의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관련 법안 10여 개를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논의 중에 있다.

## **개인의 자유 및 안전,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대한 처우, 그리고 공정한 재판(제 9,10,14 및 24조)**

**14. 모든 형사상 혐의로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이 판사 또는 법률이 사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람들에게 즉각 인치되어 구금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받게 되는 자동적 권리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또한**

**허용되는 재판전 구금 기간을 제시해 주십시오.**

14-1. 관련 내용은 국가보고서 제159항~제164항에 기재되어 있다.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률에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사람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 지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또한 체포 또는 구속된 모든 피 의자는 체포·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적부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14-2.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의 경우 공소제기까지 일반형사사건피의자는 최장 30일,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는 최장 50일까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의 공소 제기 후에는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씩 2차례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며, 상소심에서 추가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례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 기간 내에 법원이 반드시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인신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인데 통상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이 허용 되는 기간 내에 선고가 이루어진다. 미결구금 상태는 확정된 형의 일수에 산입 된다(「형법」 제57조).

**15. 비호를 구하는 아동을 포함,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구금 지속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을 규정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려주십시오. 또한 그와 같은 구금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사법적 심사를 하는 것이 동 규약 제9조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당사국이 동행자가 없는 아동을 포함하여 비 호를 구하는 아동을 정기적이며 적기의 구금에 대한 심사없이 부적절한 시설에 구금한다는 (NGO들의) 보고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구금에 관해 비구금형 대안을 제공하고, 이러한 구금이 오직 최종적 수단으로서,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 주십시오.**

15-1.(외국인보호에 대한 사법심사) 제4차 국가보고서 제154항에 기재된 법무부 장관의 보호연장승인제도를 통해 법무부장관은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 · 외국인 관서의 장이 처분한 보호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법적 또는 남용적 보호를 방지하고 있다.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을 위해 대기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보호외국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의 구금과는 목적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보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제도(제55조)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즉 보호처분취소소송 과 집행정지신청 등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지속기간과 관련된 법적 권리구제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또한 보호명령서의 집행 시 반드시 보호되는 외국인에게 보호명령서를 보여주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보호 관련 사실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보호절차는 규약 제9조 상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는 규정 외의 다른 규정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

15-2.(난민아동구금) 비호를 구하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지 않으며, 그 밖의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동을 보호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보호방을 배정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면담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서는 출국에 필요한 여행증명서 발급 지원 등을 통해 송환절차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출국 시까지 평균 보호 기간은 최근 3년간 7.8일이다. 따라서 동행자 없는 아동을 포함하여 비호를 구하는 아동의 구금에 관한 NGO 주장은 합당한 근거가 없다.

15-3.(보호제도 개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자가 자진 출국의사를 표시하면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명령을 하여 보호하지 않으며, 보호외국인에게 권리구제나 질병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는 보호일시해제를 하고 있다. 또 보호기간 단축을 위해 보호기간이 장기화되는 주요 원인인 체불임금 문제 등 고충 파악과 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귀국 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조기 출국을 지원한다. 따라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자진출국 의사가 없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퇴거명령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최 후의 수단으로서 보호조치를 하며, 그 경우에도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보호외국인의 평균 보호기간은 12.2일이다.

16. 위원회의 기존 권고(CCPR/C/KOR/CO/3, para. 14)와 관련하여, 당국이 신문도중 변호인의 참여를 여전히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명확히 밝혀주시고, 만일 그렇다면 이에 관한 근거 및 이와 같은 제한이 동 규약 제 9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송환대기실에 구금된 (망명신청자 외에) 외국인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한다는 정보에 관한 견해를 밝혀주시시오.**

16-1.(변호인의 신문참여제한) 피의자 조사 시에도 변호인 접견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변호인의 참여는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을 뿐이므로(「형사소송법」제243조의2, 「검찰사건사무규칙」제9조의2), 이와 같은 제도는 규약 제9조의 자의적 구금 방지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와 양립한다. 아울러 검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행하는 경우,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등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4항).

16-2.(공항송환대기실)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은 2014년 10월부터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는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입국불허된 외국인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대기실에 머무르거나 떠날 수 있고, 수용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17.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구금 상황을 개선하고, 구금시설 밖의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용자들의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보고해 주십시오. 법무부가 2010년 2월 교정시설이 수용자들이 민사, 행정 또는 가사소송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때 수용자들로부터 사전에 호송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징수하도록 한 지침에 관한 정보와 이러한 지침이 개인의 재판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17-1.(과밀수용)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결을 위해 교정시설 3개소 신축, 5개 노후시설의 이전 및 시설확대를 추진 중이다.

(외국인 보호 시설 구금 개선) 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0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환자·임산부·노약자·19세 미만 보호외국인 등에 대한 특별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2015년 6월에는 관련 규칙에 성소수자 인권존중을 위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보호외국인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도 외국인과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호소의 직원을 응급구조사로 양성하기 위하여



국군의무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 중이다. 보호외국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 및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보호시설 운영기관은 119구조대를 통한 긴급후송체계, 인근 의료기관과 진료협약 체결 등을 통해 외부 진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의료) 2015년 6월 현재 27개 교정기관에 원격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병원 전문의 진료를 실시하고, 외부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치과 등의 전문의를 교정시설에 초빙하여 소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환자나 장 기요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교도소 신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7-2. (출정비용 징수) 소송출정비용 징수는 형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고, 민사, 행정, 가사소송 등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소송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소송출석을 위해 수용자가 출정하는 모든 경우에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출정비용을 청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출정비용의 납부를 청구하고 있으며,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용자를 출정시킨 후 사후적으로 영치금 반환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출정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 **노예상태 및 예속상태의 제거(제 8조)**

18. 형법상의 “인신매매”의 법적 정의에 의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가 금지되고 피해자들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외국인근로자들이 강제노동, 착취와 학대에 노출되도록 한다고 보고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상의 제한, 즉 고용주의 허가에 의해서만 직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사항을 다루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 (a) 취약한 인구집단, 특히 외국인근로자, 한국 장애 남성 그리고 성매매로 체포된 사람들 중 인신매매 피해자를 파악 해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b) 언론과 NGO가 2013년 보고한 사항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에 정부가 연루되었다는 주장을 수사하고,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해; (c) 위협, 신체적·성적 괴롭힘과 폭력, 주당 휴일이 없는 과도한 업무시간, 저임금, 비인도적인 대우 및 부적절한 숙소와 식사와 같은, 외국인 농업 근로자 및 한국선적 어업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강제노동과 착취가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d) 예술행행비자(E-6) 및 국제결혼브로커들이 이주 여성을 강제성매매 또는 강제노동을 위해 인신매매에 대한 위장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인신매매 사건에 관해 착수한 수사 및 기소 통계 정보와 개정 「형법」에 따른 실제 유죄 판결과 피해자에게 부여된 구제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또한 일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한국 남성들이 염전에서 강제노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4년 3월 개시된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해 보고해 주십시오.

18-1.(형법상 인신매매정의) 2013년 팔레르모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 「형법」을 개정하며 관련 장명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하고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였다. 또한 목적범 형태의 약취, 유인 등의 죄에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외에도 “노동력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등의 목적을 추가하였으며, 결과적가중범을 신설하고, 종래 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인신매매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이 가능하고,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는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18-2.(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장 변경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근로계약의 만료 후 사업주의 갱신거절, 사업장의 휴·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등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장 변경제한을 완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특히 2012년 7월부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즉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발생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18-3.(외국인, 장애남성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 2014년 2월 농어촌 지역 장애인 인권유린 행위 사례를 점검하도록 하고, 검찰에 장애인보호 전담검사를 지정·운영하여 장애인시설, 염전, 선박 및 산판, 목장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경찰, 해경,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지역별 장애 인시설 현황을 분석하여

인권침해·비리 첩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학대에 대해 신고의무직군을 기존 1개에서 21 개 직군으로 대폭 확대하여 장애인 인신매매 발견 및 개입 가능성을 높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장애인 학대 현장에 긴급출동하고 피학대 장애인에 대한 긴급보호를 하도록 하였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내지 제59 조의9).

18-4.(정부 연루 인신매매) 2013년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정부나 공무원이 인신 매매에 연루된 사건은 없다.

18-5.(외국인농업근로자, 선원)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 기적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주 대상 외국인 고용 관리 교육, 외국 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농업 부문은 업종의 특성 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이 약 32%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정부는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3천 여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시 30% 이상을 농축산업 사업장에 실시하도록 하였고,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자발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취업교육 시 성희롱 예방 및 대처법을 교육하고, 모국어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교육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2011년 한국적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침해논란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2012. 5.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원양어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2. 9.'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선방안에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지급체계 개선, 임금체불·폭력 등 신고상담센터 운영, 선원근로감독 강화, 외국인선원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선주·선원교육 실시 등의 대책이 포함되었으며, 2013년부터 매년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15. 1. 6. 「선원법」에 '강제근로의 금지'조항을 신설(제25조의2)하여 폭행, 협박, 감금,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1년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원양어선에 승선하였던 한국인 선원 5명이 인도네시아 선원 9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사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피의자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반면,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하나 이 피해자들이 인도네시아로 귀국한 상황이어서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에 피해자들의 소재 확인 등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18-6.(E-6 및 국제결혼이 인신매매가 되지 않도록 한 조치) 정부는 18개 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 점검단' 논의에 따라 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종사자들 다수가 근무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2014년 3월~11월까지 업소 운영 실태 및 외국인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하였다. E-6비자 발급 사전 단계인 외국인 공연 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위법사례가 있는 공연기획사 및 공연 업소 대표에게 E-6비자 발급 등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 시 여성경찰관을 참여시키고, 성매매업주·건물주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에 중점을 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담당 경찰관에게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성매매 단속 시 피해여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8-7.(인신매매 수사결과) 인신매매사범, 즉 「형법」(영리등을위한약취등, 부녀매매, 국외이송약취, 추행등목적약취·유인등, 인신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매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간음약취, 간음유인, 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 부녀매매, 영리약취, 영리약취·유인등, 영리유인, 추행약취, 추행유인) 등 관련 사건의 처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인신매매 사건 관련 죄 처리 현황

| 기간       | 접수  | 처분  | 기소  | 불기소 | 기타  |
|----------|-----|-----|-----|-----|-----|
| 2009     | 459 | 445 | 162 | 150 | 133 |
| 2010     | 366 | 359 | 114 | 121 | 124 |
| 2011     | 438 | 432 | 142 | 156 | 134 |
| 2012     | 428 | 445 | 178 | 128 | 139 |
| 2013     | 401 | 387 | 110 | 128 | 149 |
| 2014     | 507 | 489 | 145 | 145 | 199 |
| 2015. 5. | 185 | 172 | 51  | 57  | 64  |

(단위: 명)18-8.(염전노예사건) 정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인권보호방안'을 발표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였다. 그 내용은 위 18-3항 답변과 같다. 정부는 공익변호사와 협력하여 피해 장애인들의 염전사건 학대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등록비용과 등록절차를 지원하여 장애인으로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고용부는 13개 섬, 733 개소 신안 염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173개소 근로자 242명의 임금 39 억원의 미지급 사실을 적발하고, 이중 124개소 근로자 191명의 체불임금 20억 원을 청산하도록 조치하였고, 임금 미청산 사업주 48명을 사법처리하고 이들 중 근로자 폭행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15명은 구속 수사하였다. 2015년에도 매 분기마다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염주 대상 인권 및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014년 2월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임금착취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된 신안군 이외 모든 도서의 염전, 어선, 농장, 벌목장 등 총 38,352개소에 대해 점검 후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 37명을 형사입건하여 20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 **사생활 및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제17조)**

**19. 외국인, 수용자, 군인을 대상으로 의무적 HIV검사를 실시한다는 보고와 병원이 환자의 사전 동의없이 HIV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러한 행위들이 규약 상의 국가의무와 어떻게 합치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19.(의무적 HIV검사) HIV등 감염병은 단체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병영생활을 해야 하는 군인과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혈액혈액 채취 전 본인에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중 영어회화 강사에게 국내 입국 후 외국인 등록 시 HIV검사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이는 교육받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중보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병원에서 시행되는 HIV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2008년 3월 익명검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중 보건을 위해 제한 된 범위에서 법률상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것으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자의 적인 침해로 보기 어렵다.

**20. 개인의 통신(인터넷, 전화, 이메일, 팩스 통신을 포함)과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 및 도청, 분석, 사용 및 저장에 관한 현행 법률과 실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침해에 대한 현재의 법적 보호(제도)와 그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다음의 행위가 규약 제17조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a)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회현장 인근의 모든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경찰의 “기지국” 조사; (b)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이름, 아이디,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를 포함한 사용자 정보를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정보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 (c) 전화, 전기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각각 6, 12, 3 개월 동안 사용자의 통신정보를 보유하는 것; (d) 교사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통제하고, 위치 정보를 확인하며, 사용가능한 기능과 데이터를 찾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것. 또한 당사국이 전기통신사업자 “긴급도청(wiretap-ready)”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는지 밝혀주십시오.

20-1.(개인통신보호법률과 실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의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해당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개인정보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수집 및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저장·보관하는 동안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밖에도 개인의 금융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위치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 제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서, 개인 통신에 대한 불법적 침해행위를 처벌한다. 또한 동법은 감청 집행절차를 규정하고,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한 당사자 통지 규정, 감청 집행을 통해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 감청 현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 국회의 통제규정 등을 두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인 침해를 막고 있다. 검사나

수사관서의 장 등은 개인의 통신이나 데이터에 관련된 통신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통신제한조치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의 3가지 유형의 자료만을 법률상 정해진 목적과 요건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수사 기관은 형사재판의 입증 등 제한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통신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20-2.(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침해 방지제도 실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명시하여(동법 제4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와 동의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규정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권리를 명시하여(동법 제30조)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그 이용·제공 현황을 열람하거나 제공 요구할 권리 등을 규정하였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는 임시조치 제도를 규정해두고 있으며,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방안을 2013년 마련하여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시조치에 대하여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시조치에 대한 분쟁조정절차를 중립적 위원회가 다루도록 하고, 정보 내용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위원회 혹은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였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의 통신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때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제한조치는 일정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집행한다. 전기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루어지고, 압수수색 대상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된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한다. 또한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는 등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한 때 그 집행 사실을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있어서도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20-3.(집회장소 기지국 조사)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신원파악을 목적으로 기지국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범죄 수사 목적을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청은 가능하나, 특정한 범죄와 범죄혐의자에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자료를 요청할 뿐이다.

20-4.(ISP의 정보제공)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정보 주체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자신의 정보가 제공된 현황을 열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범죄행위 수사 및 형의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 하는 부서에서 자료의 제공여부 및 제공할 자료의 범위 등을 검토하여 수사기관 등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한 현황 등을 기록·관리·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집계하여 매년 2회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러한 정보제공요청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 합목적성을 갖추었을 때에만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규약 제17조에 위배됨이 없다.

20-5.(통신정보 보유)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유형별로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며, 이 자료는 법원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나 불법으로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보관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7조).

20-6.(교사의 학생 휴대폰 통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또는 통제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개정되는 각 학교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학교의 교칙에 휴대폰의 사용 및 소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율적으로 정한다.

20-7.(긴급도청장비 보유 의무화 개정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새로이 규정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제19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사 등의 목적으로 모든 통신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감청설비 등의 부재로 인하여 감청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로 인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강력범죄나 국가안보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감청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양심과 종교적 신념의 자유, 표현과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제18, 19, 21, 및 22조)**

21. 위원회의 기존의 권고(CCPR/C/KOR/CO3, para. 17)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도입을 위해 진전된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자들의 성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출된 법안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21-1.(대체복무제 도입)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제4차 국가보고서에 기재한 바와 같고, 보고서 제출 이후인 2014년 11월 병무청에서 실시한 '입영 및 징총거부자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8.3%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며, 우리나라 안보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21-2.(병역법 개정) 「병역법」 제81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2015년 7월부터 병무청장은 질병, 수감 등의 사유 외에,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기피를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거나 신체검사 또는 입영을 거부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잠정 공개대상자에게 인적 사항 공개 대상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심의한 후 공개대상자를 결정한다.

22. 종교재단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종교 행사나 종교 수업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해주십시오.

22-1. 제4차 국가보고서 제264항에 기재된 대법원의 판례이후,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인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2013년 개정 시에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중립학교의 경우에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컨설팅 및 시도교육청 자체 연수 등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종교 과목 개설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하는 등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의 종교 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3. “공익을 해치는” 또는 “허위 통신”과 같이 모호하게 정의된 개념을 사용하여 인터넷 내용을 차단하는 정부통제기관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인권) 옹호자들이 공익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 하도록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 허위 정보를 유포하였다며 형사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국은 (a) 명예훼손의 광범위한 정의를 개정하고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며, (b)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적시해 주십시오.**

23-1.(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 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수사 중인 사건 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 재판계속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 무죄구형, 항소취하를 하고,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형 집행 면제 및 재심가능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후에도 공익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부당 하게 제한한 사실이 없다.

23-2.(온라인상 허위정보유포 형사기소) 단순히 온라인상 허위 정보를 유포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으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위반(제70조 제2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형법」 제314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통신을 한 때(「전기통신기 본법」 제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3-3.(명예훼손 등) 정부는 명예훼손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자 유, 행복추구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폐해가 심각하고, 현재의 명예훼손죄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비범죄화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논의 중이다.

국가공무원은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이 와 같은 규정은 공무원의 일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개정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24. 위원회의 기존의 권고(CCPR/C/KOR/CO/3, para. 18)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국가보안법」 상의 개념들을, 특히 동 법의 7조에 명시된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동 법이 규약 상 국가의 의무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 동 법을 개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 건수와 기소 건수가 2008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고, 동 법이 당사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현하는 사람 등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통합진보당이 「국가보안법」 제7조 상의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찬양/고무한다고 하여 기소된 것과,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정 당해산을 결정한 것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24-1.(국가보안법) 제4차 국가보고서 제285항~288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법원이 판시한 「국가보안법」의 해석기준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동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및 기소자 수는 아래 표와 같고, 2008년 이후 증가추세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동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 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의 주의·주장 등을 찬양·동조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국가단체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찬양하였다는 이유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규약에 따라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제한에 필요한 요건에 부합되도록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다.

[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자 통계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구속자(명) | 17   | 16   | 18   | 32   | 19   | 26   | 38   | 7    |
| 기소자(명) | 40   | 27   | 34   | 43   | 39   | 59   | 70   | 34   |

24-2.(통진당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석기 등 당원 일부가 기소된 것은 단순히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찬양·고무한다고 하여 기소된 것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당원 약 130여명이 북한이 2013년 3월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전쟁상태를 선언하자 비밀리에 모여 북한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의 유류저장소, 전화국, 철도 등 주요 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서, 법원에서는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하여 이석기에게 징역 9년 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 존중, 민주적 의사결정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격하여 이를 훼손하거나 궁극적으로 폐지하려고 한다”면서 최종적 수단으로서 정당해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였다.

**25. 언론인과 인권옹호자들이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거나 인권 관련 문제 및 국가공무원의 부패 등 공익에 관한 사안을 보도/보고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의 업무에 있어 괴롭힘, 위협과 불법적 감시를 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시오.**

25-1. 질의내용과 같은 사실은 전혀 없다. 다만 언론인 등이 방송, 인터넷, 인쇄 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 하는 경우,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수사결과,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309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10조).

**26. 평화적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한 법적·실질적인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a) 평화적 집 해를 경찰이 실질적으로 허가하는 체제, (b) 시위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죄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적용, (c) 촛불 시위(2008), 용산 철 거민 시위(2009), 쌍용차 대량해고 반대 시위(2009), 한진중공업 노조구 성원 지지 시위(2011), 세월호 참사 이후 이어진 시위(2014)와 같이, 정 부의 정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해산하기 위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시위자들을 체포, 구속, 기소한 것, (d) 집회의 참여를 제한하고 시위자의 이동을 방해함으로써 집회와 시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경찰이 차벽을 사용하는 것.**

26-1.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집회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경찰관서에 사전신고만 해도 자유롭게 집회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유, 즉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경찰이 금지통고한 집회시위는 전체 신고건수 대비 0.17% (신고 433,956건 중 761건 금지)에 불과하다.

26-2.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시위대의 불법적인 도로점거가 있는 경우 일정한 단계, 즉 경고방송을 통한 불법행위 중지요청, 주최 측에 종결선언요청, 참가자 대상으로 자진해산요청, 그리고 시간차를 두어 3회의 해산명령을 발한다. 이러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직접 시위대에 대한 해산조치를 취하고, 이 경우에도 현장검거 보다는 인도로 이동시켜 도로교통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도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이를 적용하여 사법처리한다.

26-3. 정부는 정부 정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바 없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화염병 등 위험물을 투척하거나, 경찰장비나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의 행사가 있을 때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경찰력의 사용 시에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물리력을 사용한다.

26-4.(경찰차벽설치) 차벽은 '차벽운용지침'에 따라 적법한 시위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며, 시위대와 경찰력이 직접 부딪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있다. 차벽은 불법행위가 명백히 예견될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설치·해제하여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이동을 위해 시민통행로 확보, 통행안내팀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7. 위원회의 기존의 권고(CCPR/C/KOR/CO/3, para. 19)와 관련하여, 법률 및 실제에 있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진전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KGEU)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집단행동과 여타 정당 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도자가 체포, 구속 되었다는 보고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었는지 여부와 (b)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인정 되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27-1.(5급이상 공무원 노조가입) 위 1-1에 대한 답변 참조

27-2.(전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은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 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직 공무원만을 노조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3. 8. 2. 정부는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해 전공노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 4. 24. 1심 법원은 정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현재 2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재 전공노는 법상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7-3.(집단행동으로 인한 노조지도자 체포, 구속)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라 단체교섭·쟁의행위시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 주도의 집단행동에 있어 조합원의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없는 사유로 사업장 점거, 생산라인 중단, 사측 관리자·경찰 등 에 대한 폭력행사, 고공농성 등의 행위가 「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에 정한 범죄에 해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집단행동이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체포, 구속되는 경우는 없다.

27-4.(전교조, 이주노조) 「교원노조법」에 따라 현직 교원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의 해직교원이 노조원으로 인정되나 전교조의 규약은 해직교원까지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고용부는 2013년 9월 23일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2013년 10월 24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였으며 통보 당일에 전교조는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14년 6월 19일 고용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대한 2심 재판이 계속 중이며 전교조는 법상 노조 지위를 잃은 상태이다. 한편 노조가입 대상을 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였다(헌재 2015. 5. 28. 결정,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한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위에 관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에 대해 2015년 6월 25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불법체류 외국인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취소되었으며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노조설립 신청에 대한 재처분이 있을 게 희이다.

## **아동의 권리 (제24조)**

**28. 당사국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적절한 출생등록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 주십시오. 당사국이 부모 중 한명만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당사국 내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시 한국 국적을 부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28-1. 대한민국의 국적제도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편적 출생등록 제를 도입하면 국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출생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출생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출생신고의무자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해태한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안 외에 출생증명서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전산망을 이용하여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관련법률 개정안도 제출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8-2.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바, 부모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출생한 아동은 출생지가 대한민국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VIII. 쟁점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정부 답변 (영문)

Human Rights Committee  
115th session  
19 October–6 November 2015  
Item 5 of the provisional agenda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List of issues in relation to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 Addendum

Replie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list of issues

[Date received: 31 July 2015]

### Issue 1

1. A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iterates its position in Paragraph 276 of the initial report and Paragraphs 311-314 of the fourth periodic report, the prohibition of public officials of grade 5 or above from joining trade unions has due reasons. They generally engage in policy making process and carry out the role of directing and supervising lower ranking officials, and are thereby included in the employer category. Therefore the Government finds it difficult to withdraw the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the Covenant.

2. Having conducted research and broad consultations on ways to implement the Committee's Views, as mentioned in Paragraph 29 of the fourth periodic report, the Government has found it difficult to recognize direct legal effect of the Views. Nonetheless, the Government continues to examine how to implement the Views, which encompasses various measures including amendment of relevant laws, compensation, return of articles, cancellation of criminal records, and amnesty. In the meantime, every decision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and the website. The author of the communication No. 1908/2009 has been granted a legitimate visa status.

### Issue 2

3. To address the concern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has taken several measures. First, the NHRCK drafted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which includes more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the procedures for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members of NHRCK, membership qualification and criteria for candidates. The NHRCK recommended this draft Amendment to the Speaker of National Assembly and Prime Minister for their review. As of July 2015, the draft Amendment is currently under review by the relevant ministries. Second, the NHRCK recommended Guidelines on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Members of the NHRCK to the relevant authorities involved in the selection process, so that they set forth their own regulations accordingly. Third, the NHRCK introduced a new internal regulation in 2014, which enables the NHRCK to publicize vacancies of the members three months prior to the event, receive recommendations on candidates from the general public, and deliver them to the appointing authorities.



### **Issue 3**

4. In general, all businesses domiciled in Korea may be held liable for torts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 in the course of their domestic and overseas activities. Overseas Korean businesses or a Korean employee affiliated with the business may be criminally liable if their actions committed abroad are a crime under the *Criminal Act* or the special criminal laws. Corporations may also be held responsible in cases where joint penalty is prescribed. Currently, the Government has no plans to adopt a separate law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corporations regarding human rights standards. Howev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as installed a national contact poi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operates an arbitration committee while educating companies about their responsibility to conform to standards regarding human rights, labor,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5. With regard to the concerns raised by Special Procedures and civil society on the investment project of POSCO to build a steel processing plant in India, the Government has consulted with POSCO to respect human rights standards. Investments have not been made in earnest as the project is in promotional stage and the Government has not provided any support to POSCO although it has communicated with POSCO about the concerns of the Special Procedures and of the NGO's so that human rights standards are respected.

6.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 (KOMSCO) set up a joint venture with Daewoo International and established a subsidiary in Uzbekistan in 2010. KOMSCO was made aware of the issue of forced child labor and undertook countermeasures. In December 2012, KOMSCO delivered its concern about forced child labor to the Embassy of Uzbekistan in Korea and consulted the Uzbekist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ILO conventions in 2014. As part of an execution plan to improve labor rights issues in Uzbekistan, KOMSCO has been promoting cooperation with the World Bank since 2015. Meanwhile, the ILO conducted large-scale monitoring in 2013 and 2014 regarding the use of child labor in Uzbekistan when harvesting cotton. The ILO found some juvenile workers but no systematic forced child labor.

### **Issue 4**

7. Following the developments mentioned in Paragraphs 377 and 378 of the fourth periodic report,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as adopted as one of the government's new national policy agenda in May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created a task force for the legislation and discussed a variety of relevant issues. In addition, relevant reviews are currently underway for further scrupulous examinations regarding the grounds and areas of discrimination, etc.

### **Issue 5**

8. Physical violence such as assault or injury that is racially motivated is a crime that is punishable by relevant laws and the motivation of the violence affects sentencing. While discrimination or discriminatory expressions targeting foreigners may be criminally punishable when it falls under the criminal offenses of insult or defamation, there is no separate criminal provision that provides for racial discrimination as an element of a crime. Racially discriminatory or xenophobic speeches on the

internet are also punishable when it meets the elements of defamatio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will review the information on internet upon report of an infringement and take corrective measures such as deletion of the contents. Rules such as the Broadcasting Review Regulations deal with racial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in broadcasting, which requires the cases of violation are made public along with their cause, the violated rule and measures taken. Draft bills that criminalize racially-motivated hate speech are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while acknowledging the need to address racially-motivated expressions, there are discussions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ways to balance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when criminalizing these acts.

9. Due to the surge of international marriages in the early 2000s, the Government pursued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The policy target was expanded from families consisting of an immigrant married to a Korean national, regardless of gender, in its initial stage, to families of recognized and naturalized citizens in 2011.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have been extended to the families of foreigners and foreign students since 2012.

## Issue 6

10. Fifty eight welfare facilities for unwed mothers provide support for residence, medical services including childbirth care, and childcare services to unwed mothers along with the increased subsidy for living expenses. In an effort to eradicate prejudice against unwed mothers, training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welfare duties and campaigns to raise public awareness are conducted. A research was commissioned in 2013 to examine legislation and policy to protect HIV-infected persons from discrimination and media campaigns are strengthened to eradicat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infected persons.

11. The same sex sexual activities in the military are still prohibited to maintain discipline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communal living in the barracks. A bill on the relevant amendment to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calls for inserting the element of *in invitum* to the current crime, is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relevant discussion is underway.

12. The *Criminal Act* was amended in December 2012 to change the object of rape defined in Article 297 from 'women' to 'person', and created Article 297-2 to define a separate crime of imitative rape. Rape and imitative rape are punishable with at least three years and two years of imprisonment respectively. The prescribed sentences do not represent differentiated treatment of opposite-sex and same-sex rape. Rather, the term of two year imprisonment is the lower limit for the imitative rape which covers various acts and aspects including the insertion of his/her sexual organ into another's bodily part, and the insertion of other bodily part or any instrument into another's genital organ or anus. The upper limit of imprisonment, which is 30 years, applies the same for both crimes. In actual cases, sentences will be rendered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 criminal offense. Victims of rape and imitative rape are equally provided with protective measures and support as stipulated in the relevant laws.

## Issue 7

13. Through 217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Centers across the nation, the Government provides services tailored to the settlement stage of married immigrant women. All foreigners married to Korean nationals are entitled to participate in an early adaptation program for creating strong family bond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onflict resolution counseling via call center, and emergency support and protection services in connection with immigrant women protection facilities are also provided. Trainings on human rights and violence response for counselors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Centers have been expanded. Public awareness programs are also in place such as campaigns and education for understanding diverse cultures.

Foreigners married to Korean nationals are allowed to stay in Korea when he/she cannot lead a regular marriage life due to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em such as their Korean spouse's death or missing, or raises underage children born in their marriage.

14. The ratio of female judges and that of female prosecutors increased from 6.8% in 2000 to 27.4% in 2013 and from 1.8% to 25.4%, respectively. Such statistics continue to follow a growing trend. The content of the amendment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as described in Paragraph 56 of the fourth report. Under the goal of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female public servants above Grade V in local governments from 9.9% in late 2012 to 15.1% in 2016, the Third Plan for Expanding Appointment of Female Public Officials in Managerial Positions has been pursued. More than one female public servant was recommended to be appointed as director, director-general, and vic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he following statistics shows the recent increase in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Table> Ratio of participation of Women in Local Politics

| Classification         | Name of Election  | Total(person) | Sex(person) |            |
|------------------------|---|---------------|-------------|------------|
|                        |   |               | Male (%)    | Female (%) |
| 4th Election<br>(2006) | Total (Percentage)  | 3,867         | 3,338       | 529 (13.0) |
|                        | Mayor/Governor  | 16            | 16          | -          |
|                        | Head of Autonomous District,<br>City, District              | 230           | 227         | 3 (1.0)    |
|                        | Member of Local<br>city/provincial<br>council               | 655           | 623         | 32 (4.0)   |
|                        | Proportional<br>Representation                              | 78            | 21          | 57 (73.0)  |
| 5th Election           | Member of Local<br>city/ district/<br>provincial<br>council | 2,513         | 2,403       | 110 (4.0)  |
|                        | Proportional<br>Representation                              | 375           | 48          | 327 (87.0) |
|                        | Total (Percentage)  | 3,893         | 3,148(80.0) | 745 (20.0) |

| Classification      | Name of Election                                   | Total(person) | Sex(person) |            |
|---------------------|--|---------------|-------------|------------|
|                     |  |               | Male (%)    | Female (%) |
| (2010)              | Mayor/Governor                                     | 16            | 16          | -          |
|                     | Head of Autonomous District, City, District        | 228           | 222         | 6(2.6)     |
|                     | Member of Local city/provincial council            | 680           | 625         | 55(8.0)    |
|                     |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81            | 23          | 58(71.0)   |
| 6th Election (2014) | Member of Local city/ district/ provincial council | 2,512         | 2,238       | 274(9.2)   |
|                     |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376           | 24          | 352(93.0)  |
|                     | Total (Percentage)                                 | 3,930         | 3,076       | 854(21.7)  |
|                     | Mayor/Governor                                     | 17            | 17          | -          |
| (2014)              | Head of Autonomous District, City, District        | 226           | 217         | 9(4.0)     |
|                     | Member of Local city/provincial council            | 705           | 647         | 58(8.2)    |
|                     |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84            | 29          | 55(65.5)   |
|                     | Member of Local city/ district/ provincial council | 2,519         | 2,150       | 369(14.6)  |
|                     |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379           | 16          | 363(95.8)  |

<Table>Representation of the increase in female public officials of administrative positions of local governments

| Year | Total  | Female | Percentage |
|------|--------|--------|------------|
| 2007 | 18,959 | 1,349  | 7.1        |
| 2008 | 19,076 | 1,457  | 7.6        |
| 2009 | 19,579 | 1,595  | 8.1        |
| 2010 | 20,078 | 1,730  | 8.6        |
| 2011 | 20,390 | 1,869  | 9.2        |
| 2012 | 20,934 | 2,064  | 9.9        |
| 2013 | 21,512 | 2,296  | 10.7       |
| 2014 | 21,805 | 2,527  | 11.6       |

\* Senior public officials, Regular position (including regular term position) Grade I~V,

regular term position Grade VI, Researcher/Instructor, Special Governmental position Grade I~ Grade V, Specialists, Exclusive Positions of Grade V or higher

15. In 2014,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by females above age 15 was 57.0%. Female workers, however, quit their jobs or experience interruption in their career due to childbirth and care, which, in turn, generates a gender gap in wage. From 2010 to 2013, gender pay gap slightly decreased from 39.6% to 36.6%. The Government promotes various policies to prevent women's career interruption by strengthened work-life balance policies such as reducing work hours, subsidizing the installation of childcare facilities, and raising the allowance for childcare leave. Meanwhile,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provides for equal wage for work of equal-value within the identical business, and if business places are found in violation of this article through guidance, inspection and handling of a reported case, he/she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twenty million KRW. Discrimination in money and goods other than wages are punishable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KRW.

## **Issue 8**

16. In December 2012, the object of rape in the Criminal Act was amended from 'women' to 'person'. The Court also advances from its 2009 ruling that spousal rape is recognized "when a marriage fails," to the recognition in May 2013 that the crime of rape is established when the husband had sexual intercourse with his wife by disabling or hindering resistance through violence or intimidation in a sustained marriage (Supreme Court judgment 2012DO14788).

17. The Government considers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serious criminal offenses. In 2013, the new Government adopted the elimination of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as a national agenda, under which relevant government bodies cooperate to execute comprehensive measures to address them. In December 2012, the provisions that rendered sexual crimes as offense subject to prosecution on complaint were repealed and, on-site police response to any reports of domestic violence has been mandated so that necessary measures are undertaken on the scene. The police promote education and publicity to improve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to stimulate reporting.

18. The prosecutor's office prevents recommitment of crime through active imposition of criminal punishment and edification measures accompanied with substantial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victim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guidelines, the Government strengthened punishment of offenders by introducing three strikes principle, increased suspension of indictment conditioned upon the completion of education or counseling, and provided enhanced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 multicultural families. Standards for demanding penalty and appeal have been toughened and various policies to strengthen punishment against sexual offenders and prevent recommitment are being pursued such as public dissemination of the identities of sexual offenders and special education of specialized prosecutors and investigators for sexual crime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 Government assigned state-appointed attorneys, extended medical and legal support services, and increased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s and victim protection facilities. The Government also operates a 24-hour hotline for early interven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and, to raise national awareness, promotes publicity by disseminating materials and planned broadcasting in collaboration with broadcasts.

19. The policy of disclosing the identities of sexual offenders was expanded and the records are publicized on the internet and locals are notified by mail. Sexual offenders are prohibited to manage or work for child-related business for ten years. In September 2014, the Act on Special Cases of Punishing Child Abuse Crimes was introduced, under which new protective measures are taken as follows; to provide for aggravated punishment of persons engaged in child welfare facilities regarding child abuse, serious injury and habitual offender; to expand occupational groups that have a duty to report child abuse; to introduce policies such as on-site police response accompanied by specialized agency for child protection, emergency measures, emergency temporary relief, and system of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 to expand support of assistants, statement assistants, and state-appointed attorneys for the child victims; to educate police officers on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in 2014; to develop a response manual for all types of child abuse; to educate teachers and staff member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on their duty to report child abuse; to pursue projects for the enactment/amendment of reasonable school rules.

20. With the amend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in June 2013,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was introduced. The system is designed to prevent secondary injury of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 or abuse by means of the statement assistant's participation in investigation or trial and mediation or assistance of the victim's communication. The system allowed only the disabled and child victims under the age of 13 to have a statement assistant, but the eligibility expanded to include all victims of child abuse in 2014.

21. Since 2012, the state-appointed attorney for crime victims has provided child and juvenile victims under the age of 19 with legal assistance of a case from the early stages of incident to investigations and trials. In 2014, the eligibility for the system was further expanded to include all victims of child abuse. A prosecutor appoints an attorney from the prospective by the request of a victim or suo motu. As of July 2015, fifteen public defenders are working exclusively for victim support and receiving professional education regarding child victims of violence.

22.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in 2004, comprehensive inter-ministerial measures have been established and promoted. In 2011 when the Second Basic Plan (2010-2014) was being promoted, violence in schools drew heightened social attention in the aftermath of a student's suicide. The Government enacted the Comprehensive Measures to Stop School Violence to raise awareness so that schools respond thoroughly in a way that recognizes even a mere harassment as crime.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was selected as a major national agenda and the 2015-2019 Third Basic Plan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s being promoted. To this end, the Government carried out the following measures; to conduct experiential education that develops students' skills in empathy and communication and a Student Court program in which students naturally acquire legal consciousness by discussing, defending, and ruling at firsthand; to support autonomous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ivities of individual schools; to create safe school environment by expanding CCTV in school grounds. The prosecutor's office also establishes general measures for school violence, implements various conditional suspensions of indictment systems such as alternative education and guidance by probation officers and crime prevention volunteers, and appropriately conducts disposition by listening to the teacher's opinion before the prosecutor's decision when handling relevant cases.

## Issue 9

23. Refer to Paragraphs 16-19 of the fourth state report. While the acts of terror are regulated by the Criminal Act,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Violence, the Act on Prohibition on the Offences of Public Intimidation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Destruction, three drafts on basic framework on counter-terrorism and two drafts on counter-cyber terrorism are pending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All pending drafts stipulate the definition of terrorism based on the actions defined as crimes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and relevant domestic laws, and strictly provide for procedures to ensure that fundamental rights are not infringed in an array of measures against terrorism.

## Issue 10

24. In 2004, the Government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Five-year Basic Plan for Suicide Prevention and the *Act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and the Creation of Culture of Respect for Life* came into effect in 2012.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Government established suicide-prevention policies tailored to each stage of the life cycle from children, juveniles, middle-aged persons, to elderly people, and developed suicide prevention programs for juveniles, office workers, and elderly people who show the highest rate of suicide. To curb the suicide of high-risk groups, in 2013, the Government implemented elderly suicide prevention programs founded on local society and case management programs for suicide attempters founded on emergency rooms. The Government also conducted fact-finding surveys on suicide in 2013 and have pushed for psychological autopsy since 2014 with a view to identifying the causes of suicide and devising suicide prevention policies.

25.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 establishes its order placing the death penalty as the highest sentence and thus it is extremely intricat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s it requires a review of individual crimes and their corresponding penalties. The question concerned with the abolishment or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is a matter of fundamental significance in terms of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a state. Accordingly, the issue will remain under careful review through comprehensive evaluation of public opinion and legal perception, social reality, as well as the function of the death penalty in criminal policy. A draft bill on the abolishment of the death penalty has been tabl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6 July 2015.

## Issue 11

26. Although no amendment for codifying torture as a separate crime was made, certain types of torture were codified as crimes under Article 124 (illegal arrest and confinement), and Article 125 (violence and cruel acts) of the *Criminal Act* and special criminal acts.

27. Regarding torture and cruel treatment, an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investigates the complaints and makes recommendations under the procedure and authority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For the Prosecutors' Office, an inspector prosecutor carries out inquiries, and a special mandate prosecutor shall be appointed to carry out investigations for certain cases. A victim of torture may file a complaint with the investigation authority or with the Human Rights Hotline Center of the Ministry of Justice, or petition to the Minister of Justice, etc. The National Policy Agency also investigates accusation against police officers, adhering to the principle

that investigations shall be carried out at a police station where the police officer in question is not affiliated.

28. From 2012 to July 2015, the police took disciplinary measure against one case in 2012, one case in 2013 and one case concerning the alleged acts of violence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in 2014, resulted in the discharge of the policemen in two cases and one official reprimand. The following table outlines the number of cases of prosecution under Articles 124 and 125 of the *Criminal Act* since 2011.

| Year  | 2011 | 2012 | 2013 | 2014 | May 2015 |
|---|------|------|------|------|----------|
| Number of cases of Prosecution (brought to trial) | 2    | 1    | 1    | 1    | 1        |

29. Articles 97-99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clearly stipulat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protective devices may be used, types and requirements of the use of protective devices, and the prohibition of abuse of protective devices. Article 99(2) of the Act prescribes that “no protective devices shall be used as a means of punitive action.” The procedures for using protective devices are; notifying a prisoner of the reason for the use of protective devices before they are used; calming him/her through psychological counseling; using protective devices within the minimum necessary extent. The use of protective devices shall be stopped upon the termination of the relevant reason. If a correctional officer uses protective equipment against any prisoner with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the relevant medical officer shall regularly check the health status of the relevant prisoner. A forfeiture of rights may be imposed as a disciplinary action that entails a solitary confinement. When a forfeiture of rights is enforced, the relevant medical officer shall regularly check the health status of the relevant prisoner before and during the enforcement. Communications through writing, letters, interviews or outside activities may be permitted if necessary.

## Issue 12

30. A draft bill, the *Mental Health Promotion Ac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anuary 2014, in order to shift the paradigm of the mental health policy from the hospitalization of severely mentally ill persons to the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mentally ill persons. The Act envisage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by making it mandatory for the Mental Health Promotion Council to evaluate the necessity of hospitalization in three and six months after the first day of a patient’s hospitalization, which is currently carried out every six months. In addition, to protect hospitalized persons from solitary confinement and physical violence, the *Mental Health Act* bans any coercion of labor, violent and cruel treatment, and arbitrary confinement, with an exception of medical or rehabilitative activities instructed by the neuropsychiatrist.

31. s of December 2013, of 1194 applications filed for habeas corpus under the *Habeas Corpus Act*, described in Paragraphs 167 and 168 in the forth state report, 94 cases were decided in applicants’ favor. The Government submitted an amendment of the *Habeas Corpus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2014 in order to allow an officer for habeas corpus to directly inspect confinement facilities for any illegal confinement and to file an application to the court through a prosecutor when such



violation is found.

32. Forced sterilization or abortion is not allowed under any circumstanc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1973, with the enactment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 policy was introduced to allow the Government to force sterilization on patients with genetic physical or mental illness. The policy was abolished in 1999, however, due to controversies over human rights violations.

### **Issue 13**

33.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eavily punishes violence within the army while a legislative action to criminalize violence inside barrack is currently in progress. Stronger monitoring within the army is continuously carried out through the appointment of counseling officers for human rights and communal living in the barracks, the organization of a monitoring team for human rights, and the operation of a military help-call system. Military judicial officers and military human rights instructors regularly provide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army. Furthermore, there are efforts to enact the *Human Rights Act for Military Personnel* to protect human right, promote human rights awareness and prevent violence in the army.

34. Regarding compensation for victims, a victim may be compensated in the form of state compensation only if a direct causal relationship of the Government such as the commander's acquiescence or abetment in a crime is acknowledged.

35. Meanwhile on 31 October 2014, the National Assembly inspected the causes for the frequent occurrences of cruel acts and sexual crimes within the army and organized the *Ad-hoc Committee on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Progressing the Culture in the Military* in order to prevent recurrences of such acts and introduce measures that would help improve the system that manages those crimes. The Committee, which will be active until 31 July 2015, has adopted 23 policy tasks such as improvement in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the evaluation system that identifies those disqualified for military service, the managing system of those who have difficulty adapting to barrack life, measures against military sexual violence, the military medical system and educational system for military personnel that aims to foster innovation within the military personnel culture,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military ombudsman system. It has submitted about ten relevant bills to the National Assembly, all of which are under discussion.

### **Issue 14**

36. The relevant information is provided in Paragraphs 159-164 of the fourth state report. The specific conditions and procedures are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court which receives a request for issuance of a detention warrant shall hold a hearing and examine all suspects by the next day of the request if no special circumstances exist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1-2). Also, any arrested or detained person is entitled to request review on lawfulness of his arrest or detention and the judge shall examine the request within 48 hours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4-2).

37. If a person is imprisoned during the investigation, he/she may be subject to investigations while imprisoned until prosecution for a maximum of 30 days for ordinary crimes and for a maximum of 50

days for the offence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Act*. After a prosecution, the period of imprisonment is set to two months, which is renewable twice for each instance. If an additional hearing is needed in the proceeding of appeal, the period of imprisonment may be renewed a maximum of three times according to Article 9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is principle does not mean that a decision must be made within the period. Rather its purpose is to set a time period where a defendant may be tried under custody. A sentence of an imprisoned defendant is usually made during the period in which imprisonment is permitted. The number of days in confinement before imposition of sentence shall be included into the finalized sentence of imprisonment (*Criminal Act*, Article 57).

## Issue 15

38. Through the approval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extend protection explained in Paragraph 154 of the fourth periodic report, the Minister of Justice prevents illegal or abusive protection by conducting regular reviews of detention which evaluates whether the protection order of the head of regional immigration/foreigner office is illegal or unfair.

The protection order is only a waiting procedure for the departure of foreigners against whom the deportation order is made. Under the protection order, the protected foreigner may leave the country any time he/she wishes to. Therefore, the purpose and aspects of the protection order are different from those of confinement of criminal procedures. In addition, the objection against one's custody, judicial review through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eeking revocation of the protection order, and the request of a temporary release are provided so that the legal procedures on the duration of custod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detained foreigners subject to deportation are ensured. Further to limiting duration of detention, the officer executing the protection order must present the written order to the foreigner and also notify him/her of the facts regarding protection of a foreigner to his/her legal representative in writing. These procedures of protection of foreigners are in line with the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procedures of non-criminal nature under Article 9 of the ICCPR.

39. In principle, children seeking asylum are not placed under custody in the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and custodial protection is also restrained for other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guardian's accompaniment. When detention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is inevitable, children are placed in special rooms and an officer is designated to take care of the children under custody and minimize any inconveniences. The repatriation process is expedited by supporting issuance of travel document, and the average period of custody over the past three years is 7.8 days. Therefore, the allegation on the detention of asylum-seeking children, including unaccompanied children, lacks grounds.

40. If a person subject to a deportation order for violating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voluntarily expresses his/her wish to leave the country, an order of departure is issued rather than an order of deportation. An immigration detainee may be temporarily released if he/she has humanitarian reasons such as seeking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his/her rights or illness. Moreover, in order to shorten the detention period, efforts to identify and solve problems such as overdue wages are made. Financial support is provided from the state budget for early departure if the foreigner has insufficient money to pay for his/her departure. Therefore, detention in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as a last resort for the securement of executive force of compulsory

deportation is used only when a person subject to deportation does not express any wish to voluntarily leave the country and concerns that the person may flee exist. Even in such circumstances, efforts to minimize the protection period are made. The average detention period in 2014 was 12.2 days.

## Issue 16

41. The right to communication with a counsel is ensured as an absolute right during an interrogation of a defendant and the counsel's participation is limitedly restricted when it clearly causes hindrance such as disturbing the interrogation or revealing any confidential material pertaining to the investigation, so that the system is in line with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9 of the Covenant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3(2); *Administrative Rule of Prosecutorial Cases*, Article 9-2]. The participation of a counsel may be restricted during the interrogation if the participating counsel clearly hinders interrogation such as unduly interfering in the interrogation, conducting improper actions or words without a prosecutor's consent, answering the interrogation on behalf of the defendant or inducing changes to the statement made or specific answers or testimony, etc (*Administrative Rule of Prosecutorial Cases*, Article 9-2, Para. 4).

42. The deportation room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has been in operation as an open facility with free access since October 2014. The foreigners who were denied entry may stay or leave the deportation room and may receive legal assistance from counsel out of their free will.

## Issue 17

43. In order to solve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ree new correctional facilities are in construction and five decrepit facilities are in the process of moving locations or expansions. Regarding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mended on 30 December 2014, stipulates special treatment in detention for immigration detainees who are a patient, pregnant, an elderly person or under the age of 19. In June 2015, the relevant regulation was amended to strengthen the rights of sexual minorities and to allow special visits from anyone seeking to become the legal representative of an immigration detainee. Also, commissioned education is currently offered at the Armed Forces Medical School to staff members of the facilities to train them to be emergency relief persons. Regarding health care for foreigners, physicians and nurses are assigned to the *Hwaseong* and *Cheongju*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and to the immigration detention unit at *Yeosu* Immigration Office to provide medical services. All protection facilities guarantee the emergency evacuation system through the 119 Rescue Center and the right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outside the facility's grounds through medical treatment agreements reached among facilities and local medical institutions.

44. The remote medical treatment systems are established in 27 correctional facilities as of June 2015. With such systems, prisoners are now able to receive medical treatments from physicians outside the facilities and psychiatrists and dentists are invited to correctional facilities to treat prisoners. A medical prison is in construction to accommodate critical or long-term patients. Moreover, by requesting services of outside medical institutions, prisoners may annually receive appropriate medical services such as physical check-ups.

45. Collecting expenses for appearance in court applies not to criminal cases but to civil, administrative and family litigations where the appearance of any party is not obligatory and it is deemed necessary to charge the expenses. Even when the detainee does not pay the charged expense, the authority allows the detainee to appear in court and later set-off with the money in custody. Therefore, the right to justice is not limited for the reason of one's inability to appear in court.

## Issue 18

46. The *Criminal Act* was amended to implement the *Palermo Protocol* by introducing the crime of trafficking and to change the relevant chapter from 'kidnapping and abduction' to 'kidnapping, abduction, and trafficking in persons.' An element of purpose of crime was inserted as follows; the kidnapping and abduction for the purpose of labor exploitation, sex trafficking, sexual exploitation or the acquisition of organs, in addition to the purpose of engaging in an indecent act, sexual intercourse or marriage, or for gain. The provision on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is newly established, and an act of recruiting, transferring or transporting a person for the purpose of kidnapping, abduction and trafficking is prescribed as constituting separate crimes, which were recognized as only accessory offences in the past. For victims of trafficking,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ct on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Informants*, etc., *Criminal Procedure Act*, and *Immigration Control Act* prescribes legal protection by giving counseling of victims, medical service provision, payment of relief funds, legal aid, employment support, residence support etc. Residency status is granted for foreign victims while they pursue procedures for relief such as legal remedies.

47. Restriction on the change of workplace is inevitable under the EPS. However, unrestricted changes of workplace are permitted if the foreign worker is unable to continue work due to denial of extended employment after the initial term has expired, temporary shutdown or closure of business, or cancellation of employment permit, so that the restrictions on the change of workplace has been eased to protect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In particular, workplace change is allow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employers and is not counted when the violation of contractual terms or unfair treatment by the employers occurs since July 2012.

48. In February 2014, the violation of the rights of the disabled persons in farming and fishing areas was inspected and direct investigations on facilities for disabled persons, salt farms, ships, lumber camps and ranches were carried out by appointing and managing prosecutor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disabled persons. Moreover, information was gathered on human rights violation and corruption by analyzing the situation of local facilities for disabled persons and creating a cooperative system with the police, the maritime police and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mended in May 2015, drastically expanding occupational groups that have the duty to report from 1 to 21, enhanced probability of discovery and intervention regarding traffick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stablished and operated institutions protecting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so that emergency response to the scene of abuse and emergency protection are provided (Art. 59-4 to 9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49. There has been no reported case where the government or the officers are alleged to be complicit in trafficking.

50. In order to protect the work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the Government provides various measures including regular instruction and inspection of workplaces, education of employers about hiring migrants, and an offer of counseling services through the foreign labor support center. In particular, the working condition of agricultural labor is relatively poor due to inconsistent working times and remote distance from the city. Also, the female proportion of foreign workers in agriculture sector is approximately 32% higher than those of other types of labor.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working conditions of foreign agricultural workers, more than 30% out of 3,000 annual inspections were carried out in agricultural workplaces and incentives were expanded for business with comfortable housing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Moreover, The Government carried out education programs for preventing and dealing with sexual harassment and distributed information leaflets in foreigner workers' native languages

51. In order to resolve the controversy raised in 2011 on human rights violations of foreign seafarers on board Korean-flagged fishing vessels, relevant ministries jointly inquired into the cases in question in May 2012. Based on the result of the inquiry, the Korean government developed the Plan to Improve Human Rights and Working Conditions of Foreign Seafarers. The improvement plan includes measures to improve the wage payment system, manage hotline centers for overdue wage and violence issues, strengthen supervision of seafarers, and to educate ship-owners and crew members on prevention of human rights abuse. The working conditions of seafarers have been annually inspected since 2013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and to identify additional necessary measures. Also, a new provision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forced labor was prescribed in the *Seafarers Act* as of 6 January 2015 (Article 25-2). The provision stipulates that ship-owners and seafarers shall not force seafarers to work against their free-will through violence, intimidation, detention or any other means which vitiate their physical freedom. Anyone who violates the provision wi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of up to five years or a criminal fine up to KRW 50 million. Regarding the 2011 incident, the five Korean seafarers accused of habitually assaulting nine Indonesian seafarers on board Korean-flagged distant water fishing vessels were investigated at the South Regional Headquarters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case was later transferred to the prosecutor. However, the accused have continuously denied the charges of assault while the victims have already returned to Indonesia. The Government has requested the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to the Indonesian authority for further investigation.

52. Following the discussion of the Task Force for Counter Sexual Exploitation, where 18 relevant ministries participate, the Government inspected the working conditions of foreign female workers from March to November 2014, focusing on those adult entertainment businesses where a number of foreign workers with E-6 visa work. The Government manages the recommendation system of foreigner entertainment before the issuance of E-6 visa, and restricts the owners of those entertainment businesses that have a history of engaging in illegal acts, from issuing of E-6 visa. The police crack down on sex traffic sites by assigning female police officers and by focusing on the punishment of the owners of the sex traffic businesses and the related buildings and the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The police officers are also provided with Guidelines for Protecting Human Rights of Sex Traffic Victims in order to clearly identify victims during crackdowns.

53. The following table outlines statistics regarding the handling of human trafficking under the *Criminal Act* (abduction for profit, sexual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overseas abduction, abduction for harassment, luring, human trafficking), the *Act of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forced labor, sexual traffic), and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bduction for sexual intercourse, luring of sexual intercourse, overseas abduction, overseas luring, sexual traffic in women and girls, abduction and luring for profit, abduction and luring for harassment), etc.

<Table> Statistics regarding cases of human trafficking punishments (number of persons)

| Year     | Registered | Disposition | Prosecution | Non-Prosecution | Suspension of indictment, transfer, protection disposition |
|----------|------------|-------------|-------------|-----------------|--|
| 2009     | 459        | 445         | 162         | 150             | 133  |
| 2010     | 366        | 359         | 114         | 121             | 124  |
| 2011     | 438        | 432         | 142         | 156             | 134  |
| 2012     | 428        | 445         | 178         | 128             | 139  |
| 2013     | 401        | 387         | 110         | 128             | 149  |
| 2014     | 507        | 489         | 145         | 145             | 199  |
| May 2015 | 185        | 172         | 51          | 57              | 64   |

54.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Disability Rights Protection Plan and amended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ntents of which are described in Paragraph 18-3. The Government supports the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of the victims against the offenders in cooperation with public interest lawyers with financial and procedure support for registering as disabled so that they can receive welfare service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MOEL) conducted inspection on 13 islands and 733 *Sinan-gun* salt farms, and found non-wage payments amounting to 3,900,000 USD of 242 workers in 173 places. MOEL took measures to settle delayed payment of wage amounting to 2,000,000 USD of 191 workers in 124 places. Judicial actions were taken against 48 business owners who unsettled wage payments and another 15 egregious offenders were detained for investigation. In 2015 also, labor inspections were conducted every quarter of the year and education of salt farm owners on human rights and the *Labor Standards Act* was promoted. In February 2014,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prepared countermeasures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wage exploitation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conducted criminal investigation after inspecting 38,352 places of salt farms, fishing ships, farms, lumber camps etc. in not only *Sinan-gun* but all island areas. As a result, 37 were criminally charged, 20 were taken into custody and indicted, and 17 were indicted without custody.

## Issue 19

55. Since HIV is highly contagious among people who lead group lives, blood tests are given to soldiers and prisoners of correctional facilities. A prisoner of a correctional facility must give consent before a blood test is given. Among foreigners who stay in the country for more than 90 days, those

working as a foreign language instructor must submit a HIV test certificate when they register themselves as a foreigner. This procedure is carried out only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a safe public health environment to juveniles receiving education.

56. All HIV examinations are conducted with the consent of the patient,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March 2008, an anonymous examination was introduced to minimize exposure of private information. All measures of HIV tests are carried out on legal grounds within in a limited scope for public health and therefore cannot be seen as an arbitrary violation against the right to privacy.

## Issue 20

57.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enacted and came into effect in 2011. Personal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that pertains to a living person including all that by which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 be identified. All personal information managers bea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must clarify the purpose of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other purposes is prohibited. They are also required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lawfully and legitimately an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58. Chapter 4 of the *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provides for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a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If a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tends to collect and use personal data and information, he or she shall notify in advance and obtain consent from users.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protective measures are compelled so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not lost, stolen, divulged, altered, or mutilated whilst in storage or in keeping. Other legislations also protect various aspects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on financial transactions etc. is regulated by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an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regulated separately by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59. At the same time,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protects the privacy and freedom of personal communications and conversations and punishes illegal violations regarding personal communications. The Act also provides for procedures of executing wiretapping and prevents arbitrary violation of privacy through the measures of providing for parties concerned to be notified of wiretapping or provis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restriction on use of materials acquired through wiretapping; and the submission of a report on wiretapping to the National Assembly. A prosecutor or head of an investigative agency can only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the requirements in the law, with communications dat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83),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rticle 13), communication-restricting measures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rticle 5 and 6). Particularly, investigation agencies can store communications and data for limited public purposes such as presentation of evidence in criminal trials.

60.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y stipulating the rights of subject of information (Article 4), provides for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choose and decide whether he/she consents to the management of his/her

personal information, the scope of consent, and related matters; the right to verify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o request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request the suspension, correction, deletion and destr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receive prompt relief from damage caused by the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fair procedures. The *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stipulates the rights of user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Article 30) and provides for the right to revoke his/her consent, and the right to inspect or request the provision of status of his/her personal information which has been used by the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It also state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to notify details of u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compensate damages. The Article 44-2 of the *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rovides for temporary measures to relieve users from the damage caused by the violation of rights such as invasion of privacy. Plans to improve the temporary measure policy for harmonizing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freedom of speech on the internet were prepared in 2013 and legislations are underway. The amendment will clearly provide the right of the provider of information to raise an objection that dispute mediation regarding temporary measures is managed by a impartial committee, and that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r the court examines the content of the information.

61. When investigation agencies receive material related to a person's communications from operators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they shall obtain court permission upon satisfying certain conditions provided in the law. Investigation agencies execute the communication-restricting measures under the permission of the court only with a substantial reason to suspect that a crime is being planned or committed or has been committed, and to prove that it is difficult to prevent the committing of the crime, arrest the criminal or collect the evidence. Search and seizure of telecommunications are executed only on subject matters relating to the case in question after obtaining a warrant for criminal investigation and when there is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the suspect committed a crime. Search and seizure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are executed when necessary for investigation or execution of a sentence after obtaining court permission by explaining reason, relevance to the subscriber in question, and scope. Moreover, investigation agencies shall notify the fact of search and seizure of telecommunication to the person concerned when any public action is instituted against the relevant cases, and this applies mutatis mutandis to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62. The police do not conduct investigations on base stations in order to identify participants in an assembly. Request for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is possible for the purposes of criminal investigation as provided i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but facts related to specific crimes and suspect shall be specified with the request.

63.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provides strict requisi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ersons and ensures the right of the subject of information to request inspection of the status of his/her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to third persons. According to Article 8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nvestigation agencies may request providers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to provide communication data including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ddress, etc. with the written reason for such request, relation with the relevant user and the scope of necessary data. The 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who is in charges of information protection



deals with the request by deciding whether or not to provide data and reviewing the scope of the data that will be provi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oblige to store, manage, and report the statistics on the provision of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material to investigative agencies etc. which the government discloses to the public twice a year. The requests for provision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are permitted only when necess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legitimate purpose are satisfied and are thereby compatible with Article 17 of the Covenant.

64. According to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provider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are required to keep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by types for a certain period. This data may be provided to investigative agencies via legal procedures such as court permission. Yet such data are prevented from divulgence under the provisions that prohibit illegally providing or requesting the data (Articles 13, 13-3, 13-5, 17).

65. Articles 9(1) and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et out that matters concerning students' school life such as using electronic devices including cellular phones shall be stated in school regulations, and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should give their opinions in advance when school regulations are established or revised. That is, the school regulations of individual schools set out the use and possession of cellular phone or smartphone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 constituents of the school.

66. An amendment bill to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which newly provides for the duty of possession of equipment of provider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is introduced in the current 19th National Assembly. In principle, the current law provides for communication-restricting measures on all communications for the purposes of criminal investigation etc., but wiretapping on cellular phones is impossible due to absence of facilities. The amendment bill was introduced to provide for the lawful procedure for wiretapping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of violent crimes or national security threats using communications services.

## **Issue 21**

67. The Government's position on introducing alternative services for the conscientious objectors remains unchanged as stated in the state report. In November 2014, after the submission of the state report,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conducted a national survey on the conscientious objectors and the result shows that 58.3% of the public opposes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It is still hard to envisage introducing an alternative service in the midst of the continuing insecure situation of the country.

68. Article 81-2 of *Military Service Act* was newly established in July 2015, allowing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o publish on the internet websit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ose who evade military servic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except for disease or imprisonment, by staying abroad or refusing physical examination or enlistment, and matters concerning non-compliance with the duty. To this end, the Committee for Deliberation on Cases of Evasion of Military Service is established in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s. The Committee notifies tentative persons that their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disclosed, gives them an opportunity to explain, deliberates after 6 months of notification considering the status of their military service fulfillment, and decides whose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disclosed.

## Issue 22

69. Sinc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tated in Paragraph 264 of the state report, the General Chapter of the Curriculum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establish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under Article 23(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requires the school to provide an alternative class when it opens a religious class. Since the Curriculum was revised in 2013, the religiously affiliated schools that students are able to choose to attend are allowed to provide only a religious class with the consent of the parents and students. In line with these developments, the Government strives to protect the right to religion of students by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on the curriculum and training of teachers by the local education offices with the matters of interests in religious education.

## Issue 23

70. Article 47(1)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was foun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December 2010 and follow-up measures were taken, including clearing charges regarding the cases under investigation; withdrawing public prosecution, demanding of not guilty judgment, or withdrawing appeal regarding the pending cases before the court; and giving immunity from execution and informing that retrial is possible regarding the confirmed cases. Even after, there has not been any case where the act of disseminating information of public interest was unfairly restricted.

71. The mere act of spreading false information online is not subjected to criminal punishment, whereas the act of disseminating incorrect information online purposely to disparage a person's reputation, defaming his or her character as a result, is punishable for the violation of the *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rticle 70 Paragraph 2. In addition, the act of interference of business by disseminating incorrect information (*Criminal Act*, Article 314 Paragraph 1), and the act of publicly making false communication for the purpose of benefiting or harming himself or a third person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Article 47 Paragraph 2) may be subjected to criminal punishment.

72. The Government has no plan to amend or decriminalize defamation since it may cause irreparable damage on the victims and gravely violate the right to reputation,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ll of which are protected in the Constitution. The Government does not share the opinion that defamation is broadly defined. On the other hand, a number of bills are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further legislative discussion. State public officials bear obligation to political impartiality and shall be servants of the entire people under the Constitution and relevant law. Such provision does not limi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general; thus the Government does not plan to amend the provision.

## Issue 24

73. As stated in Paragraphs 285-288 of the fourth report,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National Security Act* is not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In accordance with the judgment of the Court, the NSA is applied only where there are clear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and existence or danger to the democratic fundamental order. The number of the detained and the prosecuted is provided below, which hardly shows an increasing trend since 2008.

74. Article 7 of the NSA is limited to “any person who praises, incites or propagates the activities of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with the knowledge of the fact that it may endanger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State or democratic fundamental order,” not to mere opposition to Government policies or the praise of the ideology of anti-state organization. The application of the NSA is in accordance with the Covenant that provides for the limitation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Table] The number of the offenders of the NSA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No. of persons detained   |  | 17   | 16   | 18   | 32   | 19   | 26   | 38   | 7    |
| No. of persons prosecuted |  | 40   | 27   | 34   | 43   | 39   | 59   | 70   | 34   |

75. The members of the UPP were prosecuted not merely on the charge of praising and inciting North Korean ideology but on the insurrection conspiracy and agitation. As North Korea declared the armistice invalid in March 2013, about 130 UPP members gathered in secret, agitated and conspired insurrection to assist North Korea’s conduct of war by destroying essential national infrastructures such as oil storage, telecommunication and railways.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at the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the UPP are primarily to realize ‘progressive democracy’ and North Korea’s socialism, and, in an active and deliberate manner, it attempts to undermine or to annihilate the basic democratic order based on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In this regards, The Court ruled that no alternative means exists other than to dissolve the political party.

## Issue 25

76. The allegation is not true. Investigations may be initiated by complaints if journalists or others impair another’s fame, including that of public officials, through broadcasting, internet, or publication. When the acts found constitute the crime of defamation (*Criminal Act*, Articles 307 and 309) or the crime of insult after investigation, journalists or others can be criminally responsible. However, the crime is not constituted if the facts are true and solely for the public interest and he/she shall not be criminally responsible (*Criminal Act*, Article 310).

## Issue 26

77. A permit system about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not recognized under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A person who organizes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is free to hold it by reporting to a police station in advance.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are banned to the minimum necessary extent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as specified i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n the

past three years, the proportion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banned by the police remains at merely 0.17% of the entire reported cases, which amounts to 761 banned from a total of 433,956 demonstrations.

78. While respecting peaceful assemblies and protests, the police take procedural steps to stop illegal acts; warning broadcasting, requesting the organizers to declare conclusion of the protest, requesting the participants to voluntarily disperse, and three orders of disperse in time interval. If the participants do not follow the order, the police execute a direct disperse measure. Rather than apprehending the protesters, the police put priority on securing the roads for traffic flow by leading the protesters to the sidewalks. The crime of interference of business may be applied when acts by the protesters suffice the elements of the crime.

79. The Government has not employed excessive physical force for the purpose of suppressing protests against government policies or wide-scale projects. Rather it ensures legal and peaceful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s much as possible. While respecting human rights and safety of people, a minimum necessary amount of physical force is exercised to restrain the use of violence, such as assault against police officers, throwing of firebombs or dangerous articles, and destruction of police equipment or public property. The Police force is used with observing due process of law after strictly evaluating whether the principle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is met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Rules on Use of Hazardous Police Equipment*.

80. Bus blockades are used to a minimum necessary extent to protect lawful demonstration and to prevent illegal acts and mutual physical damages that may occur in a direct confrontation between the protestors and the police. Even when illegal acts are sure to occur, blockade is phased to set up and dismantled to protect the right to assembly to the maximum extent, while taking measures for securing passageways for the safe and free move of people and managing guidance teams for passage.

## **Issue 27**

81. Refer to the response in Paragraph 1.1

82. The bylaws of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GEU) allow the membership of persons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which is in violation of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 Act* that stipulates the membership of trade union is extended to in-service public officials only. Accordingly, the government returned the report of establishment of the KGEU on 2 August 2013, against which the KGEU filed a suit. On 24 April 2014, the first instance court ruled that the return was legitimate. The case is currently pending in the appellate court. The KGEU is currently not recognized as a trade union under the law.

83. Legitimate acts during collective bargaining and strikes enjoy criminal immunity according to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4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at is, no member of trade union shall be arrested or detained for legitimate collective action or union activities unless the actions are related to the decision of working conditions, such as workplace occupation, shutdown of production lines, violence against managers or the police, or sit-in protest at high altitude fall under the crimes defined in the *Criminal Act* and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84. In-service teachers and dismissed teachers, until a review decision is made by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for remedies for unfair labor practices, are recognized as trade union members,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 However, the bylaws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allow dismissed teachers to join. MOEL required rectification on 23 September 2013 and, as it was not implemented, notified on 24 October 2013 that the union is no longer legally recognized. On the day of notification, the KTU initiated a litigation of revocation of notification. The first instance court ruled on 19 June 2014 that MOEL's disposition was legitimate, and the second trial is in process. The KTU is currently not a trade union under the law.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2 of the *Teacher's Union Act* is 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f 28 May 2015, 2013Hun-Ma671, 2014Hun-Ga21).

85. The Supreme Court ruled on 25 June 2015 on the case concerning the status of migrants' trade union that, according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 worker is defined as those who provides labor and lives on the wages, and even foreigners whose sojourn is illegal should not be viewed otherwise. Accordingly, the Migrants' Trade Union is recognized and MOEL will render a suitable disposition.

## **Issue 28**

86. The Government conducted research on improving birth reporting system under the *Act on th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and an amendment bill strengthening guardianship of the Government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entitle prosecutors or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to file birth report when the person responsible for filing report on birth neglects the duty. Another amendment bill is also under the review of National Assembly that mandates hospitals issuing birth certificates to report births through the computer network.

87. Article 2 of the *Nationality Act* sets forth the attainment of nationality by birth that a person whose father or mother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time of the person's birth shall attain Korean nationality by birth regardless of his birthplace.

## IX. 쟁점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NGO 답변

### 규약이 시행된 헌법적/법적 프레임워크

1. 규약 22조 유보의 유지필요성 검토에 대하여 철회에 대한 관점에서 진전이 있었는지 기재바람. 또한 위원회가 가진 견해의 전적시행을 위한 기관적 조치와 입법적 조치가 있었는지 기재바람. 당국에서 받아들인 본 위원회의 각 관점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1) Withdrawing reservation on Article 22 of the ICCPR

- 정부는 1992 년도에 제출한 자유권 규약 1 차 보고서(CCPR/C/68/Add.1)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유보 취지를 헌법 상 공무원의 단결권 제한 규정과의 조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사전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는 국내법 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22 조를 유보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공무원의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위 법률은 노조 가입 주체, 단체 협약의 내용을 제한하고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등 사실상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sup>192</sup>

#### Suggested Recommendations

- 자유권규약 제 22 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

#### 2) Implementation of Views

- 정부는 위원회 견해와 관련하여 법 개정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물품 반환, 기록 말소, 사면 등 다양한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나 2007 년 공청회 이후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전혀 없었음. 2007 년 당시 개인통보에 관한 견해를 재심사유로 하자는 의견, 견해에 근거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자는 의견 등 선택 가능한 이행조치가 모두 제시되었고 정책결단으로 이행조치를 채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 년 가까이 이를 회피하고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

<sup>192</sup>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만 단결권을 보장하여 그 상급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음,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직, 인사, 보수 등 업무 수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음.(제 6 조 2 항),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제 10 조 1 항), 일체의 쟁의행위는 금지됨 (제 11 조)

반복하고 있음. 또한 체류자격이 부여된 이란인의 경우 개인진정 결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격이 부여된 것은 아니고 개인진정 결정 이후 다시 신청한 난민 자격 심사에서 난민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것임.

### Suggested Recommendation

- 정부는 위원회의 견해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률 제정 등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

**2.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총회 결의안 48/134 부록)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선정 및 임명 과정에 관하여 명확성, 투명성 및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조항의 미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사전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년 신임 인권위원장 선출과 관련 신설 규칙에 따라 웹사이트에 공식 공고와 시민사회 의견 수렴 공고를 냈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para. 2-1). 이에 시민사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을 선출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음. 또한 2011 년에 투명하고 독립적인 인선절차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장하나 의원이 발의했으나 2015 년 현재 국회에서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음.
-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NHRI)는 2014 년 3 월, 2014 년 10 월, 2015 년 3 월까지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고 인권위의 다원성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등급심사가 3 회 보류된 바 있음. ICC-NHRI 는 2015 년 8 월 임기가 끝나는 인권위원장의 선출과정을 지켜보고 내년 등급심사 때 반영하겠다고 했음.<sup>193</sup>
- 2015 년 8 월, 대통령은 인권위법 상에 명시된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함. ICC 는 인권위원의 다원성이 부족하다고 권고했으나<sup>194</sup> 법대 교수 출신인 전직 위원장에 이어 현직 법관을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법조인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음.<sup>195</sup>

<sup>193</sup> ICC-NHRI, ICC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Report-March 2015, pp.39~41, <http://bit.ly/1U89asU>

<sup>194</sup> Ibid.

<sup>195</sup> 차기 인권위원장 내정자는 판사 시절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게 여성임을 증명하는 성기사진 등을 제출하라는 인권침해적인 보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성기사진 제출 등은 성별정정에 필수적이지 않은데다 전문가의 소견서 등이 있어 대부분의 재판에서 성전환자에게 요구하지 않음. 또한 그는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음. Court chief appointed 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hairman, The Dong-A Ilbo, 21 July 2015,

### Suggested Recommendations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예산, 인력, 운영의 독립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인권위 법을 개정할 것.
-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투명하고 공정한 임명 절차를 보장할 것.
- 인권 관련 경험과 지식이 없는 무자격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관행, 다원성이 결여된 법조인 중심의 인권위 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인권위원 인선 절차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

3. 당사국이 자국 영토 또는 사법권 내에 위치한 모든 기업이 그 운영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인권기준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의도가 있는가. 특히 우즈베키스탄 목화산업과 관련한 한국조폐공사와 대우 인터내셔널, 그리고 인도 자가싱푸르 제철소 건설과 관련한 포스코의 기업책임성을 다루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 한국 정부는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인권기준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기업과 인권에 관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음. 국내외 기업 활동 중에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고는 하나(사전질의서 정부 답변 para. 3-1) 해외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국내 사법절차에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함. 현재 NCP 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실효적이지 않음.
- 한국 NCP 는 2015 년 7 월 23 일, 강제노동으로 수확된 우즈베크 목화의 사용에 대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대우인터내셔널과 그 모기업인 포스코와 투자자인 국민연금, 노르웨이 연기금과 공기업인 조폐공사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제기에 있어서 한국 기업은 공급망에 있어서 아무런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며 기각하였음.<sup>196</sup>
- 한편,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한국 NCP 는 2013 년 6 월 20 일, 약 20,000 여명에 이르는 강제이주민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 평가 및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협의를 하지 않아 OECD 다국적기업

---

<http://bit.ly/1Jy2Tvm>, The Nominee Lee Sung-ho is hardly seen as the right person for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Korean), the Roundtable for the transparent selection process of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12 August 2015, <http://bit.ly/1Jy5bL1>

<sup>196</sup> Initial Assessment by Korean NCP fo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Korean Trans National Corporations Watch et al. vs. Daewoo International et al., Korea National Contact Point, 7 July 2015, <http://bit.ly/1TLexsx>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는 사건에 대하여 인도 정부가 승인을 내린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정부가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요지로 이를 기각함.<sup>197</sup>

- 이후, 2013년 10월 포스코 인도 제철소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프로젝트의 잠정 중단을 촉구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공동성명서<sup>198</sup>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또한 정부는 2014년 2월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보낸 공동 질의에<sup>199</sup> 대해 2014년 7월 보낸 답변에서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를 한국 NCP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한국 NCP는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내린 바 없으며 실효적 조치를 취한 바도 없음.

### Suggested Recommendations

- 자국 영토뿐 아니라 사법권 내에 위치한 모든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유권 규약 및 UNGP에 따른 인권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입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
- NCP를 통해 한국 기업의 활동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절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NCP 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독립성, 전문성, 집행력을 포함한 쇄신방안을 마련할 것.

## 비차별, 양성평등, 국적·인종·종교에 따른 혐오의 옹호금지,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2, 3, 20, 26, 27조)

4. 민간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직·간접적인 차별과 복합차별을 금지하고, 출신국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 사유를 포함하며, 효과적인 행정적·사법적 구제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고 하나(사전질의서에 대한 정부답변 para. 4-1)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진행 내용 및 구체적인 입법 과정을 제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고 유엔의 여러 위원회의 성적지향 등을

<sup>197</sup> Initial Assessment by Korean NCP fo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Korean Trans National Corporations Watch et al. vs. POSCO et al., Korea National Contact Point, 20 July 2013 (Korean only) <http://bit.ly/1NmBG13>

<sup>198</sup> India: Urgent call to halt Odisha mega-steel project amid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 October 2013, <http://bit.ly/1Jy5mpm>

<sup>199</sup> 28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Communications report of Special Procedures, A/HRC/28/85. p. 158, 19 February 2015

포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촉구에도 형식적인 답변<sup>200</sup>만 반복하고 있음. 2013년 2월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이 반동성애 단체 및 보수개신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자진 철회<sup>201</sup>되기도 했음.

- 2013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 31.9%, 대체로 필요하다 27.9%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sup>202</sup>을 밝히고 있음. 더불어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LGBTI 중 53.2%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책적 이슈로 차별금지법 제정<sup>203</sup>을 꼽았음.

### Suggested Recommendations

- 행정적·사법적 구제를 비롯하여 교육, 노동, 재화와 용역, 주택, 공중보건 등의 민간영역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차별과 복합차별을 금지하는 실효성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조사 및 입법에 있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입장표명 및 대중 인식제고 캠페인을 진행할 것.

5. 인종에 기반한 폭력이 범죄화 되었는지에 대하여 명기하고, 언론과 인터넷을 포함하여 특히 외국인을 겨냥한 인종차별과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또한 다문화가정의 현 개념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게만 적용되고 그 반대경우인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에게는 해당되지 않거나, 외국인노동자간의 결혼으로 인해 형성된 다문화가정은 배제하는 등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 현재 한국에는 인종차별의 정의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법은 없으며 이에 언론과 인터넷 상의 혐오발언들은 형법으로

<sup>200</sup> 제 2 차 UPR 권고이행 시민사회 정책제언에 대한 정부 의견 (법무부, 2014년 10월)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단 구성 및 운영(2013.4.~6.), 종교단체 지도자 간담회를 진행 (2013.8.)’했으며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설득 작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을 계속’

<sup>201</sup> How far should antidiscrimination law go?, The Korea herald, 29 April 2013, <http://bit.ly/1Jy6BoL>

<sup>202</sup> 종교 및 차별금지법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2013년 6월 24일

<sup>203</sup> Key Results South Korean LGBTI Community Social Needs Assessment Survey,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p. 33, <http://bit.ly/1Jy6IRh>

규제하고 있는 명예훼손 모욕 외에 특별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sup>204</sup>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년에 “인종적 화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으나<sup>205</sup> 정부는 외국인, 이주민 혐오에 대한 인권적 규제 및 캠페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가정을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남녀 구분 없음)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주민으로만 구성된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보고 있지 않음. 또한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문화 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함.<sup>206</sup>
- 2013 년 제 2 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따르면 이주민으로만 구성된 가정도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합법적 체류자격이 있는 이주민에게만 해당되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권만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가 이주여성 중심인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한국 요리, 뜨개질 등) 이주남성의 경우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Suggested Recommendations

- 인종에 기반한 폭력 및 혐오 발언에 반대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것
- 인종에 기반한 폭력 및 혐오 발언을 막기 위한 인권 교육 및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sup>204</sup> 형법 제 307 조(명예훼손), 제 311 조(모욕)에 따라 처벌 가능하나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요지가 있어 유엔에서도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한국 인권단체들도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sup>205</sup>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2010 년 12 월 30 일

<sup>206</sup>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 1 항 :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 :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 조제 3 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 조부터 제 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 3 조 및 제 4 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 2 조부터 제 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다문화가정 범위에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민들로 구성된 가정도 포함시키고 모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 조치를 취할 것

**6. 미혼모와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간성(LGBTI), 에이즈 보균자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군대 내 상호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당사국은 이성간 강간과 동성간 강간(“유사” 강간) 및 그 피해자에 대한 법적 처우의 일치를 고려하고 있는가.**

- 정부는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서에 대해 불수리 처분을 했을 뿐<sup>207</sup> 아니라 법령과 판례에 의해 비결혼 이성커플(사실혼)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비결혼 동성커플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음.<sup>208</sup> 2013 년 개정된 형법 제 297 조는 강간의 객체를 기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음. 그러나 penile-vaginal rape 만을 강간으로 보는 현재의 정의로는 동성 강간 피해자의 동등한 보호가 불가능함. 형법은 강간보다 경한 범죄인 제 272 조의 2 ‘유사강간’에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강간죄의 법정형은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이보다 경한 2 년 이상의 유기징역임. 따라서 동성의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함.
- 균형법에 명시되어 있던 동성애 성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계간”이라는 단어를 2013 년 개정하면서 “항문 성교”라는 단어로 대체하였음.<sup>209</sup> 그러나 단어만 대체되었을 뿐 여전히 합의된 동성간 성행위는 균형법에 따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되고 있음. 합의된 이성간의 성행위는 균형법에 의해

<sup>207</sup> South Korea’s LGBT Community Is Fighting for Equal Rights, The Time, 11 February 2014, <http://ti.me/1Jy7JZm>

<sup>208</sup> 비결혼 이성 커플에게 인정되는 권리로는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자격 부여(노인복지법 제 1 조의 2), 주택 임차권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 9 조), 연금 수급자격 부여(국민연금법 제 3 조, 군인연금법 제 3 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2 조), 유족 범위에 포함(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5 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5 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 3 조,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 15 조의 3,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8 조 등), 면회 허가 제한의 예외 적용(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상 제 38 조) 등이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및 지원 대상이 되는 ‘가족구성원’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음.(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의 2)

<sup>209</sup> 균형법 92 조의 6(추행): 제 1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차별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임.

### Suggested Recommendations

- 주택, 연금, 가정폭력 처벌 및 피해 지원에 있어 비결혼 이성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비결혼 동성 배우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차별을 해소할 것
- 동성간 강간의 경우에도 이성간 강간과 동일하게 법정형을 부여하여 동등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것
- 동성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균형법 92 조의 6 을 폐지할 것
- 정부는 전 계급의 장병에게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 7. 다음에 관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

#### 1) 가정 및 사회 내에서,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의 대응

-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를<sup>210</sup> 하여 단지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연장이나 영주, 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한국인 배우자가 일찍 사망할 경우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류권을 연장해주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음.
- 2012 년부터 결혼이민자에게도 귀화 허가시 이중국적이 허용되었으나,<sup>211</sup> 제 6 조 2 항 3, 4 호<sup>212</sup>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

<sup>210</sup> “외국인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인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무효의 항변이나 혼인무효의 반소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선고된 가정법원의 이혼판결은 귀회심사에서 혼인관계의 진정성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로는 불충분하고, 별도의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법 김용찬 판사의 ‘혼인파탄 간이귀화에 관하여 가정법원에서 본 문제제기)

<sup>211</sup> 국적법 10 조 2 항 1 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 6 조제 2 항제 1 호·제 2 호 또는 제 7 조제 1 항제 2 호·제 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sup>212</sup>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조제 1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 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 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 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 1 호나 제 2 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 1 호나 제 2 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 1 호나 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이중국적을 신청할 수 없고, 단일국적을 선택해야 함.

- 결혼이주여성들이 이혼 후 본국으로 귀환할 때, 한국의 이혼증명서류나 가족관계등록서류를 본국의 법원 또는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이혼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주여성에게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주지 않음.

#### **Suggested Recommendations**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이 체류연장이나 영주, 귀화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심사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상의 차별을 폐지할 것.
- 결혼이민자가 이혼증명서류 및 가족관계등록서류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 **2) 사법부와 중앙 및 지방(광역) 입법부, 집행부를 포함한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 특히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한 조치(관련 통계 첨부 요망)**

- 2013 년 기준 여성 공무원 비율은 중앙부처 42.8%, 지방자치단체 31.3%에 이르고 있으나, 고위공무원은 4.4%,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11.3%에 불과함.
-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2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홀수순번에 여성을 배치하는 남녀교호순번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위반 시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낮음.

---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 1 호나 제 2 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2015년 현재 여성국회의원 현황<sup>213</sup>



공공기관 임원현황(2014.6.23) <sup>214</sup>

| (단위 : 개, %, 명) |        |        |        |      |         |
|----------------|--------|--------|--------|------|---------|
| 공공기관 수         |        |        |        | 임원수  |         |
| 전체             | 여성임원없음 |        | 여성임원있음 |      | 여성임원 비율 |
|                | 개      | 비율 (%) | 총임원    | 여성임원 |         |
| 318            | 151    | 47.5   | 167    | 52.5 | 11.3    |

Suggested Recommendations

- 공공기관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업무 경력을 관리하고 공무원 사회 내 성차별해소를 통해 유리천정을 없애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여성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권고 조항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추천하도록 한다'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것
-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 사회 및 우리 사회가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대중 캠페인 및 교육을 시행할 것
- 성별과 관계없이 하위직 공무원을 중요업무에 배치해 업무능력을 높여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위한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육아휴직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며 일생활양립정책에 남성의 참여를 높이는 조치를 취할 것

3)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축소

<sup>213</sup>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sup>214</sup> 제 1 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5-2017)(안), 미간행

- 2013 년 현재 시간당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8.2%에 해당함. 성별임금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OECD 회원국 중 격차는 가장 큼.<sup>215</sup>
-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 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8.2%,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2.7%,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5.9%로 격차가 매우 큼. 이는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줌.<sup>216</sup>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다고 공약했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비정규직 기간을 2 년에서 4 년으로 연장하면서 도리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 여성노동자 800 만 명 중 56.11%인 450 만 명은 비정규직이고 여성 비정규직의 61%가 저임금 계층에 해당하는 상황임.<sup>217</sup>

#### Suggested Recommendations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폐지할 것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존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2, 7, 24조)

8. 배우자 강간의 범죄성을 법률상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가.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사적인 가정문제로 치부된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그러한 사건의 신고를 독려하고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 기소 및 제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할 것. 아동 성 학대와 교내 폭력 및 따돌림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것.

#### 1) 배우자 강간의 범죄성을 법률상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

- 사전질의서에 대한 정부 답변 8-1 에서 제시한 2013 년 5 월 대법원 판결은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협박, 흥기 동반되었다는 점에서 강간죄로 인정된 것임. 배우자 강간죄가 인정된 판례이기는 하나, 통상적인 강간 사건에서 인정되는 폭행과 협박의 수준보다 심각한 경우였음. 또한 양형 자체도 특수강간죄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었음.

<sup>215</sup> 김준, 임금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국회 입법조사처, 2014

<sup>216</sup>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sup>217</sup>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자료, 2014.8 기준



## Suggested Recommendations

- 배우자 강간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할 것

##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대응

- 가정폭력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쉽게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정부는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확대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으나 (사전질의서에 대한 정부 답변 para. 8-2), 이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불기소 수단으로 활용됨.<sup>218</sup>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고,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 주 접근 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 상담 위탁 등 처분을 하는 사건을 말함.<sup>219</sup> 이러한 경우, 처벌의 수위가 경미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에게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는 '무분별한, 허위 신고 증가'를 야기할 것이라는 판단과 성폭력 피의자의 '과도한' 불이익 우려로 2013 년 이후 전국의 여러 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 무고 사범 집중 단속을 했으며,<sup>220</sup>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무고를 의심받고 무고 피의자로 기소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sup>221</sup>
- 미등록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에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희롱, 성폭력 신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남.<sup>222</sup> 한국의 성폭력특별법이 외국인에게도

---

<sup>218</sup> 대검찰청의 가정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3 년에 접수된 전체 가정폭력사건 17,194 건 중 10,015 건이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리, 4239 건이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었음.

<sup>219</sup>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 조 제 1 항

<sup>220</sup> Uijungbu Local Prosecutor's Office punishes increasing false accusations on sexual violence (Korean), Daehan Ilbo, 12 May 2014, <http://bit.ly/1NJB1dF>

<sup>221</sup> Sexual violence victims being accused of false accusation (Korean), The Hankyoreh, 29 October 2014, <http://bit.ly/1NJB8Gk>

<sup>222</sup> 2013 년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과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이주민방송 MNTV,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하면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사업장 상사, 동료에게 보고한 이주노동자는 20.5%에 불과하였으며 56.4%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남성의 40.0%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비해 여성은 68.2%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로는 불법체류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47.4%, 실직 우려가 36.8%,

적용되지만 미등록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강제추방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임.

#### **Suggested Recommendations**

- 정부는 수사단계에서 체포우선주의제도를 도입하고, 검찰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할 것.
- 성폭력 무고 혐의 판단 요건을 엄중하게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무고 인지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관련 예외조항을 마련할 것.
- 성폭력 피해 미등록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당하는 성폭력에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3) 스토킹 범죄**

-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벌금 10 만 원 이하로 처벌되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의 공포와 고충에 비하면 굉장히 경미한 처벌이며,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에는 부족함. 또한 경미한 처벌로 인해 가해자를 더 자극해 보복 범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Suggested Recommendations**

- 스토킹 행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할 것.

#### **4) 아동 성학대와 교내 폭력 및 따돌림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 “아동 성폭력”에 관해 법무부는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하지만 선고형은 여전히 낮고 집행유예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sup>223</sup>, 근속년수, 순환보직 등의 이유로 아동전담검사(PFC) 및 수사관의 전문성이 부족함.

---

창피함과 수치심이 31.6%, 의사소통의 어려움 21.1%, 정보 부족 15.8%, 보복 우려 5.3%로 나타났다.

<sup>223</sup> 김진태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제출 자료, 2013. (13. 10. 18.자 연합뉴스, “올해 아동대상 성폭력범 집행유예 비율 더 올라갔다”)

- “아동 성매매”의 경우 성매수범 및 알선범은 경하게 처벌받고 있으며,<sup>224</sup> 사이버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이나<sup>225</sup> 이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고, 강요 없이 성매매한 경우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현실임.
- “학생 간 폭력”에 관해 교육부는 폭력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내외 CCTV 설치, SPO 배치 등 엄벌적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효과가 낮으며,<sup>226</sup> 학교폭력은 저연령화되고 있고,<sup>227</sup>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은 증가하였음.<sup>228</sup> 반면 전문상담사 1,000 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고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예산은 낮으며,<sup>229</sup> 회복적 정의 방식의 조치는 분쟁조정제도가 유일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체벌(교내 학대)”에 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체벌을 허용하면서 다만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사에 의하면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을 종종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비율이 45.8%로 나타났으며, ‘엎드려뺨쳐’ 등 기합성 체벌은 60%에 이르렀음.<sup>230</sup> 한편 연령에 따라 구분한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13.5%, 중학생의 29.1%, 고등학생의 26.5%가 체벌을

<sup>224</sup>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형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아동 성매수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66%로 매우 높고,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도 3년 미만의 선고형이 66.3%로 나타났음(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 2007~2012-, 여성가족부, 2013.).

<sup>225</sup> 2013년도에 성매매 조장 또는 혐의가 있는 스마트폰 앱은 717개이며, 이 중 182개의 앱을 조사한 결과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5.2%에 불과했음. 95.6%는 무료회원으로 운영됐고 51.6%는 무료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음(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비공개자료).

<sup>226</sup> 2014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의건수는 전년도 대비 10% 증가했으며,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심의건수는 전년도 대비 33.4% 증가하였음(정진후 국회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학교폭력 통계). 또한 2013년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가 전국 교사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는 70.4%, CCTV 확대 설치는 62.2%의 교사가 학교폭력 해결에 교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음.

<sup>227</sup> 9세-11세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2008년 38.2%에서 2013년 38.6%로 증가하였음(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9년, 2013년). 한편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그 대상에서 초등학교 저학년(8세-10세)을 배제하고 있는 등 조사결과가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등).

<sup>228</sup> 2013-2014년 가해유형별 학생 1천명당 학교폭력 증감율을 살펴보면,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상의 음란, 폭력, 사이버따돌림)이 22.2% 증가하였다(정진후 국회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학교폭력 통계).

<sup>229</sup> 학교폭력 없앤다더니...전문상담사 1000명 해고 (Korean), 뉴시스, 20 February 2014, <http://bit.ly/1NJBhJK>

<sup>230</sup>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4. p 6.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sup>231</sup>

#### Suggested Recommendations

-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법무부는 아동전담검사 및 수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법원은 아동 성매수범 및 알선범을 엄중하게 처벌하며,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는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매매한 아동에 대해 예외 없이 피해자로 대우할 것
- 교육부는 학교폭력 저연령화 따돌림,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책과 회복적 정의 방식의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상담사 배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것
- 교육부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징계가 금지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체벌금지 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

#### 반테러 조치(7, 9, 10, 14조)

9. 당사국은 “테러 행위”를 정의하고, 통신 개입·수색·구금·추방에 관한 규정이 규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며, 테러리즘 또는 관련 범죄의 용의자 또는 기소된 자와 관련하여 법적 안전장치와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하는 반테러 법률을 제정했는가

-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제정된 대테러 관련 법률은 없고 19 대 국회(2012~2016)에 총 5 개의 대테러 관련 법률이 계류 중임. (이 중 2 개는 사이버 테러 관련). 현재 계류 중인 테러 관련 법안은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대테러기구가 테러 자행 위험이 있는 단체의 지정과 해제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심인물에 대해서는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정보수집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음. 특히 사이버 테러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이미 회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들을 포함해 현재 계류 중인 테러 방지 관련 법안 모두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대테러업무에서 국가정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불법적인 대선개입<sup>232</sup>이나 민간인 사찰 등 권한 밖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시감독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

<sup>231</sup>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I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pp 76-77.

<sup>232</sup> More Investigation Required into State Agencies' Interference with 2012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18 December 2013, <http://bit.ly/1WMd21t>

대테러업무의 총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함. 또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집행기능까지 부여할 경우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 따라서 권한을 법률로 엄밀하고 정확하게 정의해야 함.

#### Suggested Recommendations

- 한국 정부는 모든 대테러 관련 법적 조치가 자유권 규약에 합치하도록 할 것
- 감청, 수색, 구금, 추방 등과 같은 국내 법규가 자유권 규약에 엄격히 부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 대테러 관련 법적 조치가 시민들의 자유권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제장치를 마련할 것. 특히 이와 관련하여 국정원의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인 절차 및 조치를 마련할 것.

### **생명권, 그리고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 (2, 6, 7, 9, 10조)**

10. 특히 청소년과 여성의 높은 자살률을 다루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 효과를 보고할 것. 사형제를 사실상 폐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명기할 것.

- 1997 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지만 정부는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2010 년 법무부 장관은 사형집행시설의 추가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것이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함.<sup>233</sup>
- 1996 년 이후 국회에 발의된 사형제 폐지 법안은 모두 7 건인데,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하나도 없고 모두 국회의원이 발의했음. 지난 2015 년 7 월 6 일 국회의원과 과반수인 172 명이 공동으로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중임. 그러나 2016 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함.
- 자살률은 2000 년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해 왔음. 인구 10 만 명당 자살자수는 2012 년 현재 28 명에 이르며, 이는 2000 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임. 특히 20 대와 30 대의 경우에는 자살이 사망원인 1 위를 차지하고 있음.<sup>234</sup>

#### Suggested Recommendations

<sup>233</sup> Justice Ministry to Pursue Protective Custody System and Execution in South Korea, The Hankyoreh, 17 March 2010, <http://bit.ly/1NJB1cp>

<sup>234</sup> Suicidal Rate, Statistics Korea, <http://bit.ly/1NJB1Jx>

- 사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사형제를 폐지하고 지속적인 사형집행 시도 및 여론몰이를 중단할 것
- 사형제가 생명권에 반하는 형벌 제도임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인식 제고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할 것
- 자살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정부가 취한 자살예방 관련 정책의 효과에 대해 검토해 양적, 질적 통계와 함께 제시할 것

## 11. 다음의 사항을 명기할 것.

### (a) 형법상 고문이 개별범죄로 범죄화 되고 있는지 여부

- 정부는 고문의 유형이 형법 124 조, 125 조 등 형법 및 특별형사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4 차 정부보고서 para. 118). 사전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는 형법 제 124 조(불법체포, 감금), 제 125 조 (폭행, 가혹행위) 등을 그 구체적인 처벌규정이라고 주장함. (para. 11-1)
- 그러나 형법 규정은 고문방지협약 상 고문에 비해 범위가 훨씬 좁음. 고문방지협약에는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로 주체가 넓은 반면 형법에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혹은 이를 보조하는 자”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고문방지협약에는 정신적 고통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형법에는 체포, 감금,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로만 한정되어 있음.<sup>235</sup>

### Suggested Recommendations

- 고문방지협약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종류의 고문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 혹은 개정할 것. 법률 제정, 개정 시 고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것

### (b) 고문과 학대 혐의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통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sup>235</sup> Criminal Code Article 124(Unlawful Arrest and Unlawful Confinement): 1) If a person who performs or assists in activities concerning judgment, prosecution, police or other functions involving the restraint of the human body, arrests, or imprisons another by abusing his official authority, 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 for not more than ten years. 2) Attempts to commit the crimes specifi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punished. Article 125 (Violence and Cruel Act) : A person who in performing or assisting in activities concerning judgment, prosecution, police, or other functions involving the restraint of the human body, commits an act of violence or cruelty against a criminal suspect or against another person while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 for not more than 10 years.

- 정부는 사전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절차와 권한에 따라 권고를 하고, 검찰의 경우 감찰 전담 검사, 혹은 감찰 전담 검사가 수사하며 경찰청은 고문 등 혐의가 있는 경찰관 소속경찰관 소속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수사를 하도록 한다고 답변함(para 11-2).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나 고발, 징계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이고<sup>236</sup>, 수사, 기소 처벌은 경찰, 검찰,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sup>237</sup>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양천경찰서에서 경찰들이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기 위해 머리 등을 때리거나 화장지, 수건 등을 입에 넣거나, 얼굴에 플라스틱 테이프를 붙이거나, 두 팔을 등 뒤로 하여 손목에 수갑을 채운 후, 팔을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행위(소위 날개꺾기) 등의 고문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 중 팀장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5년,

<sup>236</sup>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rticle 44 (Accusation and Recommendation of Disciplinary Action): (1) If the Commission deems that there occurred any violation of human rights or discriminatory act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any petition, it may recommend the respondent or the head of the organ or organization to which he/she belongs or the supervisory institution there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itution to which the respondent belongs") the matter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Implementation of remedial measures under subparagraphs of Article 42 (4); and 2. Rectification or improvement of any relevant Act and subordinate statute, institution, policy or practice. (2)The provisions of Article 25 (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o which the respondent belongs, who has received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rticle 45 (Accusation and Recommendation of Disciplinary Action): (1) If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any petition, the Commission deems that the contents of the petition correspond to an act of crime against which a criminal punishment is required, it may file an accusation to the Prosecutor General: Provided, That in case the accused is the military personnel or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service, the accusation may be filed to the Chief of General Staff of the armed forces to which the said accused belongs or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2) If it is deemed that there occurred any violation of human right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any petition, the Commission may recommend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respondent or any other person responsible for the same violation to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o which he/she belongs. (3) The Prosecutor General, the Chief of General Staff of the armed forces or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ho has received an accus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terminate the criminal investigation within 3 months after being so received and notify the Commission of the results thereof: Provided, That he/she shall, if failing to do so within 3 months, clarify the reason therefor. (4)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o which the respondent belongs, who has received recommendation from the Commission under paragraph (2), shall respect said recommendation and notify the Commission of the results of treatment thereof.

<sup>237</sup> Five police officers accused of torture by NHRCK, The Hankyoreh, 17 June 2010, <http://bit.ly/1fudPIO>

팀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팀원 1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음.

#### **Suggested Recommendations**

-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모든 주장들이 효과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하여 즉각적이고 철저히 조사될 것을 국내법 체계에 보장할 것.

#### **(c) 고문이나 학대의 용의자가 형법상 어떠한 조항에 의해 기소되고 어떠한 제재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정보**

- 정부는 정부보고서나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위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음. 정부는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형법 제 124 조, 제 125 조에 따른 2011년부터 2015. 5.까지의 기소사례 와 징계사례 를 답변하였을 뿐임 (사전질의서에 대한 정부 답변 para. 11-3).
- 정부는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2011 년부터 매년 1, 2 건의 독직폭행 등 기소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2011 년부터 2014 년 7 월까지 전국 지방검찰청의 독직폭행 접수 건수가 992 건, 904 건, 1,028 건, 617 건(1 월~7 월) 인 반면 기소율은 0.2% 내외에 불과함.<sup>238</sup>

#### **Suggested Recommendations**

- 고문과 학대의 용의자들이, 혐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철저히, 독립적으로 수사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
- 매년 고문과 학대 혐의 사례의 내용, 수사, 기소, 처벌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법집행기관에 대하여 고문과 학대를 방지하고 혐의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고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강력히 기소,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것
- 법집행기관에 고문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d) 징벌처분으로서의 독방감금, “보호장비”(수갑과 머리보호장비 포함)가 응징적 목적이 아닌 보호적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되어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법적 안전장치, 그리고 당사국 보고서(CCPR/C/KOR/4) 121항에 언급된 “현대적 보호장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또한 이러한 보호장치가 사용되기에 앞서 고려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보고할 것**

- 징벌(disciplinary punishment) 중 88%는 가장 가혹한 징벌인 금치(독방감금 solitary

<sup>238</sup> 전해철 의원실 자료. 2004~2014 년 전국지검과 부산지검의 독직폭행 현황 비교



confinement)로 집행되고 있음.<sup>239</sup> 또한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에 포함된 외부 위원도 교도소 소장이 임명 혹은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징벌결정 절차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움.<sup>240</sup>

- 보호장비는 보호적 목적이 아니라 응징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특히 형 집행 과정에서 수갑(manacles)과 머리보호장비(head protection devices) 등 동시에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 일을 초과해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등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sup>241</sup>
- 정부는 보호장비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보호장비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없이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러나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교도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보호장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는 존재하지 않아 악용의 소지가 있음. 보호장비를 사용하기에 앞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규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 **Suggested Recommendations**

- 금지(독방감금) 외에 법률에 규정된 다른 징벌 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금지 위주 징벌 관행을 개선할 것
- 보호장비가 응징적 목적이 아닌 보호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 관행을 개선할 것.
-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벌, 특히 둘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과 장기간 보호장비의 사용을 중지할 것.
- 보호장비를 사용하기에 앞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13. 군대 내 폭력과 학대를 방지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행위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공정한 수사, 가해자 심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기재할 것.**

<sup>239</sup> The Ministry of Justice report submitted to MP Gi-ho Suh (Justice Party) during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 2013.

<sup>240</sup>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11 조 제 2 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 인 이상 7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장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 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 인 이상으로 한다.

<sup>241</sup> 2013 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

- 지난 10 년 간 매년 평균 71 명의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자살은 군 사망 사고 원인의 58.3%로 1 위를 차지함.<sup>242</sup> 국방부는 2014 년 4 월 한 달에만 육군 장병 3,900 여명이 구타가혹행위에 연루되었다고 발표했고 2013 년에는 17,987 건의 구타가혹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발표함.<sup>243</sup>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임.
- 2010 년부터 2014 년 상반기까지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3,337 건 중 실형(징역형)을 선고 받은 건수는 50 여건으로 전체의 1.5%에 그침. 2010 년에는 12 건, 2011 년에는 15 건, 2012 년에는 9 건, 2013 년에는 14 건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4 년 상반기 중에는 398 건의 폭행·가혹행위 중 단 한 건도 실형을 받지 않았음.<sup>244</sup>
- 성범죄의 경우 2009 년부터 2010 년 사이 총 336 건의 성범죄가 신고 되었으나 이 중 52%만이 기소되었고 그마저도 장교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 0%임.<sup>245</sup>
- 국방부는 2014 년 연이은 군내 사건<sup>246</sup>으로 각종 대책을 도입했다고 밝히나 실효성은 의심됨. 예를 들어 국방헬프콜의 경우 이미 존재하던 다중의 전화신고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며 2014 년 한 해에만 14,700 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나 상담회선은 8 개에 불과하고 인원도 13 명에 불과함. 2014 년 군 인권예산도 전체 국방비의 0.0005%에 불과함.

### Suggested Recommendations

- 군대 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가 인권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국방감독관제를 도입할 것
- 군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들에게 구제 방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 가해자들을 철저히 조사할 것

## 신체의 자유와 안전,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대한 처우, 그리고 공정한 재판 (9, 10, 14, 24조)

<sup>242</sup> Situation of Accidents and Deaths in the Military, Statistics Korea, <http://bit.ly/1EddEHp>

<sup>243</sup> Military identified 3,900 violences in the military in April only (Korean), The Segye Ilbo, 3 August 2014, <http://bit.ly/1LuH86i>

<sup>244</sup>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ort submitted to MP Young-gyo Suh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during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 2013.

<sup>245</sup> Situation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20 August 2014

<sup>246</sup> Soldiers jailed over South Korea bullying death, The BBC News, 30 October 2014, <http://bbc.in/1NJBCMy>, Harassment of female Korean soldier ends in suicide, Aljazeera, 7 November 2013, <http://bit.ly/1NJBUIy>

14. 구금을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범죄혐의로 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신속하게 재판관 또는 여타 법적으로 사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자 앞에 설 권리가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되는가. 또한 허용 가능한 미결 구금 기간의 길이에 대하여 기재하라.

- 경찰이 현행범 등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후 최대 48 시간 동안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음.<sup>247</sup> 이 경우 최대 48 시간 동안 피의자는 사법적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앞에 설 권리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지는 않음.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체포되어 있는 48 시간 내에 체포적부심 신청과 법원의 판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높지 않음.
- 체포 후 48 시간 내에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관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함. 만약 구속영장이 48 시간 내에 청구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는 즉각 석방되어야 함.<sup>248</sup>
- 군인의 경우 영장 없이 최대 15 일까지 '영창'에 구금이 가능함. 그러나 이는 재판과정이 배제되고 형사적 적법절차가 부정된 상태에서 구금이라는 사실상의 형사적인 제재임. 군인은 군인사법 58 조에 따라 징계의 일환으로 영창에 구금될 수 있으며<sup>249</sup> 영창 처분의 여부는 법관이 아닌 상급 군인들로 구성된 징계권자에 의해 결정됨.<sup>250</sup>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만 18 세 이상 성인 남자가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역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군대에 복역하는 동안 군인사법에 따른 '영창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임.
-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미결구금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미결구금기간 산입규정"이 없어 제 1 심 재판에 따른 미결구금일수가 최종재판에 따른 구금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바, 항고가 인용되기까지 미결인 상태로 소년원에 수용되는 기간이 평균 약 53 일에 이름.<sup>251</sup> 한편 소년구금시설 내 인권보호를 위해 공개된 지침이 없으며, 2010 년 한 해에 새로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소년 중에 개방처우를 경험한 비율은 4.16%에

<sup>247</sup>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0-4(1) & 200-4(2)

<sup>248</sup>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0-2(5) Arrest with Warrant: Where an arrested criminal suspect is to be detained, a warrant of detention shall be requested pursuant to Article 201, and if such request for the warrant of detention is not made within 48 hours from the time of arrest, the criminal suspect shall be released.

<sup>249</sup>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Article 57 (2)(2) (Kinds of Disciplinary Measures): The term "detention in a guardhouse" means detention in a guardhouse in a military unit, a ship or other detention facilities for a period shall not exceed 15 days.

<sup>250</sup>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Article 58(Persons with Authority over Disciplinary Measures):

<sup>251</sup> 전해철의원 대표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5. 4. p8

불과함.<sup>252</sup> 또한 2014 년도 소년미결수용자의 95% 정도가 전국 43 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분리 수용되어 있어 「최저기준규칙」 제 85 조 제 2 항의 이행수준이 미흡함.<sup>253</sup>

-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에 입국하자마자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됨.<sup>254</sup>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조사 결과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강제 출국조치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행방을 알 수 없음. 또한 수용기간은 시행령에 따라 장기 6 개월까지 구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sup>255</sup> 실제 수용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수, 현황 등 조차 파악되지 않아 실제 몇 명이 어느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음.

### Suggested Recommendations

- 긴급체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긴급체포가 남용되어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또한 피의자가 체포 즉시 자동적으로 체포 적법성에 대해 법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협약 제 9 조에 따라 피의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
- 군인 징계의 방법 중 하나인 '영창제도'를 폐지할 것
- 소년범에 대한 미결구금이 필요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년법」에 미결구금기간 산입규정을 신설할 것.
- 소년구금시설 내 인권보호를 위한 공개된 지침을 마련하고, 소년에 대한 개방처우를 확대 실시할 것.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구금실태를 조사 및 공개하고, 비구금화 등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sup>252</sup> 법무부 소년보호통계 '신수용인원'과 제 4 차 국가보고서 '개방처우 대상 인원'을 비교하였음

<sup>253</sup>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14. p85

<sup>254</sup> Convictions Deal Blow to South Korean Intelligence Service, The New York Times, 28 October 2014, <http://nyti.ms/1NJBLj5>

<sup>255</sup>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임시 보호 등의 내용): ① 법 제 7 조제 3 항에 따른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보호신청 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로 한다.

②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제 1 항에 따른 조사는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 1 항에 따른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15. 망명신청 아동을 포함하여 추방명령을 받은 자의 구금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관점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가. 또한 이러한 구금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법적 검토가 규약 9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 설명할 것.

- 구금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관점에서 취해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조치는 전무함. 2009. 12. 29. 법개정으로 인해 3 개월 이상의 구금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으나,<sup>256</sup> 실질적 심사 없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음. 자진해서 구금을 해제한 사례는 내부적으로 승인상신 일자를 초과하여 보호를 해제한 사례 1 건<sup>257</sup>을 제외하고는 법 개정 이후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음.

|              | 국제적<br>(자유권 규약)           | 입법기준 | 한국<br>구속제도                          | 형사절차상 | 출입국관리법상<br>보호제도   |
|--------------|---------------------------|------|-------------------------------------|-------|---|
| 구금의<br>개시    | 행정청의 청구                   |      | 행정청(수사기관)의 청구                       |       | 출입국관리공무원<br>의 신청  |
| 구금여부<br>결정주체 | 판사의 '구금의 필요성'<br>심사후 구금결정 |      | 판사의 '구금의 필요성'<br>구속영장실질심사 후<br>구금결정 |       | 출입국관리사무소<br>장의<br>결정(강제퇴거명령<br>만 발령되면<br>구금의 필요성<br>심사 無) |
| 구금의<br>연장    | 행정청의<br>청구(자동연장x)         |      | 행정청의 청구(자동연장x)<br>구속기간연장신청          |       | 사실상 자동연장<br>(법무부장관의<br>사전승인 형해화)                          |
| 구금여부<br>연장주체 | 판사의 '구금계속의<br>필요성' 심사후    |      | 판사의 '구속기간 연장의<br>필요성' 심사후           |       | 법무부장관(구금계<br>속의 필요성 심사                                    |

<sup>256</sup> Immigration Control Act Article 63(2) (Internment of Persons in Receipt of Deportation ORders, or Release from Internment): When the period of internment exceeds three months in cases of internment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Immigration Service shall first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every three months.

<sup>257</sup> 해당 조항이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3 개월 이상 장기구금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에 의해서 구금이 해제된 것은 오로지 2012 년도 1 건 외(外) 전무하며, 다 공개되진 않았으나, 2012 년에 있었던 1 건 마저도 위 조항의 취지대로 “구금 계속의 필요성”이 없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해제된 것이 아니라, 매 3 개월마다 있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승인절차의 날자를 ‘하루 초과한 것’에 대해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자 보호를 전격해제한 것임.

|              |                         |                                    |  |
|--------------|-------------------------|------------------------------------|--|
|              | 연장결정                    | 구속기간연장허가                           | 無, 단지<br>강제퇴거명령<br>집행이 지연되는<br>사유만 소명)               |
| 구금기간<br>의 상한 | 입법되어야함                  | 수사단계 : 최장 30일,<br>재판단계 14월         | 없음   |
| 불복방법         | 청구에 따라 판사에게<br>다툼 기회 보장 | 청구에 따라 판사에게<br>다툼 기회 보장 :<br>구속적부심 | 신청에 따라<br><b>법무부장관</b> 에게<br>다툼 기회 보장 :<br>보호에 대한 이의 |

### Suggested Recommendations

- 무기한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63 조 1 항을 개정하여 구금의 상한선을 제시할 것.
- 외국인의 구금이 자유권규약 9 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통하여 구금을 개시하고, 정기적 사법 심사로 인한 구금의 합법성 검토를 도입할 것.

당사국이 무연고아동을 포함한 망명신청아동 또한 구금에 대한 정기적이고 신속한 검토 없이, 그리고 부적절한 시설에서 구금한다는 보고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 이러한 구금에 대하여 비구금적 대안을 제공하고 구금이 최소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써의 경우에 한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할 것.

- 2012.1.부터 2015.6. 까지 113 명의 아동들이 구금되었으며, 그 중에는 3 살 남아가 30 일 동안, 그리고 2 살 여아가 81 일 동안 구금된 경우도 있었음.<sup>258</sup> 이러한

<sup>258</sup>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익법센터 어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18 세 이하 이주아동 구금 통계 (2012.1~2015. 6)

| 나이        |             | 성별 (성별기재) | 구금기간          |
|-----------|-------------|-----------|---------------|
| 1 세 : 2 명 | 11 세 : 2 명  | 남: 63 명   | 하루 미만: 1 명    |
| 2 세 : 4 명 | 12 세 : 2 명  |           | 1 일 : 20 명    |
| 3 세 : 7 명 | 13 세 : -    |           | 2-5 일 : 53 명  |
| 4 세 : 6 명 | 14 세 : 1 명  |           | 6-10 일 : 25 명 |
| 5 세 : 3 명 | 15 세 : -    |           | 11-15 일 : 3 명 |
| 6 세 : 5 명 | 16 세 : 18 명 | 여: 50 명   | 16-20 일 : 3 명 |
| 7 세 : 4 명 | 17 세 : 56 명 |           | 21-25 일: 4 명  |

구금은 출입국관리법 상 아동이 구금되는 경우 최소기간 최후의 수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구금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당국은 이에 대하여 비구금적 대안의 제공 혹은 최소기간 최후의 수단으로 구금을 하는 것이 아닌 구금 시, 담당공무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sup>259</sup>

**Suggested Recommendations**

- 예외없는 아동 비구금 원칙을 법제화 할 것
- 아동에 대한 비구금적 대안 방안을 마련할 것

**16. 본 위원회의 이전 권고(CCPR/C/KOR/CO/3, 14항)와 관련하여, 당국이 여전히 심문 중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명기하고, 만약 제한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제한의 근거와 규약 9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부합하는지 설명할 것.**

**1) 변호인의 심문참여 제한**

- 정부는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형사소송법 제 243 조의 2(제 1 항)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9 조의 2(제 1 항)에 비추어 피의자 조사 시에도 변호인의 접견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변호인의 참여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제한이 규약 9 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부합한다고 답변함(para. 16-1)
- 그러나 ‘신문 방해’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의 요건이 불명확하고, 수사절차가 당사자를 추궁하여 자백을 받는 것에 의존하고 있어서

|            |            |  |                             |
|------------|------------|--|-----------------------------|
| 8 세 : 1 명  | 18 세 : 1 명 |  | 26-30 일: 1 명                |
| 9 세 : 1 명  |            |  | 한 달 이상: 3 명                 |
| 10 세 : 1 명 |            |  | (각 1 월 26 일, 81 일, 4 월 9 일) |

<sup>259</sup> 2015 년 6 월 15 일 개정된 외국인 보호규칙 제 4 조 제 4 항은 “소장은 1 개월 이상 보호하는 18 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그 아동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이어지는 제 5 항과 제 6 항에서는 “(제 5 항) 소장은 법 제 56 조의 3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19 세 미만자 포함)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보호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또한 “(제 6 항) 제 5 항에 따라 지명된 전담공무원은 해당 보호외국인을 2 주일에 1 회 이상 면담하여야 하며, 면담 결과 방배정, 교육, 운동, 급식, 진료 등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문서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진술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을 들어 신문 방해라고 주장하며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함.

- 또한 형사소송법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음.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 243 조의 2 제 3 항). 따라서,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는 할 수 있지만, 피의자신문 중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신문내용 전체에 대하여 조언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9 조의 2 제 4 항<sup>260</sup>,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 16 조의 2'<sup>261</sup>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 18 조의 2' 등에,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중에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피의자의 답변이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

<sup>260</sup>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검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 243 조의 2 제 3 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sup>261</sup> 제 16 조의 2(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 243 조의 2 제 1 항에 규정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 1 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 243 조의 2 제 3 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경우, 피의자신문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 등에는 변호인의 '참여' 자체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

- 심지어 정부는 수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조력을 한 부분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종용하였다거나 진술거부권을 조력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변호인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하기까지 함.

#### 법무부의 인권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사건<sup>262</sup>

법무부는 2014. 말 인권 변호사들에 대하여 징계 개시를 신청하였는데, 그 중 김인숙 변호사는 2014. 4. 16.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건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을 조언했다는 혐의로,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 사건의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설득하였다는 혐의를 내용으로 함.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하여 장 변호사가 거짓진술을 종용했다고 볼 수 없고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의자 등에게 부여된 권리이며, 변호인이 피의자 등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이 진실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함.

#### Suggested Recommendations

- 변호인이 묵비권 행사 여부,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여부, 답변 내용 등 모든 내용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수사 참여권을 보장할 것.
-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수사참여권을 배제하는 사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정기적으로 법 집행 공무원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권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 변호인의 접견권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음을 형사소송법 등에 명백히 규정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9 조의 2 제 1 항,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 16 조의 2 제 1 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 18 조의 2 제 1 항을 개정할 것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9 조의 2 제 4 항,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 16 조의 2 제 4 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 18 조의 2 제 4 항을 삭제할 것

<sup>262</sup> Prosecutors picking a fight with progressive lawyers group, The Hankyoreh, 6 November 2014, <http://bit.ly/1JrGRdq>

## 2) 인천국제공항의 출국 대기실에 구금된 사람 중 망명신청자를 제외한 외국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거절되었다는 정보

- 송환대기실의 구금이 위법하다는 판결 이후, 당국은 2014. 10.부터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는 개방형 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실제로 송환대기실의 운영 자체를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시설로 바꾸었다는 것이 아니라, 입국불허자들에게 송환대기실 이용신청서라는 것을 사전에 징구하여 동의 하에 구금되는 것을 감수하거나 송환대기실 밖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것을 강요받는 형식을 도입했다는 것임. 변호인 접견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면회가 허용되지만, 그 외에는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상태임.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5. 8.에도 6 개월 째 한 번도 나가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있음.
- 현재, 송환대기실은 이처럼 명백한 구금시설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그 자체로 음식과, 거주공간 자체의 처우가 열악할 뿐 아니라, 임시상륙허가를 받는 방법 외에는 의료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자비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진찰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Suggested Recommendations

- 송환대기실의 운영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송환대기실 내 외국인, 특히 장기구금이 예상되는 불복절차중인 난민신청자들에 처우를 개선하라.
- 입국이 거절되어 송환대기실에 구금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라.

17.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이민자 구금시설에서의 구금환경 개선, 구금시설 외부의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소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2010년 2월에 제정되고 교정시설이 민사, 행정, 또는 가정소송으로 인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구금자로부터 사전에 호송차량 연료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와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개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1)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 정부는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para. 43)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3 개소를 신축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현재도 교도관 인원 부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수용거실이 많다는

수용자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 1 인당 적정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무부 예규인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교정시설 별 수용정원 산정기준이 있을 뿐인데. 그 기준<sup>263</sup> 역시, 다른 법률이 정하는 1 인 기준 면적,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시설의 기준<sup>264</sup>, 경찰서 유치장의 기준<sup>265</sup>, 주택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sup>266</sup> 등에 비하여 수용자 1 인당 면적이 너무 좁으며, 그나마도 위 수용정원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2010 년 기준으로, 전체 수용정원 대비 수용률이 111%이고, 개별 교정시설에 따라서는 161.5%(부산구치소)에 달하기도 함.<sup>267</sup>

### Suggested Recommendations

- 수용자 1 인 당 적정 면적을 법률에 규정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수용 정원 이상을 수용하는 과밀수용 관행을 개선할 것

### 2) 이민자 구금시설에서의 구금환경

- 2007.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호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55 명 중 10 명 사망, 17 명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음. 이후에도 외국인 보호소의 구금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3-2014 대한변협에서 최초로 독립적인 민간주최 구금시설 처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형사구금이 이뤄지는 교도소보다 이주민 구금시설이 더 열악한 환경이며, 별다른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징벌적 성격이 강한 독거실의 자의적 운용, 성소수자 보호 시스템의 부재, 외부와의 통신 제약, 열악한 질의 지급 물품, 보호소 근무 직원 부족 및 용역 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의 부재, 부적절한 급식 및 운동시간 미확보로 인한 건강권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음.<sup>268</sup>
- 또한, 정부는 전문 의료인력이 보호소 내에 상주하고 있다고 하지만 (para. 189),

<sup>263</sup> △독거실 1 실당 1 명 △혼거실 2.58 m<sup>2</sup>당 1 명 △장애인 혼거실 3.3 m<sup>2</sup>당 1 명(신축예정시설의 경우 4.3 m<sup>2</sup>당 1 명) △외국인 수형자, 여자수용자 및 직업훈련 수형자 혼거실 3.3 m<sup>2</sup>당 1 명, △병수용동 혼거실 4.3 m<sup>2</sup>당 1 명

<sup>264</sup> 1 인당 3.3 m<sup>2</sup> 이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sup>265</sup> 5 인실은 1 인당 3.6 m<sup>2</sup>(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 10 조 제 2 항)

<sup>266</sup> 1 인 가구 14 m<sup>2</sup>, 6 인가구 1 인당 9.2 m<sup>2</sup>(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490 호)

<sup>267</sup>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0.4.21, 27 쪽

<sup>268</sup> 대한변호사협회,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15.2.

실제로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보호소 내에 배정되어 있으며, 피구금자가 외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일반의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전문의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피구금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심리 및 정신과 서비스가 전무한 상태임.

#### **Suggested Recommendations**

- 외국인보호소 내 피구금자에 대하여 정신과 진료를 포함한 전문의의 진료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이주민 구금시설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제시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외국인보호소 내의 환경을 개선할 것

### **3) 구금시설 외부의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소자의 접근권**

- 구금시설 외부의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용자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외부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제 37 조, 제 38 조) 내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는 사실상 자비부담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특히 가난한 수용자가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경우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로 2004 년부터 2013 년 7 월까지 10 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자 227 명 중 37.4%에 해당하는 85 명의 수용자들이 치료 등을 위하여 형(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sup>269</sup>
- 정부는 2015 년 6 월부터 원격의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실질적으로 구금자들이 면대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증진해 나가야 함.

#### **Suggested Recommendations**

- 구금시설 외부의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용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는 사실상 자비부담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할 것

### **4) 소송 수용자 출정 비용 징수**

- 법무부가 2010 년 2 월 제정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sup>269</sup> 2013 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

지침'이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음. 출정비용 징수제도 도입 1 년째인 2011 년 2 월 법무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전체 출정건수 약 1,400 여건에 수용자가 청구당한 금액이 5500 만원으로 출정 1 건당 약 4 만원이 청구되었음. 같은 시기 영치금이 1 만원 미만인 수용자의 수는 전체의 10%가 넘는 5,800 여명에 이르렀음.<sup>270</sup> 정부는 사전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para. 45)출정비용 징수 제도가 민사, 행정, 가사 등 수용자가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소송에만 적용되며,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용자를 출정시킨 후 영치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가난한 수용자들은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출정하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 이 제도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교도소가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를 해당 법원에서 먼 다른 구금시설로 이송하여 더 많은 출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음.

#### Suggested Recommendations

-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을 폐지할 것

#### 5) 구금된 트랜스젠더

- 현재 한국의 교정시설에는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어떠한 처우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교정시설에 입소한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성별에 맞는 속옷의 반입을 거부당하고, 외관을 꾸미는데 제한을 받는 등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그 뿐 아니라, 자신의 성별에 부합하는 행동을 취할 때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음.<sup>271</sup>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용자의 건강 및 의료 처우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제 30 조) 하지만 트랜스젠더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지원적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sup>270</sup> 접수번호 1264173 등

<sup>271</sup> The court ruled the government should compensate a transgender detainee who tried to hurt himself (Korean), The Hankyoreh, 1 January 2011, <http://bit.ly/1NJBZ9O>, The court ruled that punishing a transgender detainee who refused to have a haircut is illegal (Korean), The Hankyoreh, 2 October 2014, <http://bit.ly/1NJC5yp>

### Suggested Recommendation

- 정부는 교정시설 내 트랜스젠더 처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내의 트랜스젠더 의료접근권을 향상하여 교정시설 내부에서도 개인의 성별정체성이 존중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 노예제와 노예상태의 철폐(8조)

18. 형법상 “인신매매”의 법적 정의가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지 명기할 것. 이주민을 강제노동, 착취 및 학대에 노출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고용주의 허가를 통해서만 직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허가제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제한을 다루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기재할 것. 다음에 대한 조치를 보고할 것.

(a) 특히 이주노동자, 한국인 장애남성, 매춘 혐의로 체포된 자 등 취약계층에 속한 인신매매 피해자 파악의 개선

(b) 2013년 언론과 비정부기구 등에 의하여 보고된 사안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에 있어서 정부의 공모 혐의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c) 농업 이주노동자 와 대한민국 국적 어선의 선상 이주노동자에 대한 위협, 신체적·성적 괴롭힘 및 폭력, 과도한 근무시간 및 주간 휴일 부재, 저임금 지불, 비인도적인 대우, 부적절한 수용시설 및 식량 등을 포함한 강제노동 및 착취 의심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d) 강제매춘 또는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하여 예술행행비자(E-6)와 국제결혼 브로커가 위장으로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수사와 기소의 수, 개정된 형법에 따른 실제 유죄선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 또한 일부 장애인을 포함한 수백명의 한국인 남성이 염전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진 혐의에 대하여 2014년 3월에 착수한 수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할 것.

형법상 “인신매매”의 법적 정의가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지

- 팔레르모 의정서는 인신매매의 정의에 있어서 착취의 목적과 수단, 이동 방법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 형법 상<sup>272</sup> 인신매매의 정의는 착취의

<sup>272</sup> 형법제 289 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목적에 대해서만 나열할 뿐, 인신매매의 수단 및 이동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인신매매죄의 신설로 삭제된 ‘부녀 매매죄’의 매매의 해석례에 따르고 있음. 그런데 법원은 부녀매매에 대하여 강제력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대가관계에서 핵심을 찾고 있기 때문에<sup>273</sup> 팔레르모 의정서 상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전혀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됨.

- 예를 들면, 개정된 형법의 인신매매 조항에 의하여도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같이 강제 노동 등 의도한 착취에 대해 형식상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실력적 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역시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죄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Suggested Recommendation

- 형법 상 인신매매의 정의가 팔레르모 협약 상의 인신매매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

**이주민을 강제노동, 착취 및 학대에 노출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고용주의 허가를 통해서만 직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허가제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제한을 다루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기재할 것.**

-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 혹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사업장변경사유<sup>274</sup>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장을 변경 할 수 있음. 변경할 수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 3 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sup>273</sup> “부녀매매라 거래 일방인 매도자가 그의 완전한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처럼 대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서 본죄의 성립여부는 매도인이 매매 당시 부녀자를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는가 여부 즉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폭행의 위협 등의 험악한 분위기로 인하여 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 신체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대법원 1992.1.21. 1. 선고 91도 1402)

<sup>274</sup>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 조 1 항 : 외국인근로자(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있는 경우에도 즉각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을 통해 사업장 변경을 해야 함.

-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 횟수는 3 년 동안 3 회를 넘어갈 수 없고,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지 1 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변경 신청을 한지 3 개월 이내에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sup>275</sup>

#### **Suggested Recommendation**

- 고용허가제로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

#### **(a) 특히 이주노동자, 한국인 장애남성, 매춘 혐의로 체포된 자 등 취약계층에 속한 인신매매 피해자 파악의 개선 (identification)**

- 현재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로 파악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보호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특히 이주민 피해자들은 오히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명령 대상자가 되어 구금 및 강제퇴거를 당하여 구제책 접근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
- 2014년에는 폭행 및 폭언을 견디지 못한 베트남 선원 2 명이 사업장 이전을 요청하면서 출입국 당국에 도움을 구했으나 오히려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를 당하였음. 2015년에는 예술 비자(E-6 비자)로 입국하여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된 여성들이 단속으로 인해 성매매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음. 이 여성들은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기소되어서는 안되고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심지어

---

2. 휴업, 폐업,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 20 조제 1 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sup>275</sup>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 조 4 항 : 제 1 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 18 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 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 18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 1 항제 2 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업주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구금을 당하였음.

-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를 마련하지 않아, 이에 2011 년과 2012 년에 연근해와 원양 어선에서, 2014 년에 염전과 농축산업에서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장애인들에 대한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되지 못하였으며 보호받지 못함.

#### **Suggested Recommendations**

- 인신매매피해자 파악을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기관 전체에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들, 특히 출입국관리 공무원 및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 **(c) 농업 이주노동자 와 대한민국 국적 어선의 선상 이주노동자에 대한 위협, 신체적·성적 괴롭힘 및 폭력, 과도한 근무시간 및 주간 휴일 부재, 저임금 지불, 비인도적인 대우, 부적절한 수용시설 및 식량 등을 포함한 강제노동 및 착취 의심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 2013 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가적인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릴 뿐 아니라 욕설, 폭언, 폭행, 성폭력 등 다양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음.<sup>276</sup>
-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휴일, 숙소 등의 개선을 요구할 때 대부분 거절하며, 이에 반발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이들에게는 경찰이나 출입국에 신고해 불법으로 만들거나 추방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음.<sup>277</sup> 특히 근본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63 조로 인하여 근로시간 제약 등에 대하여 적용을

---

<sup>276</sup> 2013 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76%가 욕설이나 폭언을, 15%는 폭행을, 11%는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sup>277</sup> 고용주들의 이러한 대응은 종종 집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한 시설채소 작목반 소속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갈 경우 위약금을 내야하고, 근무태만이나 결근 시 벌금을 내야하며, 근로연장수당은 기숙사 사용비용으로 상쇄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과 폭행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다가 고용주가 합의해주지 않아 이탈을 결심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해당 고용주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른 고용주들과 그 가족들이 경찰과 출입국 직원 수십 명을 불러 체포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받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sup>278</sup>

- 2011 년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한국 원양선사에 고용되어 뉴질랜드에서 조업을 하다가 임금체불, 성폭행, 물리적인 폭행, 가혹한 노동조건과 차별 등을 견디지 못해 탈출한 사건이 있었으나, 성폭행과 물리적인 폭행을 한 사람들은 모두 기소가 중지되었고, 원양선사는 처벌 받지 않았으며, 관리업체만 문서위조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음.
- 연근해의 경우에도 외국인 어선원들이 높은 송출비용과 어선에서의 폭행과 임금체불 그리고 이탈을 막는 보증금, 여권과 통장 압수 등으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를 당한다는 취지의 연구보고가 2013 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Suggested Recommendations**

- 근로기준법 63 조의 개정을 통하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할 것.
- 관련부처간 협조를 통하여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이 구조적으로 겪고 있는 임금체불, 성폭행, 물리적인 폭행, 가혹한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법 및 정책을 개정할 것.

#### **(d) 강제매춘 또는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 이주여성의 인신매매 대하여 예술행행비자(E-6)와 국제결혼 브로커가 위장으로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 법무부는 그 동안 E-6-2 비자가 필리핀 이주 여성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만드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특히, 법무부는 E-6 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예행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para 142), E-6-2 비자를 보유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필리핀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sup>278</sup> 근로기준법 제 63 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 5 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정부는 특히, 필리핀 해외노동청(Philippines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으로부터 해외취업증서(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를 받지 않은 채 한국에 입국한 여성들의 경우 인신매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법무부는 OEC 와 무관하게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인신매매 발생에 기여를 하고 있음.

### Suggested Recommendations

- E-6-2 비자 발급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OEC 를 받은 자에게만 비자를 발급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 과정을 강화할 것
- 예술행비자(E-6)와 결혼이민비자(F-6)가 강제매춘 및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며, 비자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 인신매매 피해자의 체류권 및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것.

###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수사와 기소의 수, 개정된 형법에 따른 실제 유죄선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대한 정보

-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는 성매매 전반에 대한 통계로서 팔레르모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2013 년 개정된 형법에 마련된 인신매매 조항에 대한 통계가 아님. 새로운 인신매매 조항은 자세한 정의조항의 부재로 극소수의 사건만이 적용되어 기소 및 유죄판결로 이어지고 있음. 법 조항 신설 이후로 2015 년 6 월까지, 단 6 건 만이 기소 및 유죄판결<sup>279</sup>로 이어짐.
- 위 사건들에서 유죄확정을 받은 피의자들은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에 대하여 성매매를 위해 금품지급을 하고 매도하고 매수한 사람들로서, 그 전 인신매매 조항 이전에 존재하던 부녀매매죄로 처벌되던 사항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신설된 인신매매 조항은 협약 정의상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염전 강제노동

- 2015. 8. 현재까지 2014 년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하여 진행된 20 건의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은 6 건에 불과함.<sup>280</sup>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그나마 실형이 선고된 사건 중에서도 인신매매 조항으로 기소

<sup>279</sup> 2014 도 4451, 2014 노 776, 2015 노 167.

<sup>280</sup> 2014 노 1953, 2014 노 1770, 2014 노 248, 2014 노 273, 2015 노 410, 136(병합), 2014 노 2699

및 처벌이 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 인신매매와 가장 유사한 약취, 유인죄의 경우 본인의 판단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이 되지 않고 있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따라서 염전으로 간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약취,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음.<sup>281</sup>

- 도서지역 염전에서 장애인 착취 문제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부재로 인하여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 실제로 사건 발생 1 년 후인 2015 년 4 월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신의도에서 구출하여 조력한 63 명 중, 13 명만이 소재가 파악이 되었으며, 20 명은 섬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음.<sup>282</sup>

##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17조)

19. 외국인, 재소자, 군인에 대한 의무적인 HIV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보고와 병원에서 환자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검사를 진행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하여 견해를 밝힐 것.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규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에 부합하는지 설명할 것.

### 1) 의무적인 HIV 검사 관련

- 정부는 군인<sup>283</sup> 과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며,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하여 혈액 채취 전 본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하며, 외국인 중 90 일 이상 체류자 중에서 영어회화강사에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HIV 검사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답변함(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para 19). 정부는 군인과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단체생활 중 감염의 우려, 영어회화강사의 경우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중보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 답변함.
- 그러나 2015 년 3 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정시설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사람에게는 건강진단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고<sup>284</sup>, 법무부 지침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 3 조 제 5 항은 신입자 건강진단의 내용에

<sup>281</sup> 2013 고합 353

<sup>282</sup> 세상으로 돌아왔던 '염전노예' 세상에서 버림받고 돌아갔다 (Korean), 서울신문, 8 April 2015, <http://bit.ly/1NJCocj>

<sup>283</sup> 軍, 입영신검 대폭 강화... 혈당검사 등 11 개 항목 추가 (Korean), 국방일보, 17 February 2014, <http://bit.ly/1NEZ2m5>

<sup>284</sup>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6 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소장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신입자는 제 2 항에 따라 소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HIV 테스트를 포함<sup>285</sup> 하고 있어 수용자들에 대한 HIV 강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임.

- 정부는 영어회화강사(E2 비자, 회화지도)의 경우 외에도, E7 비자(특정활동, 외국인학교 등 교사 직종)에 대해서도 2014. 4. 1.부터 HIV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sup>286</sup>, F2 비자(거주) 발급대상자도 HIV, 성병, 정신질환 진단을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함.<sup>287</sup> 외국인에 대한 HIV 검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입국과 체류 자격을 거부할 수 있는 제재를 수반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검사임.

## 2) 사전동의 없는 HIV 검사 관련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검사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HIV 검사의 경우 실제 동의 없이 검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음. 또한 의료인들 사이에 감염 관련 비밀 누설들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음.

A씨는 2012년 다른 질병 치료 차 찾아온 환자 B씨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혈액검사 중 HIV 검사를 실시하고, HIV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정확한 HIV 검사를 위해 수술을 미룸. A씨는 당초 B씨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부했던 다른 병원 의사에게 "B씨의 HIV 수치가 높게 나왔다. 다른 곳에서 수술을 받겠다며 돌아갔는데 당신 병원에 찾아갈 수 있으니 참고하라"고 말함.

이에 대해서 1심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제7조 비밀누설금지)로 유죄를 선고(그마저도 벌금 20만원을 선고유예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함.

### Suggested Recommendations

- 외국인, 군인,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HIV 강제검진을 즉각 폐지할 것.
- 병원에서 수술 전이나 질병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 도중 HIV 검사를 하게 될 경우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

<sup>285</sup>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 3 조 제 5 항: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할 보건소 또는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실시한다.

<sup>286</sup> 회화지도자격 채용신체검사서 관련 변경 사항 알림, <http://bit.ly/1NEZd0R>

<sup>287</sup> 결혼동거 목적 거주 건강검진서에 대한 안내, <http://bit.ly/1NEZkcW>

20. 개인적인 통신(인터넷, 전화, 이메일, 팩스를 통한 통신 포함) 및 데이터의 감시, 감청, 분석, 사용 및 저장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의적인 침해에 대한 현존하는 법적 안전장치, 그리고 그의 실질적인 준수 현황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 다음의 활동들이 어떻게 규약 17조와 부합하는지 설명할 것.

(a) 주장에 따르면 참가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집회 범위 내 모든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수집하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

(b)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어떠한 규제도 없이 정보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름, 개인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한 사용자의 정보 제공

(c) 전화사, 통신사 및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각 6개월, 12개월, 3개월간 사용자의 통신 데이터 저장

(d)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조종하거나 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사용가능한 기능을 통제하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되어지는 프로그램의 사용 또한 통신사들이 “감청 가능(wire-tap ready)” 장비를 구비하도록 요구는 개정안을 채택하였는지 여부를 명기할 것.

- 실시간(live) 커뮤니케이션과 그 통신사실확인자료(metadata, 정부는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라고 표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율하고 있음. 통신제한조치(wiretapping, 정부는 communication-restricting measures 라고 표현)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각률<sup>288</sup>은 매우 낮아 충분히 통제되고 있지 않음.
- 한국의 감시상황은 감청(wiretapping), 통신사실확인(metadata acquisition), 통신자료제공(subscriber identifying information) 모든 면에서 양적으로 과도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sup>289</sup>. 특히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위치정보의 제공에 남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

<sup>288</sup>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지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3,922건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감청) 청구서(document)에 대해 3,746건을 발부하고 176건을 일부 또는 전체 기각하여 4.49%의 기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고등법원은 정보기관이 청구한 45건의 국가안보를 위한 내국인 대상 통신제한조치(감청) 청구서에 대해 42건을 발부하고 3건을 일부 또는 전체 기각하여 6.67%의 기각률을 보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법원의 통제를 받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지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492,414건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metadata) 제공 청구서에 대해 467,883건을 발부하고 24,531건을 일부 또는 전체 기각하여 4.98%의 기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고등법원은 정보기관이 청구한 64건의 국가안보를 위한 내국인 대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청구서에 대해 58건을 발부하고 6건을 일부 또는 전체 기각하여 9.38%의 기각률을 보였다. 대법원 사법연감 참고. <http://bit.ly/1laFQFR>

<sup>289</sup> Communications Surveillance in Korea, Park Kyung Sin, <http://bit.ly/1NJCDEq>

2014년 4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실시간위치정보’ 제공의 요청은 여기에 더하여 모든 수단을 다 써본 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음.

- 한편, 송수신이 완료된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제공되는데 당사자 및 그 통신 상대방에 대한 통지권과 당사자 참여권 보장이 부족함.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수색의 경우 집행 이후 특정시한까지가 아니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통지 시점을 매우 늦추게 됨은 물론, ‘내사’ 등의 사유로 장기간 통지가 유예되는 경우가 있음. 최근 한국 정부가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스파이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남.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가정보원의 통신 수사를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감독할 체계가 부족함.

#### (a) 참가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집회 범위 내 모든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수집하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

- 한국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집회 장소 주변의 무선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히는 모든 휴대전화 내역을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이 사실을 알린 2010년 4월 2일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는, 기지국수사란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였음.<sup>290</sup> 2011년 검찰은 야당인 민주통합당 집회에 대하여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한다며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기지국 수사를 실시하여 659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입수하였고, 취재차 이 집회에 참여하였던 한 기자가 2012년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사 중임. ‘수사상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 제공되는 기지국 정보는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집회시위의 권리도 위축시킴.

---

<sup>290</sup> 약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한국에서 기지국수사 건수는 38,706,986 건(2010년), 36,800,375 건(2011년)으로 무척 과도하였고 인권단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2012년 이후 점차 줄어들어 24,831,080 건(2012년), 15,245,487 건(2013년), 9,786,752 건(2014년)이 실시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09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협조 현황”, 2010. 4. 2.를 비롯해 정부의 보도자료와 정보공개 종합.

**(b)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어떠한 규제도 없이 정보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름, 개인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한 사용자의 정보 제공**

-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법원의 심사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사업자들이 보유한 성명,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가입자 정보 (subscriber identifying information, 정부는 communications data 라고 표현)를 정보·수사기관에게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특히 이는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이용자를 사찰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sup>291</sup> 2014 년 2 월 10 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 허가를 받아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허가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c) 전화사, 통신사 및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각 6개월, 12개월, 3개월간 사용자의 통신 데이터 저장**

-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 시행령 제 41 조 2 항<sup>292</sup>에 의해, 모든 가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유선전화 사업자는 6 개월, 이동통신 사업자는 12 개월, 인터넷 사업자는 3 개월 동안 각각 보관해야 함. 그렇지만 모든 국민의 모든 자료를 보관하도록 국가가 의무화 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해 광범위하고 특별히 심각한 침해할 수 있음.<sup>293</sup>

**(d)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조종하거나 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사용가능한 기능을 통제하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되어지는 프로그램의 사용 또한 통신사들이 “감 청 가능(wire-tap ready)” 장비를 구비하도록 요구는 개정안을 채택하였는지 여부를 명기할 것.**

- 학생들의 휴대전화 제한 정책이 학생들의 사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sup>291</sup> 2013 년 9,574,659 건의 가입자 인적 사항이 제공되었다는 것은 매일 전국에서 26,232 명의 정보가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50,219,669 명의 인구를 보유한 한국에서 전체 19%의 국민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 년 철도 파업 당시에는 경찰이 체포대상 노동자의 통화상대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3~400 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이동통신사로부터 법원의 허가없이 제공받은 후 그들에게 연락하여 관계를 캐묻기도 했다.

<sup>292</sup>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 41 조 2 항

<sup>293</sup> "It entails a wide-ranging and particularly serious interference with the fundamental rights to respect for private life an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without that interference being limited to what is strictly necessary", The Court of Justice declares the Data Retention Directive to be invalid,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8 April 2014, <http://bit.ly/1U85tDy>



2014년에는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에 접근을 통제하여 학생의 위치 확인, 사용 가능한 기능 통제, 데이터 열람까지 가능한 '아이스마트키퍼'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음. 더 나아가 2015년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에서는 청소년 사용 이동통신에 음란물 차단수단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그 삭제여부를 '확인'하여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음.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이 법을 빌미로 하여 부모감시기능이 있는 앱을 홍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십만 명의 청소년들은 부모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휴대폰사용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앱이 깔린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수사기관을 위한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19대 현 국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현행법은 휴대전화 감청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2005년 불법감청 사실이 드러나서 정보기관 스스로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였음.<sup>294</sup> 정부는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며 이동통신사와 SNS 사업자 등 정부가 지정하는 모든 통신사업자에 감청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오랫동안 주장하여 왔으나, 국정원은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구비가 없어도 감청을 할 수 있도록 2015년 이탈리아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스마트폰을 해킹한 사실이 드러남. 기업들에게 자기 통신망을 '감청 준비' 상태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는 "씩씩이 감시 조치를 촉진하는 환경을 낳기 때문에" 특히 우려스러움.

### Suggested Recommendations

-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때의 요건을 강화할 것.
-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전기통신압수수색에 대한 통지가 수사종료 후 특정기한 내가 아니라 감시행위 종료 후 특정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국가정보원의 감청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 정보·수사기관이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요건을 강화할 것.

<sup>294</sup> 사전질의에 대한 정부보고서 답변 para. 20-7

NIS accused of purchasing powerful program to monitor smartphones, The Hankyoreh, 13 July 2015, <http://bit.ly/1U86rzs>

- 모든 통신 가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는 제도에 대하여 재고할 것.
- 통신회사나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원격 통제하는 정책 시행을 중지할 것.

## **양심과 종교적 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8, 19, 21, 22조)**

21. 본 위원회의 이전 권고(17항)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의 도입에 있어서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 또한 병역거부자의 성명을 인터넷에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법안의 상황에 대하여 보고할 것.

- 한국 정부는 4 차 보고서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어려움을 인식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para. 267) 여론조사 외에 별다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
- 한국 정부는 2008 년 병무청의 발주로 수행된 대체복무제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도입에 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지만 오로지 여론조사만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거부했음. 또한 여론조사 결과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은 결과도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sup>295</sup>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부정적으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을 이유로 제도 도입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인권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여론에 의거해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인권보호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임.
- 안보위해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관해서도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특별한 불이익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sup>296</sup>한 바 있음
- 2014 년 말 병역기피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한 것은 이미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형사처벌에 더해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받도록 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음

### **Suggested Recommendations**

- 병역거부권을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내재된 인권으로 인정하고 민간 복무 형태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포함해 제반 법규를 정비할 것

<sup>295</sup> 2013 년도 11 월 한국 갤럽에서 실시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힘.

<sup>296</sup>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3 November 2006 (Communications Nos. 1321/2004 and 1322/2004), UN Doc. CCPR/C/88/1321-1322/2004, para 8.4

- 민간 복무 형태의 대체복무제도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병역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
- 과거에 양심에 따른 신념 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모든 사람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배상을 할 것
-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 및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신상공개 제도 시행을 전면 재검토할 것

**22. 종교를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이 종교적 행사 또는 종교 수업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서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편성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강제력이 없어 배정받은 사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강요받는 경우가 빈번함.<sup>297</sup> 종교계 사립학교의 58.1%는 종교교과가 개설되어 있다고 했고, 그 중 61.1%가 종교 교과 수강 선택 시 자유가 없다고 밝힘. 또한 종교계 사학의 60.8%는 입학식, 졸업식에서 언제나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있다고 함.<sup>298</sup>

**Suggested Recommendation**

-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과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것.

**23. 인터넷 콘텐츠를 차단할 목적으로 “공익에 대한 위해”나 “허위 정보”와 같이 모호하게 정의된 개념을 사용하는 정부 산하 기관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인권옹호자에 의한 공익성 정보의 유포를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형사기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하여 견해를 밝힐 것. 또한 명예훼손의 광범위한 정의를 개정하고 그를 비범죄화하며,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무원복무규정」을 포함한 법 및 규정의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

-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이유로 다른 법 혹은

<sup>297</sup> 한국의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선택이 아닌 교육당국의 배정에 의해 학교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공립학교와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

<sup>298</sup>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동법의 다른 조항들을 적용한 수사 및 기소가 계속되고 있음.<sup>299</sup> 특히 2014 년 4 월 16 일 수학여행 중이던 고등학생을 포함해 304 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경찰, 검찰, 대통령은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형사적으로 대응해 왔음.<sup>300</sup>

- 2015년에는 메르스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크게 늘자 법무부·검찰·경찰이 앞다퉀 “ 메 르 스 괴담 엄단하겠다”며 나섰다. 정부산하 행정심의회기관 방통심의위원회가 관련 인터넷 게시물 심의를 맡았는데 2015년 6월 11일 열린 이 기관의 회의에서, 경찰청이 접속차단을 의뢰한 메르스 관련 게시물 6건 중 5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등 정부 비판적 내용이었음.<sup>301</sup>
-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정부에 대한 비판 및 의혹제기가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 또는 제소되거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유명사례들이 총 48건에 이른다.<sup>302</sup> 이처럼 정부 비판 인터넷 의견에 대해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하거나 행정심의회기관을 통해 삭제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함.

#### Suggested Recommendations

- 정부 산하 기관이 인터넷 콘텐츠를 차단할 목적으로 “공익에 대한 위해”나 “허위 정보”와 같이 모호하게 정의된 개념을 사용하여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sup>299</sup> 2011년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의 대기 유입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한국 정부는 “한국 영토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 유입 불가”를 공식화하였고, 경찰은 관련된 논란을 다룬 외국 방송 내용을 소개한 인터넷 게시자 1명을 입건하였다. 서울 근교에서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실제로 발견된 후 해당 게시자가 형사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관련 인터넷 토론이 위축되었다. 2011년 7월에는 서울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자 경찰이 여당 소속 전 서울시장을 비판한 게시자들을 수사하겠다고 밝혀 관련 토론 또한 위축되었다.

<sup>300</sup> 경찰은 참사 직후인 4월 23일 ‘세월호 괴담’ 엄정 대처 방침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해경과 현장책임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유언비어 87건을 적발하는 한편 1,038명의 사이버 경찰을 동원하여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선정한 악성 유언비어 중 상당수가 정부의 구조실패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며, 해경이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잠수부들의 수색을 막았다거나 산소 주입이 거짓이라는 주장은 후에 사실로 드러났다. 또, 7월에 세월호 실질 선주 유병언씨가 갑작스레 사망한 채 발견되자, 경찰은 사망 원인에 대한 경찰의 공식 발표와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허위사실로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사이버 공간에서 본인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였고 이후 검찰은 공인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에 ‘선제적으로’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전문 <http://bit.ly/1IaNaBa>

<sup>301</sup> 메르스 괴담 수사한다더니 대통령 비판에 집중, 미디어오늘, 12 June 2015, <http://bit.ly/1IaNJUJ>

<sup>302</sup> Crisis of Seditious Libel in Korea, Park Kyung Sin, <http://bit.ly/1NJCSz8>

인권옹호자에 의한 공익성 정보의 유포를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UN 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일반논평 34 호에 부합하게 모욕죄(형법 제 311 조)를 폐지하고, 진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며(형법 제 307 조 제 1 항), 허위에 대한 명예훼손죄에서 자유형을 삭제할 것.

### 「공무원복무규정」을 포함한 법 및 규정의 개정

- 정부는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para. 23-3)에서 국가공무원은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공무원의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개정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은 헌법 제 7 조 제 2 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조항을 통해 이미 직무상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더불어 집권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는바 복무규정 개정<sup>303</sup> 등을 통해 직무와 관계없이 공무원 개인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금지하고 있는 것은 규약을 위반하는 것임
- 또한 이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sup>304</sup> 과 국제노동기구 권고<sup>305</sup> 를 통해

<sup>303</sup>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2010.7.15]>

제 1 조의 2(근무기강의 확립) ① 생략

② 공무원(제 8 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 1 조의 3(복장 및 복제 등) ① 생략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 1 조의 2 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2011.7.4]>

제 3 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생략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 3 조제 3 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의 2(복장 및 복제 등) ① 생략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 3 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④ 생략

<sup>304</sup> 2008.5.29 헌법재판소 2006 헌마 1096 결정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을 밝혔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우려<sup>306</sup>를 표명한 바 있음

- 2009 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정국 당시 6 월 시국선언, 7 월 13 일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싶습니다' 신문광고 및 7 월 19 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국민대회' (휴일집회) 참석 등을 이유로 노조간부 16 명 형사고발, 105 명 징계요구하였고, 대부분은 경징계 처분되었고 당시 위원장을 포함한 4 인에 대해 배제징계처분 (파면 1 명, 해임 3 명)
- 2010 년 1 월 25 일 공무원 등 290 여명에 진보정당(구,민주노동당) 소액후원을 이유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검찰 기소, 같은 해 6 월 258 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 결정, 2011 년 1 월 정당법 위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 만원~50 만원 벌금형, 경징계 처리
- 2011 년 6 월 또 다시 271 명에 대하여 진보정당(구, 민주노동당) 월 1 만원 소액후원을 이유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기소, 정당법 위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50 만원 벌금형, 경징계 처리
- 2015 년 5 월 공무원연금법 개악 등에 맞서 진행된 4.24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를 이유로 임원 및 본부장등 18 명에 대한 형사고발 및 앞의 18 명을 포함한 노조간부 총 32 명에 대해 중징계 추진 중

#### Suggested Recommendations

- 공무원에게 시민으로서 부여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치활동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금지하고 있는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포함한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공무원의 일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24. 본 위원회의 이전 권고(18항)와 관련하여, 특히 7조를 비롯하여 「국가보안법」에 포함된 개념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동법이 규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국가보안법」에 따른 금금과 기소 건수가 2008년 이래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법이 당국의 정책에 대한

<sup>305</sup> '공무원노동조합은 폭넓은 경제적·사회적 정책 문제들에 대해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ILO Governing Body, 353rd Report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GB.304/6, 2009.3, para. 749

<sup>306</sup> E/CN.4/1996/39/Add.1, 1995.11.21, paras 34~36. A/HRC/17/27/Add.2, 2001.3.12, paras 76, 80, 100

비판적 의견 표현을 포함하여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하여 견해를 밝힐 것. 또한 「국가보안법」 7조에 의거하여 북한 이데올로기의 찬양과 전파 혐의로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한 기소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당 정당의 해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의 제약

-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2015. 1. 22. 대법원은 ‘혁명동지개’를 제창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 국가보안법 제 7 조를 위반(2014 도 10978)하였다고 결정했음.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국가보안법 7 조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합헌으로 결정(2012 헌바 95)하고 관련조항이 확대해석과 법해석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재확인했음. 이는 자유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 대검찰청(Supreme Prosecutor’s Office)의 2015 년 자료<sup>307</sup>에 따르면 2008 년 이래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 및 기소한 건은 상당한 증가추세에 있음. 2014 년의 수치의 감소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므로 유의미한 감소추세로 간주할 수 없음. 따라서, 질의목록 24-1 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언급된 통계는 바르지 않음.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Number of people who are investigated       | 46   | 57   | 97   | 90   | 112  | 129  | 57   |
| Number of people who are indicted and tried | 32   | 43   | 52   | 63   | 89   | 94   | 54   |

-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매개로 정부와 다른 정치적 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가진 인권옹호자를 포함한 개인과 시민사회단체, 정치정당을 표적삼아 자유로운 의견의 표출과 교환을 자의적으로 제약했음. 특히, 구체적 위험성이 없음에도

<sup>307</sup> 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사범, Statistics Korea, <http://bit.ly/1NJD9IL>

불구하고 북한의 정책 및 주장과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고 활동하는 것을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오고 있음. 박정근(Jeong-geun Park)은 북한 정부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리트윗해 게시내용을 퍼트리거나 이적표현물을 링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2012)되었고 1 심에서 유죄판결, 2 심에서 무죄, 최종심에서 무죄확정판결(2014)을 받았음. 사실 그의 행위는 북한정부를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음. 유엔 ECOSOC 협의지위에 있는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사건의 정부공식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로 조사(2010)한 바 있음. 마지막으로, '새시대 교육 운동'을 결성한 전교조 소속 교사 4 명은 이적단체 구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북한관련 서적을 보유한 것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로 유죄를 선고(2015)하였음.

- 한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석기(강연자)와 경기도당 위원장 김홍열(사회자)을 비롯한 몇몇 전현직 간부들을 포함한 총 6 명<sup>308</sup>은 2013. 5. 12. 다른 전현직 간부들 130 여명과 함께 정세강연회에 참가하였음. 이석기는 강연에서 2013.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으로 북미간 긴장관계가 고조된 사실을 근거로 한반도에서 미제국주의 주도의 지배질서가 붕괴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대격변기로 평가하였음. 이어서 이석기는 이러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참석자들에게 필승의 신념으로 갖고 물질기술적 준비체계를 갖추자고 촉구하였음. 이석기는 강연에서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피하고 참여자들의 소규모 그룹토론을 하게 했음. 이석기와 김홍열을 제외한 4 명은 전 참가자 앞에서 소규모그룹토론의 결과를 발표했고 그 내용 중 일부에 전쟁의 발발시 철도 및 통신시설의 파괴가 언급되었음.
- 검찰은 정세강연회를 소위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 130 여명이 모여 북한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한 내란을 음모하였다며 이석기를 비롯한 6 명을 기소하였고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음. 2015. 대법원은 검찰의 내란음모 주장에 무죄를 선고하고, 이석기와 김홍열에게 내란선동죄의 유죄와 6 인 모두에게 국가보안법 제 7 조 1 항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및 동조 5 항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취득)의 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였음.
-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서, 우선, 대법원은 5. 12.의 정세강연회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sup>308</sup>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이석기,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즉 북한의 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7 조 1 항 위반으로 판결했음. 또, 위의 6 명 중 2 명이 진행한 사상학습을 한 사실을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한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며 7 조 1 항 위반의 유죄를 선고했음. 나아가 혁명동지가 제창을 이적동조로 7 조 1 항 위반으로 보았고, 6 명 모두에게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취득의 7 조 5 항 위반의 유죄를 선고하였음.

- 아울러, 정부는 국가보안법 제 7 조를 검열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온라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해 왔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제 44 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의 제공자와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게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14 년 경찰청에서 발간한 '2014 국보법 적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9 년부터 2014 년 8 월까지 게시물 작성자 및 관리자는 206,404 건을 삭제했음.

#### **Suggested Recommendations**

- 국가보안법을 전면(in its entirety) 폐지할 것.
- 지나치게 폭넓고 모호한 조항인 제 7 조를 우선적으로 폐지할 것.
- 국가보안법 제 7 조로 사실상 검열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 조 7 항 1 호와 8 항('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을 폐지할 것

#### **통합진보당 해산**

- 2014. 12. 19.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선고하고 소속 국회의원 5 명의 의원직을 박탈했음.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당헌에 드러난 목적이 아닌 숨은 목적을 추구하는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으며 폭력적 수단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았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내린 결론임. 통합진보당의 합헌성을 판단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했고 이로 인해 증거의 인용(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및 입증책임에 있어

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음. 또, 헌법재판소는 진행중인 재판에 제출된 증거는 헌법재판소 심리에 사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 32 조를 위반했음. 통합진보당 해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5 월 모임(May meetings, 이석기를 포함한 6 명에 대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의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계류 중이었고 대법원에서의 증거 채택여부가 최종 결정되기도 전에 모든 증거가 현재에 인용되었음.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not necessary) 자유권 규약 22 조를 위반한 판결임. 첫째, 해산이 필요한 강력한 이유(compelling reasons)가 없었음. 통합진보당은 폭력적 수단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고 시도한 적도 없으며 선거를 통한 집권을 추구해온 바, 민주적 기본질서나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협을 지니지 않았음. 또한 일부 당원들의 개별적인 행위나 주장에 대해 통합진보당 자체가 책임질 의무는 없으며 개별적인 행위나 주장도 폭력적 수단을 통해 정치적 목적 달성하겠다는 행동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나아가 통합진보당의 일부 주장이 북한의 주장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협을 인정해서는 안됨.
- 둘째, 덜 침해적인 수단(less restrictive measures)이 가능했음. 정부가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의 위험적 활동은 모두 입법, 행정, 사법적 차원에서 대응했거나 대응이 가능했음.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나 선동을 주동했다면 국회 내 절차를 밟아 국회위원직 박탈이 가능하고, 검찰과 국정원은 언제든지 이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음.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주장하는 통합진보당 해산의 핵심적 근거였던 5 월 모임에서의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은 모두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 후 대법원은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
- 셋째, 통합진보당이 해산함으로써 미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의 냉각효과(chilling effect)는 우리 사회에 통합진보당의 지속적인 존재가 끼칠 위험보다 훨씬 큼.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판결 이후 정부를 비판하거나 대북정책을 포함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의 창설과 정치적 활동이 어렵게 되었고 나아가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음.

## Suggested Recommendations

- 자유권규약 22 조 (결사의 자유)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적용과 해석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을 재심할 것.

## 25. 언론인과 인권옹호자들이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인권 관련 사안과 공직자들의 부패와 같은 공익성 사안에 대한 보도를 포함한 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괴롭힘, 위협, 불법 감청에 처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견해를 밝힐 것.

- 정부는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언론인과 인권옹호자들이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했다고 해서 위협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sup>309</sup> 한국 정부는 평화로운 집회참여를 통해 정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는 인권옹호자들에게 업무방해죄(형법 314 조),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 조), 일반교통방해죄(형법 185 조) 등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해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음. 심지어 집회 현장이나 파업현장에 찾아가 지지 발언을 한 노동자에게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도 하는 등 연대할 권리 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음.
- 특히 정부는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시민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했음. 실제로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는 만큼 국가가 명예훼손죄, 모욕죄 혐의로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을 고소, 고발, 손해배상소송 등을 강행했다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거나 무죄 또는 배상책임없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이러한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인권옹호자들에게 chilling effect 를 가져옴.
- 또한 최근 국정원의 이태리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이 밝혀지며 인권옹호자 및 언론인들에 대한 사찰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의 구입이 연구목적 및 대북공작에 사용되었고 내국인을 상대로 한 사찰에 결코 사용된 적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핸드폰 통신 앱인 카카오톡과 삼성 핸드폰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는 점, 국내 블로그나 언론사

<sup>309</sup> In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 on the official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Special Rapporteur warns against the use of legislation to regulate, undermine or obstruct the work of defenders, and identified that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facing difficulties and challenges in doing their work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25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3 December 2013, A/HRC/25/55/Add.1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메일에 악성코드를 심자고 했다는 점을 볼 때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 2008 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의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한 한 기업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이 밝혀짐. 2012 년 3 월 30 일 KBS 새 노조는 2008 년부터 2010 년까지 3 년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기자, 활동가, 야당 정치인 등을 사찰한 내용이 담긴 문건 2,619 건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음. 이러한 불법 사찰은 특히 노조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노조 집행부가 부당하게 체포당하고 해고당하기도 했음. 또한 이러한 사찰이 국무총리실 뿐만 아니라 군내 정보기관인 기무사도 한 것으로 밝혀졌음. 심지어 국무총리실은 2010 년 조사 당시 압수수색 1 일 전에 컴퓨터에 남아있는 증거를 없애기도 했으며 이 사실은 공익제보자에 의해 밝혀졌음. 국회는 민간인 불법사찰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책임자를 찾아내지도 못했고 사후 대책도 마련되지 않음.<sup>310</sup>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적으로 세월호 가족, 시민사회단체, 개인들이 함께 구성한 4.16 연대(Coalition 4.16 for the Sewol ferry disaster)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장이 지난 5월 17일 구속되어 8월 25일 현재까지 구속 중임. 주된 혐의는 일련의 4.16 1주기 추모 집회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폭력 행위를 조장했으며 "불법" 시위를 조장했다는 것임. 이에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박래군을 기소함. 그러나 박래군이 이러한 폭력 행위를 조장했다는 것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며 집회 당시 몇몇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추모 행사를 주최한 4.16연대의 공동운영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부당함. 박래군이 지난 30년간 인권활동을 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활동가라는 점, 4.16 연대의 공동상임운영위원장이라는 점, 각종 집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점을 본다면 박래군에 대한 무리한 구속 수사는 정부를 비판하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대표적인 탄압 사례라고 볼 수 있음. 이에 국제인권단체들이 박래군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함.<sup>311</sup>

<sup>310</sup> In South Korea Scandal, Echoes of Watergate, The New York Times, 9 April 2012, <http://nyti.ms/1U881BE>

<sup>311</sup> Release activists imprisoned for supporting Sewol Ferry demonstrations, CIVICUS, 23 July 2015, <http://bit.ly/1hhAjaV>, South Korea: Release human rights defenders seeking truth for Sewol Ferry disaste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21 July 2015, <http://bit.ly/1MF1M0n>

## Suggested Recommendations

-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법의 이름으로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
-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 적용을 중단하고 해당 법률을 폐지할 것
-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6. 다음을 포함하여 법과 관행에 따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의 행사 제한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 (a)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경찰의 사실상 허가제도

- 한국은 헌법 제 21 조 제 2 항에 따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집시법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sup>312</sup> 신고만으로 집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허용 여부가 경찰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사전질의서에 대한 정부답변 (para. 26-1)에서 신고만 해도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집시법은 보호대상을 '적법한 집회'로 국한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은 집회<sup>313</sup>, 절대적인 금지장소<sup>314</sup>와 금지시간을 위반한 집회<sup>315</sup>, 교통소통을 위한 주요 도로에서 집회금지과 제한<sup>316</sup> 등을 위반한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고 있음. 특히 경찰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집회나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 집시법에 따른 사전 제약(금지·제한 통보)하고 사후 처벌함.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기 보다는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는 것에

<sup>312</sup> "The Special Rapporteur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ensure the right of all individuals to freedom of assembly and peaceful demonstrations, as a collectiv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by refraining from any de facto practices of prior approval in violation of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17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HRC/17/27/Add.2, 21 March 2011, para. 96

<sup>313</sup> 2인 이상이 하는 1인 시위, 플래시몹,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시법 6조 1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다. 경찰이 만든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 따르면, 2인 이상이 하는 1인 시위, 플래시몹,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은 '평화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집시법 상 미신고 불법집회이므로 해산명령 등 엄정대응 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sup>314</sup> 집시법 11조에 따라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국회의장 공관, 국무총리 관저 등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

<sup>315</sup>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이후 24이후에 하는 시위는 처벌받고 있다.

<sup>316</sup> 집시법 12조에 따라 경찰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초점을 두고 있음.

**(b) 시위자를 상대로 한 일반교통방해에 관한 조항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법 314조의 적용**

- 경찰, 검찰, 법원은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교통정체를 유발한 집회시위를 형법 일반교통방해죄(형법 185 조)로 처벌하고 있음.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평화적인 집회'라 할지라도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징역 10 년 이하 또는 150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중범죄라는 것임. 경찰은 현장에서 집회참여자를 연행하기 보다는 채증을 통해 소환하여 조사·입건하고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300~500 만원)을 명령함. 이러한 권리제한의 경향성에서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법원은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입건하고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통계도 수집하고 있지 않음. 2008 년 촛불집회, 2011 년 한진중공업 조합원 지지 집회, 2014 년 세월호 집회 등 집회참여자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은 광범위함.

**(c) 시위 해산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촛불집회(2008)**

- 총 기소사건은 306 건이고 피고인 수는 945 명임.<sup>317</sup> 이들에게는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었음. 집시법 10 조 야간시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sup>318</sup> 과 대법원의 선고 이후 검찰은 24 시 이후 시위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지했고 사법부도 기계적으로 자정이 넘어 연행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음. 2008 년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평화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했을 뿐인데 단지 집회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소환되어 형사재판과 유죄선고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임.

**용산 철거민 농성(2009)**

- 철거 세입자 30 여 명의 농성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은 20 개 중대 1600 여 명과 경찰 특공대 99 명, 물대포 차량 4 대 등을 동원했음. 하루 종일 물대포를 쏘며 진압하다가 25 시간 만에 새벽에 대 테러 진압 목적으로 구성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하였음. 용산참사의 경찰진압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sup>317</sup> 2015. 7. 23 기준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집계한 것이다.

<sup>318</sup> 2014 년 3 월 27 일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 조 야간시위금지에 대해 자정 12 시 이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였다. 자정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24 시 이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다.

2010년 제 1차 전원위원(2010.2.9)회를 통해 “당시 경찰권 행사는 경찰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며 “경찰력 행사가 위법의 단계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음. 경찰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경찰지휘 책임자인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김석기)은 서면답변서만으로, 무혐의 처분 되었음.

### 쌍용 집단해고 항의시위(2009)

- 경찰은 공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3,000명 이상의 경찰기동대를 현장에 투입하였고 물대포, 사다리차를 포함한 약 30대의 차량 및 헬리콥터가 동원되어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의 취루액을 투하하였음. 또한 경찰은 테러진압부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등의 생명에 위해가 큰 무기를 사용하였음.

###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원 지지 시위 (2011)

- 경찰은 현장 연행과 이후 채증을 통해 536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했음<sup>319</sup>. 민간의 집계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벌금액수 총액이 최소 1억원에 이룸. 경찰은 송경동(희망버스 제안자)에게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 진압 장구 파손 등의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음.<sup>320</sup> 한편, 검찰은 송경동 등을 집회의 주최자로 기소했고 2심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세월호 참사 이후의 집회(2014)

- 2014.4~2015.7까지 경찰은 세월호 집회 관련해 539명을 연행하였고, 연행된 사람중 526명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 또한 2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중 1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sup>321</sup>. 또한 경찰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35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냄.<sup>322</sup> 세월호관련 집회시위 신고건수는 총 1,371건이며 이중 금지통고된 건수는 117건, 보완·제한통고는 14건임. 세월호 집회에 관한 경찰의 금지통고 비율은 8.5%로 2013년

<sup>319</sup> 경찰청, 『2012년 경찰백서』, 2012, 229쪽

<sup>320</sup>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1가소 2301267 판결. 송경동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sup>321</sup>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의원실 정보공개청구 자료

<sup>322</sup>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 정보공개청구 자료

전체 집회 금지통보 비율이 0.15%임을 감안하면 8 배 가량 높은 것임.<sup>323</sup> 2015 년 세월호 1 주기를 전후하여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향해 경찰은 차벽을 세우고 최루액이 섞인 물포를 사용하였으며, 대규모 연행을 하였음. 경찰은 세월호 1 주기 추모 집회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9000 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음.<sup>324</sup>

###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2005~2015)

- 한국전력은 신규 핵발전소 추진에 따라 대도시로 송전하기 위해 밀양 주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송전탑 건설 추진을 강행했음. 공사를 막는 주민들에 대한 한전 및 시공사의 폭력이 극심해지면서 2012 년 1 월 이에 항의하며 주민 1 명이 분신 자결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후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다가, 2013 년 5 월 공사 재개 시기부터 공권력이 동원되었음. 특히 2013 년 10 월 공사 재개 당시에는 하루 3,000 명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공사 현장으로 나 있는 모든 길을 봉쇄했고, 24 시간 경비를 서며 주민들의 현장 진입을 철저히 통제했음. 2014 년 6 월, 아직 송전탑이 들어서지 않은 4 곳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기까지 약 10 개월 동안 경찰병력 연인원 38 만명이 배치되었고, 그 비용으로 100 억원이 지출되었음. 현재 40 여 명의 주민들이 도합 1 억 원이 훌쩍 넘는 벌금형을 받으며 사법 처리되고 있음.

### 강정해군기지 반대 운동 (2007~2015)

-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를 막기 위해 평화롭게 저항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진압하기 위해 2011 년 8 월부터 2013 년 8 월 말까지 2 년 동안 연인원 약 20 만 2,620 명의 경찰력이 강정마을에 투입 됨.<sup>325</sup>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은 대부분 공사장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으며 경찰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리를 잡고 끌어내 머리를 다치거나 사지를 들고 옮기다가 떨어뜨려 부상을 입거나 발에 차이고 관절이 꺾이는 등 심각한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음. 2015 년 현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둔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210 여 명(중복포함)으로 총 53 건에 이르고 있음. 판결이 종료된

<sup>323</sup> 2013 년 전체 신고된 집회 139,812 건 중 금지통보된 집회는 203 건이다. 금지통보율은 0.15% 이다. [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whitepaper/사이버경찰청\\_2014\\_백서\\_5.pdf](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whitepaper/사이버경찰청_2014_백서_5.pdf)

<sup>324</sup> 경찰, 세월호 1 주기 추모집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예정, 조선일보, 14 July 2015, <http://bit.ly/1hhBp6t>

<sup>325</sup> 2013 년 국감 때 경찰청이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약 50 건의 형사사건으로 납부한 벌금은 1 인당 최소 15 만원에서 최대 천만 원에 달하며 전체 금액은 약 1 억 원 정도로 추산됨. 형사재판 벌금액은 경범죄와 과태료를 제외하고도 앞으로 2~3 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고 해군기지 시공사가 마을회장 등을 상대로 2 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과도한 벌금이 부과되고 있음.

### LGBTI 단체 등록 및 관련 집회

- 성소수자 인권 재단을 표방하는 비영리사단법인 '비온뒤무지개재단(Beyond the Rainbow Foundation)' 이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설립 신청 접수를 보류, 거부당했고 2014 년 11 월 법무부 인권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sup>326</sup> 하였으나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므로 한쪽에 치우친 주제라 허가가 어렵다" 라며 접수를 거부했고 2015 년 4 월 법무부는 법인설립 신청 불허를 통보했음.
- 2015 년 5 월 29 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The Organizing Committee of Korea Queer Festival, KQCF)는 6 월 28 일 일요일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거리행진'을 하기 위한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5 월 30 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KQCF)는 두 곳 모두에서 퀴어퍼레이드의 '거리행진'을 금지한다는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받았음.<sup>327</sup> '행진로의 일부가 선신고된 단체(동성애, 퀴어문화축제 반대 단체)의 행진로 4 개 장소와 경합이 되고,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하지만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집회 개최(6 월 28 일) 한 달 전(5 월 28 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5 월 20 일 홈페이지를 통해 6 월 28 일 집회 개최 건에 대해 신청 순번으로 집회를 접수 받는다는 공지를 하는 등 평화적 집회 개최의 자유를 침해함. 이에 서울행정법원 제 13 부(재판장 반정우 판사)는 6 월 16 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림. 법원의 결정에 따라 6 월 28 일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었고 거리행진은 진행되었음.

### (d) 집회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시위대의 이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으며 집회와 시위의 고립 및 차단을 목적으로 한 차별의 사용

- 도로행진을 막거나 집회 장소를 봉쇄하는 물리적 방법으로 경찰은 오랫동안

<sup>326</sup> South Korea refuses to incorporate gay group, Gay Star News, 11 February 2015, <http://bit.ly/1hhBxTu>

<sup>327</sup> South Korean Police Bans LGBT Pride, OUT, 1 June 2015, <http://bit.ly/1hhBLKr>

차벽을 활용해 왔음.<sup>328</sup> 차벽은 집회시위 장소 주변을 경찰버스나 다목적방패 차량을 이용해 빼곡하게 둘러싸는 방식으로 통행의 불편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차벽은 한국 경찰이 평화롭게 행진을 하는 참여자들을 손쉽게 고립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수단임. 또한 차벽은 시야와 음향을 가리기 때문에 집회를 차단시키는 효과를 가짐. 헌법재판소는 차벽설치에 관해 '위헌'결정을 하였음.<sup>329</sup> 그러나, 경찰은 차벽설치가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음. 26-4 관련해 차벽운용지침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니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임.

- 최근 한국 경찰은 4.18 세월호 집회에서 차벽트럭 18 대등 차량 470 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6 겹으로 시위대 저지선을 쳤고, 광화문으로 향하는 길목을 완전히 차단했음.<sup>330</sup> 세월호 1 주기 전후해 청와대로 향하는 서울의 주요 도로에는 계엄상태를 떠올릴 정도로 차벽에 의해 견고한 '장벽'이 만들어지기도 함.

####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투입

- 사전질의에 대한 한국 정부 답변 para. 26-3 관련해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고 있으며 필요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경찰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때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참여자들을 강제로 해산하기 위해서도 물리력을 사용함. 즉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거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포를 사용함. 경찰의 자의적인 물포 사용으로 집회참가자의 고막이 파열되고 뇌진탕을 경험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음.<sup>331</sup>

<sup>328</sup> 차벽은 2002년 미선이·효순이 촛불집회에서 등장했고 이후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컨테이너 차단벽으로 등장하였다. 그 이후 2007년 한미 FTA 집회, 2008년 광우병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2009년 서울시청광장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민추모집회, 2011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원 지지 시위(2011)에 차벽을 동원하여 전면적으로 봉쇄하였다.

<sup>329</sup> 헌법재판소는 차벽은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만 정당화(2009 헌마 406)”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판시하였다.

<sup>330</sup> 세월호 집회 '차벽' 위헌 논란...집회 주최측 헌소 방침 (Korean), 연합뉴스, 22 April 2015, <http://bit.ly/1hhChla>

<sup>331</sup> 이 사례에서 경찰은 도로에서 집회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포를 쏘았고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고만 했을 뿐 해산명령의 구체적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물대포' 피해 배상판결 나왔지만..., The Hankyoreh, 29 October 2014, <http://bit.ly/1hhCnj3>

- 또한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최루액을 넣은 분사기를 사용하고 있음. 최루액은 집회참가자들에게 기침, 호흡곤란, 구토를 일으키며 심한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김. 분사기는 위해성 장비인만큼 필요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경찰은 집회방해나 통제에 항의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기도 전에 사용하며, 심지어 경고방송조차 하지 않음.

#### **Suggested Recommendations**

- 경찰은 '적법한 집회'가 아닌 '평화로운 집회'를 존중, 보호할 것.
- 국회는 사실상 허가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집시법을 전면 개정할 것.
- 경찰, 검찰은 집회시위 참여자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로 입건, 기소하지 말 것. 법원은 집회참가자들을 형사적인 범죄로 처벌하지 말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 무죄를 선고할 것
-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차벽, 통행제한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
- 경찰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찰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를 할 것. 특히 진압복이나 조끼를 착용하더라도 경찰식별표시가 드러나도록 할 것.
- 법집행관들은 물포, 분사기 등 위해성 장비 사용을 사용하기 이전에 가능한 비폭력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것. 만약 물포, 분사기 등 유해성 장비를 사용할 경우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할 것.

**27. 본 위원회의 이전 권고(19항)와 관련하여, 법과 관행 모두에 있어서 고위 공직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참여에 대한 권리의 보장에 관한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명기할 것.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집합행위와 여타 합법적 조합 활동에 참여한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되었다는 보고에 대하여 견해를 밝힐 것.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인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명기할 것.**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정부의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 27-4 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규약이 해직교원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문제삼아 '노조아님' 통보를 하여 법상 노조 지위를 박탈함.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심이 진행 중이며, 노조가입대상을 정한 교원노조법 제 2 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 5. 28.

합헌결정을 하였음.

- 하지만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인정은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과거 정부산하의 기관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했던 사항임. 정부의 조치는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던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규약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지난 1996 년, 한국 정부가 OECD 에 가입하려고 하자 OECD 는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한국의 가입 승인을 유보하였음. 당시 OECD 는 복수노조 허용, 교원의 단결권 보장, 공무원 단결권 보장,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허용(자율결정) 등 9 가지 사항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는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후 OECD 에 가입할 수 있었음<sup>332</sup>. 또한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제 1 기 노사정 위원회(98.1.15.-98.2.9) 에서 ‘해고자,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인정’ 및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을 합의하였고, 제 2 기 노사정위원회(1998.6.3- 1999. 8. 3)에서는 ‘해고자,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가입’문제와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연동하여 논의 하였고, ‘해고자,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이 인정되면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가입’도 당연히 인정하기로 합의 하였음. 그리고 이로 인해 1999 년 1 월 6 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전교조가 합법적인 지위를 갖게 된 것<sup>333</sup>임.
-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및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후 노동부는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및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그리고 2012 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노동부는 (스스로의 직무유기로) 개정되지 않은 채 방기되어 온 교원노조법상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 금지 규정을 들어 전교조에게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라고 명령하고,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함.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정부는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 제 1-1 항 및 제 27-1~2 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5 급 이상 공무원에게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규약 제 22 조에 대한 유보를 유지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이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고 함

<sup>332</sup> 장신철, “OECD 한국 노동법 모니터링”

<sup>333</sup> 노사정위원회, “1998 년도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결사의 자유 유보는 5 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 금지 때문이 아니라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 등에 따른 것임. 또한 행정부 소속 985 만 공무원 중 민간의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1~3 급 고위공무원의 비율은 0.18%인 1,700 여명에 불과하고 4 급 중 무보직 서기관과 5 급 사무관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움. 한국 대법원의 판례 334 또한 사용자의 범주에 대하여 해당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5 급 이상의 노조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되지 않음
- 또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규약을 문제삼고 있는데 실제로 동 규약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13 년 노동부에 제출한 동일한 규약으로 2007 년 9 월~2009 년 10 월까지 합법노조로 활동한바 있음
- 더욱이 노동부는 공무원노조 규약 제 7 조 2 항의 단서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예측만으로 반려한 것은 행정관청으로서 서류상 심사를 통한 설립신고증 교부라는 본연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심각한 결사의 자유 침해임
-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 및 노동부의 과도한 권한남용 등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한국 법령을 개정토록 수 차례 권고<sup>335</sup>하였음에도 정부는 이행하지 않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경과

- 2009 년 10 월 20 일 해고자 4 명의 노조간부 활동을 이유로 설립신고 취소 및 대정부교섭권 배제, 노조 사무실 폐쇄, 단체교섭 중지, 체결된 단협 해지, 노조 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 통보
- 2009 년 12 월 1 차 설립신고 제출, 반려
- 2010 년 2 월 23 일~24 일 조합원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총투표를 개최하여 규약개정, 2 차 제출 하였으나 해고자 및 업무총괄자 8 인이 조합원에

<sup>334</sup> 2008 두 1387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1.9.8)

<sup>335</sup>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인정, 5 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 제한없는 단결권 보장 등을 1996 년 6 월부터 시정 권고 (ILO Governing body CFA Report No. 304, 306, 307, 309, 311, 327, 331, 335, 340, 346, 353, 363, 371) 및 2013 년 8 월 긴급개입 진행(ILO TUR 1-145/1-145-3)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2 차 반려

- 2012 년 3 월 26 일 3 차 설립신고 제출, 강령에 '정치적 지위 향상' 등 규약내용을 문제삼아 3 차 반려
- 2013 년 6 월 4 차 설립신고 제출, 노동부가 요구한 규약 개정을 완료하고 그것을 근거로 2 개월에 걸쳐 노정교섭을 진행하였고 설립신고를 약속하였으나 다시한번 해고자가 실제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약속을 파기하고 설립신고 4 차 반려

#### **Suggested Recommendations**

- 한국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즉각 인정하고,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토록 하는 국제노동기준과 국제기구권고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할 것.
- 자유권규약 제 22 조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즉각 철회할 것.
-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통보를 철회하고,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

### **아동의 권리(24조)**

28.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적절한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 부모 중 한 사람만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국이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기할 것.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의 출생등록은 한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만 가능함.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공식적 자료가 없으며, 난민 자녀, 무국적, 중국의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벌금부담, 한국 체류 미등록 자국민의 수를 줄이려는 대사관의 등록 거부 등을 이유로 자국 대사관에조차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어디에도 등록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으며, 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미 출생등록이 난민과 난민신청자, 비정규 이주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고,<sup>336</sup> 당사국의 법률이 그 영토 내에서 태어난 난민과 난민신청자 아동에게 법적 지위에 관한 증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음.<sup>337</sup> 또한 위원회는 한국은 아동권리협약 제 7 조에 합치되도록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없이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아동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음.<sup>338</sup>

- 그러나 당사국의 외국국적 혹은 무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음. 질의목록에 대한 대한민국의 답변(28-1)에서 언급한 출생등록에 대한 개선책은 대한민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외국국적자와 무국적자를 배제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포함하지 않음. 또한 당사국은 출생등록이 국적 취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외국국적 혹은 무국적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배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Suggested Recommendations**

- 당사국은 국적과 상관 없이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모두 출생과 동시에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
- 당사국은 무국적자를 포함하여 현재 출생등록이 되지 못한 아동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

---

<sup>336</sup> UN Doc. CRC/C/KOR/CO/3-4, 2 February 2012, para. 36.

<sup>337</sup> UN Doc. CRC/C/KOR/CO/3-4, 2 February 2012, para. 64.

<sup>338</sup> UN Doc. CRC/C/KOR/CO/3-4, 2 February 2012, paras. 37, 65.

## X. 쟁점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NGO 답변 (영문)

###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on the Republic of Korea NGO Submission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115<sup>th</sup> Session, 19 October 2015 – 6 November 2015

Submitted by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Network (83 NGOs)

#### Executive Summary

The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sations Network, composed of 83 human rights NGOs in the Republic of Korea, submits its report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for its review on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115th Session from 19 October 2015 – 6 November 2015. The Report is based on the List of Issues adopted by the Committee at the 113th Session from 16 March 2015 – 2 April 2015.

We note with concern that since the review of the 3r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2006,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country have largely deteriorated.

The Government has been silencing dissent with arrests, prosecutions, filing suits for compensation by applying various laws such as Obstruction of Business (Article 314 of the Criminal Act),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rticle 136 of the Criminal Act),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Article 185 of the Criminal Act), Defamation (Article 207 of the Criminal Act) and Insul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The number of prosecutions for viola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has been on the rise since 2008. Als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systemically manipulated public opinion by tweeting and writing comments online intervening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The NIS also purchased a programme from the Italian Hacking Team, which creates suspicions on its illegal surveillance of civilian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rregular workers, and migrant workers persists along with hate speech against sexual minorities. Nevertheless, the anti-discrimination act has not yet been enacte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military are also alarming, but no effort has been put in to resolve such issue. The annual number of conscientious objectors being imprisoned amounts to 600 per year and capital punishment has not been officially abolished.

Recommendations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from the 88th Session (CCPR/C/KOR/CO/3) have not been fully implemented. In the Government'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we note that the Government frequently provides enactment of laws and policies on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rather than an actual evaluation of implementations to see its processes and outcomes. Issues such as withdrawing reservations on Article 22, concerns on counter-terrorism related legislative measures, increas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political, legal and



economic sector, migrant workers, providing alternative servic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protecting rights of trade unions are repeatedly recommended from other UN human rights mechanisms such as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nd Special Procedures.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sations Network aims to inform the Committee's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 areas of concern highlighted here will be reflected in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 **Co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 within which the Covenant is implemented (Article 2.)**

**Issue 1** Please indicate whether there has been any progress in reviewing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the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the Covenant, with a view to withdrawing it. Please also indicate whether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measures have been taken to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and provide information on measures taken to ensure full compliance with each of the Committee's Views adopted in respect of the State party.

### **1) Withdrawing reservation on Article 22 of the ICCPR**

In its first report to the Committee (CCPR/C/68/Add.1) submitted in 199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d that the reservation to article 22 is to make it consistent with the regulations that limit public officials' right to organiz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lso, the Government argue that it guarantees public officials' labour activities by enacting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Union. However, the Act limits the agents that join the trade union and contents of a collective agreement, and denies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and therefore, it is hard to see that it guarantees union activities by public officials.<sup>339</sup>

### **Suggested Recommendations**

- Withdraw the reservation on Article 22 of the Covenant.

### **2) Implementation of Views**

As regard to the Committee's views, the Government argues that it is reviewing various measures from law revision to compensation for victims, return of goods, cancellation of records, amnesty, etc. But, there has not been any practical measures taken after the public hearing in 2007. Numerous measures were suggested at the time such as having the view as grounds for a retrial and recognizing claims for compensation based on the views from the Committee. Despite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received possible measures for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views, it has been avoiding selecting effective measures for almost 10 years and repeating that it is still in the process of reviewing. In addition, in case of the author of the communication No. 1908/2009 was granted a legitimate visa status. However, his legitimate visa status was not automatically given after the View

---

<sup>339</sup>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Union: The act only guarantees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of public officials of grade 6 or under. Even for public officials of grade 6 or under, the act prohibits the public officials that engage in direction, supervisory position, personnel affairs, and remuneration from joining trade unions. (Article 6 (2)). Among the contents of the collective agreement, the effects of the contents that are stipulated by the legislation, ordinance, and budget and the contents stipulated by a mandate of an ordinance are not recognized (Article 10 (1)). Any kind of act of dispute is prohibited (Article 11).

was made, but the author reapplied the refugee status after the View was made and then granted a legitimate visa status.

### **Suggested Recommendations**

- Immediately carry out practical measure required for implementing the Committee's views including enactment of relevant laws.

**Issue 2**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measures taken to address the lack of provisions in the legislation providing for a clear,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process for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K) with a view to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NHRCK and its compli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of 20 December 1993, annex).

As written in the Government'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on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a new chairperson in 2015, the NHRCK publicly made a vacancy announcement along with seeking civil society views through its official website in accordance with the newly enacted internal rules (para 3).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ubmitted their recommendations demand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and fair candidate nomination committee through which members of the NHRCK should be selected and appointed. However, these recommendations were not reflected in the process of appointing the new chairperson. Moreover, Member of Parliament Hana Jang (a member of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presented an amendment bill for the NHRCK Act including provisions to create a transparent and independent selection process in 2011, but as of 2015, the bill is not even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ree times, in March 2014, October 2014, and March 2015,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s (ICC-NHRI) issued its recommendations for the NHRCK to establish an appropriate selection process for its members and guarantee the diversity of its composition. The Government failed to implement these recommendations, resulting in the NHRCK's reaccreditation deferred three times in a row by the ICC-NHRI. The ICC-NHRI said that it would watch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of the new chair of the NHRCK whose term ends in August 2015 and discuss it in the first session of 2016 when reviewing its reaccreditation.<sup>340</sup>

In August 2015, the President Park Geun-Hye appointed the incumbent chief judge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s the new chairperson of the NHRCK even though he has no experience with human rights matters which is a requirement by the NHRCK Act. The ICC-NHRI repeatedly expressed its concerns over the lack of diversity in the composition of the NHRCK commissioners.<sup>341</sup> As of 2015, the majority of its commissioners are legal professionals including the former chairperson who was a law professor and the new chairperson who directly moved to the NHRCK from being a judge.<sup>342</sup>

---

<sup>340</sup> ICC-NHRI, ICC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Report-March 2015, pp.39~41, <http://bit.ly/1U89asU>

<sup>341</sup> Ibid.

<sup>342</sup> The newly inaugurated chairperson of the NHRCK, when he was a judge asked a person applying for a male-to-female gender reassignment to submit photographs of her external sexual organs which is a human rights violation. In general, courts do not ask gender reassignment applicants to submit photographic evidence as it is not critical in deciding gender reassignment, in particular when there are written opinions provided by a mental health specialist and a sex reassignment surgeon. During his term as a judge, he also sentenced as guilty many defendants on charge of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guilty and has previously sentenced death penalty. (Court chief appointed 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hairman, The Dong-A Ilbo, 21 July 2015,

### Suggested Recommendations

- Amend the NHRCK Act to provide an independent budget, human resources, and operation with the aim of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NHRCK.
- Guarantee a clear,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process for selection of the NHRCK commissioners by creating an independent candidates nomination committee.
- Guarantee the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selecting and appointing the NHRCK commissioners with the aim of improving institutions and practices to overcome the lack of diversity in the composition of its commissioners dominated by legal professionals, and to end the practices of selecting unqualified persons without knowledge of and experience with human rights matters for commissioners.

**Issue 3** Please indicate whether the State party intends to adopt a legislative framework regulating the activities of all business enterprises domiciled in the State party's territory and/or its jurisdiction with a view to ensuring they respect human rights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the Covenant throughout their operations. Please report on measures taken to address the possible corporate responsibility of the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 (KOMSCO) and Daewoo International in connection with their activities in the cotton sector in Uzbekistan, and of POSCO in connection with the steel processing plant project in Jagatsinghpur, Indi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have a legislative framework to ensure human rights standards in business operations; nor the 2<sup>nd</sup> National Action Plan (2012-2016) does include any plan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hough the State party alleges that business may be held liable under the Criminal Act or special Criminal Acts (Response to the List of Issues para. 4), it is almost impossible to access the Republic of Korea's judicial proceedings for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Furthermore, the National Contact Point (NCP)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been effective in resolving human rights violations.

On 23 July 2015, the Republic of Korea's NCP dismissed the specific instance against Daewoo International, its parent company, POSCO, and its investor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and public enterprise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and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 (KOMSCO), for their use of Uzbek cotton, harvested by forced labour which violated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Republic of Korea's NCP concluded that no liability is found in Daewoo International's supply chains.<sup>343</sup>

On 20 June 2013, the Republic of Korea's NCP had also dismissed the instance concerning POSCO's violation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India. The instance was made as POSCO failed to conduct an impact assessment as well as stakeholder consultation with all affected

---

<http://bit.ly/1Jy2Tvm>). On August 12, 2015, the roundtable for the transparent selection process of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stated that the nominee Lee Sung-ho is not the appropriate person to be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http://bit.ly/1Jy5bL1>)

<sup>343</sup> Initial Assessment by Korean NCP fo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Korean Trans National Corporations Watch et al. vs. Daewoo International et al., Korea National Contact Point, 7 July 2015, <http://bit.ly/1TLexsx>

communities. Even though the project caused forced displacement of about 20,000 people. Korea's NCP concluded that it was the Indian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approve the project.<sup>344</sup>

After the decision from the Republic of Korea's NCP, in October 201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responded to the joint statements by the UN Special Procedure mandate holders urging the suspension of the POSCO project in India while the alleged human rights concerns are being examined and addressed.<sup>345</sup> In July 201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plied to the joint allegation letter sent by the UN Special Rapporteurs made in February 2014<sup>346</sup> that the Republic of Korea's NCP was in charge of human rights abuses by the Republic of Korea's corporations outside of the country.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s NCP has never made any decisions regarding substantive issues nor has it taken effective measures.

### **Suggested Recommendations**

- Adopt the National Action Plan<sup>347</sup> as well as the legislative framework regulating the activities of all business enterprises domiciled in the state party's territory and its jurisdiction to ensure human rights standards are met throughout their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venant and UN Guiding Principles.
- Review the operation of the NCP and take measures of reform to ensure independency, expertise, enforceability in order to offer effective remedy to the victims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Republic of Korean corporations' activities.

### **Non-discrimination,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prohibition of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and minority rights (Article 2, 3, 20, 26 and 27)**

**Issue 4** Please report on measures taken to adop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that addresses discrimination in all spheres, including in the private sphere, prohibits direct, indirect and multiple discrimination, contains a comprehensive list of grounds for discrimination, including national origi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nd provides for effec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medies.

In February 2013, the Commission on Presidential Transition for then-newly elected President Park Geun-Hye publicly stated that it will enact the Anti-Discrimination Act as part of its national agenda.<sup>348</sup> The Government also reported in its response report for the list of issues that they

---

<sup>344</sup> Initial Assessment by Korean NCP fo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Korean Trans National Corporations Watch et al. vs. POSCO et al., Korea National Contact Point, 20 July 2013 (Korean only) <http://bit.ly/1NmBGI3>

<sup>345</sup> India: Urgent call to halt Odisha mega-steel project amid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 October 2013, <http://bit.ly/1Jy5mpm>

<sup>346</sup> 28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Communications report of Special Procedures, A/HRC/28/85. p. 158, 19 February 2015

<sup>347</sup> The 3<sup>rd</sup> National Action Plan (2017~2021)

<sup>348</sup> **It was originally one of the proposed national agendas for Park Geun-Hye by 18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in Feb 21 2013, p. 167**, No. 102 'Building social integrated system of human rights protection, Ministry of Justice' at Prime Minister's Homepage <http://bit.ly/1NGZ4K1> (in Korean)

created a task force for the legislation of an Anti-Discrimination Act and discussed a variety of relevant issues.<sup>349</sup> However, to date no progress by the Government has been publicly reported<sup>350</sup> and the Government has not met or held consultations with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LGBT) organizations abou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he research conducted by the Government for the legislation was not disclosed to the public. Two anti-discrimination bills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3 were withdrawn due to organized opposition from anti-LGBTI organizations and conservative Protestants.<sup>351</sup>

In a 2013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 31.9% of respondents found it very necessary to ha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hile 27.9% of the respondents felt that it is somewhat necessary.<sup>352</sup> A June 2014 needs assessment survey conducted by Chingusai,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shows that over 53% of LGBT people in South Korea consider the Anti-Discrimination Act as "the most important policy issue."<sup>353</sup>

### Suggested Recommendations

- Provide concrete details and timeframes for the adoption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that addresses discrimination in all spheres, including in the private sphere. An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hich prohibits direct, indirect and multiple discrimination, and contains a comprehensive list of grounds for discrimination, including national origi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nd provides for effec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medies.
- Ensure the full participation of all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NGOs in the research, survey, and social discourse for the enactment of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 Support public education campaigns to counter prejudice and negative attitudes against minorities, to promote th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before the law.

**Issue 5** Please clarify whether racially-motivated violence has been criminalized and report on measures taken to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inter alia in the media and on internet, targeting in particular non-citizens. Please also report on steps taken to address the

<sup>349</sup> Respons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List of Issues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mmittee for the Examination of the Fourth State Party Report, at p.2

<sup>350</sup> UN News Centre, "Republic of Korea: UN rights experts urges adoption of anti-discrimination law"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9038>

<sup>351</sup>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Withdrawal: Korea human rights situation back tracks, 5 May 2013, at <http://bit.ly/1OpIS1t> How far should antidiscrimination law go?, The Korea herald, 29 April 2013, at <http://bit.ly/1Jy6BoL>

Proposals for and withdrawals of anti-discrimination bill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Bill no. 1903793(12 sponsors including National Assembly member Choi Won Sik), proposed on 2/20/2013, withdrawn on 4/24/2013.

Bill no. 1903693(51 proposers including National Assembly member Kim Han Gil), proposed on 2/12/2013, withdrawn on 4/24/2013.

<sup>352</sup> **Public survey on religion and anti-discrimination law, Korea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 24 June 2013**

<sup>353</sup>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Key Results of the South Korean LGBTI Community Social Needs Assessment Survey, June 14, 2014, p. 32. <http://bit.ly/1Jy6IRh>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ncept of multicultural families, including its application only to foreign women who marry a Korean men and not vice versa and exclusion from the definition of multicultural family of two migrant workers from a non-Korean background.

Currently, there is no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that provides a definition for or criminalizes racial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disseminated by the media and on the internet are not regulated other than punishments for defamation or insult under the Criminal Act.<sup>354</sup> Although the NHRCK recommended in 2011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racial harmony and establish specific action plans to form a consensus o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also to review adequate improvement plans against expressions on the internet that promote racial discrimination,”<sup>355</sup> the Government has not taken measures against xenophobia such as implementing human rights regulations and campaigns.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defines multicultural families as families that are formed through marriage between a Korean national and marriage migrant (without distinction of gender), and families consisting of only migrants are excluded. Also, families are not recognized as multicultural families if the marriage migrant does not have legal residency.<sup>356</sup>

According to the 2nd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Policy of 2013, even though families consisting of only migrants fall within the category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is true only if the marriage migrant has legal residency, and these families are not able to receive benefits provided under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nd are limited to using services provided b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res. Moreover, the services provided b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res focus on migrant women (Korean cooking, knitting, etc.), thus migrant men are not able to enjoy adequate services.

### **Suggested Recommendations**

- Officially denounce violence based on race and hate speech, and provide legal,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these acts.
- Initiate a public campaign and human rights training aimed at preventing violence based on race and hate speech.

---

<sup>354</sup> Although hate speech can be punished under Articles 307(defamation) and 311(Insult) of the Criminal Act, criminal punishments for defamation and insult may limit freedom of expression, as there have been UN recommendations to revise and repeal these provisions and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at have argued for the abolishment of criminal punishment for defamation and insult.

<sup>355</sup> Opinions for improvement of the issue of racially discriminatory expressions on the interne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30 December 2010

<sup>356</sup> Article 2 Paragraph 1,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term "foreigners in Korea" means those who do not possess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o legally stay in Korea for the purpose of residing in Korea;  
Article 2,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1) The term "multicultural family" means any of the following families: (a) A family comprised of an immigrant by marriage defined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 person who has acquired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Articles 2 through 4 of the Nationality Act; (b) A family comprised of a person who has acquired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Articles 3 and 4 of the Nationality Act and a person who has acquired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Articles 2 through 4 of the aforementioned Act;

- Include families consisting of only migrants in the defin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regardless of their residency, and provide substantive support for all multicultural families.

**Issue 6**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measures taken to combat discrimination and social stigma against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defector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rsons, and persons with HIV/AIDS. Please report on measures taken to decriminalize consensual same-sex sexual activity within the military. Please indicate whether the State party is considering harmonizing the legal treatment of opposite-sex and same-sex rape ("quasi" rape) and rape victims.

Prominent public officials and several government departments have openly adopted anti-LGBTI attitudes and policy, reinforcing social prejudice and intolerance towards the LGBTI community. The Minister for Education is officially opposing textbooks that encourage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of LGBTI persons and officially promote "immoral homosexuality."<sup>357</sup> In December 2014 the Mayor of Seoul, Park Won Soon refused to proclaim the Charter of Human Rights for Seoul Citizens, which stipulated the right not to b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sup>358</sup> In February 2015 the Government instituted new Sex Education guidelines, which deliberately exclude mention of "diverse sexual orientations" or the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sup>359</sup> In an official communiqué, the Ministry of Education stated that homosexuality was "not a common issue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for Korean school children. The NHRCK and National Assembly buildings were used to host "conversion therapy" seminars in November 2014 and March 2015. These seminars described homosexuality as a "sinful" disposition to be suppressed or a "disease" to be cured.<sup>360</sup> By facilitating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hat can lead to increased stigma, discrimination and potential violence against LGBTI persons, the Government breaches its obligation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rights of LGBTI persons. In April 2015, the Ministry of Justice denied the Beyond the Rainbow Foundation's request to register as a non-profit organisation. The Ministry concluded that advocating for the human rights of a sexual minority did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activities performed by "human rights organisations", to which it is empowered to administer legal status.<sup>361</sup> The Seoul City Government's Welfare Policy Department reportedly stated in correspondence with the Foundation that the organisation's purpose went "against traditional values."<sup>362</sup> This discriminatory use of governmental authority to prevent LGBTI groups from officially registering as non-profit organizations infringes upon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of LGBTI persons.<sup>363</sup> In June 2015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denied the

<sup>357</sup> 'Pastor protests 'homophobic' textbooks', *The Korean times*, 27 Oct 2013, <http://bit.ly/1NGVqzG>

<sup>358</sup> 'An Open Letter From The Rainbow Action and Sit-In Protesters At Seoul City Hall', *The Huffington Post*, 9 Dec 2014, <http://huff.to/1NGVuzH>

<sup>359</sup> 'Letter t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on the Need to Recogniz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n Sex Education', *Human Rights Watch*, 3 May 2015, <http://bit.ly/1NGVuj6>

<sup>360</sup> 'South Korea: Letter to NHRCK on Conversion Therapy',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Published 5 July 2015, at: <http://iglhr.org/content/iglhr-letter-officials-about-state-endorsement-conversion-therapy-gays-and-lesbians-south>

<sup>361</sup> "Government denies recognition to sexual minority rights group", 4 May 2015, *The Hankyoreh* at: [http://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689681.html](http://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689681.html)

<sup>362</sup> "Government Says 'No' to LGBT Koreans", 10 February 2015, *The Korea Observer* at: <http://www.koreaobserver.com/government-says-no-to-lgbt-koreans-26267/>

<sup>363</sup>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Russian Federation*, CCPR/C/RUS/CO/6, 29 October 2009, para. 27.

request of holding the parade of the Seoul Queer Culture Festival, the annual event for LGBTI persons in Korea.<sup>364</sup>

A gay couple held a public wedding ceremony in September 2013 and submitted a marriage licence application to Seodaemun-gu Office in December 2013, but the local government rejected the application. The lawsuit is still pending.<sup>365</sup> Furthermore, the government failed to give the same legal protections and benefits to the same sex couple as those granted to unmarried heterosexual couples.

The Criminal Act defines rape as penile-vaginal rape only. A second, lesser crime of 'imitative rape' under Article 297-2 refers to a person inserting a sexual organ into another person's body part, such as a mouth or anus, or by inserting fingers into a person's genitals or anus. 'Imitative rape' attracts a lesser punishment. Individuals who are assaulted by a person of the same sex are not afforded the same access to justice as victims of penile-vaginal assault.

Article 92-6 of Korea's Military Criminal Act provides punishment for consensual same sex sexual conduct between men in the military.<sup>366</sup> Military service is mandatory for male citizens of Korea, hence the provision approaches the level of a universal sodomy ban.<sup>367</sup> It has been the sole provision punishing sexual acts between same-sex peopl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March 2014, 11 National Assembly members proposed a bill for the abolishment of this provision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Military Criminal Act went into effect, however the government failed to endorse the bill.

### Suggested Recommendations

- Support public education campaigns which combat discrimination and social stigma against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and against defector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Take strong measures to combat discrimination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rsons, and persons with HIV/AIDS, including the enactment of an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hate crime laws.
- Banning conversion therapy and adopting a legal framework for prohibiting the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against LGBTI persons; providing anti-bullying campaign and a comprehensive, age-appropriate sex education which protects LGBT youth.
- Ensure that same-sex couples are able to enjoy the same legal protections and benefits as those granted to non-married heterosexual couples in the areas of public housing, pension, and protection from the domestic violence.
- Amend the law to ensure that LGBTI persons are afforded equal protec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in terms of statutory punishment.
- Repeal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to remove discrimination against same-sex attracted men in the military.

---

<sup>364</sup> Dispatches: No Parade, but Pride Perseveres in South Korea, 1 June 2015, *Human Rights Watch* at <https://www.hrw.org/news/2015/06/01/dispatches-no-parade-pride-perseveres-south-korea>

<sup>365</sup> Borowiec, S., *The Time* (2014, February 11) South Korea's LGBT Community Is Fighting for Equal Rights. from <http://time.com/6575/south-koreas-lgbt-community-is-fighting-for-equal-rights/>

<sup>366</sup>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92(6) : A person who commits anal sex or other disgraceful conduc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2 years.

<sup>367</sup> Lee, A. (2010). *Assessing the Korean Military's Gay Sex Ban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Law & Sexuality: Rev. Lesbian, Gay, Bisexual & Transgender Legal Issues*, 19, 67.



**Issue 7** Please provide further information on measures taken: (a) to comba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in marriage and within society, in particular against migrant wives; (b) to increas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including in the judiciary, the legislative local and regional (wide area) councils and executive bodies, especially in decision-making positions (please include relevant statistics); (c) to reduce the wage gap between working men and women.

### **1)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in marriage and within society**

Even if the Korean spouse is at fault for the divorce,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Immigration Office conducts investigations on the “sincerity of marriage”<sup>368</sup> and denies extension of visa, permanent residence, and naturalization of the marriage migrant on grounds that the couple did not cohabit. Also, if the Korean spouse happens to die soon after the marriage, there are cases where the marriage migrant is denied extension of visa on grounds that the marriage was short-lasting and is urged to return to his or her country of origin.

Although marriage migrants have been allowed to maintain dual citizenship since 2012<sup>369</sup>, when the Korean spouse dies or a divorce is obtained under the grounds stated in the Article 6, Paragraph 2(3), (4) of the Nationality Act<sup>370</sup>, the marriage migrant may not apply for dual citizenship and must select a single citizenship.

When marriage migrants return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after divorce, there are instances where they are required to submit Korean divorce documents or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documents to the court or other relevant agencies in order for the divorce to be recognized in their home countries. However, migrant women are not issued family relations register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obtain relevant documents.

### **Suggested Recommendations**

- When the Korean spouse is at fault for the divorce,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marriage migrant women are not disadvantaged in evaluations for extension of their visa, permanent residency, and naturalization, and that abuse of power does not occur in the evaluation

---

<sup>368</sup> “In a divorce suit filed by the foreign spouse where there is no protest or counteraction against the annulment of marriage by the Korean spouse(defendant), the Family Court’s ruling cannot be sufficient evidence for sincerity of marriage in the naturalization screening process, and a separate investigation will be necessary. (“Issues rais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mily court regarding simple naturalization in failed marriages”, Judge Yong-chan Kim, Suwon District Court Ansan branch)

<sup>369</sup> Nationality Act Article 10 Paragraph 2 Subparagraph 1: A person who had any ground falling under Article 6 (2) 1 or 2, or Article 7 (1) 2 or 3 when he/she obtained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sup>370</sup> Nationality Act Article 6(2)3, 4: Where a foreigner whose spouse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e/she may obtain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even without meeting the requirement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5: 3. A person who was unable to sustain marriage due to the death or disappearance of his/her spouse or other causes unattributable to him/her while sustaining a domicile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eing married to the said spouse, who failed to fulfil the requirements for period under subparagraph 1 or 2 but has fulfilled the requirements for the remaining period under subparagraph 1 or 2, and is considered reasonable by the Minister of Justice; 4. A person who faile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under subparagraph 1 or 2, but who is taking care of, or shall take care of, a minor born within the marriage relationship with the said spouse, and has met the domicile period requirements under subparagraph 1 or 2 and is considered reasonable by the Minister of Justice.

process.

- Repeal the discriminatory provision in the Nationality Act that does not allow dual citizenship for marriage migrants on grounds that the marriage has ended.
- Provide procedures for returned marriage migrants to directly obtain divorce or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documents.

## 2) Representation of Wome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In 2013, the proportion of female public officials was 42.8% for central government and 31.3% for local governments, but the proportion of female high-level officials and female executives in public institutions were only 4.4% and 11.3% respectively.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stablishes a 20% quota for femal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nd the use of the “zipper system”, which alternates male and female candidates on the ballot, but this has shown to be ineffective as there are no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hese measure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contrast to local councils.

Statistics on Female Members of Parliaments (left chart) and Local Council (right chart) (as of 2015)<sup>371</sup>



Executives of Public Institutions (as of 23 June 2014)<sup>372</sup>

| (Units : institutions, %, persons) |                           |             |                           |                      |                   |                                 |       |
|------------------------------------|---------------------------|-------------|---------------------------|----------------------|-------------------|---------------------------------|-------|
| Number of Public Institutions      |                           |             |                           | Number of Executives |                   |                                 |       |
| Total                              | Female executives present | not present | Female executives present | Total Executives     | Female Executives | Percentage of female executives |       |
| 318                                | 151                       | 47.5        | 167                       | 52.5                 | 3,091             | 350                             | 11.3% |

### Suggested Recommendations

- Manage the careers of women to increase female representation in public agencies and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to break the “glass ceiling” through solving gender discrimination.
- Establish legal mechanisms to effectively enforce the female parliamentary quota system.

<sup>371</sup> Women's Lives through Statistics in 2015, Statistics Korea (KOSTAT)

<sup>372</sup> 1<sup>st</sup> National Action Plan on Gender Equality(2015-2017)(Draft), unpublishe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female politician quota system, chang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 clause to a mandatory clause: “When any political party intends to recommend its members as candidates to run in the election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local constituency and in the election for local council members of local constituency after their term of office expires, such political party shall work to recommend not less than 30/100 of the total number of the candidates to run in the election for nationwide constituencies from among women”

- Implement public campaigns and education programs to raise awareness on public service and working women and to increase the ratio of female public officials.
- Assign low-level public officials to key tasks, regardless of gender,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performance and provide them with equal opportunities for promotions, eliminate disadvantages to those who go on childcare leave, and take measures to increase male participation in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 **3) The Wage Gap between Working Men and Women**

As of 2013, the hourly wage of female workers is 68.2% of that of male workers. The gender pay gap is decreasing, but the gap is still the greatest among OECD countries.<sup>373</sup>

Female regular workers receive 68.2%, male non-regular workers receive 52.7%, and female non-regular workers receive 35.9% of the wage of male regular workers. This shows that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force disproportionately affects female non-regular workers.<sup>374</sup> The Government stated that non-regular workers would be switched to regular workers, but it has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that extends the term of non-regular workers from 2 to 4 years, which would create more non-regular workers. Among 8 million female workers, 4.5 million (56.11%) are non-regular workers and 61% of female non-regular workers are low-wage earners.<sup>375</sup>

#### **Suggested Recommendations**

- Repeal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 Evaluate the impact of existing policies aimed at closing the gender wage gap, and provide a comprehensive plan to by taking the results into consideration.

###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including domestic violence (Article 2, 7, and 24)**

**Issue 8** Please indicate whether steps have been taken to clarify the criminal nature of spousal rape in the legislation. Please respond to concerns that domestic violence or sexual assaults tend to be considered private family matters, and report on measures taken to prevent and combat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ing on measures to encourage reporting of such cases and ensure the effective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sanctioning of perpetrators. Please also provide

<sup>373</sup> Jun Kim, “The current condition of wage disparity and its implication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4

<sup>374</sup> Yu-sun Kim, “The scale and conditions of non-regular workers”, Korea Labor and Society Institute, 2015

<sup>375</sup> Statistics Korea (KOSTAT), data from supplementary survey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s of August 2014

information on steps taken to combat effectively violence and abuse against children, including child sexual abuse, as well as violence and bullying in schools.

### **1) Measures taken to clarify the criminal nature of marital rape in the legislation**

In the May 2013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as in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List of Issues (para. 16), the case was only recognized as rape because it involved a severe level of violence, threats, and the use of a weapon. Although the case was recognized as marital rape, the level of physical violence and threats were much severe compared to that of usual cases of rape. Also, the sentence was much lower compared to that of "aggravated rape".

### **Suggested Recommendations**

- Criminalize marital rape in the law.

### **2)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Considering the nature of domestic violence, the victim is often financially and emotionally dependent on the perpetrator, thus it is difficult for the victim to actively seek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and in many cases investigative agencies do not punish the perpetrator if the victim simply does not wish to press charges.

The Government stated that it has strengthened the implementation of "suspension of indictment on condition of counselling" and transfer of home protection cases (response to the List of Issues para.17), however, these are used as means for non-indictment.<sup>376</sup> "Suspension of indictment on condition of counselling" involves suspending the indictment of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on the condition that the offender undergoes counselling, and handling domestic violence as "home protection cases" involves imposing measures such as restraining orders, community service and orders to attend a lecture, protective custody, treatment, consignment of counselling. In these cases, the light punishments allow perpetrators to perceive domestic violence as a "non-crime".<sup>377</sup>

The punishment for sexual violence has increased with the amendmen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but due to concerns of the police and investigation agencies that the amendment will cause an "increase in indiscriminate and false accusations" and give the accused excessive disadvantages. Numerous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around the country began crackdowns for false accusations of sexual violence<sup>378</sup>, and many cases have occurred where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were suspected of false accusations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indicted accordingly.<sup>379</sup>

Undocumented female migrant workers avoid reporting cases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

<sup>376</sup> According to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s Statistics on Reports and Handling of Domestic Violence, 10,015 out of the total 17,194 cases of domestic violence in 2013 resulted in non-indictment (acquittal, suspension of indictment, crime not established, no right of indictment, dismissal), and 4,239 cases were handled as home protection cases.

<sup>377</sup> Article 40 Paragraph 1,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sup>378</sup> Uijungbu Local Prosecutor's Office punishes increasing false accusations on sexual violence (Korean), Daehan Ilbo, 12 May 2014, <http://bit.ly/1NJB1dF>

<sup>379</sup> Sexual violence victims being accused of false accusation (Korean), The Hankyoreh, 29 October 2014, <http://bit.ly/1NJB8Gk>

violence due to fear of deportation.<sup>380</sup>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also applies to foreigners, but these cases usually end with the undocumented female migrant being deported.

### **Suggested Recommendations**

- Implement a preferred-arrest policy in the investigation stage, and abolish the “suspension of indictment on condition of counselling” system in the prosecution stage.
- Revise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to establish strict criteria for determining false accusations of sexual violence, and create an exception to the application of false accusation against victims of sexual violence by proceeding with the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for false accusations after the judicial proceedings for sexual violence have been completed.
- Provide solutions such as granting residency for undocumented migrant worker women who are victims of sexual violence.

### **3) Stalking Crimes**

Stalking can be punished as consistent harassment under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but the punishment is minor considering the fear and distress experienced by the victim and is not enough to establish stalking as a social crime, as the punishment is a fine not exceeding 100,000 KRW (approximately 100 USD). Also, this type of mild punishment may agitate the perpetrator and cause retaliatory crimes.

### **Suggested Recommendations**

- Enact a comprehensive law on stalking that punishes stalkers and protects stalking victims.

### **4) Regarding effective measures combating violence and abuse against children, including child sexual abuse, school violence and bullying.**

Regarding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the Ministry of Justice is advocating for reinforcing the legal prosecution for perpetrators. Nevertheless, the percentage of sentencing criminal punishment is still low, while the percentage of sentencing probation has increased.<sup>381</sup> Because of reasons such as short years of service and frequent position rotation, a number of the Prosecutor for Child (PFC) and prosecutors with proper expertise in the field is not enough.

Regarding child prostitution, both the clients and the agents are lightly punished.<sup>382</sup> No policies exist

---

<sup>380</sup> According to the 2013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and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against Migrant Workers (Korea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Migrants’ Network TV, Dongcheon Public Interest Foundation, Bae, Kim & Lee), only 20.5% of migrant workers reported their cases to supervisors or coworkers, and 56.4% did not report their cases at all. Whereas 40.0% of male migrant workers did not file reports, 68.2% of female migrant workers did not do so. Meanwhile, the reasons for not filing reports were in the order of fear of reporting irregular status (47.4%), concerns of unemployment (36.8%), embarrassment and shame (31.6%), difficulty in communication (21.1%), lack of information (15.8%), and fear of retaliation (5.3%).

<sup>381</sup> Data submitted by the Supreme Court to the Member of Parliament Jintae Kim(Saenuri Party) In 2013.

<sup>382</sup> According to statistics on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from 2007 to 2012, 66% of offenders were released on probation and among those that were sentenced imprisonment, 66.3% were sentenced for less than 3 years in prison. (Occurrence tendency and trend analysis on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2007~201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

against online prostitution which is now a popular mechanism<sup>383</sup>, and children in prostitution are treated as criminals if they were not forced to be a prostitute.

Regarding violence among school students, the Ministry of Education reacts with measures such as leaving records of violence in the student's record, installing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inside and outside of the school building and positioning school police officer (SPO). These measures, however, are not effective<sup>384</sup> and school violence is becoming more prevalent in lower grades<sup>385</sup> while cases of new types of violence such as bullying and cyber-bullying are increasing.<sup>386</sup> In addition, 1,000 specialized counsellors were dismissed in 2014 because of low-budget<sup>387</sup>, and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which is the only existing damage recovery policy, is not being implemented properly.

Regarding physical punishment in school,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llows indirect physical punishment and only prohibits "punishment using tools and one's body," However, research shows that 45.8% of students have experienced or witnessed punishment with tools and 60% have experienced or witnessed indirect punishment such as staying down in push-up position.<sup>388</sup> Meanwhile, another research that classified students into different age group shows that 13.5%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29.1%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26.5% of high school students have experienced physical punishment in school.<sup>389</sup>

### **Suggested Recommendations**

- The court should strictly prosecute sexual violence, and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provide effective measures to enhance the expertise of Prosecutors for Child and investigators dealing with children related cases.
- The court should prosecute and hold accountable both child prostitution purchasers and

---

<sup>383</sup> In 2013, 717 smart phone applications were suspected to be connected to prostitution, and of those applications, 182 were investigated and only 35.2% of 182 demanded for adult authentication number. (2013 Situation of Prostitution Repor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Closed information)

<sup>384</sup> In 2014, cases handled by the Local Board against School Violence increased by 10%, and in particular, elementary school cases increased by 33.4% compared to the prior year (Ministry of Education's statistics on school violence revealed by Member of parliament Jinhoo Chung(Justice Party)). In addition, according to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KTU) and Human Rights Friendly School's survey of 1,007 teachers, 70.4% replied that leaving records of violence in the student's report does not alleviate school violence and 62.2% replied that instalment of CCTV also does not help.

<sup>385</sup> In 2008, the percentage of students between age 9 and 11 who experienced school violence was 38.2%, but it increased to 38.6% in 2013(National Survey on Children and Youth,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2013). Meanwhile, the Ministry of Education's survey on school violence does not includ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from age 8 to 10) in the sample, so it is unclear whether the survey conveys the situation of school violence well(Ministry of Education's press material, Second Research on actual condition of school violence result presentation in 2014)

<sup>386</sup> In 2013 and 2014, 1,000 students were surveyed on occurrence of different categories of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obscenity, violence and cyber-bullying via internet) have increased by 22.2%(Ministry of Education's statistics on school violence submitted to Member of Parliament Jinhoo Chung (Justice Party).

<sup>387</sup> Despite promises to eliminate school violence...1,000 specialized counsellors were dismissed (Korean), Newsis, 20 February 2014, <http://bit.ly/1NJBhJK>

<sup>388</sup> National Survey Report on the Situation of Student Rights, Human Rights Friendly School &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2014. P 6.

<sup>389</sup> National Survey on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Youth's Human Rights IV,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4. Pp 76-77.

broker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ould establish measures for cyber prostitution, and children involved in prostitution should be treated as victims without exception.

-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materialize restorative measures in regards to problems such as school violence becoming prevalent in lower grades and cyber-bullying, and the Ministry should also arrange budget for placing specialized counsellors in schools.
-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revise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o prohibit any disciplinary action that cause physical and mental pain to students, and the Ministry should also monitor and regulate the prohibitions so they can be implemented effectively.

## Counter-terrorism Measures (Article 7, 9, 10 and 14)

**Issue 9** Please clarify whether the State party enacted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that, inter alia, defines “terrorist acts”, regulates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searches, detention and deportation in strict compliance with the State party’s obligations under the Covenant, provides for legal safeguards for persons suspected of or charged with a terrorist or related crime, as well as for effective remedies.

As the Government mentioned in it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paragraph 23), five drafts on counter-terrorism (including two related to the cyber terrorism) are pending in the 19<sup>th</sup> National Assembly (year 2012~2016). The drafts on counter-terrorism allows the Counter-Terrorism Bureau und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o suggest designation and dissolution of organization that has potential threats to commit a terrorist act and to collect information related to immigration, financial transaction and communication record of a suspect. In this case, basic rights of people can be easily violated by the Counter-Terrorism Bureau. Most of all, the definition of cyber-terrorism is too vague which leaves room for arbitrary interpretation.

Including past drafts which were automatically rejected due to the end of session, all drafts on counter-terrorism impose excessive authority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hose main role is to collect information. The current drafts grant excessive authorities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hile not applying any democratic control mechanism. Unfortunatel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committed various illegal activities including illegal intervention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sup>390</sup> and illegal surveillance on civilians. A transparent and independent monitoring mechanism on this body is not yet established. Providing a full command on counter-terrorism activity is inappropriate. Also, if the executive power is being given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addition to collecting information, concerns are raised related to violations of basic rights.

### Suggested Recommendations

- Make all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counter-terrorism in accordance with the Covenant.
- Domestic laws related to wiretapping, search, detention and deportation should be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Covenant.

---

<sup>390</sup> More Investigation Required into State Agencies’ Interference with 2012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18 December 2013, <http://bit.ly/1Wmd21t>

- Provide protection mechanisms so that counter-terrorism related laws do not limit people's civil rights. Most of all, guarantee a democratic process and mechanism to prevent abuse of power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specially related to counter-terrorism.

## **Right to life and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2, 6, 7, 9 and 10)**

**Issue 10** Please report on measures taken, and the impact thereof, to address the high suicide rates, particularly among youth and women. Please clarify whether measures are being take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de jure.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not executed the death penalty since 1997, no effective measures have been take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2010, the Minister of Justice order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stalling additional facilities for carrying out executions of the death penalty.

Since 1996,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ills have been proposed at the National Assembly for seven times. On 7 July 2015, 172 members of parliament, a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special law relating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proposition is now under consideration by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under the National Assembly. Whether the bill will be passed or not still remains uncertain as the general election (April of 2016) approaches.

The suicide rate has increased sharply in the years 2000s. Suicides rate reached 28 out of 100,000 people. In 2012, this figure has doubled compared to the year 2000.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Most of all, in case of people in their 20s and 30s, suicide is the highest reason of death.<sup>391</sup>

### **Suggested Recommendations**

- Abolish the death penalty by amending the law that enables to sentence a person to death. Stop subsequent attempts for execution and using public opinion polls as a justification to execute the death penalty.
- Campaign and educate the public about how death penalty is against the right to life.
- Analyse the causes of suicide and review, wi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atistics, the effectiveness of suicide police the Government has been effective in preventing suicide.

**Issue 11** Please clarify: (a) whether torture is criminalized as an independent crime in the Criminal Code; (b) whether allegation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are investigated by an effective and fully independent mechanism; (c) under which Criminal Act provisions person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cts of torture or ill-treatment were prosecuted and the types of sanctions imposed.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modern protective devices" referred to in paragraph 121 of the report (CCPR/C/KOR/4), the solitary confinement as a disciplinary punishment, and on legal safeguards to ensure that the use of "protective devices" (including manacles and head protection devices) are strictly limited to protective rather than retributive purposes; please also report on

<sup>391</sup> Suicidal Rate, Statistics Korea, <http://bit.ly/1NBJIx>



alternatives that are available before resorting to such protective devices.

### **1) Torture is criminalized as an independent crime**

In the 4<sup>th</sup> periodic report to the Committee (CCPR/C/KOR/4, para. 118), the Government argues that the types of torture are prescribed as a crime in Article 124 and 125 of the Criminal Code and the Special Act on Criminal Code. In the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para. 26), the Government says that Article 124 (illegal arrest, confinement) and Article 125 (assault, cruel treatment) of the Criminal Code are the concrete rules of punishment for torture.

However, the range of the Criminal Code regulations regarding torture is much narrow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While the Convention on Torture stipulates that the agent of torture is “government employees or other persons that conduct government affairs” providing a wide range for it, the Korean Criminal Code specifies that that agent of torture is “those who conduct duties regarding judgement, prosecution, police, or other duties involving the restraint of human body or those who assist such duties”, maintaining a much narrower range. Furthermore, whereas the Convention on Torture includes psychological anguish in the types of torture, the Criminal Code of the Republic of Korea only limits it to arrest, confinement, assault, or harsh treatment.<sup>392</sup>

### **Suggested Recommendations**

- Enact or amend relevant laws so that all kinds of torture in accord with the definition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f Punishment can be prosecuted. Make sure that the enacted or revised law will punish torture with appropriate charges in consideration of the seriousness of torture crime.

### **2) Effective and Independent Mechanism to Investigate Torture and Ill-Treatment**

In the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para. 27), the Government answered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makes recommend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and authority as provided by the NHRCK Act.

However, the NHRCK can only make suggestions, accusations, or recommendations of disciplinary action<sup>393</sup> and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punishment are made through the police, the

---

<sup>392</sup> Criminal Code Article 124(Unlawful Arrest and Unlawful Confinement): 1) If a person who performs or assists in activities concerning judgment, prosecution, police or other functions involving the restraint of the human body, arrests, or imprisons another by abusing his official authority, 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 for not more than ten years.

2) Attempts to commit the crimes specified in the proceeding paragraph shall be punished.

Article 125 (Violence and Cruel Act): A person who in performing or assisting in activities concerning judgment, prosecution, police, or other functions involving the restraint of the human body, commits an act of violence or cruelty against a criminal suspect or against another person while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 for not more than 10 years.

<sup>393</sup>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rticle 44 (Recommendation of Remedies, etc.): (1) If the Commission deems that there occurred any violation of human rights or discriminatory act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any petition, it may recommend the respondent or the head of the organ or organization to which he/she belongs or the supervisory institution there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itution to which the respondent belongs") the matter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Implementation of remedial measures

Prosecutor's Office, and the court. Therefore, the investigation of the NHRCK only cannot be considered an 'effective mechanism'.

<Case>

Seoul Yangcheon Police Station Torture Case<sup>394</sup>

It has been revealed that police officers at Seoul Yangcheon Police Station conducted acts of torture from 2009 to 2010 that involve hitting head, stuffing mouth with towel, etc, putting plastic tape on face, and lifting arms after handcuffing the suspect behind his/her back (so-called folding wings) so as to extract confession from suspects. Seoul District High Court sentenced the chief detective of the Yangcheon Police Station to 3 years in prison and 5 years of suspension of license. Three team members from the same station were also sentenced to 1 year in prison and 3 years of suspension of license while one member was sentenced to 8 months in prison with 2 years of probation and 2 years of suspension of license.

### **Suggested Recommendations**

- Make sure to have the domestic legal system guarantee that every argument regarding torture and unfair treatment will be promptly and thoroughly investigated by an effective and fully independent mechanism.

### **3) Prosecution and Sanctions on person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cts of torture or ill-treatment**

In the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the Government did not mention about the abovementioned Seoul Yangcheon Police Station torture case and the related contents. Rather, the Government only provided the indictment cases and punishment cases from 2011 to May 2015 in compliance with Article 124 and 125 of the Criminal Code (para. 28).

In the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the Government answered that the police took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1~2 cases per year concerning the alleged acts of violence in the performance of

---

under subparagraphs of Article 42 (4); and 2. Rectification or improvement of any relevant Act and subordinate statute, institution, policy or practice. (2) The provisions of Article 25 (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o which the respondent belongs, who has received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rticle 45 (Accusation and Recommendation of Disciplinary Action): (1) If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any petition, the Commission deems that the contents of the petition correspond to an act of crime against which a criminal punishment is required, it may file an accusation to the Prosecutor General: Provided, That in case the accused is the military personnel or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service, the accusation may be filed to the Chief of General Staff of the armed forces to which the said accused belongs or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2) If it is deemed that there occurred any violation of human right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any petition, the Commission may recommend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respondent or any other person responsible for the same violation to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o which he/she belongs. (3) The Prosecutor General, the Chief of General Staff of the armed forces or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ho has received an accus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terminate the criminal investigation within 3 months after being so received and notify the Commission of the results thereof: Provided, That he/she shall, if failing to do so within 3 months, clarify the reason therefore. (4)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o which the respondent belongs to, who has received recommendation from the Commission under paragraph (2), shall respect said recommendation and notify the Commission of the results of treatment thereof.

<sup>394</sup> Five police officers accused of torture by NHRCK, The Hankyoreh, 17 June 2010, <http://bit.ly/1fudPIO>

duties between 2012 and 2015 (para. 28). However, numbers of reported cases of violence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are 992 (2011), 904 (2012), 1,028(2013), and 617(Jan~Jul 2014), and only 0.2%of them were actually indicted by the Prosecutor's Office.<sup>395</sup>

#### **Suggested Recommendations**

- Establish a mechanism so that suspect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can be thoroughly and independently investigated whil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 Monitor the contents, investigation, indictment, and punishment results of torture and abuse cases every year. When the facts of suspicion have been confirmed, make sure to strictly indict and punish the responsible persons while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the torture crime.
- Conduct human rights training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so as to prevent torture.

#### **4) Protective Mechanisms in the Prison**

88%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is adopting the cruellest punishment, which is a solitary confinement.<sup>396</sup> Moreover, as the outside members included in the Disciplinary Committee that decides the types of disciplinary action ar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warden, it is hard to consider that the disciplinary punishment decision procedure is being made independently and objectively.<sup>397</sup>

The protective devices are being used for retributive rather than protective purposes. In particular, when more than two protective devices, such as manacles and head protection devices, are used at the same time in the process of sentence execution, they are used for a long time exceeding 1 day which is an excessive and unnecessary infringement of the inmates' human rights.<sup>398</sup>

The Government stated that the law stipulates that the protective devices cannot be used for retributive purposes and that the protective devices are being used in the minimum range of necessity and they are stopped being used without delay once the grounds for the use of them extinguish. However, with the prison guard judging whether the use of protective devices should be continued or not, no legal safeguard that ensures the minimum use of the protective devices exists, leaving room for abuse.

#### **Suggested Recommendations**

- Improve the solitary confinement-centred punishment regulations so that other punishment alternatives take priority over solitary confinement.

---

<sup>395</sup> Data from Member of Parliament Hae-chul Jun(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s office. Comparison of the Present Condition of Corruption Crime between the Busa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other District Offices

<sup>396</sup> The Ministry of Justice report submitted to MP Gi-ho Suh (Justice Party) during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 2013.

<sup>397</sup>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rticle 111(2): The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at least five but not more than seven members. The person on the second rank after the warden shall serve as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and the members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warden, from among the directors of the competent agencies (in cases of branches, correctional officers of Grade VII or in higher rank) and outside personnel, who have much knowledge and experience in correction. In such cases, the outside members shall be three or more.

<sup>398</sup> Supra note 22

- Improve the customary use of protective devices so that they can be used for protective purposes rather than retributive purposes.
- Stop the practice of cruel and inhumane punishment. In particular, stop using two or more protective devices at the same time and the long-term use of protective devices.
- Provide an alternative system that can be considered before using protective devices.

**Issue 13** Please indicate what measures are taken to prevent and combat violence and abuses in the military and ensure that such allegations are effective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d, perpetrators are brought to justice and victims are provided with redress.

Over the last decade, an average of 71 soldiers committed suicide each year.<sup>399</sup> Suicide accounts for 58.3% out of total death cases in the militar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orted that about 3,900 soldiers were victims of physical violence (including beating) and have been brutally treated in April 2014 only. In 2013, 17,987 beating and brutal treatment were reported.<sup>400</sup> It is expected to be more considering many cases of abuse go unreported.

From 2010 to the first half of 2014, 50 out of 3,337 beating and brutal treatment criminal cases (1.5%) perpetrators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None of the 398 trials in the first half of 2014 have sentenced the accused with imprisonment.<sup>401</sup>

As for sexual assault cases, from 2010 to 2013, a total of 1,442 sex crimes were reported by the Military Prosecutor's Office, but only 39.98% were actually formally indicted.<sup>402</sup> Only 15.2% of cases were sentenced to actual imprisonment by the Military Courts while in the civil court, the imprisonment rate is 34.9%. For 5 years from 2009, 160 sex offenders against female soldiers were penalized with disciplinary actions, 76.8% of these cases the penalty was not adequate.<sup>403</sup>

Althoug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clared that it introduced numerous preventative measures after consecutive human rights infringements within the military in 2014<sup>404</sup>, the effectiveness of these preventative measures is still questionable. For instance, the National Defense Help Call Centre is merely a sum of existing telephone reporting systems. While the military advertises that 14,700 counselling sessions were conducted during 2014 alone, there are only 8 phone lines and 13 counsellors in the call centre. Even after several preventative measures have been taken, some physical abuse, beating and brutal treatment cases causing suicide attempts have been reported continuously.<sup>405</sup> The existing mechanisms such as 'Attention-needed soldier' is poorly

<sup>399</sup> Situation of Accidents and Deaths in the Military, Statistics Korea, <http://bit.ly/1EddEHp>

<sup>400</sup> Military identified 3,900 violence in the military in April only (Korean), The Segye Ilbo, 3 August 2014, <http://bit.ly/1LuH86i>

<sup>401</sup>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ort submitted to MP Young-gyo Suh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during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 2013.

<sup>402</sup> Sexual Violence Report in the Military: Who Killed Captain Oh?, Korean Broadcasting Company Documentary Chang, aired on 8 April 2014

<sup>403</sup> The Military Again Violates Sexual Guidelines (Korean), The Chosun Ilbo, 22 October 2014, <http://bit.ly/1Ko0mEc>

<sup>404</sup> Soldiers jailed over South Korea bullying death, The BBC News, 30 October 2014, <http://bbc.in/1NJBCMj>, Harassment of female Korean soldier ends in suicide, Aljazeera, 7 November 2013, <http://bit.ly/1NJBIUy>

<sup>405</sup> A lance-bombardier who jumped to his death was bullied by seven others(Korean), MBC News, 24 July 2015, <http://bit.ly/1Ko0lux>

operated; 40% of soldiers who committed suicide were in fact classified as 'attention-needed'.<sup>406</sup> The 2014 National Defense allocated only 0.0005% of its budget to dealing with human rights issues.

### **Suggested Recommendations**

- Introduce an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Ombudsperson system for independent experts to be able to independently conduct investigation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s within the military
- Provide remedies to victims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within the military and thoroughly investigate all perpetrators.

##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and fair trial (Articles. 9, 10, 14 and 24)**

**Issue 14** Please clarify whether the law provides for an automatic right of any person arrested or detained on a criminal charge to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 or other officer authorized by law to exercise judicial power in order to bring the detention under judicial control. Please also indicate the length of permissible pre-trial detention.

The police can detain a suspect for up to 48 hours without warrant after the arrest.<sup>407</sup> In such cases, the suspect is not granted with an automatic right to be brought before an officer authorized to exercise judicial power. Though a suspect may request a court to review whether or not the arrest was conducted legally, this process has not been used often. The request for the review and the court's decision have to be realized within the 48 hours of the detention.

When an arrest warrant for a suspect is requested within 48 hours after the arrest, the judge decides whether or not to issue the arrest warrant through an arrest warrant review. If an arrest warrant is not filed within the 48 hours following the arrest, the suspect must be released promptly.<sup>408</sup>

Soldiers may be detained in a military prison for up to 15 days as a disciplinary action according to

---

<sup>406</sup> 40% of suicide soldiers were attention needed soldiers... actual management is poor(Korean), The Herald Economics, 18 August 2014, <http://bit.ly/1Ko0JPo>

<sup>407</sup>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0-4(1) & 200-4(2): (1) When a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has arrested a criminal suspect pursuant to Article 200-3 and intends to detain him/her, the prosecutor shall request a warrant of detention to a judge of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without delay, and the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request a warrant of detention issued by a judge of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upon request of a prosecutor who is requested for the warrant by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In this case, a request for the warrant of detention shall be made within 48 hours from the time when the criminal suspect is arrested and shall be accompanied by the affidavit of emergency arrest under Article 200-3 (3). <Amended by Act No. 8496, Jun. 1, 2007>

(2) When a warrant of detention is not requested or issued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a criminal suspect shall be released immediately.

<sup>408</sup>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0-2(5) Arrest with Warrant: Where an arrested criminal suspect is to be detained, a warrant of detention shall be requested pursuant to Article 201, and if such request for the warrant of detention is not made within 48 hours from the time of arrest, the criminal suspect shall be released.

Article 58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sup>409</sup>; this decision is made by one's superiors who hold the disciplinary power, and not by judges in court.<sup>410</sup> However, this disciplinary action of detention is de facto a criminal penalty that denies proper procedures and excludes formal trial processes. Considering it is mandatory for all Korean male citizens who are over 18-years-old to serve in the military, and in fact 90% of them do join the military,<sup>411</sup> half of the Korean population falls under the threat of these military arbitrary detentions. For a decade proceeding 2014, a total of 123,446 soldiers were sent to military prisons, and the number continue to increase.<sup>412</sup>

In case of juvenile court procedure under pre-trial detention, because there is no limitation on legally permissible pre-trial detention period and pre-trial detention period resulted from the first trial procedure does not count in detention period sentenced by the final verdict due to lack of "pre-trial detention period inclusion clause", the length of time juvenile spend in juvenile detention centre in uncertainty until the appeal is accepted amounts to approximately 53 days in average.<sup>413</sup> Meanwhile, no public guideline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n juvenile detention centre exists, and only 4.16% of those who were newly put in juvenile detention centre or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re in 2010 experienced open treatment.<sup>414</sup> Furthermore, about 95% of juvenile pre-trial detainees are separately placed in 43 jails and detention centres nationwide which represents the poor implementation of Article 85 section 2 of Standard Minimum Rules.<sup>415</sup>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defectors are sent to and accommodated in the DPRK Defector Protection Center (former Central Joint Interrogation Center) upon their arrival in the Republic of Korea. It has been known that DPRK defectors are not given the right to an attorney in the process and that they are investigated while completely blocked from the outside world. DPRK defectors get forcibly expatriated when not classified as 'subjects to protection' after the investigation. After the repatriation, the DPRK defectors' whereabouts are unknown. Furthermore, although the enforcement decree specifies the accommodation period of the DPRK defectors as maximum 6 months, the actual number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DPRK refugees accommodated in the centre are not known, so it is difficult to know how many people have been detained and for how long.

### **Suggested Recommendations**

- To minimize the use of arrest without warrant and to abide by procedural guideline so that

---

<sup>409</sup>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Article 57 (2)(2) (Kinds of Disciplinary Measures): The term "detention in a guardhouse" means detention in a guardhouse in a military unit, a ship or other detention facilities for a period shall not exceed 15 days.

<sup>410</sup>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Article 58(Persons with Authority over Disciplinary Measures):

<sup>411</sup> 91% men joined the military including 26,000 mentally disabled people (Korean), The Yonhap News Agency, 6 August 2014, <http://bit.ly/1FhWb0P>

<sup>412</sup> MP Sung-joon Jin(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submitted amendment of military prison (Korean), 21 April 2015, <http://bit.ly/1FhWnxd>

<sup>413</sup> Review the report on a Bill for Partial Amendment to Juvenile Law submitted by Member of Parliament Haecheor Je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2015. 4. P 8

<sup>414</sup> Compare Department of Justice's statistics on juvenile custody 'number of new accommodations' and the Fourth Country Report's 'number of open treatment recipients'

<sup>415</sup> Study on Advancement of Correction Custody for Prevention of Recidivism(Ⅲ), - Implementation Conditions International Standard on Correctional Treatment and its Improvement Method, Cooperative Research Series by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4. p85

a suspect can be aided when arrested without warrant in order to avoid abuses and infringements of their rights. Also,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e suspects in compliance with Article 9 of the Covenant by preparing a procedure with which a suspect can automatically receive a judge’s rule on the legality of the arrest right after his or her arrest.

- Abolish the ‘military prison’ from the available disciplinary action to soldiers in the Military Personnel Act
- Ensure pre-trial detention against juvenile offenders is kept to bare minimum and amend Juvenile Law to include an inclusion clause for pre-trial detention.
- Provide public guideline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n Juvenile detention facility and expand the guidelines for open treatment of juveniles in detention nationwide.
- To investigate and reveal the conditions of detainment inside the DPRK Defectors Protection Center and devise a measure such as non-detainment so as to minimize infringements.

**Issue 15-1** Please indicate whether steps have been taken to amen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ith a view to establishing legal limits on the duration of detention of persons subjected to deportation orders, including asylum-seeking children. Please also explain how the judicial review of such detention by the Minister of Justice satisfies the standards required under article 9 of the Covenant.

No measures have been taken by the Government to amen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CA) for the purpose of setting limits on the duration of detention. The amended ICA (29 December 2009) states that detentions, when exceeding three months, are to be reviewed by the Minister of Justice.<sup>416</sup> However in practice, the amendment is only an administrative formality. Apart from one particular case in which the Ministry of Justice was unable to approve the extension due to late submission of paperwork,<sup>417</sup> no cases of discharge from detention have been witnessed for the past five years, since the amendment of the ICA.

|                              | ICCPR   | Criminal Procedure Act (Republic of Korea)                                    | The Immigration Control Act (Republic of Korea)                               |
|------------------------------|---|---|---|
| Commence ment of a Detention | Request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 Requested by the Criminal Investigative Agency                                | Requested by the Immigration officer  |
| Deciding Body of Detention   | Detention is made after the Judge’s review of ‘the Necessity of | Detention is made after the Judge’s review of ‘the Necessity of Detention’ to | Detention is decided by the Head of the Immigration Office (No Review for the |

<sup>416</sup> Immigration Control Act Article 63(2) (Internment of Persons in Receipt of Deportation Orders, or Release from Internment): When the period of internment exceeds three months in cases of internment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Immigration Service shall first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every three months.

<sup>417</sup> Although long-term detentions exceeding three months have prevailed even after the amendment in the ICA in 2009, only one case of discharge from detention(in 2012) was made until today. Furthermore, the particular case of discharge in 2012 was issued not because the Minister of Justice disapproved the extension for having no ‘need for extension of detention’, as stated in the revised article, but because Advocate for Public Interest Law(APIL), an NGO monitoring the immigration detention issue, persisted on the issue of the Minister’s proceeding with the approval for extension one day overdue of its trimonthly review.

|   | ICCPR  | Criminal Procedure Act (Republic of Korea)  | The Immigration Control Act (Republic of Korea)   |
|---|--|---|---|
|   | Detention'   | decide whether to issue a detention warrant or not.   | Need for Detention once Deportation Order is Issued)  |
| Extension of Detention period                         | Request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No Automatic Extension)                                  | Request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No Automatic Extension): Request for the Extension of Period of Detention | <i>De Facto</i> Automatic Extension (Prior Approval by the Minister of Justice Deformalized)  |
| Decision Making Body of Extension of Detention period | Extension of period is decided after Judge's review of 'the Necessity of Extension of Detention' | Extension of period is decided after Judge's Review of 'the Necessity of the Extension of Period of Detention'    | Minister of Justice (No Review for the Necessity for Extension of Detention Period. Only the Grounds for the Delay of the Execution of the Deportation Order is explained.) |
| Maximum Period of Detention                           | Legislation Required   | During Investigation: Maximum 30 days, During Trial : 14 months   | N/A   |
| Method of Objection                                   | Objection can be made to judges upon request.  | Objection can be made to judges upon request: Review on Legality of Detention                                     | Guarantee the Opportunities to Object against the <b>Minister of Justice</b> : Objection for Protection   |

### Suggested Recommendations

- Amend Article 63 (1) of the ICA to provide limit to any detention period
- Commence detention via an independent review mechanism so that the detention of foreigners would comply with Article 9 of the Covenant, and introduce a system of regular judicial reviews for the legitimacy of detention.

**Issue 15-2** Please also comment on reports that the State party also detains asylum-seeking children, including unaccompanied children, without periodic and timely review of detention and in inappropriate facilities, and report on measures taken to provide for non-custodial alternatives to such detention and to ensure that detention is used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a period of time as short as possible.

From January 2012 to June 2015, 113 children were detained, among which were the cases of one three-year-old boy detained for thirty days, and a two-year-old girl for eighty-one days.<sup>418</sup> These

<sup>418</sup> Detained immigrant children under age 18 from January 2012 to June 2016 (Source: Ministry of Justice, via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 Age             |                  | Gender  | Period of Detention      |
|-----------------|------------------|---------|--------------------------|
| Age 1: 2 people | Age 11: 2 people | Boy: 63 | Under one day: 1 person  |
| Age 2: 4 people | Age 12: 2 people |         | For 1 day: 20 people     |
| Age 3: 7 people | Age 13: N/A      |         | For 2-5days : 53 people  |
| Age 4: 6 people | Age 14: 1 person |         | For 6-10days : 25 people |



children were detained in violation of the ICA standards which supposed to be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appropriate period of time. However, detention of children has been set as a common practice, and then exceptionally allowing discharge. The Immigration Office tries to reconcile this issue not by offering non-detention alternatives or allowing detention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appropriate period of time, but by assigning public officials to the detainees.<sup>419</sup>

### Suggested Recommendations

- Legalize an exception free principle of non-detainment of children
- Provide alternatives to detention for children

**Issue 16** With reference to the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 (CCPR/C/KOR/CO/3, para. 14), please clarify whether authorities can still limit counsel’s participation during interrogation, and, if so, explain the grounds thereof and the compatibility of such limitation with the State party’s obligations under article 9. Please also comment on information that foreigners (other than asylum seekers) detained in the deportation room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re denied the right to counsel.

### 1) Counsel’s Participation during Interrogation

In the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the Government stated that a suspect’s right to access to an attorney is strictly guaranteed during interrogation in compliance with Article 243-2 (paragraph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rticle 9-2 (paragraph 1) of the Prosecution Case Administration Regulations. The Government also stated that the participation of an attorney is limited only when it is presumed to induce substantial encumbrance to the investigation such as interruption of interrogation and disclosure of investigation secrets, hence such limitations are in accordance with the State party’s obligation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

However, because the conditions for ‘interruption of interrogation’ or ‘concerns about inducing substantial encumbrance to the investigation’ are unclear and the investigation procedure depends mostly on extracting confessions by interrogating suspects, it is possible to limit the counsel’s

|                   |                   |          |   |
|-------------------|-------------------|----------|---|
| Age 5: 3 people   | Age 15: N/A       |          | For 11-15days : 3 people                                      |
| Age 6: 5 people   | Age 16:18 people  | Girl: 50 | For 16-20days : 3 people                                      |
| Age 7: 4 people   | Age 17: 56 people |          | For 21-25days: 4 people                                       |
| Age 8: 1 person   | Age 18:1 person   |          | For 26-30days: 1 person                                       |
| Age 9: 1 person   |                   |          | Longer than a month: 3 people                                 |
| Age 10 : 1 person |                   |          | (Respectively one month 26 days, 81 days, four months 9 days) |
|                   |                   |          |   |

<sup>419</sup> Foreigner Detention Regulation, Article 4 (4) indicates that ‘the Head of the Immigration Office may provide education for children under age 18 held in custody for longer than one month, as seen fit for their age and ability, or entrusted to specialized welfare facility from outside.’ Also, the following (5), (6) indicate, respectively, that ‘the Head of the Immigration Office must designate an official for the special protection of each of the foreigners held in custody,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rticle 56 (2)’; and that ‘officials exclusively designated as according to the (5) must conduct interviews with foreigners in their charge once in every two weeks, and when seen as needing special treatment for accommodation, education, exercise, food, and health care, must report to the Head of Immigration Office in written form.’

participation by insisting that making suggestions regarding testimonies is an interruption of interrogation.

Moreov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specifies 'The defense counsel who participates in the interrogation may make a statement on his/her opinion after the interrogation process. Provided, that the counsel may raise an objection to any unfair interrogation manner even in the middle of the interrogation and may also make a statement, with the approval from the prosecutor or the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Article 243-2 (3)). As such, the counsel can raise an objection to unfair interrogation manner, but a suspect's rights to make suggestions or statements on the investigation agency's overall interrogation contents in the middle of the interrogation are not guaranteed.

In addition, Article 9-2 (4) of the 'Prosecution Case Administration Regulations'<sup>420</sup>, Article 16-2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Management Work Regulations'<sup>421</sup>, and Article 18-2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Management Work Regulations', it is prescribed that the 'participation' of a counsel may be limited when the counsel answers on behalf of the suspect during interrogation, makes the suspect change his/her answer or testimony, or records the contents of interroga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requested the Korean Bar Association to punish an attorney that

---

<sup>420</sup> The prosecutor can limit the participation of a counsel even in the middle of the interrogation if the participation of the counsel causes any of the following and causes substantial encumbrance, such as interruption of interrogation or disclosure of investigation secrets, to the investigation.

1) When the counsel unfairly intervenes in the interrogations without the approval from the persecutor or he or she makes insulting remarks or actions. 2) When the counsel answers on behalf of the suspect or induces specific answer or change of testimony. 3) When the counsel unfairly makes an objection not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o of Article 243-3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4) When the counsel videotapes, tape records, or records the contents of the interrogation. Provided, the counsel may make a short note for the purpose of refreshing memory for the sake of legal advice for the suspect.

<sup>421</sup> Article 16-2 (Participation of the counsel in interrogation) ① The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should let a counsel participate in the interrogation unless there exists just reasons upon the request of a persons stipulated in Article 243-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such case, just reasons refer to cases in which it is acknowledged that the participation of a counsel might cause substantial encumbrance to investigation such as interruption of interrogation and disclosure of investigation secrets.

② When a request prescribed in paragraph (1) is put in, the senior judicial police shall have the applicant submit a paper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a counsel before the participation of the counsel.

③ Even when a request for the participation of a counsel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is put in, the suspect may be interrogated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the counsel if the counsel is not present for a substantial period of time or cannot be present in the interrogation.

④ The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may limit the participation of the counsel even in the middle of the interrogation if the participation of the counsel causes any of the following and induces substantial encumbrance to the investigation such as interrup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disclosure of investigation secrets.

1. When the counsel unfairly intervenes in the interrogation without the approval from the persecutor or makes insulting remarks or actions.

2. When the counsel answers on behalf of the suspect or induces specific answer or change of testimony.

3. When the counsel unfairly makes an objection not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243-3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4. When the counsel videotapes, taperecords, or records the contents of the interrogation. Provided, the counsel may make a short note for the purpose of refreshing memory for the sake of legal advice for the suspect.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on the grounds that the said attorney advised the suspect to make a false testimony and assisted in practicing the suspect's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Case> The Ministry of Justice's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on Human Rights Lawyers<sup>422</sup>

In late 2014, the Ministry of Justice requested disciplinary actions on human rights lawyers. Among them, attorney In-suk Kim was accused of advising a suspect who participated in a rally asking for truth regarding the sinking of Sewol ferry to practice the right to remain silent in the investigation, and attorney Kyung-wook Jang was accused of persuading the suspect of a spy case to make a false testimony.

Regarding this, the Korean Bar Association rejected the disciplinary action request stating that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attorney Jang urged the suspect to make a false testimony and that the right to remain silent is a right granted to suspects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hence attorney Kim's advising the suspect to practice the right to remain silent cannot be considered to be violating his duty.

### **Suggested Recommendations**

- To guarantee the counsel'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so that he/she can fully advise his/her client whether or not to practice the right to remain silent, whether or not to answer individual questions, contents of the answers, among others.
- To conduct regular investigations on the cases in which investigation agencies excludes the counsel'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and provide education on "the right to access a lawyer cannot be limited with whatever basis be that guarantee of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orders, or public welfare" to law-enforcement officials.
- To clearly specify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etc that the right to access to a lawyer cannot be limited with whatever basis even if it was guarantee of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orders, public welfare, and etc. Amend Article 9-2 (1) of the Prosecution Case Administration Regulations and Article 18-2 (1)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Management Work Regulations.
- To delete Article 9-2 (4) of the Prosecution Case Administration Regulations, Article 16-2 (4)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Management Work Regulations, and Article 18-2 (4)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Management Work Regulations.

## **2) Information that Foreigners (other than asylum seekers) detained in the deportation room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denied the right to counsel**

Since the ruling that detention in the deportation room is unconstitutional, the Immigration Office publicly claims to operate an open facility which guarantees free mobility within the airport facilities. However, in reality, the operations of deportation rooms does not allow mobility; instead, foreigners who are denied entr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re asked to fill out an application form for the use of the deportation room, which means agreeing to be detained, or else being forced to bare the cost of one's food, clothing and shelter outside the deportation room. Apart from seeing visitors such as attorneys, detainees are denied mobility outside the detention room; still at this point while the report is being prepared (August 2015), such detainees have been locked up for more than six months.

---

<sup>422</sup> Prosecutors picking a fight with progressive lawyers group, The Hankyoreh, 6 November 2014, <http://bit.ly/1JrGRdq>

As such, at present point the deportation room is clearly operated as a detention facility, not only rendering the poorest conditions of living space, but also denying the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health care for the detainees (apart from obtaining an approval for temporary landing), for whom not even a basic check-up would be allowed unless in an emergency situation and at one's own expense.

### **Suggested Recommendations**

- Provide legal grounds for the operation of the deportation rooms and improve the conditions for detained foreigners, especially refugees whom are expected to be detained long term as they wait for their application process.
- Guarantee attorney counsel upon application for all foreigners denied entrance or detained in the deportation room.

**Issue 17** Please report on measures taken to address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to improve conditions of detention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and to facilitate access of prisoners to adequate medical care outside detention facilities.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guideline enac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February 2010, requesting correctional facilities to collect convoy fuel costs and highway toll fees in advance from persons in custody who need to appear in court for civil, administrative, or family litigations, and on its impact on individuals' access to justice.

### **1)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As a response to the List of Issues with regards to overcrowding in detention centres, the Government has presented solutions such as constructing three new correctional facilities. However, this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as there are testimonies from the detainees that many of these facilities have been left unused due to the shortage of prison officers.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does not have regulations on the optimal cell space per prisoner, and the 'Guidelines on detainment classification, transfer, and documentation'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nly sets a standard on the maximum capacity of correctional facilities<sup>423</sup>. Even that, the available space for each inmate is too small compared to the standards set for handicapped facilities<sup>424</sup>, police station jails<sup>425</sup>, and residential facilities<sup>426</sup>. Furthermore, the above standard is not well enforced and, as of 2010, the ratio of maximum capacity inmates to the actual number of inmates at correctional facilities was 111%; at some individual facilities, namely the Busan Detention Center, the ratio reaches 161.5%<sup>427</sup>.

---

<sup>423</sup> One person per one single cell Δone person per 2.58 m<sup>2</sup> of an associated cell; one person per 3.3 m<sup>2</sup> of an associated cell with disabilities (one person per 4.3 m<sup>2</sup> in case of new facilities); one person per 3.3 m<sup>2</sup> of an associated cell with foreign detainees, female detainees, or job-training detainees; one person per 4.3 m<sup>2</sup> of an associated cell in the patient accommodation facilities.

<sup>424</sup> More than 3.3 m<sup>2</sup> per one person (Attached Table No. 5,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p>425</sup> 3.6 m<sup>2</sup> per one person in the cell for five detainees (the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Detention Facilities Article 10 (2))

<sup>426</sup> 14 m<sup>2</sup> per one-person household, 9.2 m<sup>2</sup> per one person in six-person household

<sup>427</sup>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Disposal Request for Audit Result, 2010. 4. 21., p.27

### **Suggested Recommendations**

- Include provision on the optimal cell space allowed per prisoner in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s a measure to solve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 Improve practices that accommodate prisoners beyond the maximum space capacity of correctional facilities

### **2) Living Conditions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In 2007, the fire at the Yeosu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that resulted in 10 deaths and 17 injuries is an example of poor treatment and living conditions of detainees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Despite this incident, there hasn't been any measure taken to improve the conditions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In 2013-2014, the Korean Bar Association has conducted the first non-governmenta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on the conditions of immigration detention shelters. The investigation has found that the treatment of detainees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is far worse compared to that of correctional facilities. It has also confirmed there hasn't been a systematic measure to improve the situation. Few examples of the poor conditions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include the following: the arbitrary management of solitary confinements which are particularly punitive in their nature; the lack of a protection system for gender/sexual minorities; a restriction on the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world; the poor quality goods provided by detention shelters; the shortage of detention personnel and the lack of adequate training and education offered to commissioned staff members of the facilities;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health caused by inadequate diet and exercise.<sup>428</sup>

In addition, the Government claims that professional medical staffs reside within the protection shelters (para.189), but in reality there is only one general practitioner assigned to each facility. Moreover, even if detainees seek external medical treatment, the detainees have to bear the entire expense of treatment and the visits have to first be approved by the residing general practitioner. It is also extremely difficult for detainees to receive psychological treatment.

### **Suggested Recommendations**

- Implement measures allowing detainees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by professional medical specialists, including psychological treatment
- Conduct an independent monitoring o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and improve their conditions based on the monitoring's suggested recommendations

### **3) Prisoners' Access to Adequate Medical Care Outside Detention Facilities**

Prisoner's access to adequate medical care outside detention facilities is not being guaranteed.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only allows prisoners to receive external medical treatment when granted permission from a warden (Article 37 and 38) and in practice, medical treatment within the facility is the default treatment method and external treatment is allowed only when inmates bear the treatment fees. This particularly affects impoverished prisoners, as they are not able to get specialized treatment for serious diseases. From

---

<sup>428</sup> Korean Bar Association, Final Report for the investigation on the conditions of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2015.

2004 to July 2013, 85 out of the 227 inmates (37.4%) who di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were found to have died because their applicati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detention) for treatment purposes had been denied or because the evaluation process took too long.<sup>429</sup>

The Government claims that the remote medical treatment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as of June 2015. Providing remote medical treatment system can be a temporary measure and it should be a step to eventually provide face-to-face treatment.

#### **Suggested Recommendations**

- Reform the practice that only allows external treatment when inmates bear the treatment fees in order to guarantee prisoners' access to adequate medical care outside detention facilities.
- Provide specific plan with detailed timeline to provide face-to-face medical treatment for prisoners.

#### **4) Collection of Expenses for Civil Trials and Court Appearance of Inmates**

The 'Guideline on collection of expenses of civil trials and court appearance of inmates' enac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February 2010 undermines the inmates' right of access to courts. The Ministry of Justice released the public information in February 2011, which marks one year in which the collection of expenses for appearance in court and civil trials has been introduced. According to the disclosed public information, the number of civil trials and court appearances of inmates was approximately 1,400 and the costs charged to the inmates were 55 million KRW (approximately USD 45,540) in total, which amounts to 40,000 KRW for every court appearance. Within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inmates with less than 10,000 KRW worth of money kept in custody was 5,800, which is approximately 10% of the whole inmate population.<sup>430</sup> In its response to the List of Issues with regards to collection of expenses for civil trials and court appearance of inmates (para. 45), the Government claims collecting expense for appearance in court only applies to civil, administrative and family litigations where the appearance of any party is not obligatory. Even when the detainee does not pay the charged expense, the authority allows the detainee to appear in court and later set-off with the money in custody. Nevertheless, the inmates who cannot afford to designate an attorney to handle the cases can only proceed with the lawsuits by themselves, and since they are unable to appear in court, the lawsuits cannot progress. Therefore, the policy has the effect of making inmates hesitant to file a civil suit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regarding violations of their human rights or unfair treatment by the correctional facility. Furthermore, there are even cases in which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ntentionally move inmates, who have filed lawsuits, to another correctional facility far away from the court in order to make them bear higher expenses to appear in court. Such action puts an indirect pressure on inmates to withdraw their cases.

#### **Suggested Recommendations**

- Abolish the 'Guideline on collection of expenses of civil trials and court appearance of inmates' that infringes upon the inmates' right of access to courts

#### **5) Detained Transgender Inmates**

---

<sup>429</sup> Information submitted to parliamentarian Seo, Young-gyo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during the 2013 parliamentary inspection

<sup>430</sup>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receipt number 1264173

Correctional facilities in Korea do not provide any guideline or regulation concerning the treatment of transgender inmates. Transgender inmates detained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are not receiving any treatment appropriate to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they are being denied to bring underclothes suitable to their gender and restricted from putting make-ups on. Not only that, transgender inmates are subject to unfair punishment when they take actions based on their gender identity<sup>431</sup>.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specifies that suitable medic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with regards to the detainees' health and medical conditions (Article 30). However, there is no medical treatment and service provided in relation to transgender inmates.

### **Suggested Recommendations**

- Provide a well-defined guideline concerning the treatment of transgender inmates and implement measures that can honour the inmates' sexual orientation by improving their access to medical treatment with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ssue 18** Please clarify whether the legal definition of “trafficking” in the Criminal Code prohibits all forms of trafficking and effectively protects victims. Please indicate what steps are being taken to address the restrictions imposed on foreign migrant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including changing jobs only with employer’s permission, that are reportedly exposing them to forced labour, exploitation and abuse. Please report on measures taken: (a) to improve the identifica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among vulnerable populations, in particular migrant workers, disabled Korean men, and persons arrested for prostitution; (b)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government complicity in trafficking, including those reported in 2013 by the media and NGOs,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c) to investigate promptly and effectively cases indicative of forced labour and exploitation of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and fishermen on South Korean-flagged fishing vessels, including intimidation, physical and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excessive working hours without weekly rest days, underpayment, inhumane treatment and inadequate accommodation and food; (d) to ensure that entertainment visas (E-6) and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do not serve as a cover for trafficking migrant women into forced prostitution or forced labour.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initiated into cases of trafficking and on the actual criminal convictions under the revised Criminal Code, as well as on remedies awarded to victims. Please also report on the progress with the investigation initiated in March 2014 into allegations of forced labour of hundreds of Korean men, including some with disabilities, on salt farms.

### **1) Criminal Code’s Definition of Trafficking**

The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in the Palermo Protocol defines the purpose and means of exploitation as well as the mode of transportation. However, the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under the Criminal Code<sup>432</sup> merely enumerates the purpose of the exploitation, and not about

---

<sup>431</sup> The court ruled the government should compensate a transgender detainee who tried to hurt himself (Korean), The Hankyoreh, 1 January 2011, <http://bit.ly/1NJBZ9O>, The court ruled that punishing a transgender detainee who refused to have a haircut is illegal (Korean), The Hankyoreh, 2 October 2014, <http://bit.ly/1NJC5yp>

<sup>432</sup> Criminal Code Article 289 (Trafficking in Persons): A person who buys or sells anoth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2) A person who buys or sells another for the purpose of engaging in an indecent act, sexual intercourse, marriage, or for gai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t

means and the mode of transportation; it only states that “individuals who trade humans shall be prosecuted” without providing specific means and mode of transportation. Furthermore, the Court’s reading of this clause is bound to the crime of trading women, which was deleted due to the new legislation of the crime of human trafficking. The Court demands a proof of the use of force and of the compens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in order for the crime of trading someone to be established<sup>433</sup>; thus, the acts of human trafficking under the Palermo Protocol cannot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Korean Criminal Code.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article about human trafficking in the amended Criminal Code, if the victim consents to the intended exploitation such as forced labour, then the case cannot be recognized as trafficking. The Court does not recognize trading without physical and actual control over the victim such as the trafficker for Shin-ahn salt farm case would not be charged with the crime of human trafficking.

### **Suggested Recommendations**

- Amend the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in the Criminal Code to be consistent with the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under the Palermo protocol.

## **2) Restrictions imposed on foreign migrant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Migrant worker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are prohibited to change their working places in principle. Transfer to another business sites occurs only if their employer allows, or if the reason for the transfer falls within the conditions listed i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ct.<sup>434</sup> With few exceptions, the number of job transfer is limited to three times during three years; the application must be made within a month from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with the previous

---

least one year up to ten years. (3) A person who buys or sells another for the purpose of labor exploitation, sex trafficking, sexual exploitation, or the acquisition of orga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t least two years up to fifteen years. (4)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pply to a person who buys or sells another for the purpose of transporting him or her ou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person who transports a purchased person out of the Republic of Korea.

<sup>433</sup> “The Trade of women is the act of having them under a seller’s control and selling them for a price, thus transferring that control to another person. To establish that this is a crime, it needs to be considered whether the seller had actual control over the women; in other words, whether there was continuous blackmailing or whether the transfer of the control of the body was completed in a situation where women would forgo seeking legal protection because of explicit/tacit threat of assault or similar risks.” (21 January 1992, Supreme Court. 9Do1402).

<sup>434</sup>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5 (Permits to Transfer to Another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events occurs, a foreign worker (excluding a foreign worker under Article 12 (1)) may apply for a transfer to another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with the head of an employment security offi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 If his/her employer intends to terminate his/her employment contract during the contract period, or intends to refuse to renew his/her employment contract after its expiry, due to a justifiable ground;
2. Where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gives public notice, as he/she deems that the foreign worker is unable to continue his/her employment in the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in conformity with principles generally accepted in the society due to a ground not attributable to him/her, such as temporary shutdown, closure of business, cancella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under Article 19 (1), limitation on the employment under Article 20 (1), or his/her employer's vio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or unfair treatment;
3. Where any other cause or ev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ccurs.



employer; and the application must be approved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ve agency within three months.<sup>435</sup>

### **Suggested Recommendations**

- Revise the law to allow migrant worker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o change their working place freely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employer.

### **3) Improve the identifica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among vulnerable population**

There is no system to identify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s defined in the Palermo Protocol. With the lacking of such systems, no protection is available for the victims. Due to the absence of these systems, migrant victims are rather subjected to deportation orders for violation of Immigration control law; they are detained, deported, and deprived of chances to access to remedy.

In 2014, two Vietnamese fishing crews who suffered from physical and verbal violence submitted a request to the Immigration Office in order to change their working place; however, the Immigration Office deported the crew for absconding from their designated working place. In 2015, migrant women, who entered the country with entertainment visa were sexually exploited in night clubs, were investigated as criminals and witnesses after a police raid. Although the women should be protected as th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without prosecution according to the Palermo Protocol, the women were even detained as witnesses during the investigation of the owner of the club.

Lacking identification indicators for human trafficking victims, crew members from fishing vessels in 2011 and 2012, Korean disabled men at the salt farm and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in 2014, were neither identified nor protected as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fter they were trafficked.

### **Suggested Recommendations**

- Establish clear guidelines for identifying human trafficking victims and distribute them to all government agencies. Conduct training to relevant officers especially to immigration officers and police officers on regular basis.

### **4) Investigation of forced labour and exploitation of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and fishermen**

No measures were put in place since 2013 when the NHRCK conducted an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Migrant workers working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not only suffer excessive working hours with low wages; they are exposed to different human right abuses such as abusive and violent languages, physical and sexual violence.<sup>436</sup>

Most of the employers reject migrant workers' request to improve their wages, holidays or accommodations. Furthermore, in case the workers ask for transfer to a different business site, the employers threaten to report the employees to the police or immigration officers so that the workers

---

<sup>435</sup>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5 (Permits to Transfer to Another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4) Any foreign worker's transfer of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under paragraph (1) shall not, in principle, exceed three times during the period prescribed in Article 18 or two times during the extended period prescribed in Article 18-2 (1) (excluding a transfer to another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due to any ground set forth in Article 25 (1) 2):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any extenuating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ists.

<sup>436</sup> According to research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76% of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e industry were verbally insulted and assaulted; 15% of them were physically abused; and 11% of them were sexually abused.

would be deported.<sup>437</sup>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take any measures regarding article 63 of the Labour Standards Act, which exempts workers in agricultural industry from the limitation of the working hours.<sup>438</sup>

In 2011, the Indonesian fishing crews, who were employed in a Republic of Korean-flagged fishing vessel operated in New Zealand, ran away from the site due to unpaid wages, sexual and physical violence, harsh working conditions, and discrimination. However, none of the offenders who committed the sexual and physical violence were prosecuted; no punishment was given to the fishing company; only a light penalty was imposed on the managing agency for forging documents.

No measures was taken after the research was published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of Korea in 2013 that foreign fishing crews working inshore fishing vessels suffer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amounts to the human trafficking. These conditions incite the violence, non-payment of the wages, deposit money that prevents crews from leaving the working place, confiscation of passports and bank books.

### **Suggested Recommendations**

- Amend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63 to be applicable to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e industry.
- Revise laws and policies to improve the structural problems suffered by migrant workers working in a fishing vessel such as non-payment of wage, sexual and physical violence, and harsh working conditions.

### **5) Entertainment visas (E-6) and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Knowing that the Filipino female migrants who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with E-6-2 visas becom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e Ministry of Justice has taken no measure to stop or regulate these abuses of visa regulations. Though the Ministry of Justice stated that the screening process for the issuing of E-6 visa has been strengthened and the number of women entering the Republic of Korea with entertainment visa has decreased in its 4<sup>th</sup> periodic report paragraph 142, in fact, the number of Filipino women entering Korea with E-6-2 visa has increased.

Many women who entered Korea without the 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 (OEC) from the

---

<sup>437</sup> Employers often collectively react to these issues. There was a case of the employers of the vegetable farms who forced migrant workers to sign a memo forcing them to pay for the penalty if the migrant workers quit working before the contract period, imposing the fines for delinquency of duties or absence, and requiring extra pay for the extended working hours would be offset by the fees for dormitory. In addition, employers of migrant worker who asked for the transfer of working site due to the nonpayment of the wages and violence have called the police and immigration officers requesting to arrest the workers with the other employers and their families in the area.

<sup>438</sup> Labor Standards Act Article 63 (Exclusion from Application): The provisions pertaining to work hours, recess, and holidays referred to in this Chapter and Chapter V shall not apply to a worker who falls under any on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A worker engaged in cultivation or reclamation of land, seeding, cultivation, or collection of plants, or other agricultural and forestry work;
2. A worker engaged in breeding of animals, collection or catching of marine animals and plants, cultivation of marine products, or other cattle breeding, sericulture and fishery business;
3. A worker engaged in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 whose employer has obtained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4. A worker engaged in such busines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hilippines Oversea Employment Administration becam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e Ministry of Justice's issuance of visas without OEC leads to different incidents of human trafficking.

### **Suggested Recommendations**

- Strengthen the actual screening procedure in issuance of E-6-2 visas by issuing the visas to only those who have 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 (OEC).
- Conduct regular monitoring of the entertainment visas (E-6) and marriage migrant visas (F-6) in order to prevent abuse, forced prostitution, and forced labour. Provide specific measures to prevent the abuse of the (F-6) and (E-6) visas.
- Provide the appropriate measures to support the right to stay and the right to work for th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 **6) Number of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The statistics presented by the government related to overall prostitution; it does not include the specific statistics regarding the human trafficking article enacted in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Code in 2013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lermo Protocol. Due to the absence of detailed definitions in the new human trafficking article, the article has been cited only in few cases, which then leads to indictment and convic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article only 6 cases were sentenced with indictment.<sup>439</sup>

Among the cases above, the suspects convicted are people who sold and bought and paid money for prostitution with women with mental disabilities. It is clear that punishment is based on the women trafficking clause which was present before the revised clause. This means that the revised human trafficking clause is not able to enforce the prosecution of illegal acts of human trafficking according to the definition laid in the code.

### **7) Forced Labour in Salt Farm**

As of August 2015, merely 6 cases were actually sentenced to the perpetrators of the salt farm slave cases in 2014 out of 20 cases.<sup>440</sup> Most of the cases were sentenced to suspension of execution; furthermore, none of the cases were prosecuted and punished under the human trafficking act.

In the crime of kidnapping or abduction, which is similar to the crime of human trafficking, the crime

---

<sup>439</sup> 1) Human Traffic, Violation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Supreme Court, 15 October 2014, 2014Do4451, 2) Human Traffic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Violation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Busan High Court, 25 March 2015, 2014No776, 3) Human Traffic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Violation of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Seoul High Court, 27 March 2015, 2015No167

<sup>440</sup> 1) Quasi-Fraud, Violation of Labor Standards Act, 8 October 2014, Gwangju High Court, 2014No1953 2) Inflicting Bodily Injury on Other or on Lineal Ascendant, Quasi-Fraud, Violation of Labor Standards Act, Guarantee of Workers' Retirement Benefits Act, 24 September 2014, Gwangju High Court, 2014No1770, 3) Abduction for Gain, Quasi-Fraud, Embezzlement, Violation of Labor Standards Act, Inflicting Bodily Injury on Other or on Lineal Ascendant, Interference with Business, Destruction and Damage, etc. of Property, 25 September 2014, Gwangju High Court, 2014No248, 4) Embezzlement, Attempts to Murder, 6 November 2014, Gwangju High Court, 2014No273, 5) Abduction for Gain, Quasi-Fraud, Violation of Labor Standards Act (Inflicting Bodily Injury on Workers, Nonpayment of Wages), Violation of Guarantee of Workers' Retirement Benefits Act, Violation of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Gwangju High Court, 2015No410, 136 (Merged), 6) Receiving of Person Abducted, Violation of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Violation of Labor Standards Act (Inflicting Bodily Injury on Workers), Aggravated Illegal Confinement, Abduction for Gain, Violation of Employment Security Act, Fraud, Seoul High Court, 2014No2699

is not realized if the judgment and consent of the person is present. The precedent states that the crime of kidnapping or abduction cannot be established when the mentally disabled victims are considered to follow the perpetrators voluntarily.<sup>441</sup>

The exploitation of disabled persons in the salt farms in the remote islands has been a chronic problem without Government's fundamental measures to regulate it. A research conducted in April 2015, after a year from the incident shows that among the 63 people who were assisted after the rescue, only 13 were located and 20 were found to have returned to the island.<sup>442</sup>

## Right to privacy and family life (Article 17)

**Issue 19** Please respond to reports that mandatory HIV tests are conducted on foreigners, prisoners, and soldiers, as well as to reports indicating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where hospitals perform such tests on their patients without obtaining their prior consent. Please explain how such actions are compatible with the State party's obligations under the Covenant.

### 1) Mandatory HIV tests

The Government conducts blood tests on soldiers<sup>443</sup> and prisoners. The conductor obtains prior consent from prisoners before taking their blood samples. Among those foreigners who stay more than 90 day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register as foreign language instructor should submit HIV test results to the Government. (Reply to the List of Issues para. 55).

In March 2015, the Government amended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which enforce persons who are admitted to prison for the first time are required to have health tests<sup>444</sup>. The Medical Instruction for Prisoners by the Ministry Justice Article 3, Paragraph 5445 includes HIV tests in the health tests of prisoners, which resulted in compulsory HIV test on prisoners.

Besides the cases of foreign language instructor (E2 Visa, Teaching Visa), from 1 April 2014, the Government requested E7 Visa (Specially Designated Activities) applicants to submit medical report that includes an HIV test result.<sup>446</sup> In addition, F2 Visa (Long-Term Residency) applicants also should submit the medical report that includes HIV test, venereal disease (VD) and mental disorders.<sup>447</sup> The

---

<sup>441</sup> 2013GoHap353

<sup>442</sup> 'Salt Farm Slaves' Returned to the World, Abandoned from the World, and Returned (Korean), Seoul Newspaper, 8 April 2015, <http://bit.ly/1NJCocj>

<sup>443</sup> Military reinforced health test before entering military service (Korean), Kookbang Ilbo, 17 February 2014, <http://bit.ly/1NEZ2m5>

<sup>444</sup>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rticle 16 (Confinement, etc. of Newly Confined Persons): (1) Any person newly confined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from the court, prosecutors' office, police agency,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wly confined person") shall be confined after a written direction for execution, court records, and other necessary documents for confinement are examined. (2) Any warden shall conduct medical examinations for newly confined persons, without delay.

<sup>445</sup> Medical Instruction for Prisoners Article 3(5): All new prisoners must have syphilis and HIV test by public health centers or specialized agencies.

<sup>446</sup> Information Notice about changes to qualification concerning the health test for working as foreign language instructor, Hi Korea, 4 November 2012, <http://bit.ly/1NEZdOR>

<sup>447</sup> Announcement on Health Certificate for long-term residency for marriage, Hi Korea, 16 May 2011, <http://bit.ly/1NEZkcW>

HIV tests on foreigners are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because they can be used as a way to regulate immigration and residency without any other legal bases.

## 2) HIV test without prior consent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ll medical tests should be conducted after obtaining prior consent. However, several cases have been reported that some HIV tests are conducted without prior consent. Also, cases are reported that HIV infection related information is circulated among medical professionals without obtaining consents from patients.

<Case>

In 2012, Doctor A conducted the HIV test on patient B while doing blood test without obtaining prior consent from patient B. The test showed that B has HIV positive. Therefore, Doctor A delayed B's surgery to conduct exact an HIV test. Doctor A told that patient B is HIV positive to the doctor in another hospital where B visited to have surgery. Doctor A received a guilty verdict as being suspected of violating the Prevention of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ct. However, Doctor A was acquitted on appeal and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lower court's ruling which decided that Dr. A is not guilty.

### Suggested Recommendations

- Immediately abolish compulsory HIV tests on foreigners, soldiers and prisoners.
- When HIV tests are needed to be conducted, health personnel should fully explain about the test to the patient and obtain the patient's consent. This should be prescribed in legislation.

**Issue 20**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current legislation and practices governing the monitoring, surveillance and interception, analysis, use and storage of private communications (including internet, telephone, and email and fax communications) and data; on the existing legal safeguards against arbitrary interference with the privacy of individuals; and on their respect in practice. Please explain how the following activities are compatible with article 17 of the Covenant: (a) "base station" investigation by police whereby call history of every mobile phone within the range of assemblies is allegedly intercepted in order to find out the identity of participants; (b) release of user information by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cluding names, ID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addresses, to intelligence or investigation agencies allegedly without any restrictions; (c) retention of users' communication data by providers of telephone, telecommunication and internet services for 6, 12, and 3 months, respectively; (d) operation of a program that allegedly enables teachers to control students' mobile phones, check their location information, control usable functions and browse data. Please also clarify whether the State party adopted amendments requiring telecommunication operators to be equipped with 'wiretap-ready' facilities.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regulates real time communications and its metadata (referred to as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by the Government). Wiretapping (referred to as communication-restricting 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metadata retrieval each requires permission from the courts, however the rejection rate of such permissions in the courts is extremely

low<sup>448</sup> and, thus, and the system is not adequately regulated.

The amount of surveillance and monitor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s excessive for all aspects of wiretapping, metadata acquisition, and subscriber identification information.<sup>449</sup> In particular, there are serious problems with the abuse of metadata to track location information, which is extensively permitted by the Government when considered necessary for an investigation. On 9 April 2014, the NHRCK recommended that the requirements to request metadata from the Government should be limited to when there is reasonable ground for doubt that the suspect has committed the crime and that the metadata is related to the relevant case. The requirements to request real-time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limited to when the case fulfil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subsidiarity. (Such information should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after attempting all other means available. The Government, however, rejected the NHRCK's recommendation.

Regarding non-real-time communications (saved communications), metadata is provided by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However, the Government does not adequately notify the suspect of the seizure of metadata neither do they notify the parties who have communicated with the suspects, (therefore their data is shared on the suspect's device) while they are not involved in the case. The courts should notify the suspect of any wiretapping, metadata, and search and seizure activities within 30 days of the indictment date, not within a specific deadline after their execution, which significantly delays the point of notification. There has been also cases where the notification was postponed due to reasons such as ongoing internal investigation.<sup>450</sup> Recentl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illegally purchased and used spyware from the Italian company, Hacking Team. However, there are insufficient mechanism to effectively and independently monit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communication investigations, including those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at the National Assembly.

### **1) Base Station Investigation by Police**

To identify participants during protests, the police carries out a so-called "base station investigations," in which the receive all mobile phone records from which a signal has been picked up

---

<sup>448</sup> From 2003 to 2012, the district court issued 3,746 wiretapping warrants out of 3,992 request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has rejected only 176 requests for warrants maintaining a 4.49% overall dismissal rate. During the same period, the High Court issued 42 wiretapping warrants out of 45 requested warrants by the intelligence agency while rejecting part or all of only 3 warrants requests, maintaining an overall 6.67% I dismissal rate. From 2006 to 2012 when the court started to control its metadata, the district court issued 467,833 metadata acquisition warrants out of 492,414 while rejecting 24,531 warrant requests, maintaining an overall dismissal rate of 4.98%. During the same period, the High Court issued 58 metadata acquisition warrants request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hile rejecting only 6 warrants requests, maintaining a 9.39% overall dismissal rate. Please see the Supreme Court Judicial Review (Korean) <http://bit.ly/1laFQFR>

<sup>449</sup> Communications Surveillance in Korea, Park Kyung Sin, <http://bit.ly/1NJCDEq>

<sup>450</sup> In the Beomminryeon cas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wiretapped most of the communication facilities used by the Secretary General of Beomminryeon, Lee Kyung-Won. Between 30 July 2003 and 7 May 2009 he was arrested on charges of breach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NIS monitored Lee Kyung-won's landline, mobile phones, fax, and internet including his email messages, and portal mail without a judge's permission for over 68 months. In December 2010,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collecting evidence in this manner was not admissible. The warrant for wiretapping Lee Kyung-won was issued in 2009 when he was prosecuted and brought to trial. See "The National Security Law: Curtail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in the name of security in the Republic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2012, pp12~13, <http://bit.ly/1laJn7c>

at a wireless base station near protest sites without having to specify certain subjects. In the press release made on 2 April 201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xplained that a base station investigation “targets all phone numbers transmitted from specific base stations in specific time zones.”<sup>451</sup> In 2011, the Prosecutor’s Office seized mobile phone records of 659 people through a base station investigation, targeting protest participants, claiming to investigate alleged bribery at a protest of the Democratic United Party, the main opposition party. One journalist who joined the protest to cover the article filed a constitutional appeal in 2012. The appeal is currently being examin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hen base station information is provided as metadata “when necessary for an investigation”, it i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privacy as well as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 **2) Release of User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Government allows common Internet carriers to extensively provide subscriber identification information (referred to as communications data by the Government), such as the user name, I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es held by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without any restrictions.. This infringement has been criticized for its abuse to conduct illegal surveillance on internet users who are critical of the Government.<sup>452</sup> On the 10<sup>th</sup> of February 2014, the NHRCK recommended to the Government that subscriber identification information contained in metadata should be obtained only after permission is received from the courts, and that such permission from the courts should be limited to “when there is reasonable ground for doubt that the suspect has committed the crime and it is related to the relevant case.”

## **3) Retention of Users’ Communication Data**

According to Article 41, Section 2,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phone companies must store the metadata of all subscribers for 6 months, mobile carriers, for 12 months,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for 3 months. However, legalizing storage of all people’s data is an extensive and sever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sup>453</sup>

## **4) Operation of a Program that Allegedly Enables Teachers to Control Students’ Mobile Phones**

The policy that restricts students’ use of mobile phones is a violation of right to privacy of students. In 2014,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the Gangwon-do Office of Education pilot

---

<sup>451</sup> The Republic of Korea, with its population, of 50 million people conducted an excessive number of base station investigations, 36,706,986 cases in 2010 and 36,800,375 cases in 2011. The number of investigations, however, steadily decreased after a constitutional appeal was filed by human rights organizations, recording 24,831,080 cases in 2012, 15,245,487 cases in 2013 and 9,786,752 cases in 2014.

<sup>452</sup> The fact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9,574,659 users was provided by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2013 means that information of 26,232 people were provided to intelligence or investigation agencies every day across the nation. It also indicates that the information of 19% of the total popu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being provided with country’s total population being 50,219,669. During the railroad workers’ strike in 2013, the police acquired personal data of 300 to 400 people from telecommunication companies without the court’s approval for no other reason than the fact that they were on the calling list of the workers that were targeted for arrest. The police contacted them and questioned them to questio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workers.

<sup>453</sup> "It entails a wide-ranging and particularly serious interference with the fundamental rights to respect for private life an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without that interference being limited to what is strictly necessary", The Court of Justice declares the Data Retention Directive to be invalid,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8 April 2014, <http://bit.ly/1U85tDy>

tested the “iSmart Keeper” program, by which teachers can access students’ mobile phones, check their location, control available functions, and even view their data usage. Moreov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which was amended and enforced in 2015, made it compulsory to implement a means to block pornography on mobile communications used by teenagers. The teachers can regularly check whether that blockage means are being deleted from the phone of the student or not, and “notify” their parents. Aside from that, the Government used this law to publicize applications that allow parents to monitor their children. As a result, hundreds of thousands of teenagers are using mobile phones that their parents can monitor and control using applications on a real-time basis.

Moreover,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amend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o make it obligatory for mobile carriers to be equipped with wiretapping equipment for intelligence and investigative agencies. This bill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at the 19<sup>th</sup>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existing law does not prohibit mobile phone wiretapping, but when a case of illegal wiretapping by the intelligence agency was revealed in 2005, the intelligence agency claimed that they had discarded mobile phone wiretapping equipment.<sup>454</sup> The Government argued that since mobile phone wiretapping is impossible, it is necessary to make it compulsory for mobile carriers and social network operator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to be equipped with wiretapping equipment. Howev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urchased Italian Hacking Teams’ programme to be able to wiretap without wiretapping equipment by mobile carriers. A system that makes it obligatory for firms to have their communication networks “wire-tap ready” with equipment raises more concerns because it “creates an environment that facilitates complete surveillance.”

### **Suggested Recommendations**

- Reinforce the restrictions on information and investigative agencies receiving metadata and location information.
- Notification of search and seizure of wiretapped information, metadata, and telecommunications should be carried out within a specific deadline after the end of a surveillance operation, not after the end of an investigation.
- Establish an effective and independent supervision system to prevent the abuse of wiretapping authorizations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Reinforce the restrictions on information and investigative agencies receiving subscriber identifying information, such as having to get permission from the courts.
- Adopt a system that makes it obligatory to store the metadata of all subscribers for only a certain period of time.
- End the policy by which mobile carriers or schools have remote control over students’ mobile phones.

###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us belief, freedom of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freedom of association (arts. 18, 19, 21 and 22)**

**Issue 21** With reference to the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 (CCPR/C/KOR/CO/3, para. 17), please report on the progress made with respect to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civilian

---

<sup>454</sup> NIS accused of purchasing powerful program to monitor smartphones, The Hankyoreh, 13 July 2015, <http://bit.ly/1U86rzs>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lso report on the status of proposed legislation aimed at publicizing on the Internet the names of those who refuse to serve in the military.

In the 4<sup>th</sup> periodic report to the Committee (CCPR/C/KOR/4, para. 268), the Government claims that it “continues to conduct research in recognition of the difficulties in introducing such alternative service system”. However, the Government is not conducting any particular research on this issue besides occasional survey of public opinions.

The Government had already prepared solutions for alternative services through a research on a plan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which was conducted upon the request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n 2008.<sup>455</sup> However, the Government had refused to find ways to implement these solutions, only referring the poll results unfavourable to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Although there were other poll results which were in favour of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the Government has not acknowledged it. The Government should not decide human rights related laws and policies based on poll result or public opinion only.

Regarding the concern of the State Party that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ystem may harm national security, the Committee had noted that the State Party had failed to show what special disadvantage would be caused if an alternative system would be introduced.<sup>456</sup>

At the end of 2014, an amendment was made to the Military Service Act, which provide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draft evaders. This amendment could function as a means of stigmatiza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conscientious objectors in addition to the criminal punishments the objectors has to receive.

#### **Suggested Recommendations**

- Recogniz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a human right inherent to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nd make changes in relevant provisions including introduction of a civilian service system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 Release all individuals imprisoned solely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refuse to perform military service in absence of a civilian alternative.
- Clear the criminal records and provide adequate compensation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ho have been imprisoned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by reason of their conscientiously held beliefs.
- Fully review the enforcement of systems of public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may cause stigmatization and discrimina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Issue 22** Please report on the measures taken by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students assigned to religiously affiliated schools are not forced to attend religious events and take religious classes.

<sup>455</sup>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Research on Plan to include persons who refuse to enlist on the ground of religion and other beliefs and values into a Social Service System”, December 2008, Publication Registration Number: 11-1300000-000084-01, <http://bit.ly/1QIRP9t>

<sup>456</sup>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3 November 2006 (Communications Nos. 1321/2004 and 1322/2004), UN Doc. CCPR/C/88/1321-1322/2004, para 8.4

According to the General Chapter of the Curriculum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schools are required to provide alternative options for students when offering religious classes. These alternative options not legally enforceable and students in private schools are often forced to take part in religious education.<sup>457</sup> Religious classes are compulsory in 58.1% of religious private schools, and among those schools 61.1% do not offer freedom of choice for attending religious classes. In addition, 60.8% of religious private schools hold religious rituals during entrance and graduation ceremonies.<sup>458</sup>

### Suggested Recommendations

- Enact a law to prohibit religious discrimination and compulsory religion education in private schools.

**Issue 23** Please report on measures taken to ensure that freedom of expression online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f public interest by defenders is not unduly restricted by Government-controlled institutions that use vaguely defined concepts, such as “harming the public interest” or “false communication”, to block Internet content. Please respond to reports that criminal charges against the spreading of false information online continue to be imposed,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December 2010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Please indicate whether there are any plans (a) to amend the broad definition of defamation and to decriminalize defamation; (b) to amend the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Public Officials Service Regulations that restrict public officials’ freedom of expression.

### 1) Freedom of Opinion on the Internet / Decriminalize Defamation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December 2010 in regards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investigations and indictment against the spreading of false information online are continuing, using other laws or different articles in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sup>459</sup> Most of all, the police, Prosecutor’s Office, and the President have continued to impose criminal charges against messages on the Internet that criticizes the Government following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Sewol ferry disaster happened on 16 April 2014 in which 304 people were killed including students who were heading for a school trip. The Government argue that charges were made because spreading false information damages public officers’ reputation.<sup>460</sup>

---

<sup>457</sup> In terms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Republic of Korea, most students are assigned to both private and public schools by the education authorities and not by their choice, and the Government provides w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private schools, thus the distinc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chools is insignificant.

<sup>458</sup>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report on the “Study on Religious Discrimination and Plans for Improvement”

<sup>459</sup> After the Fukushima incident on March 2011, people worried about possibility of radioactive materials transmitted to the Republic of Korea via wi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ficially announced that 'it is not possible to have radioactive materials in the air because wind blows to Korea from Japan on the westerlies, and the police booked one person who posted foreign media which covered this issue online. Since radioactive materials were found places around Seoul, the person was not criminally indicted, but it created chilling effects on the Internet.

<sup>460</sup> Right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on 23 April 2014, the Police immediately announced 'Guidelines to respond Sewol ferry related false information', and identified 87 cases of rumours that damage reputation of

In 2015, as there were a number of critical views about the Government's way of dealing with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the Ministry of Justice,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strictly warned that "We are going to strictly regulate rumours about MERS".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monitored all messages concerning MERS that were shared online. At the KCSC's conference on the 6th of November 2015, it was reported that among six messages that were blocked and prevented from going online by the police, five messages were critical about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sup>461</sup>

Forty-eight cases were reported in which the Government or public officials accused or prosecuted people for defamation between 2008 and 2014.<sup>462</sup> It i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or an investigative agency to delete or investigate critical views on the Government for defamation.

### **Suggested Recommendations**

- Guarantee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n the Internet by preventing the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e from excessively regulating disseminating public information in order to block contents on the Internet by using vague words such as "Harming the public interest" or "false information".
- Abolish the Article 311 of the Criminal Code (Insult) and Article 307 of the Criminal Code (Defamation), in line with the General Comment No. 34.

### **2) Public Officials'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sponse to the List of Issues (para. 72), the Government states that public officials bear obligation to political impartiality and shall be servants of the entire people under the Constitution and relevant law, and such provision does not limi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general, and thus, the Government does not plan to amend the provision.

The Constitution Article 7(2)<sup>463</sup> already clearly states that public officials have a duty to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and can work independently from the ruling party. Therefore, depriving public officials' political right and fully limit freedom of expression as an individual, not as a public official, violate the Covenant.

---

local officers and Sewol victims' families. The Police also announced that they would mobilize 1,038 cyber police officers to control false information related to it. However, those rumour cases identified by the police were mainly on criticizing the Government's failure on rescue mission, and later, it was found that coast guards were in fact not active in rescue mission. Also, when the owner of the Sewol ferry Mr. Byun-eon Yoo suddenly found dead on July 2014, the police announced that any Internet postings that raise doubts on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the cause of death of Mr. Yoo. Most of all, at the Cabinet meeting on 16 September 2014, the President Park pointed out that "insult on the President on the Internet cross the line" and after that, the Prosecutor's Office announced that it will pre-emptively punish defamation against public figure.

<sup>461</sup> While saying investigation on MERS related rumours... focusing on finding message criticizing the President (Korean), Media Today, 12 June 2015, <http://bit.ly/1IaNUjP>

<sup>462</sup> Crisis of Seditious Libel in Korea, Park Kyung Sin, <http://bit.ly/1NJCSz8>

<sup>463</sup> Constitution Article 7(2): The status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public officials shall be guaranteed as prescribed by Act.

Regarding this case, both the Constitutional Court<sup>464</sup> and the ILO<sup>465</sup> stated that public officials' political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lso expressed his concerns on this matter.<sup>466</sup>

<Case 1>

In 2009, when there was candle-light rallies against the United States Beef import, 16 labour leaders were charged with criminal cases and 105 labour leaders were charged with disciplinary action after they declared the state of affairs in June 2009 and made a banner saying 'we want to be servants for the public not servants for the Government'. They also attended rallies where they called for 'let's take back our democracy'. Most public officials were charged with disciplinary actions and four people including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leader took a disciplinary dismissal.

<Case 2>

On the 25th of January 2010, around 290 people including public officials were prosecuted for violating the Political Party Law and the Political Fund Law as they had donated small amount of money to certain political parties. Moreover, in June of 2010, 258 public officials were charged with heavy disciplinary actions such as expulsion and dismissal. On January 2011, these public officials were found not guilty of violating the Political Party Law but guilty of violating the Political Fund Law and therefore, had to pay fine. Again in June of 2011, 271 were prosecuted and fined for the same reason above.

<Case 3>

Recently, in May 2015, eighteen public officers and union leaders were prosecuted for attending 24 April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general strike against the retrogressive revision of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Moreover, 32 public officials including the eighteen people just mentioned are charged with heavy disciplinary actions.

### Suggested Recommendations

- Guarantee public officials' political rights and amend the laws and regulations accordingly, including the Public Officials Service Regulations that restrict public officials'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ssue 24** With reference to the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 (CCPR/C/KOR/CO/3, para. 18), please report on steps taken to amend the National Security Act in order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s therein, in particular those contained in article 7 of the Act, and ensure its compatibility with the State party's obligations under the Covenant. Please comment on reports that the number of detentions and prosecution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Act has been on the rise since 2008 and that the Act is increasingly used to curtail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including of those expressing critical views about the State party's policies. Please als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sup>464</sup>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6HeonMa1096, 29 May 2008

<sup>465</sup> "Public servants at all grades, regardless of their tasks or functions, including firefighters, prison guards, those working in education-related offices, local public service employees and labour inspectors, have the right to form their own associations to defend their interests"; ILO Governing Body, 353rd Report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GB.304/6, 2009.3, para. 749

<sup>466</sup> E/CN.4/1996/39/Add.1, 1995.11.21, paras 34~36. A/HRC/17/27/Add.2, 2001.3.12, paras 76, 80, 100

charges brought against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under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for praising/propagating North Korean ideology and the disbandment of this political party by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December 2014.

**1)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Limit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Government argues that it is strictly apply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NSA). Nevertheless, on 22 January 2015,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singing the ‘Revolution Comrade Song’ has concrete danger of posing actual threats to the existence and safety of a nation and the basic orders of liberal democracy, thereby violating Article 7 of the NSA (2014 Do 10978). On the 30th of April 2015, in the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7 of the NSA,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rticle is constitutional (2012 Heonba 95) and reconfirmed that the related provisions leave no room for a broad interpretation and arbitrary judgement of legal interpretation. This case shows that the Government has not implemented the Human Rights Committee’s recommendation to revise the NSA.

According to the Supreme Persecutor’s Office’s 2015 data,<sup>467</sup> the number of detentions and prosecutions for violating the NSA has been on the substantial rise since 2008. Since the decrease of the figure in 2014 is not a result of the change in the Government policies as regard to the NSA, it cannot be considered to be a meaningful decrease. As such, the statistics mentioned in the Government’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para. 74) are not correct.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Number of people who are investigated       | 46   | 57   | 97   | 90   | 112  | 129  | 57   |
| Number of people who are indicted and tried | 32   | 43   | 52   | 63   | 89   | 94   | 54   |

The Government arbitrarily restricted the expression and exchange of free opinion by targeting the individuals, civil society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including the human rights defenders that have different or opposite political views from the Government, with the NSA as a vehicle. In particular,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concrete danger, the Government has been considering the expression of opinions similar to North Korean policies and arguments as a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punishing those who express such opinions.

The Government has been punishing actions that publish or spread online posts using Article 7 of the NSA as a standard for censorship. According to Article 44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order the provider of information and the management operator of the bulletin board to delete corresponding information as regard to the information with contents that fall under

<sup>467</sup> Public Safety Case Management Situation for Each Crime Type – National Security Act Violation Crime, Statistics Korea, <http://bit.ly/1NJD9IL>

the actions prohibited by the NSA. In case of not implementing the order, up to 2 years of imprisonment or fines up to 10 million won may be imposed. According to the '2014 Report on the Real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NSA' publish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2014, people that publish online posts or manage the bulletin board deleted 206,404 posts from 2009 to August 2014.

A total 6 people<sup>468</sup> including Seok-ki Lee (lecturer),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lawmaker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Hong-yeol Kim the chairperson of Gyeonggido district, and several past and present party leaders participated in a state of affairs lecture on the 12th of May 2013, along with 130 other present party members and leaders. At the time, the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heightened because of DPRK's nuclear tests and the announcement of nullification of armistice. Based on that, Seok-ki Lee evaluated in the lecture that it was a time of change in which the US led-dominant order will collapse and independence, democracy, and unification will be realized on the Korean peninsula. Lee continued on to urge the participants that they shall establish a physical and technical preparation system with a faith in victory in order to response to such state of affairs. In the lecture, Lee avoided mentioning the specifics about the physical and technical preparation methods and had the participants to debate in small groups. Four people excluding Lee and Kim presented the results of their debate in front of the whole participants, which included a reference about the demolition of railroads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in case of the outbreak of a war.

The Prosecutor's Office asserted those 130 members of 'RO', a so-called underground revolution organization, who gathered and plotted a rebellion to help North Korea's war. Six people including Seok-ki Lee were charged for plotting a rebellion along with sedition and violation of the NSA. In 2015, the Supreme Court found them innocent of plotting a rebellion, but found them guilty of violating Article 7 (1) (agreeing with anti-national group) and (5) (possessing, distributing, and acquiring expressions that benefit the enemy) of the NSA.

In regards to the violation of the NSA,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state of affairs lecture held on May 12 was to respond to and join the anti-national group, namely DPRK activities, by advertising and instigating an anti-national group and conducting actions that make assertions similar or consistent with the activities of an anti-national group, in violation of Article 7 (1). The Court found two of the six people involved guilty of violation of Article 7 (1) for posing concrete danger of exerting an evil influence on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nation and the basic orders of liberal democracy by carrying out an ideology study to praise or agree with the activities of an anti-national group. Furthermore, the court judged that singing the Revolution Comrade Song was to agree with anti-national group that benefits the enemy in violation of Article 7 (1) and found every 6 persons guilty of possessing, propagating, and acquiring the expressions that benefit the enemy in violation of Article 7 (5).

<Case 1>

Mr. Jeong-geun Park was arrested and charged in 2012 for following the official twitter account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retweeting its posts, supposedly spreading and linking the expressions that benefit the enemy. He was found guilty in the first trial, found innocent in the second trial, and found innocent in the Supreme Court (2014). Park's action was in fact to mock the DPRK government.

---

<sup>468</sup> Sang-ho Lee, Sun-seok Hong, Dong-keun Han, Seok-ki Lee, Yang-won Cho, Hong-yeol Kim, Geun-rae Kim

<Case 2>

Whe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n NGO with a special consultative status to the UN ECOSOC, raised a question regarding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s official investigation on the Cheonan Naval Ship incident, the Government investigated PSPD for conducting actions that benefit the enemy as prescribed in the NSA in 2010.

<Case 3>

Lastly, four teachers belonging to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that formed the 'New Era Education Movement' were charged for forming a group that benefits the enemy, which was rejected by the court. They were found guilty in 2015 of the possession of the expressions that benefit the enemy for possessing books related to the DPRK.

### **Suggested Recommendations**

-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Act in its entirety.
- Abolish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by priority, which is way too broad and vague.
- Abolish Article 44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which is conducting de facto censorship with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 **2)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On 19 December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ed 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and deprived five UPP lawmakers of their duty. The court considered that the UPP is against the democratic order, since it is dominated by core forces pursuing the hidden objectives rather than the objectives disclosed in the party's constitution and pursues DPRK socialism by the means of violent measures.

Howev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a result made by violating a due procedure. In jud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UPP, the Constitutional Court applied civil procedure rather than criminal procedure. As a result, less strict standards were applied in th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and burden of proof. Moreover, the Constitutional Court violated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at stipulates that the evidence submitted to the trial in progress cannot be used in the tria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en the trial of the people concerned in the May Meetings (the incident that found 6 people including Seok-ki Lee guilty for instigating a rebellion and violating the NSA), a crucial factor in the dissolution of the UPP, was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on charges of rebellion conspiracy, instigating a rebellion, and violating the NSA, every evidence was cit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before the Supreme Court's final decision was made on whether or not to accept the evidence.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he dissolution of the UPP is not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t is a ruling in violation of Article 22 of the CCPR. First, there exist no compelling reasons for the necessity of the dissolution. The UPP never declared that it would achieve its political goals through violent measures nor did it ever tried to. As the UPP had promoted the rise to power through elections, it did not bear any actual threat to the democratic order or to national security. In addition, the UPP does not bear the liability to be responsible for the individual actions and assertions of some party members, which did not even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ny action plans

for achieving political goals through violent measures were not actually acted out. Moreover, the threat cannot be recognized as a concrete threat that will cause actual harm to the democratic order solely on the grounds that the assertion of some members of the UPP are similar to or same with that of the DPRK.

Second, less restrictive measures were possible. The unconstitutional activities of the UPP as argued by the Government could have been responded at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judicial levels. If a lawmaker led rebellion conspiracy or instigated a rebellion, his/her posi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could have been deprived of through due procedur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osecution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ould have conducted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gainst him/her. In fact, conspiracy of and instigation of a rebellion at the May Meetings and the NSA violation issue, which served as the main grounds for the disbandment of the UPP, were all in the process of trial.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e disbandment of the UPP, the Supreme Court found the defendants not guilty of conspiracy of a rebellion.

Third, the chilling effect to be brought on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resulted by the dissolution of the UPP is much greater than the danger the continuous existence of the UPP might pose on our society. After the court's decision on the dissolution of the UPP, the establishment and political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that promotes policies which are critical of the State party's policies including the North Korean policy have become more difficult. Furthermor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of the people that wish to express and realize their political opinions through a political party has been severely violated.

#### **Suggested Recommendations**

- Conduct a re-trial the dissolution of the UPP with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in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cluding Article 22 of the Covenant.

**Issue 25** Please comment on allegations that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are subjected to harassment, intimidation and illegal surveillance in connection with their work, including for publicly criticizing the Government, reporting on human rights-related issues and issues of public interest such as corruption by State officials.

In its reply to the List of Issues, the Government argues that the allegation that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are subjected to harassment, intimidation and illegal surveillance in connection with their work is not true.<sup>469</sup> The Government has frequently and arbitrary applied Obstruction of Business (Article 314 of the Criminal Act),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rticle 136 of the Criminal Act), and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Article 185 of the Criminal Act)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who attend protests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ies. These

---

<sup>469</sup> In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 on the official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Special Rapporteur warns against the use of legislation to regulate, undermine or obstruct the work of defenders, and identified that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facing difficulties and challenges in doing their work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25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3 December 2013, A/HRC/25/55/Add.1



laws are being used as grounds to request compensation and/or impose heavy fines to financially pressure human rights defenders. The Government even imposes abetting illegal actions on those who visited protest sites or strike sites and delivered solidarity speech with human rights defenders.

The Government filed compensation and/or defamation lawsuits against people who legitimately exercised their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fact, the Court ruled that the State cannot be a victim of defamation and based on this, the result of abovementioned lawsuits are non-indictment or not guilty or no need to compensate. However, frequent lawsuits filed by the Government create chilling effects on human rights defenders and silence dissents.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bought Italian hacking programme and there are suspicions that the Government is illegally surveilling human rights defenders and journalists.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tated that the purchased hacking programme was used only for research and monitoring North Korea, and never being used illegally for domestic surveillance. However, this argument is hard to believe since the purchased hacking programme was used on kakao talk application (a mobile messaging application) and Samsung mobile which are widely used in South Korea. The programme was used to avoid domestic virus programme, and malicious code was deployed in the email related to Cheonan Naval Vessel, impersonating national journalist.

In 2008, that the Public Ethics Division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illegally surveilled an entrepreneur who posted a video online criticizing the President. On 30 March 2012, 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 new labour union revealed 2,619 documents on the Internet, which included illegal surveillance on civilians, journalists, activists and opposition party politicians by the Public Ethics Division. Such illegal surveillance specifically targeted labour union leaders and journalists, and based on this information, leaders of labour unions were illegitimately arrested and fired. This illegal surveillance was conducted by not only the Prime Minister's Office but also by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which is an intelligence body inside the military. Furthermore, in 2010, the Prime Minister's office destroyed relevant evidence on its computers one day before the seizure and confiscation warrant, this was revealed by one whistle-blower. After the scandal, the National Assembly established a Special Committee to Investigate Illegal Surveillance but it failed to point out any responsible persons and failed to establish any preventive mechanisms.<sup>470</sup>

#### <Case>

Mr. Lae-goon Park is a standing steering committee member of the Coalition 4.16 for the Sewol Ferry Disaster (4.16 Coalition). The Coalition consists of Sewol victims' families,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individual supporters to find the truth about the disaster and establish a safer society. Mr. Park was detained since 17 May 2015 and has been detained until today (16 September 2015). He was officially indicted on charges of: organising 'illegal' protest; refusing to disperse (articles 6 and 21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special obstruction of public duty;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and destruction of public goods (articles 141, 144, and 185 of the Criminal Code). However, there was no clear evidence that he incited any violent actions during the protests and it is not fair that organizer of peaceful protests bear any responsibility for the unlawful behaviour of others participants in the assembly. The cases brought against Mr. Park are classic examples of crackdown on human rights defenders, since he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human rights defenders in Korea who have worked as an activist in the last 30 years. Mr. Park has

---

<sup>470</sup> In South Korea Scandal, Echoes of Watergate, The New York Times, 9 April 2012, <http://nyti.ms/1U881BE>

publically criticized the Government in various protests. Vari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GOs released a statement calling for his release.<sup>471</sup>

### **Suggested Recommendations**

- Immediately stop arbitrary application of laws such as Obstruction of Business,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nd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to crackdown on human rights defenders.
- Stop applying defamation and contempt (insult) court cases that silence human rights defenders who expressed different views to the Government and limit freedom of expression. Defamation should be decriminalized and contempt (insult) should be abolished.
- Thoroughly and transparently investigate illegal surveillance on civilians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and journalists, and provide measures to prevent future occurrence.

**Issue 26** Please report on measures taken to address the restrictions imposed on the exercise of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in law and in practice, including (a) the de facto system of authorization of peaceful assemblies by the police; (b) the use of the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and of article 314 of the Criminal Code on obstruction of business against demonstrators; (c) the use of excessive force in order to disperse demonstrations and arrests, detentions, and prosecutions of participants protesting against government policies or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during candlelight vigils (2008), the Yongsan tenant protest (2009), protests against Ssangyong Motors mass layoffs (2009), protests to support Hanjin Heavy Industries labour union members (2011) and during assemblies following Sewol ferry disaster (2014); (d) the use of bus blockades to isolate and block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restricting participation in assemblies and impeding the movement of demonstrators.

### **1) The De Facto System of Authorization of Peaceful Assemblies by the Police**

Article 21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allow the system of authorization for assemblies, but in reality,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as been in effect a system of assembly authorization.<sup>472</sup> The authorization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s determined only at the discretion of the police. Although the Government claims in the response to the List of Issues (para. 77) that assemblies can be carried out by simply notifying the authorities, this is not true in reality.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only protects “lawful assemblies” and non-reported assemblies<sup>473</sup> and assemblies that violate prohibitions on the location<sup>474</sup> and time<sup>475</sup>,

---

<sup>471</sup> Release activists imprisoned for supporting Sewol Ferry demonstrations, CIVICUS, 23 July 2015, <http://bit.ly/1hhAjaV>, South Korea: Release human rights defenders seeking truth for Sewol Ferry disaste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21 July 2015, <http://bit.ly/1MF1M0n>

<sup>472</sup> “The Special Rapporteur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ensure the right of all individuals to freedom of assembly and peaceful demonstrations, as a collectiv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by refraining from any de facto practices of prior approval in violation of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17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HRC/17/27/Add.2, 21 March 2011, para. 96

<sup>473</sup> One-person protests with more than 2 participants, flash mobs, performances, press conferences, etc. are punished on the basis that they have not been reported to the police in advance. According to the <Law Enforcement On-Site Manual f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created by the police, even if one-person protests with more than 2 participants, flash mobs, performances, press conferences, etc. are “carried out in a

and prohibitions and limitations on assemblies that take place on roads<sup>476</sup> (for traffic flow) are regarded as unlawful and are subject to punishment. In particular, the police impose restrictions (notice of ban or restriction) in advance under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d later punish assemblies that criticize the Government or labour assemblies. The police are focusing on protecting “lawful assemblies” rather than “peaceful assemblies”.

## **2) The Use of the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and of Article 314 of the Criminal Code**

The police, Prosecutor’s Office, and court is imposing punishments on non-violent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at cause traffic jams by applying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Article 185, Criminal Act). Even if “peaceful assemblies”, aimed at forming public opinion interrupt traffic, they are considered serious crimes that can be punished by up to 10 years imprisonment or up to 15,000,000 KRW (approximately 15,000 USD) in fines. Rather than arresting assembly participants on the spot, the police illegally gather evidence through photographing and later summon participants for questioning and booking, and then the prosecution imposes fines (3-5 million KRW, approximately 3000-5000 USD) through summary orders. Despite these trends of rights restrictions, the police and prosecution do not collect statistical data on bookings, indictments, and convictions f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here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has been applied.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have widely applied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to assemblies such as the 2008 candlelight vigils, 2011 Hanjin Heavy Industries labour union protests, 2014 Sewol ferry disaster assemblies, among others.

## **3) The Use of Excessive Force and Candlelight Vigils (2008)**

The total number of indictments is 306 and the number of defendants is 945, related to candlelight vigils in 2008.<sup>477</sup>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d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were applied to these individuals. Even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restricted constitutionality on Article 10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Law,<sup>478</sup> which bans night time outdoor assemblies, and the Supreme Court’s ruling, the prosecution continued to indict individuals for assemblies held past midnight. The judiciary has continued to convict those brought in for participating in assemblies past midnight. Participants of the 2008 candlelight vigils were brought in by the police, summoned to court for criminal trial, and convicted, even though they were simply expressing their opinions in a peaceful manner.

---

peaceful manner”, they are considered non-reported, unlawful assemblies and should be dealt with in a strict manner through means such as disperse orders.

<sup>474</sup> According to Article 11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no person may hold any outdoor assembly or stage any demonstration anywhere within a 100-meter radius from the boundary of office buildings or residence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all levels of courts,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idential residence, residence of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sidence of the Prime Minister, among others.

<sup>475</sup>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f restricted constitutionality on Article 10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ssemblies taking place past midnight are still being punished.

<sup>476</sup> Under Article 12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he police are able to prohibit or restrict assemblies when deemed necessary for traffic flow in major cities and roads.

<sup>477</sup> Data collected b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s of 23 July 2015.

<sup>478</sup> On 27 March 2014, referring to Article 10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which bans night time assemblie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banning assemblies before midnight is unconstitutional.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stated that the decision to ban assemblies past midnight should be up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enacted any legislation. Lat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banning assemblies past midnight does not go against the constitution.

### **The Yongsan tenant protest (2009)**

20 police units consisting of over 1,600 police officers, 99 SWAT team members, and 4 water cannons were mobilized to suppress 30 tenants protesting against development-based evictions in Yongsan in 2009. After using water cannons to suppress the protest for 25 hours, the SWAT team (counter-terrorist unit) was deployed at dawn to crackdown the protest. In regards to the police crackdown in the Yongsan issue, the NHRCK stated in its 2010 1<sup>st</sup> Plenary Committee meeting (9 Feb 2010) that “the use of police authority on that day was an excessive measure that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police balance, which resulted from a lack of due diligence,” and sent a written statement to the court stating that the “use of police force was unlawful.” No police officers were indicted and then the Commissioner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Seok-gi Kim), who was in charge of commanding the police force, was acquitted after simply submitting a written response.

### **Protests against Ssangyong Motors Mass Layoffs (2009)**

In 2009, in relations to the Ssangyong Motors labour issue, the police deployed a police task force of over 3,000 to crackdown on workers protesting inside a factory and also mobilized around 30 vehicles including water cannons and ladder trucks, as well as helicopters, to drop tear gas chemicals which strong enough to melt Styrofoam. Also, the police deployed a SWAT team, a counter-terrorist unit, to use life threatening weapons such as taser guns, multi-purpose launchers, etc.

### **Protests to Support Hanjin Heavy Industries Labour Union Members (2011)**

The police took judicial action for violat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gainst 536 individuals by taking people in to the police station and later summoning them through illegal evidence gathering.<sup>479</sup> According to private counts, the fines charged by the prosecution amount to at least 100 million KRW (approximately 100,000 USD). The police filed a civil suit against Kyung-dong Song (the proponent of Hope Bus) claiming damages to police equipment that occurred during a clash with protesters, and the court ordered Song to pay 15 million KRW (approximately 15,000 USD).<sup>480</sup> Meanwhile, the prosecution indicted Song and others for organizing the assembly. The court on the second appeal sentenced them to 2 years imprisonment with 3-year probation.

### **Assemblies following Sewol ferry disaster (2014)**

From April 2014 to July 2015, the police arrested 539 individuals from the Sewol ferry disaster related assemblies, and the cases of 526 who were brought in were referred to the prosecution. Also, arrest warrants were requested for 22 individuals and 13 warrants were granted.<sup>481</sup> In addition, from 1 April 2014 to 23 February 2015, the police issued summons to 352 people.<sup>482</sup> A total of 1,371 Sewol ferry related assemblies had been reported, and among these reports 117 were banned and 14 were required to be changed or restricted. The proportion of bans against Sewol ferry related assemblies is 8.5%, which is about 8 times higher than that of bans against all assemblies in 2013

---

<sup>479</sup> National Police Agency, “2012 White Paper, 2012, p 229

<sup>480</sup>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1Ga-so2301267 (12 August 2014). Kyung-dong Song has filed an appeal and the appellate trial is in progress.

<sup>481</sup> Data obtained via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by the office of Member of Parliament Su-kyung Lim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sup>482</sup> Data obtained via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by the office of Member of Parliament Hana Jang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0.15%).<sup>483</sup> Around the one year anniversary of the Sewol ferry disaster, citizens gathered to participate in protests to seek the truth behind the disaster, and the police used water cannons, loaded with water mixed with tear gas, and bus blockades against citizens and also brought in many to police stations. The police said that they would seek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the Sewol ferry disaster one year anniversary assemblies (90 million KRW, approximately 90,000 USD).

### **Protests against the High-voltage Electronic Transmission Tower in Miryang (2005~Present)**

The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pushed ahead with the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towers without consultation with Miryang residents. These events followed plans to build a new nuclear power plant and send the generated electricity to major cities. As the violence committed by KEPCO and constructors against residents protesting the construction became more severe, in January 2012, one resident carried out self-immolation in protest. Since then, the construction had continued on and off and when the construction resumed in May 2013, the use of governmental authority began. In particular, when construction had been continuing. In October 2013, 3,000 police officers were dispatched to block all paths leading to the construction site and guarded the site for 24 hours, preventing residents from entering the site. During the 10 month period up to June 2014, the 4 sit-in protest sites were forcibly removed and to do this, a police force of 380,000 were deployed per year and this incurred a cost of 10 billion KRW (approximately 100,000,000 USD). Currently, more than 40 residents have received fines adding up to 100 million KRW (approximately 100,000 USD) altogether and are being subject to judicial action.

### **No Naval Base Campaign in Gangjeong (2007~Present)**

During the period of 2 years from August 2011 to the end of August 2013, the police deployed approximately 202,620 personnel per year to suppress residents and human rights activists peacefully protesting against the construction of a naval base in Gangjeong village, on Jeju Island. Most of the residents and human rights activists blocked the entry of construction vehicles by picketing and engaging in one-person protests. In order to hold back these efforts, the police dragged residents by their legs, hurting their heads in the process, caused injuries by picking them up by their limbs and dropping them, and committed serious physical violence such as kicking and bending joints. As of 2015, there are a total of 53 cases in which over 210 Gangjeong village residents and peace activists (including individuals involved in multiple cases) are awaiting trial for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50 criminal cases where decisions have been made, the fines paid by each individual ranged from 150,000 to 10,000,000 KRW (approximately 150 to 10,000 USD), and the total amount of fines is estimated at 100 million KRW (approximately 100,000 USD). The fines from criminal trials are expected to reach 200-300 million KRW (approximately 200,000-300,000 USD), with minor offense fines excluded. Excessive fines are being imposed on village residents and activists as the constructors of the naval base have filed a claim for damages of 200 million KRW (approximately 200,000USD) against the chief of the village.

### **Registration of LGBTI organization and Relevant Protests**

The Beyond the Rainbow Foundation, a sexual minority's human rights foundation, submitted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to the City of Seoul and NHRCK, but the applications were denied and later re-submitt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Human Rights Bureau.<sup>484</sup> The Ministry of Justice

---

<sup>483</sup> In 2013, 203 out of 139,812 total reported assemblies were banned. The proportion of banned assemblies is 0.15%. <http://bit.ly/1JeA3j6>

<sup>484</sup> South Korea refuses to incorporate gay group, Gay Star News, 11 February 2015, <http://bit.ly/1hhBxTu>

rejected the application stating that “the Ministry is a place that deals with all human rights issues, thus it cannot authorize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focusing on a single area”, and sent a notification of disapproval in April 2015.

On 29 May 2015, the Organizing Committee of Korea Queer Festival (KQCF) submitted an assembly report for a street march, as part of the queer parade scheduled to take place on Sunday, 28 June 2015, to the Seoul Namdaemun Police Station and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Both the Seoul Namdaemun Police Station and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issued an “outdoor assembly ban notice” prohibiting the queer parade street march.<sup>485</sup> The police stated that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part of the march route overlapped with 4 sections of the route of another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against homosexuality and the queer culture festival) that submitted an assembly report beforehand, and also that the route was part of the main roads of the city, which may cause continuous inconveniences for other citizens and disruption of traffic flow. However, the Seoul Namdaemun Police Station violated the right to hold peaceful assemblies by disregarding the lawful procedure of submitting the report to the police station one month in advance (28 May) to the assembly date (28 June). On 20 May, the Seoul Namdaemun Police Station announced on its website that registrations for the 28 June assembly will be received by order of arrival, 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In response, the 13th division (Judge Jeong-woo Ban) of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ruled the “outdoor assembly ban notice” as invalid on the 16th of June. Following the court’s decision, the ban on the 28 June Queer Culture Festival road march lost its effect and the road march took place as planned.

#### **4) The use of bus blockades during Assemblies**

The police have long used bus blockades to physically block street marches or to seal off access to assembly locations.<sup>486</sup> Bus blockades involve using police buses or multipurpose shield vehicles to tightly enclose areas nearby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location, which not only causes inconveniences in movement but also violates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Bus blockades are used by the police to isolate and incapacitate participants of peaceful marches with ease. Also, bus blockades have the effect of blocking off assemblies, as they obscure vision and soun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e use of bus blockades as unconstitutional.<sup>487</sup> However, the police are not complying with this decision which makes clear that bus blockades “can only be justifiably relied on as a last resort when there is imminent, clear and grave danger”. Regarding paragraph 80 of the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the guidelines on the use of bus blockades was not enacted as a law by the National Assembly, but was arbitrarily applied by the police.

During the recent Sewol ferry disaster assembly which was held on 18 April 2015, the police dispatched 470 vehicles, including 18 buses for blockades, and used safety fences to create a 6 layer

---

<sup>485</sup> South Korean Police Bans LGBT Pride, OUT, 1 June 2015, <http://bit.ly/1hhBLKr>

<sup>486</sup> Bus blockades were first introduced during the 2002 Misun-Hyosun candlelight vigils, and shipping container blockades later appeared during the APEC Summit in Busan. Since then, bus blockades have been used to block off protests and limit their street access such as in the 2007 Korea-US FTA protests, 2008 US beef protests, 2009 Roh Mu-hyun commemoration rallies in Seoul City Hall Square, and 2011 support protests for Hanjin Heavy Industries labor union members.

<sup>487</sup>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use of bus blockades “can only be justifiably relied on as a last resort when there is imminent, clear and grave danger that cannot be prevented by granting conditional permission or by ordering termination or dispersal of assembly” (2009Hun-ma406)

barricade to fend off protesters and cut off all passages leading to Gwanghwamun<sup>488</sup>. Around the one year anniversary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 series of tight bus blockades were set up on the main roads in Seoul.

### **Excessive Use of Police Forces**

In regards to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List of Issues in paragraph 79, the statement that peaceful assemblies are being protected and a minimal amount of force necessary is being used, is false. The police do not only use force when violent acts occur, but also when forcibly dispersing assembly participants. The police use water cannons against those who cross police lines, occupy roads, protest against police disrupting assemblies, or do not follow orders to disperse. There have been cases where assembly participants suffered from ruptured eardrums and concussions due to the arbitrary use of water cannons by the police. The Government has paid compensation for such physical harm.<sup>489</sup>

The police are using sprayers loaded with liquid tear gas to disperse assembly participants. Liquid tear gas causes coughing, difficulty in breathing, and vomiting, and also causes blisters in severe cases. As sprayers with tear gas chemicals are hazardous equipment, their use should be limited to a minimum. However, without prior warning, the police use this equipment against individuals who resist the disruption of assemblies by the police.

### **Suggested Recommendations**

- The police should respect and protect "peaceful assemblies", and not only "lawful assemblies".
-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revis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which is in effect a system of authorization.
-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should halt the practice of booking and indicting assembly participants for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The court should not punish assembly participants for criminal offenses and acquit all cases of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 The police should immediately discontinue the use of bus blockades and passage restriction measures against peaceful assemblies.
- The police should wear personal identification so that assembly participants may identify police officers. In particular, personal identification should be visible even when wearing riot gear or vests.
- Law enforcement officials should use non-violent means before resorting to the use of hazardous equipment such as water cannons, chemical sprayers among others. If hazardous equipment such as water cannons and chemical based sprayers are to be used, limit the use to situations where there is a clear and imminent danger.

---

<sup>488</sup>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of "bus blockades" in Sewol ferry protests? Organizers to file complaint to Constitutional Court (Korean), Yonhap News, 22 April 2015, <http://bit.ly/1hhCh1a>

<sup>489</sup> In this instance, the police fired water cannons at assembly participants that they did not disperse from the road, but the police simply ordered the participants to "halt the unlawful assembly and disperse" and did not specify the grounds for the orders, which is a violation of lawful procedures. Despite the decision for damage compensation..., The Hankyoreh, 29 October 2014, <http://bit.ly/1hhCnj3>

**Issue 27** With reference to the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 (CCPR/C/KOR/CO/3, para. 19),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progress made with regard to ensuring, both in law and in practice, the right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for senior public officials and clarify what is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GEU). Please comment on reports that trade union leaders are arrested and detained for engaging in collective action and other legitimate union activities. Please also clarify (a) whether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has been restored; (b) whether the Migrants' Trade Union (MTU) has been recognized.

### **1)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As the Government mentions in it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para. 84, the Government notified the 'union registration cancellation' by making an issue with dismissed workers' membership eligibility on KTU's bylaw and deprived the KTU of legal status of trade union. Therefore, the KTU initiated a court case which is in progress in the court of appeals. In the meantime on 28 May 2015,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decided 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Article 2 in Teachers' Trade Union Act, which defines the scope of union membership.

Dismissed workers and unemployed should be able to join trade unions and teachers' trade union rights should be recognised, as it has been frequently recommended by the UN human rights bodies to the Republic of Korea. It was also an agreement which came about from the tripartite commission in 1999. The Government's current measures against the KTU is no more than deterring trade unions who have been criticizing Government policy.

In 1996, when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a member of the OECD, the OECD reserved approval for the Government due to its labour related laws which is in dis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The OECD request to the Government to improve 9 issues such as allowing pluralism,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for teachers and public officials, allowing dismissed workers and unemployed to join trade union among others. The Government promised to change such law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under that pledge, the Republic of Korea could become a member of the OECD<sup>490</sup>. The 1<sup>st</sup> tripartite commission under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15 Jan. 1998 - 9 Feb. 1998) was agreed to allow dismissed workers and unemployed to join industrial level trade unions and to ensur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for teachers. The 2<sup>nd</sup> tripartite commission (3 June 1999 – 3 Aug. 1999) discussed to allow dismissed teachers to join trade unions in relation to the issue of allowing dismissed workers and unemployed to join trade unions. The Government agreed to allow dismissed teachers to join trade unions automatically, once dismissed workers and unemployed issues are solved. Those processes led to the passing of the 'Teachers' Trade Union Act' on 6 Jan. 1999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eventually the KTU being legally registered union after that<sup>491</sup>.

Nevertheless this commitmen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ripartite agreemen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not implemented its duty to revise related laws. In 2012, whe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became in pow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sup>490</sup> Chang, Shin-Chul, OECD monitoring on Korean labour laws(Korean), Korea Labor Institute, 2008,

<sup>491</sup> The Tripartite Commission of labour management and government, "Activity situation of tripartite commission in 1998"



ordered to exclude membership eligibility of dismissed teachers on the grounds of un-amended laws that were supposed to be revised long time ago. Finally the Ministry deprived KTU's of its legal status as a response to KTU's refusal of these orders.

## **2)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GEU)**

As the Government mentions in it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paragraphs 1 and 82, there are valid reasons to prohibit joining the trade unions for public officials who are over grade 5 and therefore, the Government maintains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the Covenant and they had no choice but to reject KGEU's union registration because KGEU's bylaw violates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ct.

However, the main reason of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the Covenant is not because of prohibiting public officials from joining the trade union, but because the Government does not approve membership of dismissed workers to the trade union. Also the number of high-ranking officials (grade 1 to 3), who are directly involved in policy making and decision making process are 1,700 which is only 0.18% out of nearly 1 million public officials who are under the administration ministry. Also, 4<sup>th</sup> grade officials without assignment and 5<sup>th</sup> grade officials are hard to be considered as employers who are in a decision making process. The Supreme Court<sup>492</sup> also said that it is not supposed to decide the scope of employer uniformly whether certain position or duty can be or not. Therefore, the prohibition to join the union for 5th grade public officials uniformly does not coincide with freedom of association.

The Government also makes an issue of KGEU's bylaws, but KGEU's bylaws do not stipulate membership eligibility of dismissed workers. However, the bylaws that the KGEU submit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2013 is the same one that it had been using while KGEU was a legally registered union from September 2007 to October 2009.

In the process of issuing union registrati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s the only given authority to screen submitted documents in the administrative office. However in the case of KGEU, the Ministry rejected the KGEU registration based on prediction to the Article 7(2) of KGEU's bylaw<sup>493</sup> could be interpreted to recognize membership eligibility of dismissed workers. In this regard, the ILO has repeatedly recommended<sup>494</sup> the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restrict the freedom of association by disallowing membership eligibility of dismissed workers and excessive misuse of authority. Nevertheless, the Government has not implemented those recommendations yet.

### **History of KGEU's Union Registration**

On 20 October 2009, the Government notified the union registration is cancelled because four dismissed workers were working as leaders of the union. While cancelling the registration, the Government also excluded KGEU's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shutdown union offices, stopped negotiations, and cancelled signed/agreed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Union Registration form was submitted for the first time on December 2009. Rejected

---

<sup>492</sup> Cancellation of appeal to relief unfair labour practices, Supreme Court, 8 September 2011, 2008Do13873

<sup>493</sup> Korean Government's Employee's Bylaw Article 7(2): When a member of the Union is unlawfully dismissed

<sup>494</sup> ILO Governing body CFA Report No. 304, 306, 307, 309, 311, 327, 331, 335, 340, 346, 353, 363, 371 and ILO TUR 1-145/1-145-3 (ILO urgent intervention on August 2013)

Amended KGEU's bylaws through all union members vote on 23~24 February 2010. Re-submitted Union Registration form and it was again rejected in 2010 because 8 dismissed workers were members of KGEU.

On 26 March 2012, registration form was submitted for the 3<sup>rd</sup> time, and again rejected by the Government as the KGEU had a paragraph says 'to improve political status' in its bylaws. It was included in the context that the trade union aims to improve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its members, but the Government interprets it as members of KGEU who are public officials aim to do political activities.

On July 2013, registration form was submitted for the 4<sup>th</sup> time, after amending bylaws a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quested. Based on this, negotiation was ongoing for 2 months and admitting registration was promised, but it was again rejected, under the reason that dismissed workers are members of KGEU.

#### **Suggested Recommendations**

- Recognize the legal status of KGEU immediately, and revise domestic laws to ensure freedom of association for all workers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provided by the ILO.
- Immediately withdraw its reservation to the ICCPR Article 22 on freedom of association
- Withdraw the cancellation notice of KTU's union registration immediately and should recognize dismissed teachers as union members by revision of the Teachers Union Act.

**Issue 28** Please report on measures taken to ensure proper birth registration of all children born in the State party,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Please clarify whether the State party envisage granting Korean citizenship at birth for children born in the country in cases when only one parent holds Korean citizenship.

According to the current legislation, birth registration of children is made possible only when the child is an ROK citizen. There are no official data on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who were born and raised in the Republic of Korea. Also, there are children whose birth cannot be registered even at their own country's embassy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being children of refugees, being without citizenship, being imposed fines due to China's one-child policy, being refused of registration due to several embassies' attempts to reduce the number of its own undocumented nationals who are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mong other reasons. It is difficult to obtain related statistics or information on these undocumented children.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pointed out, in rel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birth registration is not insured consistently for persons seeking refuge, asylum-seeking or irregular migration situations,<sup>495</sup> and domestic legislation does not provide for civil status documentation for refugee and asylum-seeking children born on its territory.<sup>496</sup>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urged the Government to undertake measures to ensure that birth registration is available

---

<sup>495</sup>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6 October 2011, CRC/C/KOR/CO/3-4, para. 36

<sup>496</sup> *Ibid* para. 64.

to all children, including children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born within its territory regardless of their parents' legal status and/or origin.<sup>497</sup>

However, the State Party has not taken any measures concerning birth registration of children of foreign nationality or stateless children. The measures to improve birth registration mentioned in the Government'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para. 86) does not include all children and only covers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It excludes foreign nationals and stateless persons. Furthermore, the Government, based on the misunderstanding that birth registration affects acquisition of nationality, excludes 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or stateless children from birth registration.

#### **Suggested Recommendations**

- Tak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permit all children who are born in the Republic of Korea, regardless of their citizenship, to be registered at their birth, and report them to the Committee.
- Collect data on children whose birth have not been undocumented including stateless children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se children and report them to the Committee.

---

<sup>497</sup> *Ibid* paras. 37, 65.

# XI. 제115차 유엔 자유권 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발표문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참여연대 백가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영석 발표

오늘 저희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 보고서를 제출한 83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을 대표해서 발표합니다. 자유권 규약에 언급된 모든 권리들은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한 때 한국 사람들에게 인권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부끄러운 보고서를 비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발표합니다.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 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안이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45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지속하며 주민들은 9년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난 군사 독재 정권을 미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실패했고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법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법은 인권을 제약하고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왔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한 후 자유를 잃었습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인권옹호자들을 옹호하지 못하고 인권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자유권 규약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들의 인권 의식 및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투명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자유권 규약 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인권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해 온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사람들의 수는 2008년에 비해 2013년에는 3배나 늘어났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은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심지어 진실을 말하거나 단순히 감정이나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도 이로 인해 처벌받고 있습니다. 반면 인권옹호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차별, 적대, 혹은 폭력 선동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도 없고 정부는 이를 위한 어떠한 정치적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개발 정책에 반대하는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기소됩니다. 경찰은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 맨손의 집회 참여자들에게 캡사이신이나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발사하거나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우는 등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회 중에 인권 변호사나 기자들이 연행되기도 합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피해자의 가족들을 포함해 약 550명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집회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친구들과 연대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파업 현장에 찾아가 연대 발언을 한 노동자에게 업무방해 방조죄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율과 가장 빠른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정부는 시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 근처에 있는 기지국과 교신한 전화의 모든 통신내역을 제공받고 이를 분석해 누가 집회에 참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제도로 인해 전화나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영장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계속 늘어나 2014년에는 전체 인구 5천만 중 1,300만명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바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부모 및 통신사업자가 감시하고 원격조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반테러라는 미명 하에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반테러 관련 법안은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자행으로 악명이 높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2012년 대선 당시 786,000여건의 트위터 및 댓글을 올리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시민들은 사법절차에의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직폭행 접수 건 대비 기소율은 0.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조사받을 때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게 제한 받으며 어떨 때는 수사관들에게 위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금 시설의 인권 상황 역시 문제입니다. 교도소 내 징계 위원회는 교도소 소장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교도소 내 징계의 90% 정도는 가장 심각한 징계 방법인 독방 감금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외국인들이 구금 시설 내에서 직면하고 있는 인권침해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은 형법 절차에 있는 관련 규정의 보호 수단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구금 시설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속옷의 반입을 금지당했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고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구금 기간 상한을 정해놓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보호소에 무한정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법심사가 아닌 법무부장관에 의해 개시된 구금의 경우, 피구금자들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툴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은 피구금자들이 외부 연락과 변호인 접근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구금시설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4년에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의 존재가 한 구금자의 증언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에 도착하면 신문을 위해 이 센터로 보내지는데, 아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구금되는지, 혹은 그들이 추방되는지 등을 알 수 없습니다. 보호센터의 접근도 엄격하게 국정원에 의해 통제됩니다. 또한, 한국에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있는데,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귀환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군대는, 인권 침해의 또 다른 사각지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3,600건에 달하는 모욕이나 다른 가혹행위 같은 인권침해가 보고되었지만, 가해자의 1.4% 만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군대 내 모욕이나 가혹행위를 판단하는 군사법원은 판사가 아닌 장교나 사령관도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영장이나 엄격한 심사 없이 징계의 일환으로 최장 15일 동안 구금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구금 결정은 군사법원도

아닌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한 국가의 인권 상황이 후퇴할 때, 소수자들의 상황은 더욱 더 취약해집니다. 여성, 장애인, LGBTI, HIV/AIDS 감염인, 아동들은 계속해서 차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의 심의 이후,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장애인들의 법 앞의 평등 역시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에는 두 명의 성소수자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인 퀴어퍼레이드를 위하여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때, (유사)강간의 피해자가 될 때, 이성커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하고자 할 때, 심지어 성소수자 인권 재단을 설립하려고 할 때조차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으로 인해 군대 내 동성애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HIV/AIDS 감염인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낙인과 차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소수자와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은 물론이고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들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어떠한 정치적 의지를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위원회와 같은 UN 인권기구에서 체벌을 금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지만, 여전히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푸쉬업 자세로 몇 시간을 버티도록 하거나,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번 이상 반복하게 하거나, 1시간 동안 팔을 들고 있도록 하는 체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체벌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군사문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인권 침해의 지리적 경계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강제 노동이나 인도에서의 선주민 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규약 상의 의무를 역외적용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인신매매”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외국인 여성의 성착취 사례, 그리고 농업 이주노동자의 착취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표문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자유권 규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의 책무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말도 자유로이 할 수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와있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이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XII. 제 115차 유엔 자유권 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발표문 (영문)**

**115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19 October 2015 – 6 November 2015**

**NGO Briefing on the Republic of Korea**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Gayoon Baek(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Mr. Youngsoug Chang(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n Behalf of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Network (83 NGOs)**

We are presenting this statement on behalf of 83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jointly submitted the report to the Committee. All the rights mentioned in the Covenants are our areas of focus.

Human rights were once a pride for Koreans. But today, we are grieved to present the report with shame.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drastically deteriorating year after year. We fear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reverting to the dark era of authoritarian regime that we believed to have overcome. One can easily find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streets, on top of factory chimneys, in front of the court, and in prison. Sewol ferry victims’ families have been living on the streets to protest for more than a year, workers have been on a hunger strike for more than 45 days, and villagers have been protesting against the naval base construction for more than 9 years. As we speak today, hundreds of high school students are protesting on the streets opposing the Government’s plan to impose state history textbooks, which is suspected to idealize past military dictatorship.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protect people’s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people are compelled to run to the streets with candles.

Although rule of law, freedom of expression and independence of judiciary ar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the laws have been used as tools to justify restriction and suppression of human rights and people have lost their freedom after expressing their views. The judiciary no longer defends human rights defenders, and is no longer a safeguard for human rights victim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lso cannot play an active role in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and we have a serious concern that transparent and independent selection process of the Commissioners are not yet guaranteed which brings doubts on human rights competency and expertise of commissioners.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been charged and indicted for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which the Committee and other UN human rights mechanisms have repeatedly recommended to amend or repeal, has increased threefold in 2013 compared to 2008. Government officials and agencies consistently punish people for defamation or insult who criticize the Government, sometimes even those who state facts or simply express feelings or opinions. On the other hand,

human rights defenders and social minorities become targets of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However, there is no legal framework nor gestures from the Government showing any political will to protect them. The society is now at a critical juncture.

People who gather to peacefully protest against Government policies or development projects are being arrested, detained and indicted. The police use excessive force against barehanded protesters to suppress assemblies, such as water cannons loaded with capsaicin and tear gas liquid and bus barricades to block assemblies. Even human rights lawyers and journalists have been arrested during protests. Around 550 people including family members of the victims were arrested during the Sewol ferry related protests from April 2014 to May 2015. We are not allowed to stand in solidarity with our friends, not to mention participating in assemblies. One worker who visited labor strike sites to deliver support statements has been punished for aid and abetment of Obstruction of Business.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highest Internet penetration rate and the fastest wireless broadband in the world. With this technology, the Government is watching and intervening in people's private lives. The police can identify those who are at protests by seizing and analyzing all phone call histories from the nearby base stations. Phone or internet users' personal information can be seized without warrants, and such seizure is significantly increasing, amounting to about 13 million accounts in 2014 in a country with just 50 million people. Children under 19 years old must use mobile phones equipped with applications enabling the parents and service providers to monitor and remotely control their phones.

We are also subject to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the name of counter-terrorism. All currently pending counter-terrorism bills grant excessive authority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which is notorious for its abuse of power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e NIS systematically intervened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by posting and tweeting 786,000 online messages. Also, the NIS was found fabricating evidence of an espionage case.

In face of gross viola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country, people cannot gain full access to justice and are unfairly treated during investigations. Only 0.2% of investigators are indicted of maltreating the accused. Even though lawyer's participation is crucial to prevent such harassment, the police and prosecutor's office arbitrarily interpret the Criminal Procedural Act to minimize lawyers' participation. Generally, lawyers are limited in presenting their views during the interrogation and sometimes, lawyers are even threatened by the investigator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detention centers is also problematic. The disciplinary punishment committees of prisons are not guaranteed of their independence and fairness, as the prison warden appoints members of the committee. Almost 90% of the actual punishment in the prison has been executed in the form of solitary confinement, which is the most severe disciplinary measure.

In particular, children, transgenders and foreigners in detention centers are facing mor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hildren are denied protective measures under relevant regulat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s. Moreover, detention centers have no 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transgenders. Because of this, transgender inmates are denied underwear of their own choice and there was a case where a transgender inmate was punished for refusing to get a haircut. Furthermore, foreigners detained in detention centers may be subject to indefinite detention due to lack of legal regulation on maximum detention periods. In the event the Minister of Justice commenced detention that is not subject to independent judicial review, the detainees are prevented from disputing the legality of the detention. The deportation rooms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ractically function as detention centers since detainees are restrained from outside contact and denied access to attorney.

Recently in 2014, the existence of the DPRK Defector Protection Center (former Central Joint Interrogation Center) was widely known by testimony of one detainee. When DPRK defectors come to the Republic of Korea, they are sent to the center for interrogation, but nobody knows what exactly is happening inside. We do not know how many DPRK defectors are being detained for how long, and whether they are being deported or not. Access to the center is strictly regulated by the NIS. Also, there are some DPRK defectors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wish to go back to the DPRK, but their return is not allowed by the Government on grounds of viola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The military, where all Korean men are mandated to serve, is another blind spot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lmost 3,600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assault and other cruel acts have been reported in the last five years, but only 1.4% of perpetrators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The Military Court, which deals with assault and cruel acts in the military, is not independent because commissioned officers and commanders, who are not judges, exercise judicial power. Soldiers may be detained for up to 15 days in military prison as disciplinary action without a warrant and judicial scrutiny. The decision for detainment is not even made by the military court, but only by military superiors.

When a country's human rights situation regresses, marginalized groups become even more marginalized. Women, persons with disabilities, LGBTIs and people with HIV/AIDS, and children continue to be discriminated against. Since the last review in 2006, the gender wage gap still remain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and more than half of female workers are non-regular workers. The right to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tinues to be greatly affected.

We have two LGBTI friends in this room. They experience discrimination on a daily basis. They are discriminated against when they go to the police to report their annual pride parade, when they become victims of rape, when they want to enjoy same rights as heterosexual couples, and even when they want to set up an NGO to advocate their own rights. They are even punished under sodomy provisions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Persons with HIV/AIDS are suffering from stigma and discrimination when they receive medical services. The Government is turning a blind eye to this injustice and homophobic/transphobic groups who incite hatred against LGBTIs and persons with

HIV/AIDS, and do not show any political will to legislate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Even though UN human rights mechanisms such as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repeatedly recommended to the Government to abolish corporal punishment, it is still prevalent in schools and at homes. Examples of these punishments include staying down in push-up position for hours, repeatedly sitting up and down 100 times, or raising one's arms above the head for one hour. These severe punishments can be explained in line with widespread military culture in the society.

Finally,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expanded the geographical boundari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Many compani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re responsible for forced labour in Uzbekistan and violation of indigenous people's rights in India. However, the Government does not provide legal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under the Covenant. Narrow definitions of human trafficking in the Criminal Act limit protection of victims, as seen in the incident of abuse of disabled men and homeless in the salt farm, sexual exploitation of foreign women, and exploitation of migrant farm workers.

As is clear from our present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comply with the Covenant and does not fulfill its commitment as a membe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We do not wish to go back to the time when we could not speak out freely. To bring people on the streets back to their normal lives, we hope our areas of concerns will be reflected in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We thank you.

## XIII. 대한민국 네번째 정기보고서에 관한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 견해

1.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위원회)는 2015년 10월 22일과 23일에 열린 제 3210차 및 3211차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 회의(CCPR/C/SR.3210 와 CCPR/C/SR.3211)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한 네 번째 보고서(CCPR/C/KOR/4)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2015년 11월 3일에 열린 제 3226차 회의(CCPR/C/SR.3226)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 A. 서문

2. 위원회는 비록 대한민국 정부가 조금 늦게 제출했지만 네 번째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고기간 동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급 대표단과 건설적 대화를 재개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 대표단의 구두 답변과 서면 보충 자료를 포함하여 '질의 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CCPR/C/KOR/Q/4/Add.1)에 감사한다.

###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아래와 같은 법적, 제도적 조치를 환영한다.:
  - (a)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도입;
  - (b) 2013년, 난민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도입;
  - (c) 2012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도입;
  - (d) 2012년, 형법 제 297조에 정의된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한 것;
  - (e) 2009년,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f) 2005년에서 2006년까지의 젠더 차별적인 법률의 확인 및 그에 따른 총 385개 법 규정들의 개정(개정 절차 2009년에 완료);
  - (g)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하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

(h) 2007 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

4.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8 년 12 월 11 일자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것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7 년 4 월 2 일, 자유권 규약 제 14 조 5 항의 유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 C. 주된 우려 및 권고 사항

#### 선택의정서에 따른 견해

6.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여전히 선택의정서에 따른 위원회의 견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가진다. 특히,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견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수많은 사건들(제 2 조)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7. 대한민국 정부는 위원회의 견해에 충분한 효력을 부과하는 메커니즘과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로써 '규약'을 위반한 모든 사건들에 유효한 구제 수단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위원회가 내린 견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8.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독립성, 투명성, 그리고 참여적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추진한 활동들을 인지하고 있다. 동시에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사항들을 아직 법제화 하지 않았음에 우려를 표명한다. 법제화는 파리 원칙 (제 2 조)에 부합하여 국가인권위의 전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9.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고 임명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가 보장 되도록 필요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해당 법에는 독립적인 후보 추천 위원회 설립과 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업과 인권

10. 위원회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관련 인권 기준들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구제책에 (피해자들이)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제 2 조)
11.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 영토 내를 비롯하여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동 규약에 명시된 인권 기준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및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차별금지

12.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다. (제 2 조, 26 조)
13. 대한민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간접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14.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 (a)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심각한 차별적 태도
  - (b)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 조의 6
  - (c)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 행사에 대한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의 장소 대관 인가
  - (d)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성교육 표준안 개정안
  - (e)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것을 제약하는 과도한 요구사항 (규약 2 조, 17 조 그리고 27 조)

15. 대한민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균형법 제 92 조의 6 을 폐지하고,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여성에 대한 차별

16.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 (a)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및 젠더에 기반한 고정관념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
- (b) 정책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특히 낮은 비율,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남녀 간의 특히 큰 임금격차;
- (c) 아동 수당에 있어서 입양 부모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을 포함해 미혼모에 대한 빈번한 사회적 낙인 및 차별 (3 조 및 26 조)

17. 대한민국 정부는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젠더 고정관념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녀 평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시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 (a) 일시적 특별조치를 포함하여 민간 및 공공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b)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임금격차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가정이 있는 직원을 정규직화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고용에서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포함한다.
- (c)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특히 교육, 고용 및 주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미혼모들이 입양 부모와 동등한 아동 수당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18. 위원회는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부부 강간이 현행 형법하에서 처벌 가능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사건들에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동시에 이 사실들에 주목한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피해자들을 적절히 보호하지도 못하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전달하지도 못한다. (제 3 조, 7 조)
19.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상황에서의 부부강간을 명백히 범죄화하고,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 대신 동意的 부재라는 관점에서 정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모든 유형과 현상을 방지하고 다루기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경찰, 사법부, 검찰, 지역 대표들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의 심각성 및 가정 폭력이 피해자들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가정폭력과 부부강간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도록 하며, 유죄 시 적절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들이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피해자들이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대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방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 반테러 조치

20. 위원회는 2 개의 반 사이버 테러 관련 법안을 포함하여 총 5 개의 반테러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공한 정보로는 현재의 잠정적인 테러의 정의, 또는 계류 중인 법안 상의 테러의 정의가 규약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이버 테러의 정의가 특히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명한다. (9, 14, 15 및 17 조)
21. 대한민국 정부는 반 테러 법률과 관행이 규약에 완전히 부합하고, 테러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비차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테러 행위가 명확하고 한정된 방식으로 정의되도록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채택된 법률이 명백하게 테러로 간주되는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테러에 관한 적절한 정의는 '테러방지과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반 테러 관련 10 개 분야 모범사례 보고서

(A/HRC/16/51)의 29 문단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66 호 (2004) 3 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 사형제

22. 위원회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이 사형 확정자라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제 6 조).
23.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사형 선고형을 징역형으로 감형하는 것은 물론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차 의정서(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채택 25 주년을 맞아 해당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자살

24.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살을 예방하고 그 수를 줄이기 위하여 채택한 방안들에 주목하면서도, 특히 높은 자살율, 특히 20 대와 30 대의 젊은 층에서 자살이 제 1 의 사망 원인이라는 점, 노년층과 군대 내에서는 물론 여성들에게도 제 2 의 사망 원인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제 2 조, 6 조)
25. 대한민국 정부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다루며, 그에 따라 자살 방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 고문 및 부당한 대우

26.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고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들, 특히 정신적인 고문들이 온전히 처벌되도록 적절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통상적인 법 시스템 하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경찰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의 혐의를 수사할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제 7 조).
27. 대한민국 정부는 규약 제 7 조 및 다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규범들과 충분히 일치되도록 고문의 정의를 포함하여 형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고문은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고문과 부당한 대우의 사건들에 있어서 수사자와 잠재적 가해 혐의자들 사이에 어떠한 기관 혹은 위계질서 상에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기구에 의하여 적절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재활과 보상을 포함한 구제책 뿐만 아니라, 그 중대성에 따라 그와 같은 행위의 가해자와 공범들에 대하여 일반 형사 법원에서 기소와 유죄 선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 정신과 시설에서의 비자발적 입원

28.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 비자발적 입원의 근거가 지나치게 광범위 하고, 구금된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구금되며,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보호 절차가 불충분하다는 점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29. 대한민국 정부는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경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 필요성과 비례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정신과 감금을 이뤄지도록 하며, 적당한 기간 동안 최대한 짧게,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자발적 입원의 절차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고, 어떤 대표자라도 개인의 이익과 소망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방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같은 감금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적절한 절차와 실질적인 보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군대 내 폭력

30. 위원회는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성적, 신체적, 언어적 폭행 사건이 많다는 점과 그 중 오직 소수의 사건만이 기록되고 기소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제 7 조)
31. 대한민국 정부는 군대 내 학대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온전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권 침해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되고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단지 가해자를 복무로부터 제외하거나 보직해임시키는 것은 폭력 범죄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아니다. 제기된 진정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하고 피해자와 증인들은 보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피구금자의 수사 중 변호인에 대한 접근이 특정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특정 상황이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고, 부적절한 변호인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는 것과 함께 이 사실에 주목한다.

33. 대한민국 정부는 피구금자의 수사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어떤 상황 하에서도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 구금시설 내 상황

34.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
- (a) 구금시설 내 과밀 수용 및 구금시설 외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 제한;
  - (b) 구금시설 내에서의 보호장비 사용이 주로 징벌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고 및 그 사용의 종료시점이 교도관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
  - (c) 최대 30 일까지 부과될 수 있는 독방구금이 수용자에 주어지는 징벌의 가장 흔한 형태라는 보고 및 징벌의 유형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교도소장에 의해 임명된다는 점 (제 10 조)
35. 대한민국 정부는:
- (a) 독방구금이 가장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고 엄격히 제한된 기한 동안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징벌위원회의 위원이 독립 기관으로부터 임명되도록 보장하고;
  - (b)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99 조 제 2 항(역자 주 :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의 이행 여부가 반드시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장비의 사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를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하고;
  - (c) 대한민국 정부의 구금시설 시스템이 규약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에 부합하도록 구체적 단계를 밟아나아가야 한다.

####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

36. 위원회는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 도착한 즉시 “북한이탈주민센터(역자 주 : 구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며, 해당 센터에 6 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실에 주목한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제공한 정보 즉 피구금자들이 (기관 내) 인권보호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도, 본 위원회는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독립적인 심의 없이 제 3 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에 대하여 더욱 우려하는 바이다. (제 9 조, 10 조, 13 조)

37.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최단 기간만 구금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수사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개인이 제 3 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일시적 집행 정지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 난민신청자의 구금

38.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2013 년, 난민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환영하는 한편, 이주구금의 기간에 법적 상한이 없는 것과 이주 아동의 구금, 그리고 이주 구금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우려한다. (제 9 조, 24 조)
39.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 35 번에 부합하도록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뒤에,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주구금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이주노동자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40.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신매매의 송출국, 경유국, 목적국이며,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기소 및 유죄판결이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 (a) 상당수의 농축산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포함한 착취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해 대한민국에 온다는 것과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 조에 의해 제한된 조건에서만 고용주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 (b) E-6 연예행비자로 입국하는 여성들이 종종 성산업에 예속된다는 점;
- (c) 대한민국 정부의 적절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구금되고 강제송환 된다는 점;
- (d) 형법상 인신매매의 정의가 오로지 매매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계약 사기를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착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제 3 조, 7 조, 8 조)

41. 대한민국 정부는 특별히 인신매매의 수요를 근절하는 것을 통하여 인신매매를 필사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또한:
- (a) 고용허가제 하의 노동자들이 고용주 변경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할 것;
  - (b) 노동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c) E-6 연예행행비자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것;
  - (d) 인신매매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피해자로서 필요한 모든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3 조제 3 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을 이유로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제 17 조 및 제 21 조).
43.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해 모든 감시가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

44. 위원회는 군복무에 대한 민간 대체복무가 부재한 상황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지속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병역거부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 사실에 주목한다. (제 18 조)
45. 대한민국 정부는:
- (a)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부를 즉시 석방할 것
  - (b)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c)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것

## 형법 상의 명예훼손

46. 위원회는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거나 기업의 이익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기소하는데 있어서 형법 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장기 징역형을 포함해 법 상의 형량이 가혹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한 진실인 언사마저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구사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제 19 조).
47. 대한민국 정부는 명예훼손의 경우 민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비범죄화를 고려해야 하며, 자유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장 심각한 사건들에만 국한해서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진실을 항변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비판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에 따른 기소

48.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계속되는 기소, 특히 비합리적으로 대략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모호한 제 7 조에 따른 기소에 우려를 표한다. 이처럼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소는 공적인 대화에 있어서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수많은 사건들에 있어서 불필요하고 균형에 맞지 않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검열의 목적으로 점점 더 사용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동시에 이 사실을 지적한다.(제 19 조)
49.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34 번과 견해 (CCPR/C/79/Add.114, para. 9 (1999))를 상기하며, 대한민국 정부에게 “조약은 단지 사상이 적국의 것과 일치하거나, 적국에 대한 공감을 초래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제 7 조를 폐지하여야 한다.

## 통합진보당의 해산

50. 위원회는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 혐의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UPP) 해산결정이 주로 통합진보당 당원이 북한의 이념을 선전하였다는 혐의에 기반한다는 점에 염려한다. 해당 당원들은 이미 국가보안법 7 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제 19 조, 22 조)

51. **정당의 해산이라는 것이 특별히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성격의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그러한 방법이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 하에서 사용되도록, 그리고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52.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제 7, 9 및 21 조)
53.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이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규약 제 21 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력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라 경찰관을 교육해야 한다.**

#### **결사의 자유**

54.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가해지는 부당한 제약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합원 중 해고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55. **대한민국 정부는 규약 제 22 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과 해고자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출생등록**

56.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자녀들의 출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국 대사관에 가야 하며 이는 주로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격 보유자 혹은 난민에게는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이 사실에 주목한다. (제 24 조)
57.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부모의 법적 상태 그리고/혹은 출신국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에게 허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58. 대한민국 정부는 규약 및 제 4 차 정기 보고서와 본 최종견해 문서를 사법, 입법, 행정 당국, 국내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 혹은 비정부 기관,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59. 위원회의 의사절차규칙 제 71 조 5 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1 년 내에 15 번(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45 번(양심적 병역거부) 및 53 번(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단락에 있는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60.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본 위원회의 권고와 규약 전체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차기 정기 보고서를 2019 년 11 월 6 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보고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및 비정부 기구들과 널리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 유엔 총회 결의안 68/268 에 따라, 그 보고서의 분량은 21,200 단어로 제한한다.

## **XIV.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four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4) at its 3210<sup>th</sup> and 3211<sup>th</sup> meetings (CCPR/C/SR.3210 and CCPR/C/SR.3211), held on 22 and 23 October 2015. At its 3226<sup>th</sup> meeting (CCPR/C/SR.3226), held on 3 November 2015, it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submission of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lbeit somewhat late, and the information presented therein. It expresses appreciation for the opportunity to renew its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 State party's high level delegation on the measures that the State party has taken during the reporting period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The Committee is grateful to the State party for its written replies (CCPR/C/KOR/Q/4/Add.1) to the list of issues, which were supplemented by the oral responses provided by the delegation and for the supplementary information provided to it in writing.

#### **B. Positive aspects**

3. The Committee welcomes the following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steps taken by the State party:
- (a) The adop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Punishing Child Abuse Crimes in 2014;
  - (b) The adoption of the Refugee Act, Presidential Decree and Regulations in 2013;
  - (c) The adoption of Act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and the Creation of Culture of Respect for Life in 2012;
  - (d) 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Act, which changed the object of rape defined in Article 297 from "woman" to "person" in 2012;
  - (e) The amendments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guarantee Korean nationals abroad the exercise of their right to vote in 2009;
  - (f) The identification of gender-discriminatory legislation from 2005 to 2006, leading to the rectification of a total of 385 legal provisions (rectification process completed in 2009);
  - (g) The adoption of the Act on Punishment, etc. of Crimes under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punish crim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2007;
  - (h) The adoption of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in 2007;
4. The Committee welcomes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the State party on 11 December 2008.

---

\*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115th session (19 October–6 November 2015).

5.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e party's withdrawal of its reservation to article 14 (5) of the Covenant on 2 April 2007.

### **C. Principal matter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 **View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6.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bout the absence of a specific mechanism to implement the Committee's View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In particular,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the State party has, except in one case, failed to implement the Committee's Views, notably the numerous cases concerning conscientious objection (art. 2).

**7. The State party should establish mechanisms and appropriate procedures to give full effect to the Committee's Views so as to guarantee effective remedies in all cases of violations against the Covenant. It should also fully implement the Views the Committee has issued so far.**

####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8. While noting the initiatives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o secure legislative guarantees of its independence and a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process for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its members,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 has not yet adopted legislation to this effect, which may be a crucial element in achieving its full independence in compli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art. 2).

**9. The State party should adopt the necessary legislation to ensure a fully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process regarding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members of the NHRCK throughout all stages of the process, including by establishing an independent candidates nomination committee and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its members.**

#### **Business and Human Rights**

10. The Committee notes that Korean companies may be acting abroad allegedly in contravention of relevant Human Rights standards, and is concerned that any remedies from the State party have proven difficult to access (art. 2).

**11. The State party is encouraged to set out clearly the expectation that all business enterprises domiciled in its territory and/or subject to its jurisdiction respect human rights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the Covenant throughout their operations. It is also encourage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strengthen the remedies for people who have been victims of activities of such business enterprises operating abroad, as well as strengthen the safeguards to prevent people from becoming victims to these.**

#### **Non-discrimination**

12. While noting the existence of a number of individual laws prohibiting specific forms of discrimination,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s lacking. It i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current lack of legislation defining and prohibiting racial discrimination and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rts. 2 and 26).

13. **The State party should adop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explicitly addressing all spheres of life and defining and prohibiting discrimination on all grounds, including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and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his legislation should impose appropriate penalties for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committed by both public and private actors, and provide effective remedies.**

####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14.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a) The prevailing strong discriminatory attitude towards LGBTI persons, including violence and hate speech;

(b) The punishment of consensual same sex sexual conduct between men in the military according to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c) The authorization of the usage of the building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of buildings of the NHRCK to host so-called “conversion therapies”, for LGBTI persons;

(d) The lack of any mention of homosexuality or sexual minorities in the new sex education guidelines; and

(e) The restrictive requirements for legal recognition of a gender reassignment. (arts. 2, 17 and 26)

15. **The State party should clearly and officially state that it does not tolerate any form of social stigmatization and discrimination, including propagation of so-called “conversion therapies”, hate speech, or violence against persons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It should strengthen the legal framework to protect LGBTI individuals accordingly, as well as repeal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avoid the usage of State-owned buildings by private organizations for so-called “conversion therapies”, develop sexual education programs that provide students with comprehensive, accurate and age-appropriate information regarding sexuality and diverse gender identities, and facilitate access to the legal recognition of a gender reassignment. It should also develop and carry out public campaigns and training to public officials to promote sensitivity and respect for diversity in respect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a) On-go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cluding patriarchal attitudes and gender-based stereotypes concerning the role of women in the family and in society;

(b) The particularly small proportion of women in decision making positions, the high rate of women in non-regular employment, and the particularly high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and

(c) The frequent social stigma and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including their unequal treatment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child allowance compared to adoptive parents. (arts. 3 and 26)

17. **The State party should develop measures to eliminate existing patriarchal attitudes and gender stereotypes, by inter alia implementing comprehensive awareness-raising programmes to**

foster a better understanding of, and support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n the family and society. It should also:

**(a) Intensify efforts to ensure equality of women in all spheres of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including through temporary special measures;**

**(b) Take measures to eliminate the gender wage gap, ensuring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including by promoting conditions to accommodate employees with families in regular employm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in irregular employment;**

**(c)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and increase support provided to unwed mothers, particularly in education, employment and housing as well as ensure that they receive the same child allowance as adoptive parents.**

###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18.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ing domestic violence. It also notes with concern that marital rape is not a punishable offence as such under the Criminal Code, and that “suspension of indictment conditioned upon the completion of education or counselling”, continue to be implemented in cases of domestic violence, which does not adequately protect victims or sufficiently convey the gravity of domestic violence (arts. 3 and 7).

**19. The State party should explicitly criminalize marital rape under all circumstances, and define all forms of rape in terms of absence of consent rather than intimidation or violence. The State party should adopt a comprehensive strategy to prevent and address gender-based violence in all its forms and manifestations. It should intensify its awareness-raising measures among the police, judiciary, prosecutors, community representatives, women and men on the gravity of domestic violence and its detrimental impact on the lives of victims.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hat cases of domestic violence and marital rape ar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that the perpetrators are prosecuted, and if convicted, punished with appropriate sanctions, and the victims adequately compensated. It should also revise measures to ensure that victims are not placed in a position where they are channelled in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 **Counter-terrorism measures**

20. The Committee notes that five bills on counter-terrorism, including two on counter-cyber terrorism, are pend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It is concerned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is insufficient to determine whether the current working definition of terrorism, or the definition of terrorism set forth in the draft legislation, are in full compliance with the Covenant. It also notes with concern that the definition of cyber terrorism is particularly vague and may lead to arbitrary application (arts. 9, 14, 15 and 17).

**21.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hat its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and practices are in full conformity with the Covenant, are applicable to terrorism alone and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particular,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hat terrorist acts, including cyber terrorism, are defined in a precise and narrow manner, and that legislation adopted in this context is limited to crimes that would clearly qualify as acts of terrorism. Inspiration for an adequate definition of terrorism may be drawn from paragraph 28 of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on 10 areas of best practices in countering terrorism (A/HRC/16/51) and from paragraph 3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66 (2004).**

#### **Death penalty**

22. While acknowledging the current non-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persons remain sentenced to death (art. 6).

23. **The State party should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leg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s well as to the commutation of all death sentences to terms of imprisonment. It should also consider acceding to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on the occas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the Protocol.**

#### **Self-inflicted deaths**

24. While noting the measures taken to prevent and reduce the numbers of self-inflicted deaths (suicides),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particularly high suicide rate, especially among young people between 20 and 30 years, with respect to whom it constitutes the highest cause of death, and among women with respect to whom it constitutes the second highest cause of death, as well as among older persons and within the military (arts. 2, and 6).

25. **The State party should increase its efforts to prevent self-inflicted deaths. In particular it should study and address the root causes of suicide and improve its suicide prevention policies accordingly.**

#### **Torture and ill-treatment**

26.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s criminal legislation does not adequately ensure that acts covered by the internationally-accepted definition of torture are fully criminalized, especially mental torture. It is also concerned that an independent mechanism within its normal legal system, but separate from the police,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is lacking (art. 7).

27. **The State party should amend the Criminal Code to include a definition of torture that is fully in line with article 7 of the Covenant and other internationally established norms, preferably by codifying it as an independent crime. It should also ensure that all case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are properly investigated by an independent mechanism with no institutional or hierarchical connection between the investigators and the alleged perpetrators, and that the law adequately provides for the prosecution and conviction of perpetrators and accomplices of such acts in accordance with their gravity before ordinary criminal courts, as well as for remedies to victim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 **Involuntary hospitalization in psychiatric institutions**

28.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reports about the large number of persons in mental health facilities who are involuntarily hospitalized, that the grounds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are excessively broad and include circumstances in which the detained persons do not present a threat to themselves or others, and that procedural safeguards against involuntary hospitalization are inadequate (arts. 7 and 9).

29.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hat psychiatric confinement is strictly necessary and proportionate,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dividual in question from serious harm or preventing injury to others, applied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appropriate period of time. It should ensure that procedures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respect the views of the individual, and that any representative genuinely represents and defends the wishes and interests of the individual. It should ensure that such confinement is accompanied by adequate procedural and substantive safeguards established by law.**

### **Violence in the military**

30.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high number of cases of sexual, physical and verbal abuse in the military and that only a small number of cases are recorded and lead to indictment (art. 7).

31. **The State party should conduct full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into all allegations of abuse in the military and ensure that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tried and punished; a mere separation of the perpetrator from service or dismissal from army is not a sufficient response to violent crimes. Complaints should be treated confidentially and victims as well as witnesses should be protected against reprisals.**

### **Right to counsel**

3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ccess of detainees to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may be limite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which are insufficiently clearly defined and may lead to inappropriate exclusion of counsel (art. 9 and 14).

33. **The State party should take the necessary legal amendments to ensure that the right of detainees to be assisted by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is not restricted under any circumstance.**

### **Prison conditions**

34.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a) Overcrowding in prisons and limited access to medical aid outside prisons;

(b) The reported frequent usage of protective devices in prisons for retributive purposes, and termination of their usage being subject to a decision by the prison guard; and

(c) The use of solitary confinement, which can be imposed for up to 30 days, reportedly being the most commonly used form of disciplinary punishment of inmates, and the outside members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deciding on the types of disciplinary action, being appointed by the prison warden. (art. 10)

35. **The State party should:**

**(a) Ensure that solitary confinement is used only in the most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for strictly limited periods, and that the members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are appointed by an independent authority;**

**(b) Ensure that implementation of Article 99 (2)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is vigorously monitored, and that the usage of protective devices is subject to legally determined limits; and**

**(c) Take concrete steps to bring their prison system into line with the Covenant and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Detention of DPRK “defectors”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36.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defector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detained in the “Centre for North Korean Defectors” upon their arrival, and may be held in the centre for up to 6 months. While noting the information by the delegation that detainees have access to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s,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y do not have access to counsel. It is further concerned about reports suggesting that DPRK “defectors” may be deported to third countries without independent review, if it is determined that they do not qualify for protection (arts. 9, 10, and 13).

**37.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hat DPRK “defectors” are detained for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and that detainees are given access to counsel during the entire length of their detention, that counsel be available during interrogations, and that the duration and methods of interrogation are subject to strict limits which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t should also adopt clear and transparent procedures allowing review with suspensive effect by adequate independent mechanisms before individuals are deported to third countries,**

#### **Detention of asylum seekers**

38. While welcoming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Presidential Decree and Regulations in 2013, the Committee is concerned, however, about the absence of any legally prescribed maximum duration for immigration detention, the immigration detention of children, and the poor living conditions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arts. 9 and 24).

**39. The State party should limit the period of immigration detention, and ensure that it is used as a measure of last resort, for the shortest appropriate period. It should ensure that children are not deprived of liberty, except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appropriate period of time, taking into account their best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General Comment No. 35. It should also ensure that living conditions in immigration detention centres are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subject to regular independent control.**

#### **Migrant workers and trafficking for the purpose of forced labour**

40.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while the State party is a source, transit and destination country for human trafficking, traffickers are rarely prosecuted and convicted. It is also concerned that:



(a) A significant number of agricultural workers are trafficked into the State party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including forced labour, and that migrant worker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may change their employer upon their employer's permission, or under the particularly limited conditions of article 25 of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ct;

(b) Women entering under the E-6 Entertainment visa are frequently trapped into prostitution;

(c) The State party does not have a mechanism in place to adequately identify victims of trafficking, which places them at risk of detention and deportation; and

(d) The definition of trafficking as such, in the Criminal Code solely criminalizes the act of buying and selling, which hinders the prosecution of persons, who have recruited and exploited migrant workers through contractual deception. (arts. 3, 7 and 8)

**41. The State party should vigorously combat trafficking of human beings, in particular by combatting the demand for trafficking, and:**

**(a) Allow all workers under the EPS to freely change their employer;**

**(b) Strengthen efforts to prevent forced labour, including by increased labour inspection;**

**(c) Regulate the usage of E-6 Entertainment visas to ensure that they are not used to cover up trafficking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and**

**(d) Bring its trafficking definition into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establish a mechanism to identify victims of trafficking and ensure that they are treated as victims and have access to all necessary support.**

#### **Monitoring, surveillance and interception of private communication**

4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ccording to Article 83 (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subscriber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without warrant from an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for investigatory purposes. It is also concerned about the operation and insufficient regulation in practice of so-called "base-station" investigations to identify participants at assemblies, and about the extensive use and insufficient regulation in practice of wiretapping, in particular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rts.17 and 21).

**43. The State party should take the necessary legal amendments to ensure that any surveillance including for purposes of state security are compatible with the Covenant. It should inter alia ensure that subscriber information may be issued with a warrant only, introduce a mechanism to monit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communication investigations, and increase the safeguards to prevent the arbitrary operation of so-called base-station investigations.**

####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44.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in the absence of a civili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continue to be subjected to criminal punishment. It also notes with concern that personal informa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may be disclosed online (art.18).

**45. The State party should:**

- (a) Immediately release all conscientious objectors condemned to a prison sentence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b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 (b) Ensure that the criminal record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expunged, that they are provided with adequate compensation and that their information is not publicly disclosed; and**
- (c) Ensure the legal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provide conscientious objectors with the possibility to perform an alternative service of civilian nature.**

#### **Criminal defamation laws**

4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s to prosecute persons who criticize government action and obstruct business interests, and of the harsh sentences, including lengthy prison sentences, attached to such legal provisions. It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even a statement which is true may be criminally prosecuted, except if this statement was made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lone (art. 19).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and sh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of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ruth is not subjected to any further requirements. It should also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 **Prosecution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Act**

48.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continuing prosecution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Act (NSA), in particular under its unreasonably broadly phrased article 7, which is vague, may have a chilling effect on public dialogue and is reported to have unnecessarily and disproportionately interfered with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a number of cases.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the NSA is increasingly used for censorship purposes (art. 19).

49. **The Committee recalls its General Comment on Freedom of Expression No 34 and its Views (CCPR/C/79/Add.114, para. 9 (1999)) and reminds the State party that “the Covenant does not permit restrictions on the expression of ideas, merely because they coincide with those held by an enemy entity or may be considered to create empathy for that entity. The State party should abrogate article 7 of the NSA”.**

#### **Dissolution of the UPP**

50.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or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4 for the alleged violation of the “basic democratic order”, was significantly based on the alleged propagation of DPRK ideology by members of the UPP, regarding which they have already faced charges under article 7 of the NSA, (art. 19 and 22).

51. **In view of the particularly far-reaching nature constituted by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hat it is used as a measure of last resort, with utmost restraint, and embodi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52.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severe restrictions placed on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including the operation of a de facto system of authorization of peaceful assemblies by the police, cases of usage **of excessive force**, of car and bus blockades, **and the restriction of demonstrations held past midnight**. It is concerned also about the frequent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impose fines and/or arrest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for either organizing or participating in protests without due consideration of their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arts. 7, 9 and 21).

53.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he enjoyment by all of the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that limitations on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are in strict compliance with article 21 of the Covenant. It should further review its regulations on the use of force and ensure they are in compliance with the Covenant, and train its police officials accordingly.**

### Freedom of Association

54.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undue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association of public officials. It is also concerned about cases of refusals to register trade unions on the ground that their membership includes dismissed employees (art. 22).

55. **The State party should withdraw its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the Covenant, and enable all parts of the labour force, including public officials, as well as employees who have been dismissed, to join trade unions.**

### Birth registration

56.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foreigners are expected to approach their embassies to obtain birth registration for their children, which is frequently impossible for asylum-seekers, humanitarian status holders or refugees (art. 24).

57.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hat birth registration is available to all children, irrespective of their parents' legal status and/or origin.**

58. The State party should disseminate widely the Covenant, the text of its fourth periodic report and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among the judici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civil society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perating in the country, and the general public.

59. In accordance with rule 71, paragraph 5, of the Committee's rules of procedure, the State party should provide, within one year, relevant information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made in paragraphs 15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45 (Conscientious objection) and 53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bove.

60. The Committee requests that the State party submit its next periodic report by 6 November 2019 and that it include in it specific up-to-date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all its recommendations and of the Covenant as a whole. The Committee requests that the State party, in preparing the report, broadly consult civil society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perating in

the country. In accordance with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8/268, the word limit for the report is 21,200 words.

## XV. 언론 보도자료 및 언론 대응

### 1. 10/15 보도자료

####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집회결사의사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한국 자유권 후퇴 심각해

10/19~10/23 한국 자유권 실태 제네바 현지에서 알릴 예정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등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22~23에 열릴 예정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NGO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한국 자유권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유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 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제4차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최근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쟁점 목록(list of issues)과 공동 NGO보고서로 올해 초와 지난 9월 각각 발표했다. 쟁점 목록이란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이며, NGO 공동 보고서는 위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검토하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NGO 공동 보고서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자유권이 급격히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자유권 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소수자 인권, 국가보안법과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 군대 내 인권문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 및 구금 실태,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 등의 쟁점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부가 마련한 법과 정책을 나열하기만 할 뿐 그로 인한 긍정적 결과나 영향,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취사선택된 정보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 상황 전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NGO 대표단은 10/19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시작한다.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2. 10/25 보도자료

### **유엔 인권 전문가들, 악화되는 한국 인권상황에 우려 표명**

한국 정부의 형식적 답변, 유엔 전문가들에게 지적 받아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 앞둔 한국 정부, 협약 준수 의지 보여야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간 10/22(목)~10/23(금) 양일간 열렸다. 한국에서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정부 쪽에서는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국방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 중이다' 등 실효적 이행방안은 배제한 채 법과 정책만을 늘어놓는 답변을 반복했다.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 의지는 이번에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 자유권 위원들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와 관련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성소수자 차별, 군대 내 인권, 외국인 구금 문제,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인 접견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문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이번 심의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유권 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이 내린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기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거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여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지속해서 유엔에서 관련 권고가 내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하여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을 일축했다. 유발 샨니(Yuval Shany) 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각종 법안들을 매우 모호하게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요청했다.

자유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 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 그리고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구속 중인 박래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구속과 관련하여는 “현행 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번 자유권 심의에서 위원들이 한국 정부에 이처럼 구체적이고 다양한 질문을 내린 것은 한국 자유권 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심의 동안에도 회의장이 가득 차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다가오는 10/28 뉴욕에서 열릴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나갈 예정이다. 자유권 심의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답변하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자유권 규약 이행의 의지도 보이지 못하면서 과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진행하였다. 공식 브리핑 세션에서의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및 정보 제공,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한국 자유권 심의에 대한 최종 결론은 11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 3. 11/07 보도자료

####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중 감시 예정임을 밝혀**

**진실 명예훼손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 권고**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위원회가 선정한 위 세가지 집중 권고 이외에도 4)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5)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 6) 북한이탈주민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구금시간, 변호인의 조력, 신문 방법 및 시간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과 같은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대한 권고가 국제사회에서 내려진 것은 처음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자유권 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 추천 위원회를 세우는 등 전적으로 투명한 참여형의 위원 추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
-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기준 설정 및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강화
-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구금시설 내 징별위원 위원들은 독립적인 기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독방 감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할 것
- 혼인강간을 명시적으로 죄형화하고 강간의 요건을 협박 폭력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로 전환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구금 상태의 신문 중에 변호인의 조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
- 전기통신법 제 83 조제 3 항 상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 22 조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공무원, 해직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모의 법적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증명서를 발부할 것

그 외에도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테러방지법 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군대 내 폭력, 구금 시설,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자의 장기구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NGO 대표단은 2015년 11월 25일 오후 7시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장소 미정),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4. 오마이뉴스 기고

##### 1)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 집회시위 및 성소수자 권리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 내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운 간사

##### 유엔에서의 호소, "저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안이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45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지속하며, 주민들은 9년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난 군사 독재 정권을 미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저희는 어떤 말도 자유로이 할 수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적인 문제들이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 유엔 제네바 위원들 앞에서 발표한 NGO 구두 발표문

시민적, 정치적 권리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유엔은 지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채택했다. 이에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검토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 심의가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지난 심의가 2006년이었으니 거의 10년 만이다. 이번에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최근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자유권과 관련돼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모두 심의 대상이었다.

2014년 말부터 자유권 대응 활동을 함께 해 온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11명의 대표단을 자유권 심의 즈음에 제네바 현지로 파견해 로비 활동을 펼쳤다. 자유권 심의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유권 위원회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들에게 한국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예리하고 좋은 질문을 바탕으로 권고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유권 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의 일정이 매우 빡빡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시민단체 대표단은 유엔 빌딩 카페테리아에서 죽치고 앉아 있다가 위원들이 커피를 마시러 나올 때나 식사를 하러 나올 때,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까지 쫓아가 로비 문서를 전달했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절박한 심정으로 알린 것이다. 어렵게 잡힌 약속 시간에는 로비 문서를 앞에 두고 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형광펜을 들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쳐가며 위원들을 설득했다.

사실 제네바 현지까지 가서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평화로운 레만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유엔 건물 안은 전쟁 같은 로비의 현장이었다. 그 안에서 외국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이렇게나 안 좋다고, 좋은 권고를 꼭 내려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비통하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제주 강정 기지 반대 주민들, 밀양 송전탑 반대 할매 할배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등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려나갔다.

### "박래군 구속 정당한가?" 유엔의 날카로운 질문

자유권 심의 당일, 각 정부 부처에서 온 40여 명의 한국 정부 대표단들이 심의가 열리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자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각도로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법무부 차관의 기초 발언이 끝난 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을 통역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군대 내 동성 간 '교제' (same sex relationship in the military)와 관련된 질문을 '교재'(textbook)로 잘못 알아들어 군대 내 인권 교육에 대해 답변을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첫 날 오후 심의가 끝나고 시민단체 대표단은 당일 심의에서 위원들이 내린 권고에 대한 NGO의 답변을 준비해 위원들이 정부 답변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제출했다. 또한 둘째 날 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를 밤새 준비해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자료를 받은 위원들은 둘째 날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준비해 온 답변만 반복하고 추가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기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반복할 필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유엔이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언급하며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을 일축한 것이다.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와 관련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각종 법안들을 매우 모호하게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베일에 싸여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확한 통계를 요청했다.

자유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 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 그리고 7월 중순에 구속된 박래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세월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걸 두고는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계속되는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국이 자유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초 발언이 무색한 반응이었다. 결국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듣지 못한 채 추가 서면 답변 제출을 하기로 하고 자유권 심의는 막을 내렸다.

### **유례없이 강한 권고 받은 한국**

폭풍 같았던 제네바에서의 1주일. 노력의 결실인 최종 권고는 지난 11월 5일 발표됐다. 거기엔 9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한 권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LGBTI)를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포함해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또한 유례없이 강한 권고다.

자유권 위원회는 최종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유권 심의 때 이름이 언급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회는 심의가 끝난 지 며칠 안 된 지난 11월 2일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유엔에게 좋은 권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일이다. 이후 이어지는 기고문에서는 이번에 받은 권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권고 이행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인지 주제별로 나눠 살펴보려 한다. 또한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시민사회 대표단은 오는 25일(수) 오후 7시, 서울 NPO 센터에서 활동 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2)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 -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 합동신문센터)

김기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박정근 사건, 민주주의 억압했다

우선,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특히 제7조(찬양·고무 등)에 근거한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제7조가 "모호하고, 공적인 대화에 대한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불필요하고 균형에 맞지 않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검열의 목적으로 점차 사용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 자유권 위원회 유발 샨니(Yuval Shany) 위원은 박정근과 미네르바 사건의 예를 들며, "국가보안법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34번과 1999년에 내린 권고(CCPR/C/79/Add.114,para.9(1999))를 인용하며, "사상이 적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단지 일치한다거나 적국에 대한 공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권고를 내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 단락에 기술된 것과 같이 자유권 위원회는 1999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제7조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권고했었다. 뿐만 아니라 9년 전의 자유권규약 3차 국가심의회(2006)에서도 자유권위원회는 같은 우려와 권고를 채택했다. 당시 자유권 위원회는 이를 매우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절차규칙 제71조 5항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권고 이행 보고서를 1년 이내에 제공하라고 하였다. 1999년과 2006년 두 차례의 국가심의회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고 자유권 규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하다가 2015년 권고에서는 드디어 이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가 실질적 권고 이행의 노력을 보이지 않자 결국 폐지하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권 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권고는 한국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그간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해석한 적이 없다'고 초지일관 부인해 왔다. 이번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도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해석기준 제시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2004. 8. 26.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2015년 10월 유엔 자유권 위원회 국가심의 본심의에서도 한국 정부 대표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동안 남북이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고 여전히 안보위협이 있는 상황이며,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2015년 11월 최종견해가 채택된 후 한국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입장을 재표명했다. 최종견해가 채택된 날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 **자유권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권고, 이행할 수 있어야**

한편, 자유권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유엔인권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일정 기간 구금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를 내렸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서의 인권상황은 2013년 탈북 화교의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계기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을 확인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한 것을 국정원은 간첩혐의를 수사하는 형사절차로 남용했다. 피의자 신분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변호사의 접견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그

밖에도 심각한 인권침해의 정황들이 드러나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최대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고, 인권보호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과 심사 이후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독립적인 심의 없이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최단기간만 구금되고,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으며, 수사 중에는 변호인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제한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개인이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집행 정지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정부는 자유권위원회 본심의에서 자유권위원회 유발 샨니(Yuval Shany)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 해당 조사의 근거, 기간, 인권침해 시 구제절차를 고지하고 있고, 변호사인 인권보호관의 일대일 면담을 보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몇몇 간첩조작사건에서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진 사례가 있으며, 또 한국정부가 밝힌 인권보호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수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피의자의 변호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정보에 대한 접근에 제약은 없는지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비상근 명예직일 뿐이다"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같은 권고가 채택된 이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자유권규약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인류의 약속이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높은 인권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인권은



전 인류에게 중요하며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 앞으로도 인권이라는 가치에 역점을 두고 역할과 책무를 이행하겠다."

자유권위원회 4차 국가심의 본심의에서 한국 정부의 대표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한 발언이다. 맞는 말이다. 한국정부는 자유권규약에 가입하면서 자유권규약의 정신과 원칙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관련한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도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3)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 - 혼자만 20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정부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은 대략 15년 전이다. 물론 그 전에도 병역거부자들은 있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도 대부분이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은 해방 이후에도 꾸준히 병역을 거부해왔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일본의 징집을 피해 산으로 숨은 사람들, 한국 전쟁 당시 전쟁을 피하고자 도망다녔던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 병역거부자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토지>를 비롯한 소설이나 사람들의 회고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긴 역사에 비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이슈가 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병역거부자가 처벌받는 국가들은 세계적으로도 드물었고, 그나마도 아직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들이 태반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한국 감옥에 있을 만큼, 한국은 병역거부 수감자 숫자에서 압도적이었다.

다양한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처음부터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에 한국의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왔다. 유엔만 하더라도, 이번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이전에도 유엔의 여러 기구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지 말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해왔다.

- 2004 년 유엔인권위원회 35 호 결의안
- 2004 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 2006 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2008 년 유엔인권이사회 1 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 2012 년 유엔인권이사회 2 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 2013 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 2013 년 유엔인권이사회 병역거부에 대한 결의안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봐도 이렇다. 여기에 병역거부 수감자 개개인들의 진정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의문들까지 더한다면, 유엔에서 한국정부에 내린 권고들만 모아도 책을 몇 권 펴낼 수 있을 정도다.

### **국민을 핑계 삼아 인권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유엔의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초지일관으로 '국민적인 여론'을 핑계 삼고 있다. 이는 이번 자유권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나이젤 로들리 위원이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한국 정부의 변명을 일축했을까.

그런데 인권의 문제를 여론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아주 지당한 말은 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부의 핑계는 문제 삼을 것이 많다.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은 지난 10여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악의적으로 만든 질문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찬성이 절반 넘게 나오기도 한다.

2013년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대다수인 76%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이해할 수 있다"는 답변은 2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68%가 찬성(반대는 26%)하기도 했다. 이는 병역거부자의 신념의 내용과는 별개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인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또 다른 조사에서는 대체복무도입 반대가 더 높게 나오기도 했지만, 이처럼 질문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정도로 병역거부 문제가 처음 이슈화된 10년 전에 비해서는 국민 여론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10년 동안 정부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변화된 여론의 지형은 애써 외면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국민을 핑계 삼기만 해왔던 것이다.

### **2015년 자유권위원회 권고에서 주목해야 할 점**

한국 정부는 고장 난 녹음기마냥 10년 동안 똑같은 핑계만 대고 있지만, 유엔은 한국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수록 진일보한 권고를 내고 있다. 이번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안은 특히 그렇다.

지난 2006년 권고에서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채 병역거부자들을 일방적으로 수감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였다면, 이번 권고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이 인권 침해에 당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 사안을 유엔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아무런 의지도 계획도 없는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질타의 목소리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병역거부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병역거부자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를 내린 점이다. 2014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병무청은 6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쳐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병역기피자들의 신원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인권평화활동가들이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서, 애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고위공직자나 재벌가 자제들의 병역의무 불이행을 잡아내는 데는 실효성이 없고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왔다.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신상공개를 시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비취봤을 때 신상공개 방식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해주는 것이다.

#### **아시아의 인권 국가 한국으로 발돋움해야하지 않을까?**

사실 대체복무제도 도입이나 병역거부권 인정은 국제적으로는 이견이 없을 만큼 논쟁이 끝난 것들이다. 국격을 중시하는 한국 정부인 만큼,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국격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인권 문제에서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부는 없을 것이다. 인권은 하나의 가치체계이자, 늘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100년 전 사회에서 인류가 미처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아주 당연한 인권으로 여기고 누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100년 후 우리는 새롭게 확장되어 있을 인권의 목록을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런 인권 문제들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인권의 문제로 인식될 것이다. 하지만, 병역거부는 대체복무는 그렇게 다가올 미래의 인권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난 20세기에 결론이 난 인권 목록을 21세기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 **4) 갇히거나 팔리거나, 오스람과 메리를 아시나요**

##### **- 외국인 구금과 인신매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 오스람 이야기**

이란 출신 오스람은 한국에 온 뒤 기독교를 접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타 종교로의 개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란 정부의 박해가 두려워 오스람은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개종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거절을 하였고, 오스람을 이란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외국인 보호소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오스람씨는 이란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며 계속해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외국인 보호소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햇볕 한 줄이 겨우 드는 방에서 오스람씨는 신경쇠약과 그로 인한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스람씨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이 감옥같은 곳에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스람씨는 자나깨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렇게 오스람씨를 '합법적'으로 구금하고 있지만, 신체의 자유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 자유권 규약 9조에 따르면 이렇게 난민신청자를 장기간 아무런 제약 없이 가두어 두는 것은 '자의적' 구금, 즉 제멋대로 사람을 가두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한 사람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 가령 형사 처벌의 결과로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심사를 한 후에, 잘못된 만큼만 가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단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개입 없이, 가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도 없이 가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가둘 수 있는지 상한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영원히(!) 구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보호소는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전 '잠깐' 머무는 곳이니 괜찮다고 하고 있지만, 박해의 위험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난민신청자의 경우 구금 기간이 기약없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현재에도 외국인 보호소에는 3년 넘게 구금이 되어 있는 난민신청자들이 있고, 자유권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외국인들을 보호소에 가두는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외국인 보호소에 18세 미만 아동들 또한 구금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 기간에만 아동의 구금이 사용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구금에 대하여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요지의 권고를 내렸습니다.

### \* 메리 이야기

메리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젊은 필리핀 여성입니다. 평소 한국 드라마와 유행가들을 종종 접하며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던 메리는 한국에서 가수로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한 당일 밤, 메리는 동두천의 어느 클럽으로 보내졌습니다. 클럽 주인은 한국에 돈을 벌러 온 것이면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메리가 손님들에게 술을 팔면서 접대를 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클럽 주인이 원하는 만큼 술을 팔지 못할 때에는 메리는 벌금을 물거나 외출이 금지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성매매까지 강요당하였습니다.

메리는 클럽에서 그리고 숙소에서도 감시를 당하였으며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때에 외출을 할 수조차 없었고, 원래 약속된 만큼의 급여 또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메리는 경찰에 도움을 구하고 싶었지만 클럽 주인은 번번이 '그렇게 신고해봤자 여기는 한국이고 너희가 성매매라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너희만 추방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경찰의 업소 단속 후, 메리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고,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이 된 후 본국으로 강제송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매해 3천 명이 넘는 여성들이 가수의 꿈을 안고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 중 많은 수가 메리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메리와 같이 기망적인 계약을 통해 자발성을 박탈당한 근로상태에 놓이고 때로는 성착취마저 당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는 '인신매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르면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행사,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남용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가 인신매매에 해당하며, 착취에는 성매매를 비롯한 성적 착취, 강제노동, 노예제나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장기 제거 등이 포함된다는 점 또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유권 규약에서는 노예제와 예속상태 및 강제노동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8조에 따라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권 위원회는 본심의 전에 한국 정부에 보낸 사전질의서를 통해 (1)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제노동, 착취와 학대에 노출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상의 제한 (2)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및 국내외의 한국국적 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선원들이 위협, 신체적·성적 괴롭힘과 폭력, 휴일이 없는 과도한 업무시간, 저임금, 비인도적인 대우에 노출되어 강제노동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 (3) 예술홍행비자(E-6) 및 국제결혼브로커들을 통해 이주 여성이 강제 성매매 및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신매매로 간주하며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한국 형법상의 '인신매매'는 국제협약상의 인신매매의 정의와 달리 협소하게 이루어져 금전적 대가를 주고 받아 사람을 사고 판 경우에만 인신매매가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 가해자가 인신매매로 처벌이 되거나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구금되어 본국으로 송환된다는 점입니다.

자유권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과 피해자 식별과정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들리지 않는 오스람과 메리의 이야기**

이렇게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무기한으로 구금이 될 수 있고, 인신매매를 당하여 한국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스람과 메리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며 이미 배제와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와 막연한 공포감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람과 메리의 이야기가 자유권 위원회의 위원들의 입을 빌어 한국 정부에 전달이 되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들은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5)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차경윤의 시간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회피 연아' 올렸다고 검찰 수사'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판정을 받았는데도 계속 온라인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를 개정할 의사는 없는가." (대한민국 쟁점목록 23번, 이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으로 치러진 역사상 유일무이한 재판이 바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형사재판이었다. 필자가 형사재판과 위헌소송에서 참고인진술을 했는데 "유언비어유포죄같은 것은 유신 때나 짐바브웨 같은 곳에만 있는 것"이라고 증언하자 "감히 우리나라를 짐바브웨에 비교한다"며 붉으락 푸르락 하던 공판검사가 기억난다. 재판실황을 담은 2009년 4월 연합뉴스 기사가 이상하게 접속이 안 된다.)

"[명예훼손 비형사와 관련되어] 징역형은 절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적절한 벌이 될 수 없다... 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언사가 허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는가?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질문. 홍가혜씨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의 변호와 사단법인 오픈넷의 소송지원 속에서 102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국가보안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재판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과 충돌한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거하여 북한정부 트위터 계정의 정보를 배포했다고 해서 처벌당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박정근씨도 100일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 필자가 형사재판에서 참고인진술을 할 때 검찰이 6백 개 정도의 복을 조롱하는



트윗은 백안시하고 2백여 개의 북한 정부 계정 리트윗만으로 박정근씨를 기소한 것에 대해 "모나리자의 얼굴을 가리고 '얼굴없는 괴물'이라고 공격하는 꼴"이라고 진술했던 기억이 난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감청 및 통신부대정보(예를 들어, 통신자 신원정보) 취득은 법원의 동의 하에서만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통신가입자 신원정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왜 이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와사와(Iwasawa) 위원, 10월22일. 차경윤씨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신원이 수사기관에 공개되어 경찰수사를 받기까지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영장없는 공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2년 10월 모든 포털들은 영장없는 정보제공을 중단했다.)

대한민국은 여러 국제인권협약들의 당사국이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시민정치적권리에 대한 규약(소위 '자유권규약')이다. UN인권위원회는 이 규약을 각 당사국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내리는 정기심사를 4~5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심사를 받는 해였고 실제 심사는 지난 10월22일과 2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이 한번을 빼먹어서 9년 만에 처음하는 것이어서 이제는 한참 잊혀진 MB정부의 추억들 그리고 그 주인공들까지 소환되었다.

이들의 사연이 시간이 이렇게 지난 지금 머나먼 제네바에서 UN인권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몇 명의 법학교수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을까? 그들의 사연이 불어, 스페인어, 영어, 우리말 4개 국어로 정부대표들과 인권위원들의 헤드셋 너머로 번역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위의 발언들을 듣는 순간의 감동은 시간이동을 한 듯한 몽롱함과 함께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다.

UN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보통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주로 거론되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첫째 진실인 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을 것(형법 307조1항)과 둘째 통신자 신원 파악을 영장없이 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UN인권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권위주의 정부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이용해서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위험 때문에 명예훼손을 비형사화할 것을 권고해왔다. 검찰을 동원하여 정부정책이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자를 탄압하는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권고를 거듭하다가 아예 2011년에는 일반논평 34호를 발표하여 모든 UN자유권규약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할 것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과 진실에 대한 모든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후 처음으로 2015년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할 것을 다시 권고한 것이다. 이 권고에 앞서 2008년 이후 <PD수첩> 광우병 보도팀 수사를 필두로 천안함, 세월호, 대통령 가족사 등 공적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입막음한 수많은 사례들이 참여연대에 의해 UN인권위원회에 보고되었었다. 특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차례에 걸쳐 발행한 <국민입막음 소송 보고서>가 번역되어 제출되었었다. 또 <프리덤하우스> 조사에서 수년째 OECD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와 함께 유일하게 '부분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도 위원들이 알고 있었다.

### **진실 말해도 유죄... 명예훼손죄 이대론 안 된다**

특히 이번에 UN인권위원회는 진실명예훼손 폐지에 있어서, 모든 진실명예훼손죄를 면책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발설한 진실만을 면책하는 우리나라 형법 307조1항은 불충분함을 확실히 천명하였다. 즉, 진실이라면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가. 제310조 상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요건은 너무 협소하다. 공공사업 발주 비리를 폭로한 사업가는 그 폭로가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므로 진실항변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샤니 위원, 10/23).

실로 가뭄에 단비같은 권고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의 업장 앞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의약품 대리점이 제약회사들의 갑질을 고발하는 팩스를 언론 등 관련기관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 역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2013~2014년에는 아파트 노인회 간부가 회원들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여 동행자가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원이 인터넷에 당시 상황을 거짓없이 올린 글에 대해서 역시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군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던 여직원이 고용주의 언어폭력에 못이겨 퇴사하면서 고용주의 만행을 적은 글을 사무실 주변에서 자주 다니던 식당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역시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피켓이나 팩스의 내용, 인터넷글이나 유인물에 어느 것 하나 허위라고 밝혀진 것도 없었고 허위라는 기소도 없었다. 이러한 소소한 일도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해야 하니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국민의 소통은 얼마나 억눌려 있을 것인가. 도대체 진실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면 모든 대화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진실명예훼손죄가 있기는 하지만 타인의 위법행위를 밝히는 진실한 언어나 공무원에 대한 진실한 언사는 면책되며 일반적으로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엄격한 요건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기만 해도 면책이 된다.

- 제 230 조의 2 제 1 항 "전조 제 1 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거가 있는 때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 제 230 조의 2 제 2 항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본다"
- 제 230 조의 2 제 3 항 "전조 제 1 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거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11월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이미 명예가 공식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므로 이 사실을 밝혔다고 해서 더 훼손되는 명예가 없으므로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평 교수는 진실을 억제함으로써 지켜지는 명예는 '허명'이라고 부른다. 필자는 위선이라고 부른다. 적어도 일본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 교회 홈페이지도 감청 설비 갖춰야 하나

또 매년 1천만명 넘는 사람들의 신원정보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와 관련하여 특정전화번호, 계좌번호, 온라인글을 발견하면 계정소유자나 글작성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의 위헌판결에도 나왔듯이 이 절차에서 신원정보만 드러나는 것이지만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다', '누구에게 얼마를 입금했다', '어떤 내용의 글을 썼다'라는 전제사실이 이미 알려진 사람의 신원정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는 마찬가지이다. (A의 신원정보 + A의 통신행위 및 내용)이 원래 영장이 필요하다면 이 두가지를 어느 순서로 받더라도 영장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익명으로 태어난다. 익명으로 서로 대화할 권리가 있고 원할 때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고 대화를 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이 신원을 강제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 UN인권위원회는 이 원칙이 국제인권법의 일부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지국수사도 남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인권위원회가 열린 당시에는 잠잠했던 감청설비의무화 법안이 파리테러 사태 이후 '단 하나의 위기도 낭비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UN인권위원회 권고에서는 빠져 있다. 사실 쟁점목록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로비할 때 중점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을 듯 하다. 뭐 어쩔 수 없다.

아쉬워서 한마디 붙이자면, 지금 나와 있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을 주창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들 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다른 나라들은 SK, KT같이 국가의 특허를 받은 망사업자들에게만 설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Daum,

네이버, 카카오톡 같이 망 위에서 자유롭게 제공되는 서비스에게 설비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금 감청설비의무화법안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 중 하나가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가 될 것이다. 같은 논리라면 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홈피, 학교홈피, 동창회홈피들도 한발짝만 더 나가면 다 감청설비의무 갖춰야 하는 가공할 상황이 다가온다.

사실확인하는 김에 하나만 더. 법무부가 10월22일 대한민국 심사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의 인권보호노력을 소개하면서 "UN인권최고판무관(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f Human Rights, OHCHR이라고 부름. UN인권위원회, UN인권이사회, 29개의 UN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총괄적 사무지원을 함)이 발행한 인권매뉴얼이 번역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이건 정부가 한 일이 아니다. 평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99명의 판사들의 참여로 발간하였고 발간비용을 대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다.